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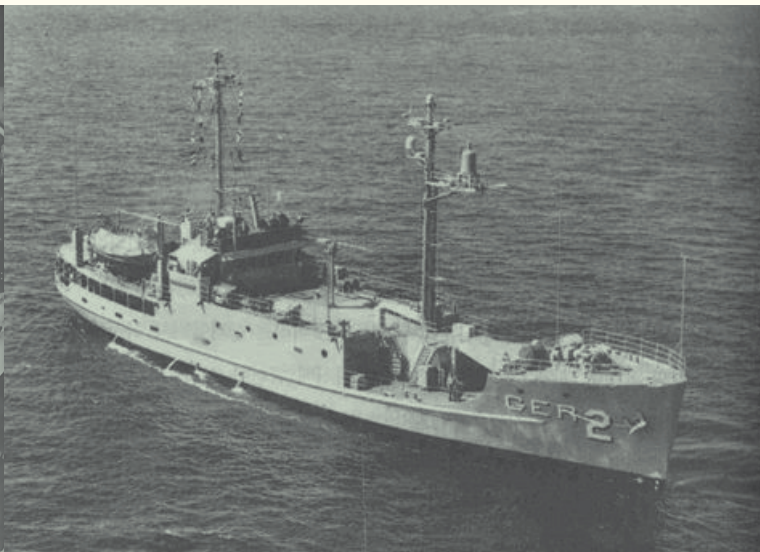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17-01

# 국방 사건사

제 1 집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 사건사

제 1 집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 사건사

제 1 집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발 간 사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5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국방 관련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발전될 뻔했던 사건도 있었고, 국가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건 중 다수가 북한의 도발 및 군과 관련된 사건들로서, 국방은 물론 한국의 정치·사회·외교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군의 기록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주요 국방사건사를 시리즈로 연구편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대별 주요 국방 관련사건을 선별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종합 정리하고 교훈을 분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산물로 『국방사건사 제1집』을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방 관련사건 중에서 북한의 도발에 관한 연구편찬은 국방부·합참·각군본부 등에서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대비정규전사’, ‘북한 침투 및 도발 사례집’ 등과 같이 다수의 사건들을 종합 정리한 연구편찬서도 있고, ‘연평해전 교훈집’,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등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한 연구기록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구서들이 전투 위주의 기록 및 사례 모음집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국방사건사 제1집’은 1960, 70년대에 발생했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본 연구서는 기존의 전술적 수준의 기록에서 탈피하여, 군사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교훈, 사후조치까지를 망라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위기관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서에 수록한 세 사건은, 북한이 일인 독재권력 유지와 대남적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며, 북한의 對南·對美 도발의 동기와 그 메커니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들 도발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독재 권력이 위협받는 상황 또는 권력세습과 관련하여 자행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권력 변동기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어도 북한은 여전히 일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저지르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수시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경구를 새기면서, 본 서가 당시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교훈을 상기하여, 북한의 도발 대비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북진**

# 목 차

## <제 1 편>

###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제1장 개 요 .....	25
제2장 1960년대 안보환경 .....	29
제1절 국제정세 .....	29
1. 국제정치 질서의 다극화 .....	29
2. 미·소의 대립과 군축협상의 진전 .....	30
3. 중·소의 이념대결 .....	31
4. 베트남전쟁의 확산 .....	31
제2절 국내정세 .....	33
1.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등장 .....	33
2.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 .....	34
3.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	35
제3절 북한정세 .....	36
1. 북한의 대(對)중·소 외교 .....	36
가. 중·소 분쟁과 친중국노선 .....	36
나. 친소노선으로의 복귀와 등거리 외교 .....	37
2. 제3세계와의 외교 강화 .....	38
3.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강화 .....	39
가. 김일성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	39
나. 난관에 처한 주체사상과 대남(對南) 폭력혁명전략 강화 .....	40

**제3장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 47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정책**..... 47

- 1. 북한의 대남전략 ..... 47
- 2. 북한의 군사정책 ..... 48
  - 가. 전 인민의 무장화..... 48
  - 나. 전 국토의 요새화..... 49
  - 다. 전 군의 간부화 ..... 49
  - 라. 군 장비의 현대화..... 49

**제2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51

- 1. 북한의 군사전략 ..... 51
  - 가. 북한의 군사전략 개관 ..... 51
  - 나. 북한의 비정규전 전략 ..... 51
- 2. 북한의 국방기구 및 지휘체제 ..... 52
- 3. 북한의 군사력 개황 및 군사동향 ..... 54
  - 가. 북한의 군사력 개황 ..... 54
  - 나. 북한의 군사동향..... 54

**제3절 북한의 대남전술과 대남공작기구**..... 56

- 1. 북한의 대남전술 변화..... 56
- 2. 1960년대 유격전 ..... 56
  - 가. ‘283군부대’의 유격활동 ..... 57
  - 나. ‘124군부대’의 유격활동..... 57
- 3. 1960년대 대남공작기구의 변천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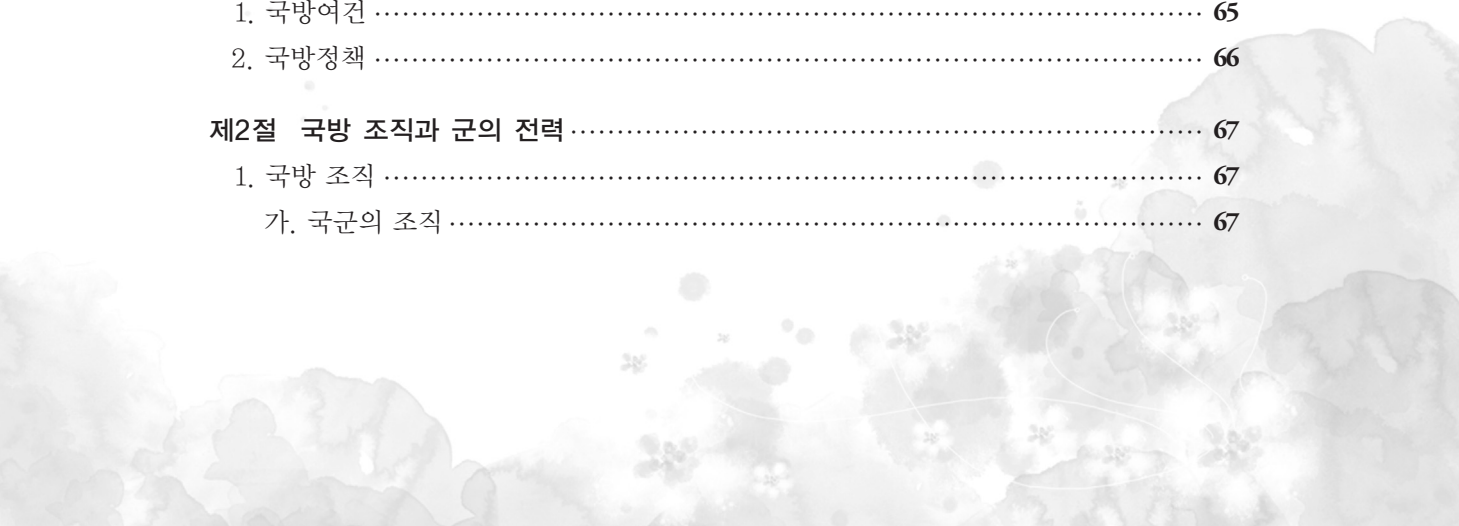
**제4장 국방정책과 군사대비태세** ..... 65

**제1절 국방정책**..... 65

- 1. 국방여건 ..... 65
- 2. 국방정책 ..... 66

**제2절 국방 조직과 군의 전력**..... 67

- 1. 국방 조직 ..... 67
  - 가. 국군의 조직 ..... 67



나. 육군의 조직 .....	68
2. 지휘체계 .....	69
3. 군의 전력 .....	70
가. 육 군 .....	70
나. 해 군 .....	71
다. 공 군 .....	71
<b>제3절 군사대비태세 .....</b>	<b>72</b>
1. 대비방향 .....	72
2. 비정규전 대비태세 .....	72
가. 대통령훈령 제18호 제정 .....	73
나. 비상치안회의 개최 .....	73
<b>제5장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b>	<b>79</b>
<b>제1절 북한의 1·21사태 도발 의도 .....</b>	<b>79</b>
1. 대외적 동기 .....	82
2. 대내적 동기 .....	83
<b>제2절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계획 .....</b>	<b>85</b>
1. 도발 계획 및 준비 .....	85
2. 목표 선정 .....	86
3. 편성 및 장비 .....	86
4. 세부 습격계획 .....	87
가. 침투 시기, 장소, 방법 .....	87
나. 습격시간 및 소요시간 판단 .....	87
다. 습격 단계 및 요령 .....	88
<b>제3절 무장공비의 침투와 초기 대응 .....</b>	<b>89</b>
1. 1월 17~18일 상황 .....	89
2. 1월 19~20일 상황 .....	92
가. 제25사단의 조치 .....	94
나. 제6군단의 조치 .....	94
다. 제6관구사령부의 조치 .....	96
라. 미 제2사단 및 미 제8군의 조치 .....	96



마. 육군본부의 조치.....	96
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조치 .....	97
사. 경찰의 조치.....	99
3. 1월 21일 상황(무장공비 발견 전까지).....	101
<b>제4절 무장공비 소탕작전.....</b>	<b>104</b>
1. 공비 발견 및 최초 접전 .....	104
2. 무장공비 소탕작전 .....	106
가. 1월 21~22일 작전.....	106
나. 1월 23일 작전.....	112
다. 1월 24일 작전.....	114
라. 1월 25일 작전.....	116
마. 1월 26일 작전.....	117
바. 1월 27일 작전.....	117
사. 1월 28일 작전.....	118
아. 1월 29일 작전.....	118
자. 1월 30~31일 작전.....	118
차. 2월 3일 작전.....	119
3. 작전결과.....	119
<b>제5절 정부·국회의 조치 및 국민 여론과 협조 .....</b>	<b>121</b>
1. 정부조치.....	121
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치.....	121
나. 국방부 조치.....	122
다. 내무부 조치.....	123
라. 공보부 및 외무부 조치 .....	124
2. 국회 조치 .....	124
3. 미국정부 및 유엔군사령부 조치.....	125
4. 언론의 반응 .....	125
5. 국민의 북한만행 규탄과 대간첩작전 협조.....	125
<b>제6장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b>	<b>133</b>
<b>제1절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 배경과 경위 .....</b>	<b>134</b>
1.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 배경 .....	134

2. 푸에블로호의 개조와 동해 투입 준비 .....	137
3. 푸에블로호의 지휘계통 .....	140
4. 푸에블로호 임무지역에 대한 위협평가 .....	142
<b>제2절 사건발생과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b>	<b>145</b>
1.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에서부터 피랍까지의 경과 .....	145
2. 푸에블로호 피랍에 대한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	149
가. 미 태평양사령부 .....	149
나. 주한미군사령부 .....	156
다. 미국 수뇌부 .....	157
<b>제3절 미국정부의 조치와 한·미 갈등과 협력 .....</b>	<b>161</b>
1.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동기에 대한 미국 수뇌부의 최초 판단 .....	161
2. 미국의 대응정책 결정과 시행 .....	162
가. 미국의 정책방향 결정 .....	162
나.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군사조치 실행 .....	164
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그 실패 .....	166
라. 푸에블로호의 북한영해 침입 여부에 대한 평가 .....	169
3. 한·미 갈등과 미국의 무마조치 .....	172
가. 미국의 대(對)북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조치 .....	172
나. 미국의 대한(對韓) 무마조치 .....	175
<b>제4절 승무원 송환 관련 미·북 협상 .....</b>	<b>178</b>
1. 초기 협상(1.24 ~ 5.7) .....	178
2. 협상 교착(5.8 ~ 12.16) .....	180
3. 협상 타결(12.17 ~ 23) .....	181
<b>제5절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의도 .....</b>	<b>186</b>
1. 흔들리는 ‘주체사상’ 과 ‘국방에서의 자위’ .....	186
2. 푸에블로호 납치 후 북한의 반응과 조치 .....	188
3. 승무원들에 대한 북한의 자백 강요와 선전활동 .....	189
4. 미·북 협상과정에서의 북한의 태도 .....	192

<b>제7장 교훈과 사후조치</b> .....	<b>205</b>
<b>제1절 교훈</b> .....	<b>206</b>
1. 정치·외교적 측면 .....	<b>206</b>
2. 군사적 측면 .....	<b>209</b>
가.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	<b>209</b>
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b>213</b>
<b>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b> .....	<b>214</b>
1.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	<b>214</b>
가. ‘박-벤스’ 회담 .....	<b>214</b>
나. ‘박-존슨’ 호놀룰루 정상회담 .....	<b>215</b>
다.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 .....	<b>215</b>
2. ‘한·미연합기획참모단’ 설치 .....	<b>216</b>
<b>제3절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전력증강</b> .....	<b>218</b>
1. ‘대간첩대책본부’ 창설 .....	<b>218</b>
2. 대간첩작전체제 정비 및 부대 증·창설 .....	<b>220</b>
3. 장비 및 시설 보강 .....	<b>222</b>
4. 향토방위예비군 창설 .....	<b>223</b>



<제 2 편>

8 ·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1장 개 요 .....	231
제2장 1970년대 안보환경 .....	237
제1절 국제정세 .....	237
1. 동서화해 .....	237
2. ‘신냉전시대’의 형성 .....	238
제2절 국내정세 .....	239
1. 주한미군 철수와 총력안보체제 구축 .....	239
2. 자주국방의 기반 조성 .....	240
제3절 북한정세 .....	241
1.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와 세습체제 기반 구축 .....	241
가. 김정일 후계체제 기반구축 과정 .....	241
나.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반발과 숙청 .....	242
2.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 .....	243
제4절 남북관계 .....	245
1.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그 실패 .....	245
2. 남북관계의 냉각 .....	246
제3장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	251
제1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	251
1. 북한의 군사정책 .....	251
2. 북한의 군사전략 .....	252
제2절 북한의 군사력 .....	253
제3절 북한의 대남도발 .....	255
1. 남북 대화기(1970~1973. 8) .....	255
2. 남북 냉각기(1973. 8~1979) .....	256

<b>제4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와 주요 충돌사건</b> .....	261
<b>제1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설치와 경비체제</b> .....	261
1. 지리적 위치 .....	261
2. 설치 경위.....	261
3. 경비체제.....	262
<b>제2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주요 충돌사건</b> .....	266
<b>제5장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b> .....	273
<b>제1절 북한의 도발 의도</b> .....	273
1. 대외적 동기 .....	274
2. 대내적 동기.....	276
<b>제2절 사건 발생</b> .....	279
1. 사건지역(3초소) 위치 및 특징.....	279
2. 사건 배경 및 경과.....	281
<b>제3절 유엔군사령부와 미국 정부의 조치</b> .....	285
1. 유엔군사령부와 미 수뇌부의 초기 조치 .....	285
가. 유엔군사령부.....	285
나. 미국 수뇌부.....	285
2. 유엔군사령부 및 미국의 후속조치와 북한의 반응 .....	286
가. 데프콘-3 격상에 따른 군사조치 .....	286
나. 유엔사 및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와 북한의 반응.....	288
<b>제4절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조치</b> .....	292
1. 한국 정부의 조치.....	292
2. 한국군 특수전부대의 작전 준비 .....	294
<b>제5절 폴 버넌작전과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b> .....	296
1. 폴 버넌작전 .....	296
2.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 .....	299
3. 폴 버넌작전 종료 이후 상황과 조치.....	308
<b>제6절 군사정전위원회 회담과 공동경비구역 분할 경비</b> .....	312

<b>제6장 교훈과 사후조치</b> .....	<b>323</b>
<b>제1절 사건결과와 교훈</b> .....	<b>323</b>
1. 사건결과에 대한 평가 .....	<b>323</b>
가. 북한의 입장 .....	<b>323</b>
나. 미국의 입장 .....	<b>325</b>
다. 한국의 입장 .....	<b>326</b>
2. 교훈 .....	<b>326</b>
<b>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b> .....	<b>329</b>
<b>부 록</b> .....	<b>336</b>
1. 대통령 훈령 제18·19호 .....	<b>336</b>
2.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 .....	<b>347</b>
3. 남북한 국력 및 군사력 비교 .....	<b>349</b>
4.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관련 원본사료 .....	<b>350</b>
5.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 .....	<b>354</b>
6.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경과 .....	<b>357</b>
7. 폴 버넌작전 경과 .....	<b>364</b>
8.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b>367</b>
9.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할 관리 합의서 .....	<b>375</b>
10. 사건 관련 증언록 .....	<b>378</b>
<b>참고문헌</b> .....	<b>401</b>
<b>찾아보기</b> .....	<b>405</b>

## 도표 목차

### 〈제 1 편〉

도표 <3-1> 북한의 국방기구 및 지휘체제.....	53
도표 <3-2> 북한의 군사력 현황.....	54
도표 <3-3> 민족보위성의 특수부대 편성.....	59
도표 <3-4> 283군부대 편성.....	60
도표 <3-5> 124군부대 편성.....	60
도표 <4-1> 국군의 조직도.....	67
도표 <4-2> 육군의 편성.....	68
도표 <4-3> 국군의 지휘관계.....	70
도표 <4-4> 한·미 지상군의 지휘관계.....	70
도표 <4-5> 육군의 주요 전투장비.....	71
도표 <4-6> 해군의 주요 전투장비.....	71
도표 <4-7> 공군의 주요 전투장비.....	71
도표 <5-1> 196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및 작전결과.....	84
도표 <5-2> 청와대 습격대 편성 및 장비 현황.....	86
도표 <5-3> 청와대 습격대의 각 조별 임무.....	88
도표 <5-4> 무장공비 침투로 및 숙영지 요도.....	90
도표 <5-5> 남방한계선→삼봉산까지의 침투로 및 침투 모습.....	91
도표 <5-6> 삼봉산→비봉북방까지의 침투로 및 제3차 숙영지.....	93
도표 <5-7> 1월 20일 제25·26사단 작전요도.....	95
도표 <5-8> 1월 20일 제6관구사와 경찰의 작전요도.....	96
도표 <5-9> 김신조 체포 당시의 작전요도.....	107
도표 <5-10> 1월 22일 전반적인 작전요도.....	108
도표 <5-11> 제1사단의 출동준비 경과.....	109
도표 <5-12> 1월 23일 제1사단 배치도.....	112
도표 <5-13> 1월 23일 제26사단 배치도.....	113
도표 <5-14> 1월 24일 제1사단 제15연대 작전요도.....	115
도표 <5-15> 작전결과 총괄.....	119
도표 <5-16> 출동병력 현황.....	119
도표 <5-17> 부대별 전과 및 피해 현황.....	120
도표 <5-18> 공비 사살 장소 및 일자.....	120

도표 <6-1> 태평양사령부와 주일 미군의 지휘체계 .....	141
도표 <6-2> 사건 발생 당시 주요사령부 위치 및 수장 .....	141
도표 <6-3>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침범 시기 및 장소 .....	171
도표 <7-1>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 양국 대표단 .....	216
도표 <7-2> 중앙대간첩협회의 지휘 및 협조체계 .....	219
도표 <7-3> 대간첩대책본부의 기구 편성 .....	219
도표 <7-4> 대간첩대책본부의 임무 .....	220
도표 <7-5> 미국의 특별 군원으로 도입된 장비 현황 .....	222
도표 <7-6> 연도별 향토예비군 무기 보급 현황 .....	224

## <제 2 편>

도표 <3-1> 발견된 땅굴 제원 .....	257
도표 <3-2> 197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	257
도표 <4-1>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의 임무 .....	263
도표 <4-2>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의 기능별 임무 .....	263
도표 <4-3> 사건 당시의 공동경비구역 주변 요도 .....	267
도표 <5-1> 사건 당시의 공동경비구역 요도 .....	280
도표 <5-2> 한국에 증원배치된 항공기 현황 .....	287
도표 <5-3> 폴 버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 편성 .....	296
도표 <5-4> 폴 버넌작전을 위한 지원포병 편성 .....	297
도표 <6-1>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 .....	330



## 사진 목차

### 〈제 1 편〉

1. 기자회견하는 김신조(1968. 1. 22).....	23
2. 청와대에서 회담 중인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1966. 11. 2).....	27
3.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침몰 중인 당포함(1967. 1. 19) .....	45
4. 제1군사령부 을지연습 지휘소훈련 강평(1967. 2) .....	63
5. 김신조 증언 모습.....	85
6. 공비들의 남방한계선 침투 장면 .....	91
7. 공비들의 1차 숙영지(모래동).....	91
8. 공비들의 임진강 도섭지점.....	91
9. 우철재 씨 현지 증언 모습 .....	92
10. 공비들의 3차 숙영지.....	93
11. 송추초등학교 .....	94
12. 공비들의 4차 숙영지 .....	100
13. 세검정 파출소.....	104
14. 최규식 총경 동상과 정종수 경사 추모비 .....	105
15. 공비-최규식 총경간 최초 조우지점 .....	106
16. 김신조가 도주한 인왕산 능선 .....	110
17. 김신조 체포 및 기자회견.....	111
18. 북노고산 공비들의 은신처 .....	115
19. 청와대에서 작전 논의 중인 박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	121
20. 한국 해역으로 이동 중인 미 제7함대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1968. 1).....	131
21. 미국의 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 .....	133
22.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던 북한의 서호급 대잠함 .....	146
23.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송환되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	185
24. 판문점에서 서명하고 있는 우드워드 장군 .....	185
25. 푸에블로호 피랍 관련 북한이 선전용으로 촬영한 사진 .....	191
26.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는 푸에블로호 .....	194
27. 제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1971. 8).....	203
28. 호놀룰루에서 만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 .....	215
29. 전방사단의 요새화된 GP .....	223
30. 향토예비군 창설식 .....	223

## 〈제 2 편〉

1. 8·18 도끼만행사건 현장.....	229
2. 민방위대 창설식(1975. 9. 22) .....	235
3. 무장공비 휴대장비 .....	249
4.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문제의 미루나무.....	259
5. 공동경비구역 위치도.....	264
6. 옛날의 판문점과 오늘날의 판문점 .....	264
7. 휴전 직후 판문점 경비와 오늘날의 판문점 경비 .....	265
8. 1953년 판문점 포로 교환 .....	265
9. 오울렛 초소(현재의 241GP).....	265
10. 북한군에게 집단 구타당한 핸더슨 소령 .....	267
11. 유엔사의 미루나무 절단작전.....	271
12. 사건 당시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	280
13. 현지 증언하는 한국인 노무단 박용한 씨.....	283
14. 북한군의 8·18 판문점 도끼만행 장면들.....	284
15. 스틸웰 대장 .....	285
16. 도끼를 증거물로 내세우며 우기는 군사정전위원회 북한 대표 .....	289
17. 김포공항에서의 보니파스 대위와 배렛 중위의 영현 봉송식.....	290
18. 군장검사를 하고 있는 박희도 제1공수특전여단장 .....	295
19. 미루나무 절단작업 장면.....	307
20. 희생자 추모비 .....	307
21. 북한만행 규탄대회 .....	310
22. 군사분계선 표시 및 북한 경비초소 철거 작업.....	313
23.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1978. 11. 7) .....	321
2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마크, 창설식에서 부대기 수여 장면 .....	329
25. 증언청취 모습(김신조, 우철재, 박희도, 박호규, 김석찬).....	378

##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했다.

◇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 항 : 1, 2, 3, .....

◇ 목 : 가, 나, 다, .....

2. 용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가. 독자가 일반 국민과 군인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쉬운 용어로 썼으나, 일부 군사용어와 군에서 익숙한 군사적 어법을 사용했고, 군사좌표 등을 표기했다. 이해가 어려운 전문적인 군사용어에는 해설을 달았다.

나. 북괴, 중국, 월남, 월맹은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북한, 중국, 베트남, 북베트남으로 각각 표기했다.

다. 아래 용어는 정식명칭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을 혼용 사용했다.

1)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 1·21사태

2)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8·18사태

3)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안보리

5) 유엔군사령부 : 유엔사

6) 공동경비구역 미 육군 지원단 :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3.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보충한 경우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 속에 대화체를 넣거나, 중요사건·숙어·강조의 표시

『 』 : 서명(書名) 표시, 외국인 서명은 사선형 글씨로 표기

《 》 : 신문 등 언론매체 표시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는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 5. 기 타

- 가. 인용문은 다소 어법이 많지 않더라도 가급적 원본 그대로 인용했으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수정했으며, 보충 설명은 ( ) 안에 추가했다.
- 나. 주석은 미주로 달았으며, 인용자료는 최초 인용 시는 저자(발행기관), 서명, 인쇄소, 발행연도, 인용 쪽수(페이지) 등을 모두 기술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서명과 인용 쪽수만 기록했다.
- 다. 그림, 표, (작전)요도 등은 '도표'로 통일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사진은 일련번호 부여 없이 각 사진 하단에 관련 설명만 추가했다.
- 라. 상황도는 사실성·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당시 상황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했으나, 일부 누락된 내용은 추가하고 독도법상의 오류 등은 그 위에 수정보완했다. 좌표는 사건 당시의 'UTM 좌표'를 그대로 인용했다.

## 제 1 편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제 1 장 개 요



기자회견하는 김신조(1968. 1. 22)

# 제 1 장

## 개 요

1953년 6·25전쟁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뻔했던 적이 두 번 있었다. 그 첫 번째는 1968년 1월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약칭 ‘1·21사태’)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약칭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발생한 때였고, 두 번째는 1976년 8월 ‘8·18 관문점 도끼만행사건’(약칭 8·18사태)이 발생한 때였다.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은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임무를 띤 북한 제 124군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아 군정의 합동작전에 의해 28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으며 2명은 도주하여 월북(추정)한 사건이다.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그 이틀 뒤인 1월 23일 원산 앞바다 공해 상에서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게 납치되어 승무원 83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35일 만인 1968년 12월 23에 귀환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지 44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남북한과 미국인 60명의 목숨이 희생된 이 사건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거의 완전히 잊혀가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1월, 국방일보의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 도심에서 1·21사태 상기 훈련을 한다”는 짙막한 기사 몇 줄 외에는 한국의 어떤 신문에도 이 사건들과 관련한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이제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이 사건들을 일으켰던 북한정권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도 사망했고 그의 아들 김정일도 사망했다. 그리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북한정권은 부·자·손(父·子·孫) 3대에 걸친 독재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이 바뀌었다는 신호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은 6·25 이후 대남적화통일을 그들의 전략목표로 내세우고, 대한민국을 타도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해 왔다. 김일성은 동족 상잔의 6·25전쟁을 비롯하여 1968년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남파사건 등의 대남도발을 자행했고, 김정일은 1974년 북한의 공동 통치자로 부상한 다음부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묘지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2002년 서해도발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타도 내지는 약화를 위해서 대남도발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나 체제결속, 정치적 안정 등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대남도발을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알력과 불안으로 인한 충성경쟁이나 돌출행동이 대남도발로 번지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북한이 그들의 체제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전략목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1·21사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군사적 도발을 언제든지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남도발의 형태와 전술은 다를지라도 북한의 근본적인 권력 메커니즘과 전략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6·25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규모 도발의 시초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행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일인 독재체제가 변하지 않고 그들의 전략목표가 변하지 않고 있는 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도발사건들과 관련해서도 이 두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두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교훈을 상기하여, 그 대비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서를 펴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서의 제1편은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다루었으며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글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했고, 제2장은 1960년대 국내외 정세와 북한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정책, 군사능력과 전략전술을, 제4장에서 우리의 안보정책과 대비태세를 개관했다. 그리고 제5장에서 1·21사태의 발생과 이에 대한 군과 정부의 조치를 비교적 상술했다. 제6장은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투입배경으로부터 피랍사건의 발생, 미·북의 대응 및 협상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한·미 간 갈등과 협력관계, 그리고 북한의 의도를 기술했으며, 마지막 제7장에서는 이 두 사건의 교훈과 사후조치 내용을 정리했다.



## 제 2 장

# 1960년대 안보환경

제1절 국 제 정 세

제2절 국 내 정 세

제3절 북 한 정 세



청와대에서 회담 중인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1966. 11. 2)

## 제 2 장

# 1960년대 안보환경

### 제1절 국제정세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왔던 미·소 두 강대국이 주도하는 양극화된 냉전 체제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다극화와 긴장완화의 추세로 돌아섰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지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베트남전이 확산·격화되었다. 공산진영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이념대결이 격화되었다.

#### 1. 국제정치 질서의 다극화

1963년에 접어들어 미·소의 지도력에 대해 프랑스와 중국의 도전이 노골화되고,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한 서독이 크게 부상하면서 국제정세는 양극화체제에서 새로운 다극화체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공산진영에서는 중·소의 이념대립이 노골화된 가운데 소련은 스탈린 통치의 종식을 선언하며 긴장완화 국면으로 선화하였으나, 중국은 정면으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대미(對美) 유화노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 베트남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자 미국과 중국은 중·소 국경충돌을 계기로 극비리에 화해를 도모하여 미·중 두 나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소련에 공동대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콩고내전(1961년), 인도·중국전쟁(1962년), 키프러스내전(1963년),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제3차 중동전쟁(1967년) 등이다. 이들 분쟁의 대부분은 국지전으로 끝났으나, 그 중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중동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지역 내 영향이 확대됨으로써 주변 아랍국들과의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되었다. 한편 신생독립국들이 연이어 건국되었고 이들 국가들이 UN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1950년대와 같이 강대국이 UN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전·중반기의 국제정세는 양극화에서 다극화체제로 변모하면서 긴장완화의 추세 속에서도 베트남전쟁이 확산 및 장기화되었고 중·소의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미국의 역할이 감소되어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sup>1</sup>

## 2. 미·소의 대립과 군축협상의 진전

1961년 동서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열린 미·소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그 다음 해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떨게 했고 전후(戰後)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쿠바사태’가 일어났다. 중남미에서 최초로 공산혁명에 성공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소련의 도움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자, 1962년 10월 22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미·소간의 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이 사건의 해결을 계기로 하여 이후의 동서관계는 화해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소 양국은 쿠바위기의 비상사태를 체험한 후 핵전쟁의 발발을 막아보고자 1963년 6월 워싱턴과 모스크바간 직통전화선(Hot Line) 설치협정을 맺었고 동년 8월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

전후 동서간 이해의 대립 속에서도 미·소 양 강대국은 가공할 핵전쟁의 방지, 핵군비 경쟁의 지양과 핵확산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조로 전쟁억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1960년대에 핵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금지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하나는 지하 핵실험을 제외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정식명칭 : ‘대기권 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금지조약’)으로,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이 조인함으로써 군축문제 해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또 하나는 1968년 7월 12일 UN총회에서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이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인도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거듭된 핵군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의 실험과 확산금지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실질적인 핵군축은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sup>2</sup> 하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대국들의 경쟁적인 군비확장을 억제하는 조치는 미·소간에 다소의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 3. 중·소의 이념대결

1960년대 초부터 ‘형제국’이라 부르던 공산진영의 두 거대국인 소련과 중국간에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이해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보는 시각과 공산주의 본질문제에까지 파급되어 갔다. 양국의 논쟁은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당의 실권을 장악한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가 전임자인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을 비판하고 격하운동을 벌인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입장에 반발하지는 않았으나 1960년대 초 중국은 경제·외교·군사정책과 이념이 소련의 정책과 상충되자 소련지도부를 ‘수정주의자’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의 쿠바위기는 소련의 유화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격의 포문을 크게 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흐루시초프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동의한 것을 두고 ‘제2의 뮌헨’<sup>3</sup>이라고 경멸했고, “흐루시초프가 제국주의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핵폭발 실험의 성공으로 미·소·영·불에 이어 다섯 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에 힘입어 베트남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소련을 맹비난했고, 중·소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966년부터 ‘문화혁명’이라는 내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큰 혼란을 겪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는 이후 3년간 중국 전역을 거의 내전 상태로 휘몰아 갔으며 수많은 주요 인물들이 축출 당했다. 1968년에 들어서서 마오쩌둥(毛澤東), 린뱌오(林彪) 체제가 완전히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고, 1969년 4월 마오쩌둥은 제9차 전국대표회의를 10여 년 만에 열어 문화혁명을 공식적으로 매듭짓고 당의 질서를 확립했다.<sup>4</sup>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1966년 11월 중·소 양국 국경선인 만주의 흑룡강(아무르강)을 초계 중이던 소련 해군함정에 대해 중국군이 발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69년 3월에는 흑룡강에 위치한 진보도(다마스키섬)에서 양국 간 대규모 발포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련은 동구에 주둔중인 20개 사단 병력을 극동으로 전환하여 아무르강 일대의 국경수비를 강화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강배치함으로써 중·소 관계는 군사적 적대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sup>5</sup>

### 4. 베트남전쟁의 확산

1961년의 게릴라전으로부터 미국의 개입으로까지 확대된 베트남전쟁(1965~1975)은 1965년부터 정규전으로 전개되면서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전쟁으로 비화했다. 1963년 11월,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비존슨(Lyndon B. Johnson)은 전임자의 파병제한 정책에서 탈피하여 확장정책으로 전환하여 점진적으로 전투부대를 증파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4년 8월 2일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발생한

미·북베트남 해군간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의회로부터 군사력 사용권을 위임받아 베트남사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단계적 확전방침에 따라 베트남 파병병력은 1965년에 182,000명 규모로 급속히 증강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 1개 전투사단과 약 2,000명 규모의 지원병력, 오스트레일리아군 1개 대대, 뉴질랜드군 포병중대 등이 파견됨에 따라 1965년부터 베트남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확전이 계속되면서 1966년 말에는 주베트남 미군의 병력이 39만 명을 돌파하여 6·25전쟁 시의 주한 미군의 최고병력 수준을 초과했고, 1967년 말에는 48만 명을 넘었다.

한편, 혼미를 거듭하던 남베트남 정국은 1967년 9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응웬 반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점차 안정되어 갔다. 남베트남 정국의 안정과 함께 남베트남 상황은 점차 호전되는 듯 했다.

미군과 한국군 등 연합군은 적극적인 수색작전으로 베트콩<sup>6</sup>과 북베트남군을 찾아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로 인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인적자원과 보급능력이 고갈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베트남과 NLF는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미국의 환상은 1968년 초 NLF와 북베트남 정규군의 ‘땃<sup>7</sup>(Tet : 節) 공세’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전에 치밀한 대공세를 준비한 NLF와 북베트남 정부군은 취약시기인 1월 30일 새벽과 31일 새벽을 기해 남베트남 전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일제히 공세를 감행했다. 이제까지 유례를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공세였다. 그 결과 베트콩이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 구내까지 침투했다가 미군의 반격으로 퇴각되는 등 사이공 시내에 대한 공세가 2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또한 중부의 후에(Hue)는 25일 간의 격렬한 시가전 끝에 겨우 탈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의 공세에서 미군 1,100여 명과 남베트남군 2,300여 명이 전사했으며, 민간인 사망자도 12,000여 명에 달했다.

“아시아의 약소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곧 이길 것으로 알고 있던 미군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TV 뉴스를 통해 미국의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미국 국민들과 세계가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반전여론이 확대되었으며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급강하했다. 이에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북쪽을 중지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쟁의 축소와 휴전을 모색하게 되었다.<sup>8</sup>

## 제2절 국내정세

한국의 1960년대 초·중반은 자유당 정부 이래의 구정치질서가 무너지고, '5·16군사정변' 이후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이 기간 중 정치면에서는 '4·19혁명', '5·16군사정변', '한일회담', '국군 베트남파병' 등의 역사적인 대사건들이 발생했거나 추진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진통을 겪었다. 경제면에서는 2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민족의 숙명으로 여겨졌던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급속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면에서는 휴전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냉전체제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남폭력전략 추진에 따른 무력도발이 증대되고 있었다.

### 1. '5·16군사정변' 과 제3공화국의 등장

1960년 3월 15일,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민중봉기가 마산에서 일어난 후 이승만(李承晩)정권의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4월 11일, 김주열의 죽음을 도화선으로 하여 제2차 마산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시위는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이 아닌 부도덕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되었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져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다.

그리고 허정(許政) 과도정부의 관리 아래 내각책임제 개헌에 이어 국민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유당 치하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장면(張勉) 국무총리하의 제2공화국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당 내부의 파쟁과 국민 각계각층의 자제할 줄 모르는 주의·주장 그리고 분별없는 선동과 시위 등으로 사회는 극도의 혼란상에 빠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朴正熙) 소장(당시 제2군부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변이 성공함으로써 민주당 내각은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변군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혼란에 빠져 있던 국정에 일대 변혁을 추진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1961년 6월 5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했다.

정변 이듬해인 1962년에 들어서자 한국사회는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안정이 이루어졌다. 1962년 3월 22일, 윤보선(尹潽善) 대통령이 정치보복 인상이 짙은 '정치정화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사임하자,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單院)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63년 2월 26일 이를 공포했다. 동년 10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주당의 윤보선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이어 11월 26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총 175석 중 110석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그리고 1963년

12월 17일 제6대 국회가 처음 소집됨으로써 2년 7개월 만에 헌정질서가 회복되었고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sup>9</sup>

## 2.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

1960년대의 대외적으로 가장 특기할 사항은 한일회담의 타결과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었다. 한일회담은 냉전체제하에서 동북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한일회담은 1952년 맥아더사령부의 중재로 6·25전쟁 중에 개최되었지만 평화선<sup>10</sup>, 재일교포, 일본 대표의 망언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1958년에 재개되었지만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입장 고수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혁명 발발로 중단되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 의해 재추진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1962년 정부는 한일회담을 다시 추진했다. 그 해 11월 12일, 김종필(金鍾必)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大平修三) 일본외상은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이었던 대일청구권 액수를 무상 3억 달러 선에서 매듭지으려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세력과 대학생들이 반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과 경제협력 등에 관한 부속협정’<sup>11</sup>에 조인했다. 이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 얻었고, 12월 18일 서울에서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한·일 국교는 정상화되었다. 이리하여 한·미·일을 연대하는 동북아의 반공보루가 형성되었고 국교정상화 후의 경제협력으로 한·일 양국의 교류는 계속 증진되어 갔다.<sup>12</sup>

이즈음의 동북아 정세가 비교적 안정된 반면, 동남아 정세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적화위기에 프랑스를 대신한 미국은 매우 힘겹고 외로운 대베트남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1964년 9월 11일 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요원(10명)을 필두로 하여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되었으며, 1965년 10월 16일 맹호사단이 베트남전에 파견되었고 1966년에는 그 규모가 1개 군단규모로 확장되었다. 이후 주월 한국군은 1970년대 초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1만 3천여 명이 참전해 수많은 전과와 무공을 쌓았다.

베트남 파병은 연 10%대의 경제성장 달성, 한국의 위상강화, 그리고 한·미 관계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1966년 6월 14일 태평양양료이사회(ASPAC : Asian and Pacific Council)를 한국이 주재했으며, 동년 10월 24~27일까지 마닐라에서 베트남참전 7개국 정상회의<sup>13</sup>를 개최했다. 동년 10월 31일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3.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제3공화국의 제1기 박정희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심한 갈등과 파동을 겪으면서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연평균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83달러에서 123달러로 증대되었으며, 산업구조도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제1차 경제개발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1967년부터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립 촉진’에 목표를 두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1971년)을 추진했다.<sup>14</sup>

이와 같이 야심적인 계획을 착수하면서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통합야당의 윤보선 후보에게 여유 있게 승리했고, 이어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압승했다.

한편 1966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1967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되어 1966년의 도발건수의 수 배에 이르렀다.<sup>15</sup>



### 제3절 북한정세

1960년대 북한정세의 특징은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노골적이고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4대 군사노선을 확정하여 강력 추진하는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남 폭력전술을 강화하여 위기를 점진적으로 고조시켰다.

1960년대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은 이념분쟁과 국경충돌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외정책면에서 친중국·친소·자주(중립)노선 등으로 갈팡질팡 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북한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완강하고 투쟁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남책동을 강화해 나간 데는 이러한 외교적 어려움을 호도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게 작용했다.

#### 1. 북한의 대(對) 중·소 외교

북한은 상호경쟁하는 2대 공산국가, 즉 소련과 중국이 다 같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소위 ‘제국주의 세력의 군사기지’라는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태평양으로 향한 소련의 중요한 해군기지인 블라디보스톡과 중국의 공업지대인 동북지방의 방위에 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간의 공산주의 이념과 정책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둘러싼 대립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1월에 ‘미·일 안보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이미 1954년에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미국을 주축으로 한 극동방위체제가 굳어져 가고 ‘5·16군사정변’으로 한국에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의 김일성은 1961년 7월 모스크바와 북경을 차례로 방문하여 남측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7월 6일 소련 수상 흐루시초프와 함께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7월 11일 중국수상 저우언라이와 함께 ‘조·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조·소, 조·중 우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양국간 쌍무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후 중·소 등거리외교를 지렛대로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변신을 거듭했다.<sup>16</sup>

#### 가. 중·소 분쟁과 친중국노선(1961~1964년)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6년 흐루시초프가 소련의 실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중·소 관계는 1960년대 초부터 표면화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의 대미 유화정책을 비롯한 수정주의적 노선이 북한의 전반적인 대내외정책과 김일성의 스탈린주의적 권력체제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0년대 말까지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에 비판을 자제했다. 이 시기 북한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건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소련의 원조에 의존한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1957~1961년)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중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알바니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때 김일성은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흐루시초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후 김일성은 1962년 10월 쿠바사태에 대한 소련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 강경주전론을 주장하는 중국에 호의를 품고 친소적이었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1962년 들어 소련은 북한과 중국을 절연시키고 북한경제를 그의 세력권 내에 결속시키기 위해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으면서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난했다. 결국 1963년부터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그 결과는 ‘7개년 경제 계획’ (1961~1967년)의 실패로 나타났다.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제 무기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성능 낙후로 북한군의 전력증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sup>17</sup>

#### 나. 친소노선으로의 복귀와 등거리 외교(1965년~)

북한의 대외정책이 소련으로 다시 기울게 된 계기는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이후 1965년 2월 알렉세이 코시긴(Aleksei Kosygin) 소련 수상이 평양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후 같은 해 2월 북한군 총참모장 최 광(崔 光)이 소련의 대독참전기념일에 참석하여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62년부터 중단되었던 군사원조가 재개되었다. 이어 1965년 8월 소련의 정치국원 셀레핀(Selephin)이 방북하여 친소노선을 유도했다. 이에 김일성은 베트남전의 확대, 한·일조약의 체결, 중국의 문화혁명 등 당시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 등으로 스스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친소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1966년 5월 김일성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와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다짐했다. 그 후 조·소간에 ‘경제 및 기술협정’ (1967~70년)을 체결했다.<sup>18</sup> 이후 북한은 1966년 8월 소위 ‘자주노선’을 선언하여 친중국노선을 탈피할 명분을 세운 다음, 중·소 대립의 진전에 따라 그들 스스로의 위치 정립과 방향을 결정하는 신중한 대중·소 관계를 유지해 갔다.

한편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진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제1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현대수정주의와 투쟁하는데 있어 중간의 길은 없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북한의 친소노선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사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제목으로, ‘사상에서의 자주,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자위’를 내세우면서

중·소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표방했다. 북한은 군사·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는 소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념문제에서는 중국의 ‘민족해방투쟁노선’을 지지했다. 이렇게 북한은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중·소 양국의 눈치를 보면서 등거리 외교정책을 펼쳤다.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드러져 갔다.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브레즈네프·김일성 회담 이후 친소외교는 가속화되었다. 1967년 2~3월에 북한 제1부수상 김 일(金 一)이 소련을 방문하여 ‘군사·기술 원조협정’<sup>19</sup>을 체결하고, 1970년까지의 군사·경제원조를 약속 받았으며, 동년 5월 소련 부수상 노비코프가 북한을 방문했다. 이처럼 소련과 북한간의 고위급 접촉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건설·어업·무역확대 등의 각종 협정과 의정서들이 조인되었다.<sup>20</sup>

한편 중국은 북한의 ‘자주노선’ 선언을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규정했다. 1967년부터 문화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홍위병’을 통해서 “김일성은 수정주의자”라고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들의 우호국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의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오히려 중국 자신이 수정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sup>21</sup>

## 2. 제3세계와의 외교 강화(1966년~)

김일성은 소련,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주외교노선을 외쳤으나, 그 결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단절 내지는 감소되었고, 이는 경제건설의 실패로 나타났다. 그러자 김일성은 1966년부터 제3세계로 외교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만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염려가 있으니 새로운 세력인 비동맹권으로부터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제3세계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있었지만 1965년 이전까지는 내부정비에 주력하느라 외부에 눈을 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제3세계로 외교역량을 돌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1966년 김일성이 자주노선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제3세계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제3세계 군사외교의 근본 목적은 김일성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북한밖에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남혁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데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북한의 대(對)제3세계 외교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sup>22</sup>

구분	군사요원 지원	군사요원 수탁훈련	군사장비 지원	폭력혁명 수출
내용	이집트 외 33개국, 6,600명	시리아 외 39개국, 6,100명	북베트남 외 28개국, 다종의 군사장비	멕시코, 미얀마 등 수개 국에 혁명 수출 기도

### 3.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강화

#### 가. 김일성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김일성이 주체를 최초로 언급한 시점은 1955년 12월 28일이었다. 이날 김일성은 당 선전선동원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의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sup>23</sup>라고 하면서 주체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 때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한 이유는 당내 종파분자를 숙청하여 김일성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 대표자회의 등에서 주체를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이 최초로 사용했다.

일 시	회 의	강조 내용
1956. 12. 1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제에서의 자립
1957. 12. 5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 12. 10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국방에서의 자위
1966. 10. 15	당 대표자 회의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분야별 주체를 강조한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그 시기별로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며, 분야별 배경과 목적을 간략히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원조가 격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련은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총노선과 대약진 운동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김일성은 중국식의 사회주의 총동원체제의 계획 및 명령 경제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경제에서의 자립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천리마 운동’ 등을 전개해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정치(내정)에서의 자주’는 1950년대 후반기 동구공산권의 탈소운동과 소련·중국의 분쟁이 심화되자 중·소 분쟁에서 탈피하여 등거리 이중외교 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는 1960년대 중반 중·소 일변도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제3세계(비동맹권)로부터의 지지획득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정치에서의 자주’는 김일성 일인독재체제 강화와 대남혁명 여건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1961년부터 북한에 대한 소련의 원조 중단, 1962년 중·인도 국경분쟁 시 소련이 인도를 지원한 사실, 1962년의 쿠바사태에서 미국에 대한 소련의 열세 입증 등으로 북한의 소련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베트남전의 확대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한국의 5·16군사정변과 핵 배치설 등으로 초조해진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24</sup>

#### 나. 난관에 처한 주체사상과 대남(對南) 폭력혁명전략 강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은 정치·경제·외교의 3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1957년 시작된 5개년 경제계획(1957~1961년)은 4년 만에 달성되었다. 4년간 제조업은 연 평균 36.6%의 성장을 달성했고, 국민 소득은 연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중에 군사비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의 2.2%에 불과했다.

김일성은 외교분야에서도 주체를 과시했다. 1961년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제22차 전당대회에서 알바니아 공산당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소련이 쿠바사태 시 미국과 화해한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1961년 소련과 중국간에 긴장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계획’을 체결하고, 중국과는 ‘조·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힘입어 1961년 김일성은 제4차 전당대회에서 “도시와 시골에서 사회주의 완수를 위한 역사적인 혁명과업과 사회주의 기반조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자찬했다. 이어 그는 ‘7개년 경제계획’(1961~1967년)을 소개하면서,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인민은 쌀과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인민의 생활은 풍요롭고 현대화되어 보다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후 김일성이 주체를 더욱 강조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소련과의 관계 긴장으로, 후반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단절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가혹한 노동력 동원과 내핍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더구나 4대 군사노선을 추구하면서 중요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의 지하화를 위해 엄청난 노동력과 자금을 투입했고, 경공업과 농업보다 중공업에 치중했던 경제정책은 경제를 더욱 침체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대내외의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노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8월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를 외치면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전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유일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권력강화와 이상화 작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와 함께 4대 군사노선<sup>25</sup>에 토대를 둔 군사우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을 억누르고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폭력적 혁명전략으로 전환했다.

군사우위정책은 김일성에 대한 추종자들 사이에서 경제건설 우선을 주장한 당료파와 국방건설 우선을 주장한 군사파간의 대립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군사우선정책이 채택됨으로써 당료파가 숙청되었다. 1967년 5월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소위 갑산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이자 조직총책인 박금철(朴金哲)과 대남공작 책임자인 이효순(李孝淳) 등의 숙청이 그것이었다.<sup>26</sup>

김일성과 군사파는 당료인 갑산파 숙청에 이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의제 토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sup>27</sup>

첫째, 이번 당 전원회의는 김일성 총비서 동지의 사상으로 당을 통일 단결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당내에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 이외의 다른 사상은 없다. 왜냐하면 총비서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건설은 오직 총비서 동지의 영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 당원들은 총비서 동지의 의사대로 단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당의 사상체계이다.

셋째,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러저러한 좌우경적인 조류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는 인연이 없다. 때문에 총비서 동지의 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서는 총비서 동지의 노선에 충실할 의무만이 있다.

넷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역사연구실을 잘 꾸며 혁명전통 회상기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공부하라.

여섯째, 회의석상에서 ‘결론’이란 말을 할 자격은 김일성 총비서 동지에 국한한다. 다른 사람은 결론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으며 다만 ‘말씀’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모신다’, ‘모시고’라는 표현은 총비서 동지가 참석할 때만 써야 하고 총비서 동지가 입장할 때만 기립하며 다른 사람이 입장할 때는 이를 금한다. ‘만수무강’이란 말도 총비서 동지에 한하여 사용한다. ‘영도핵심’이란 말은 총대 당 중앙위원회 전체를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했으나 금후에는 총비서 동지에게만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금후 ‘김일성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시나 교시에는 총비서 동지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일곱째, 역사연구실을 매개 작업반, 직장, 기관, 학교에 신설하도록 하라.

위의 당 지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사상 이외는 어떠한 사상도 존재할 수 없고 모든 당원은 그의 노선에 충실할 의무만 있다고 한 것은 갑산파 숙청의 기본 원인과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군사파 내에서도 민족보위상 김창봉 등을 중심으로 한 정규전과 소련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중시하는 파와 항일 빨치산 출신의 오진우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전과 자주노선을 중시하는 파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대회를 개최하고 김일성의 신격화와 유일사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참모장 최 광, 대남공작책 허봉학, 인민군정찰국장 김정태 등 10여 명의 장성을 처형, 제거했다.<sup>28</sup>

요컨대 1960년대 북한은 중·소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여 대외적으로는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반대파를 숙청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대남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남침준비에 광분했다.

## 주(註)

-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서라별인쇄, 1990, 23~24쪽
- 2 이후 핵군축은 제1차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본회의가 1970년 4월 16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된 이후, 1971년 11월 15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우발 핵전쟁 방지를 위한 미·소 간 협정’이 양국 외무장관 간에 조인(1971. 9. 30)되기에 이른다.
- 3 제2차 세계대전 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은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점하자 뮌헨에서 이를 추인하면서 “영구적인 평화가 보장되었다.”고 선언하며 굴욕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 4 문화혁명을 끝내고 내부체제의 수습에 들어선 중국은 대체로 다시 안정을 찾았으나 이후 1971년 10월 마오쩌둥과 린바오 사이에 새로운 권력투쟁이 일어났고 린바오와 천빠오다(陳伯達) 등이 숙청되고 당의 실권과 권위는 마오쩌둥 일인지배체제로 확립되게 된다.
- 5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31~33쪽
- 6 베트남(Viet Cong) : 일반적인 지칭으로 ‘베트남 공산주의자(越南共產 : Viet Nam Cong San ; Viet Nam Communist)’로 인식되고 있으며, 약칭으로 ‘VC’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960년 12월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 National Liberation Front)’의 무장세력을 포함한 구성요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004, 79쪽)
- 7 뗏(Tet)은 음력 1월 1일로 베트남 최대의 명절을 말한다. 베트남인들은 이 날을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을 합한 만큼이나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은 통상 1월 1일을 전후해 1주일 이상의 휴가를 갖고 각종 민속행사를 치른다. 이 같은 정서에 따라 뗏 명절에는 전쟁초차도 1주일 휴전하고 명절을 즐겼다. 이를 위해 NLF는 미군과 통상 크리스마스와 음력설(舊正)을 기해 임시 휴전협정을 체결하곤 했다.(『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04쪽)
- 8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25~28쪽 ;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04~106쪽, 이후 1969년 1월 닉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베트남전 조기종결과 철군을 추진함에 따라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며, 미국은 1971년 말까지 약 10만 명의 병력만 잔류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시켰다.
- 9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38~40쪽
- 10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으로,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 거리를 연한 선으로, 이 선 이내의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 양국간에 마찰이 빚어졌으나, 1965년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었다.
- 11 이 부속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 12 외무부, 『60년대의 한국외교』, 1971, 131~145쪽
- 13 동 회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한국, 미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의 국가원수 및 수반이 참석했다.(외무부, 『60년대의 한국 외교』, 평화당 인쇄주식회사, 1971, 45쪽)
- 14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9.7%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1인당 GNP는 123달러에서 275달러로 증가했고, 수출은 2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한국은행 『조사통계연보』, 1971)
- 15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40~46쪽
- 16 국방부, 『북괴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1979, 69~70쪽
- 17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40~46쪽
- 1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350쪽  
1966년 6월 25일 북한 부수상 이수연(李周淵)이 이끄는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경제 및 기술협정(1967~70)을 체결했다. 또 같은 달 민족보위상 김창봉(金昌奉)이 소련을 방문하여 마리노프스키(Malinowski) 소련 국방상과 회담하면서 인민군의 장비현대화 문제 등을 협의했다.
- 19 『북한총람』, 350쪽. 이 때 1967~70년까지 8,900만 달러의 경제지원과 1억 7,800만 달러의 군사원조 협정을 맺었다.
- 20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48~50쪽
- 21 그러나 양국 관계는 1968년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1969년 10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이 중국 정권수립 제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악화된 관계는 완화되었다.
- 22 서효일, 『김일성 주체사상, 그 올바른 이해』, 도서출판 한원, 1989, 195쪽(저자 서효일은 육군 대령으로 국군정신전력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책을 썼다.)
- 23 『김일성 선집 제4권』, 1960, 326쪽
- 24 『김일성 주체사상, 그 올바른 이해』, 179~209쪽
- 25 4대 군사노선에 대해서는 제3장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 26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54쪽 ; 『김일성 주체사상, 그 올바른 이해』, 179~209쪽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281~282쪽
- 27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 제1집』, 1968, 435~436쪽
- 28 『대공30년사』, 284~285쪽



## 제 3 장

#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정책

제2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3절 북한의 대남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침몰 중인 당포함(1967. 1. 19)

## 제 3 장

#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이 장에서는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과 이어서 발생한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 한·미의 군사적·정치적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정책,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북한의 대략적인 군사능력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면서 특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북한군의 비정규전 전술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 제1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정책

#### 1. 북한의 대남전략 : 적화통일전략

북한의 일관된 대남전략은 '적화통일전략' 이다. 1960년 남한에서 '3·15부정선거' 에 항의하는 민중봉기에 이어 '4·19혁명' 으로 진보세력이 정계의 표면에 등장하면서 통일의 내용보다는 통일 자체를 중요시하는 감상적 통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자,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전략' 을 내세웠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으로 남한에 비타협적인 강력한 반공정권이 등장하자, 북한은 정치투쟁에 의해 남한을 적화통일하고자 했던 평화통일 공세를 후퇴시키고 '남조선혁명론' 또는 '민족해방전쟁론' 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1965년 들어 1962~64년 시기에 중단되었던 소련의 군사원조가 재개되고,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극도로 혼란한 상황은 북한에게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한·일조약이 체결되어 미국의 '동북아지역 통합전략' 이 실현되고, 북한의 정통성이 공식적으로 부인됨으로써 북한은 국제적 위신 하락과 체제존립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전쟁의 확대와 남한의 베트남 파병으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가혹한 노동력과 내핍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북한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누적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소련과의 관계 긴장으로, 후반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자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1965년 중반 이후 자주노선 강화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으며, 대남전략을 종래의 위장 ‘평화통일전략’에서 ‘폭력적 혁명전략’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의 일관된 무력지향노선의 배경은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과 ‘3대혁명역량강화론<sup>1</sup>’에서 유래되었는데, 3대혁명역량 강화란 ‘① 북한의 혁명기지화, ② 남한 내에 혁명역량 조성, ③ 국제정세의 유리한 여건조성’ 등을 말한다.<sup>2</sup>

## 2. 북한의 군사정책 : 국방자위와 4대 군사노선

북한이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한반도에서 공산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군사정책은 그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개할 방향과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방자위’와 ‘4대 군사노선’을 기본 군사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sup>3</sup>

1962년 ‘쿠바사태’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자국의 안전보장 강화와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 1962년 12월 10일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정책으로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 군사노선은 ① 전 인민의 무장화 ② 전 국토의 요새화 ③ 전 군의 간부화 ④ 군 장비의 현대화 등 4가지 지표를 말한다. 북한이 이를 정식화하여 표현한 것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였다. 이 때 김일성은 “군사력 강화방침을 몇 마디로 말하면, 인민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전체인민의 무장화, 온 나라의 요새화”라고 밝혔다.<sup>4</sup>

### 가. 전 인민의 무장화

1958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이 완전 철수하자 이듬해인 1959년 1월 14일 북한은 중국의 민병대를 모방하여 노농적위대를 창설함으로써 전 인민의 무장화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18~45세의 남자와 18~35세의 처녀 또는 독신여성들을 행정·직장 단위로 소대·중대·대대 등의 군사적 편제로 조직했다. 노농적위대의 병력은 최초 50만 명으로 출발했으나 1963년에는 1백여만 명으로 증원되었고, 1965년부터는 매일 1~2시간씩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또 농촌과 소규모 직장의 노농적위대원들은 경화기를 가지고 소대단위 훈련에 치중했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기업소의 대원들에게는 76mm 야포, 120mm 박격포, 14.5mm

고사포를 지급하여 대대·연대급 단위의 훈련까지 실시했다.<sup>5</sup>

노농적위대의 조직과 무장, 훈련은 점차 강화되었으며, 1970년에는 고등중학생 70만 명으로 조직된 ‘붉은청년근위대’ 까지 편성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킴으로써 전 인민의 무장화가 달성되었다.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이 노선이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인민이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sup>6</sup>

## 나.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국토의 요새화’는 북한 전 지역을 방위시설화하고 갱도 및 엄폐화함으로써 전 국토를 군사적 요새지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노선에 따라 각종 대피호 구축, 주요 산업 및 군사시설의 지하화, 도시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전략적 후방기지의 조성 및 전략물자 비축, 제 분야의 동원체제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강행했다. 또한 각종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는데, 각 도와 직할시 및 주요 시·군 단위와 산업지대에는 대규모 ‘반원자대피호’를 만들었고, 기타 시·군 단위와 각급 기관 및 기업소 또는 리(里) 단위로 지하벙커와 방공호를 만들었으며, 도시에는 지하도를 구축했다. 그리고 각종 병기공장과 전시전환이 가능한 공작기 공장을 비롯하여 탄약·유류 등의 군수물자 저장소와 군부대 지휘소, 항공기 격납고 등을 지하화했다. 또한 개마고원과 낭림산맥 일대의 내륙 오지를 ‘전략적 후방지대’로 설정하고 군사도로와 교량, 갱도와 산병호를 구축했으며, 전 휴전선에 걸쳐 콘크리트화된 지하갱도망을 구축했다.

1966년 4월 북한은 내각결정 45호에 따라, ‘도시인구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평양의 인구를 소개·감소시켰으며 각 성(省) 산하 원자재 전담부서들이 순천·강동·성천 등으로 옮겼고, 평양의 기계대학·체신대학·경공업대학 등이 희천·구성·신의주로 각각 분산 이전되었다.

## 다.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간부화’는 북한군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는 모든 장병들이 차상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의 간부화 정책은 전시에 초급지휘관의 소모를 신속히 보충하고 인민군을 골간으로 하여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를 전략 예비군으로 흡수하여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유사시 대병력을 쉽게 투입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전 군의 간부화를 지속 추진하여 정규군은 물론이고 노농적위대의 핵심대원에 대해서도 간부화 교육을 했다.

## 라. 군 장비의 현대화

‘군 장비의 현대화’ 노선에 따라 기갑·기계화 및 도하장비를 현대화했으며, 포병화력의

자주화 및 사정거리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도탄고속정과 잠수함 및 항공기를 도입하고 정보병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1966년에는 대소관계의 개선에 따라 W급 잠수함 2척과 KOMOR급 유도어뢰정, MIG-21 전투기와 SA-2 지대공유도탄, 그밖에 각종 고성능 전자장비가 도입되었다. 1968년 이후 신예장비의 도입은 더욱 활발해져 T-54·55·59 중형전차와 PT-76 경전차를 비롯한 대전차 유도탄 SNAPPER 및 FROG-5 등과 KOMAR급 및 OSA급 유도탄어뢰정과 상륙용단정 등을 도입 배치했고, AN-2 수송기, MIG-21 C·D·F형 전투기와 SU-76 전폭기 등을 도입했다.<sup>7</sup>

## 제2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1. 북한의 군사전략

#### 가. 북한의 군사전략 개관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소련식의 현대전략, 중국식의 유격전략, 6·25전쟁 경험, 그리고 베트남전 및 중동전의 교훈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전후 경제에 치중하던 정책을 1961년 중·소와 각각 동맹을 맺으면서 이때부터 보다 군사적인 것에 그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62년에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설정하고, 이와 동시에 노동당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최 현, 오진우 등의 항일유격대 출신의 강경파를 전면에 등장시켜 군사력 증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 강화정책을 추진한 북한은 1964년에 이르러 북한을 혁명기지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남 유격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북한은 종래의 소련식 기동속공전략과 섬멸전에 마오쩌둥의 유격전략을 결합한, 즉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을 기본 군사전략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1967년 중동전에서 전격전을 수행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북한은 이를 교훈삼아 그들의 군사전략을 전격전과 후방교란작전을 배합하는 전략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북한은 기갑부대와 전폭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습기동 및 속전속결과 공수특공대에 의한 후방교란을 배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8년 현대식 군사장비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규전 중시자들을 퇴진시키고 비정규전 중시자들을 중용했다.<sup>8</sup>

#### 나. 북한의 비정규전 전략

6·25전쟁의 교훈 1950년 말 국군 및 유엔군이 중국군 제2차 공세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할 때, 북한군은 제2군단 제10사단(약 6,000명)을 태백산맥을 연한 아군 후방으로 깊숙이 사전 침투시켜, 아군의 인천상륙작전 시 미처 월북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잔류했던 병력들과 합세하여 장차 이 축선으로 남진하게 될 제3·5군단과 연계하는 협공을 기도했다. 북한 제10군단 병력은 1951년 초 안동-군위 선까지 침투했고, 이때부터 중앙선은 무장경호 없는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유엔군은 1951년 1월 11일 마산에서 재편성 중이던 미 제1해병사단을 이 지역에 급파하여 2월 초까지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북한은 유엔군, 국군, 전투경찰 등 총 6만 5천명 병력의 전선투입을 방해하는데 성공했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북한은 비정규전을 그들의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싸움의 한 기본 형태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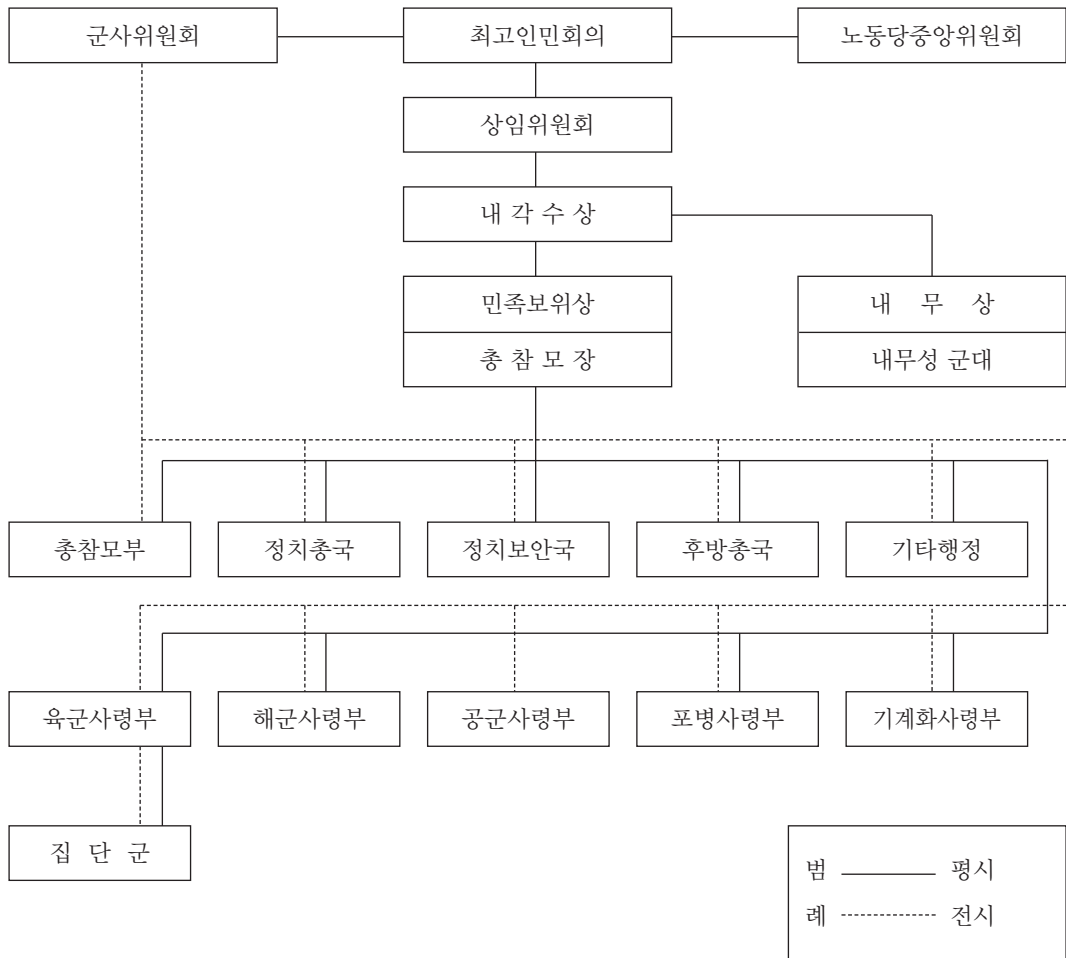
북한은 정규군의 남침과 동시에 유격부대를 지상은 물론 해상 및 공중으로 침투시켜 남한의 각 지역을 교란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전선의 정규전 병력의 우세를 달성하는 동시에 남한 후방의 인적, 물적 기초를 파괴하여 사회질서와 민심을 교란시키고, 심리적으로는 군의 사기와 국민전체의 전의(戰意)를 저하시키고자 기도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군의 기동공격, 침투분할, 진지전 등 대유격전을 습득했으며, 제공권을 일방적으로 유엔군에게 피탈당한 상황에서 야음을 적절히 이용하는 전술도 터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세장형(細長形) 반도라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적 후방지역 교란이 갖는 이점, 즉 정규전은 유격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교훈을 6·25전쟁을 통해 얻었다.

이에 북한은 남한에 동요가 일어났을 때 속전속결 기습작전에 의한 무력남침을 자행하기 위해 정규전 능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전면전과 병행하여 비정규전 측면을 중시하는 교리의 개발과 함께 유격전 수행에 필요한 경비병부대의 창설, 무기의 경량화,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들 게릴라 부대의 침투수단을 크게 보강했다. 북한은 1966년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비정규전 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하여 집단군 도보정찰부대, 283군부대, 124군부대, 특수8군단 등 특수부대를 지속적으로 증·창설하여 1969년까지 2만여 명으로 증강했다. 그리고 비정규전군의 공중침투용으로 AN-2수송기를 비롯한 각종 수송기를 계속 도입했다.<sup>9</sup>

## 2. 북한의 국방기구 및 지휘체제

북한의 권력체제는 외형상으로는 3권분립체제로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국가 최고기관이자 대표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초헌법기관인 조선노동당이 ‘권력의 원천체’로서 헌법상 통치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당외곽기구, 군사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당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sup>10</sup> 당시의 국방기구 및 지휘체제는 아래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북한의 국방기구 및 지휘체계<sup>1)</sup>



- \* 김일성 :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수상
- \* 김창봉 : 민족보위상
- \* 최 광 : 총참모장



### 3. 북한의 군사력 개황 및 군사동향

#### 가. 북한의 군사력 개황

북한은 휴전협정 조인 이래 재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북한인민을 총동원해 왔으며,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4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군사력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1967년 말을 기준한 북한의 군사력을 개관해 보면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북한의 군사력 현황<sup>12</sup>

1. 육군 : 5개 집단군, 20개 사단, 5개 여단 병력 367,000명 각종 포 7,146문(203mm 포 24문 포함) 전차 866대(TS-2, 3형(中) 96대 포함) 지대공 유도탄 30기(SA-2형) 지대지 유도탄 18기(KENNEL S형)
2. 해군 : 4개 기지, 20개 전대, 1개 잠수함 기지 병력 10,500명 전투함정 100척(50~400톤급) 보조함정 66척(20~540톤급) 잠수함 4척(1,030톤급) 계 170척(16,250톤)
3. 공군 : 4개 전투기사단, 1개 폭격기연대, 1개 정찰기연대 병력 35,000명 항공기 680대(제트기 591, 프로펠러기 89대)
4. 총병력(현역) : 412,500명
5. 준군사부대 : 1,026,500명 각종 경비대 26,500명 노농적위대(18~45세) 1,000,000명

#### 나. 북한의 군사동향

북한은 1960년대 들어 남침준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1968년 초를 기준으로 한 군사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① 1961년에 소련 및 중국과 각기 우호조약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자유진영에 대한 집단 공격력을 강화시켰다.

② 1962년 이래 소련 및 중국의 군사원조하에 미그 전투기, 유도탄, 곡사포, 신형함정 등 많은 장비를 현대화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③ 인민군은 군사훈련을 강화했고 특히 1966년에는 군단을 해체하여 집단군이 직접 사단을 통할하는 지휘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1968년 초에 전선의 제4, 5집단군이 대규모 공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남 침략에 대비한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④ ‘전 국토의 요새화’ 전략에 따라 1962년 말까지 전 전선의 지하갱도(콘크리트) 방어진지를 구축 완료하고, 1965년부터는 자강도, 함경남도의 산간 지대에 군사도로와 교량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후방 주요 군수공장 및 산업시설, 비행장, 주요항만 등을 요새화하고 있다.

⑤ 1959년 말 ‘노농적위대’ 창설 이래 1966년까지는 30% 무장, 주 2시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1965년부터는 전원 무장과 동시에 매일 1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규군과 거의 맞먹는 전투력을 배양하고 있다.

⑥ 6·25때의 교훈을 거울삼아 방공, 대피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제3절 북한의 대남전술과 대남공작기구

### 1. 북한의 대남전술 변화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1958년부터 이미 '1970년대의 통일'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계속적으로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전술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용공세력의 등장, 남북협상 기운의 고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는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새로운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하면서 위장 '평화통일'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권의 우유부단한 용공정책으로 북한의 평화공세에 귀를 기울이는 친공세력이 점차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5·16군사정변'이 성공함으로써 남한에 용공세력이 분쇄되고 대남공작 기반이 파괴되었다.

1963년,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이 수립되어 정치적 안정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북한은 종전의 '평화통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1965년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대남공작을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화시켜 종전의 소극적이었던 대남공작을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즉 '4대 군사노선'의 강화로 자체 역량을 비축하면서 과거의 도시 중심의 점조직 공작에서 마오쩌둥 전술인 농촌 중심의 공작으로 전술을 전환하여 농촌 혁명화를 통한 도시 포위를 꾀했다.

그리고 종전의 장기 공작방법을 지양하고 대체로 3인을 1개조로 하는 공작조를 편성, 남한에 침투시켜 주민을 포섭하고 포섭된 자를 대동 월북케 하여, 북에서 밀봉교육을 시킨 후 이들을 재남파하는 방법을 썼다.

1966년에는 무장공비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평북 청진과 평남 상원 등지에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집단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종래의 밀봉교육을 통해 사상교육 위주로 하던 것을 1966년부터는 육체적 훈련으로 전환했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대남공작은 주관적·객관적 정세에 응하여 정치투쟁, 경제투쟁, 폭력투쟁, 합법투쟁 등의 각종 전투형태를 야합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폭력적인 대남투쟁전술을 강조했다.<sup>14</sup>

### 2. 1960년대 유격전

북한의 대남투쟁 방식은 합법투쟁, 평화투쟁, 폭력투쟁, 유격투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60년대의 유격투쟁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휴전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대남 평화공세를 끈질기게 벌이면서 완전 파괴된 지하당의 재건공작에 주력했다. 그러다가 1965년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대남무력투쟁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벌이고 있는 유격전을 본받아 앞으로의 대남공작은 공세적인 전술을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소조활동을 전개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의의가 큰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농촌으로부터 점차 도시로 침습해 들어가는 대남공작 전략을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수의 소조를 남파하여 종전의 은밀활동에서 반공개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 가. ‘283군부대’의 유격활동

북한은 남한에서의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1966년 5월 16일 평양시 승호구역에서 민족보위성 경찰국 직속으로 283군부대를 창설했다. 283군부대는 민족보위성 경찰국과 공수정찰대대의 약 20~27세 되는 상사급과 전사급에서 엄선된 북한 출신자들로 조장요원은 대남공작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 유격요원에 대한 훈련은 5개 훈련기지에서 집단훈련을 시킨 후 평남 회창군 소재 각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했는데 주로 중요시설 습격, 납치 등의 유격훈련에 치중했다.

훈련을 마친 이들은 1967년 5월 하순부터 7~10명의 유격조를 편성하여 동·서해안으로 연속적 침투를 감행했다. 이 유격소조의 임무는 남한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기에 앞서 산악지대에 유격근거지를 구축하고 주민 2~3명을 포섭하여 조직책을 만든 후 북한의 무전지시에 따라 복귀하는 것이었다. 유격근거지는 태백산맥에 4개소, 지리산 일대에 4개소를 각각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sup>15</sup> 그러나 283군부대는 침투초기부터 아군의 대간첩작전에 의해 생포·사살되어 전멸했고, 그들의 공작기도도 완전 노출되고 말았다.

### 나. ‘124군부대’의 유격활동

북한은 283군부대가 구축한 밀거지를 거점으로 한 유격전 전개를 위하여 1967년 5월 민족보위성 경찰국 직속으로 283군부대와 별도로 124군부대라는 유격전 전문부대를 창설했다. 이는 283군부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남유격투쟁을 계속 강행하기 위해서였다.

124군부대 요원은 전부가 노동계급 출신의 공산당원으로서 남한에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고참병으로 283군부대와 도보정찰소<sup>16</sup>의 신체건강한 정예분자들을 선발했다. 124군부대는 약 2,400명으로 이들은 6개 기지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기지별로 각도를 담당하여 공작임무를 부여 받았다. 특히 이 부대는 지원역량인 지하조직이 없고 항상 엄중한 경비하의 목표물을 습격해야 한다는 악조건 때문에 결사적인 특공전술을 숙달했다. 각개훈련은 분대단위로, 유격

훈련은 소대·중대 단위로 실시했으며 기지 단위로 야영하면서 습격훈련에 치중했다. 또한 4~5명 1조의 분대원이 2~4회 정도 남방한계선까지 비밀정찰을 하거나 남방한계선에서 주간 속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유격조는 남파임무를 부여 받은 후는 가상목표를 설정하고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훈련을 했다.

유격조 편성은 침투 시의 장애를 제압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대병력으로 편성했고, 단시간 내에 기습작전을 완수하고자 기습목표를 분할 선정하여 조별로 이를 담당케 했다. 그 가운데 1개 조는 남한 내에 전국적인 대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청와대 습격훈련을 실시했다. 그 외에 각 조는 목표물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마치 남한 내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뼈라를 산포하는 정치공작훈련도 실시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1967년도에 다수의 유격전 준비공작을 감행하였으나 결정적 타격을 입음으로써 대남 유격전 연차계획에 일대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실패여하에 개의함이 없이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을 통해 남한에 전국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대남유격전의 본격화를 촉진코자 했다.<sup>17</sup>

### 3. 1960년대 대남공작기구의 변천

휴전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는 노동당 연락부, 민족보위성 정찰국, 내무성 반탐정처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61년 1월경 이들 대남공작기구를 통합하여 노동당 ‘연락국’으로 승격 개편하고 초대 국장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순(李孝淳)을 임명했다.

북한은 1964년 2월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그들의 대남전략을 무력통일 전략으로 전환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동당 연락국을 ‘대남사업총국’으로 개편하고 남한혁명의 역량 축적에 주력했다.

1967년 5월,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사업총국장 이효순에게 대남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워 숙청하고 정치총국장 허봉학(許鳳學) 육군대장을 등용했다. 그리고 283군부대와 124군부대를 창설하여 1968년도에 청와대를 기습하고, 울진·삼척지구에 대량 침투시켜 유격전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대남공작의 실패가 거듭되자 북한은 대남사업총국을 폐지하고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두어 김일성이 이를 직접 장악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그리고 1968년 11월 또다시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대장을 숙청하고 그 후임으로 노동당 문화부장이던 일본 공산당 출신 김중린(金仲麟)을 대남사업담당비서로 임명했다.

1969년도에 접어들어 북한은 대남공작기구 및 간부 개편과 더불어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에 198군부대와 907군부대(의거자 정치학원)를 신설하여 특수공작을 담당케 했다. 또한 북한은 지원역량으로 5개 집단군에 정보병연대를 창설하여 능력을 재정비하고 공작전술의 다양화, 고도화, 폭력화를 꾀했다.

이어서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에서 채택된 폭력전술방침에 의거 종래의 특수부대들을 통합정비했다. 124군부대, 17정찰여단 등 병력 16,703명으로 경찰국 산하에 특수 8군단을 창설했으며, 전방지역 3개 집단군에 경비병 연대와 도보경찰소 일부를 통합하여 경비병여단을 창설했다. 특수 8군단은 지상은 물론 해상 및 공중침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유격전 및 정규전과의 배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집단군 예하의 경비병여단은 전방 3개 집단군에 각각 2개 여단이 편성되었으며 1개 여단의 병력은 3,200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족보위성의 특수부대 편성, 283군부대, 124군부대의 편성은 도표 <3-3>와 같다.<sup>18</sup>

도표 <3-3> 민족보위성의 특수부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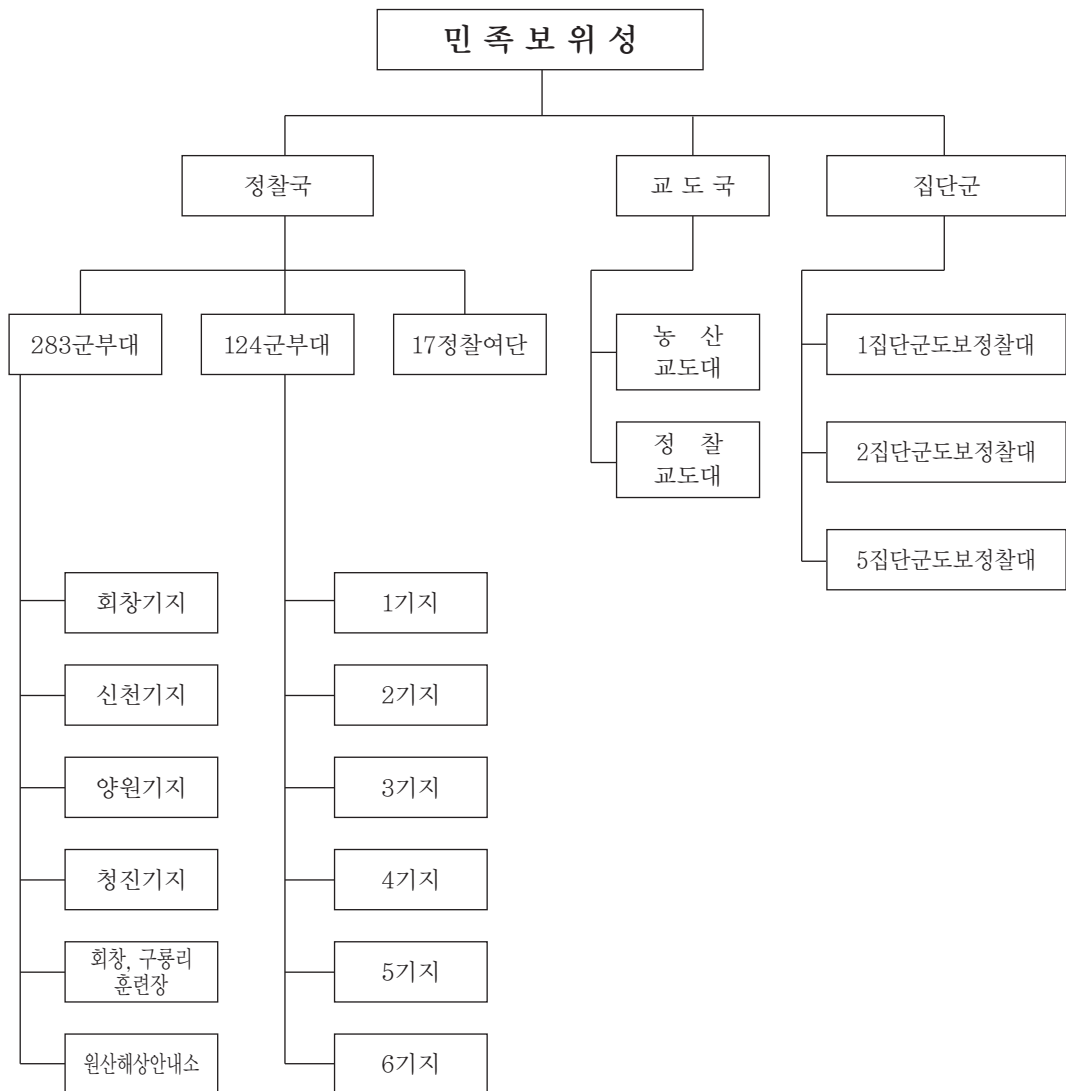


도표 <3-4> 283군부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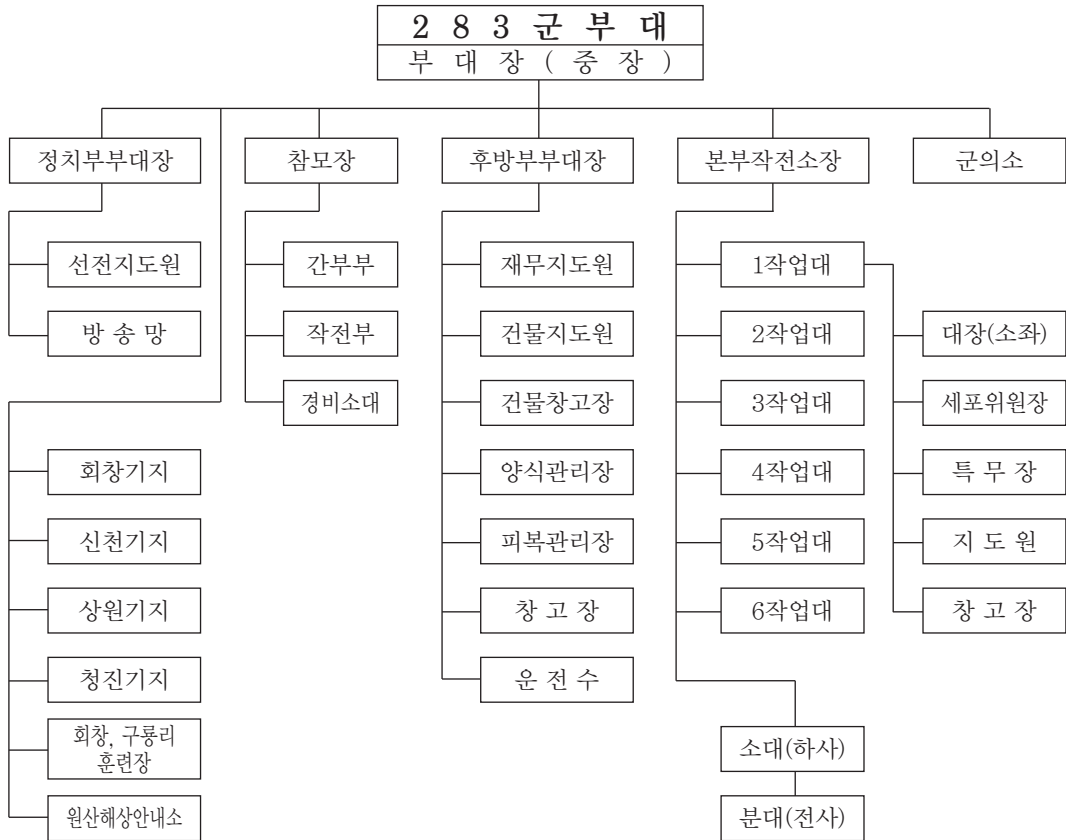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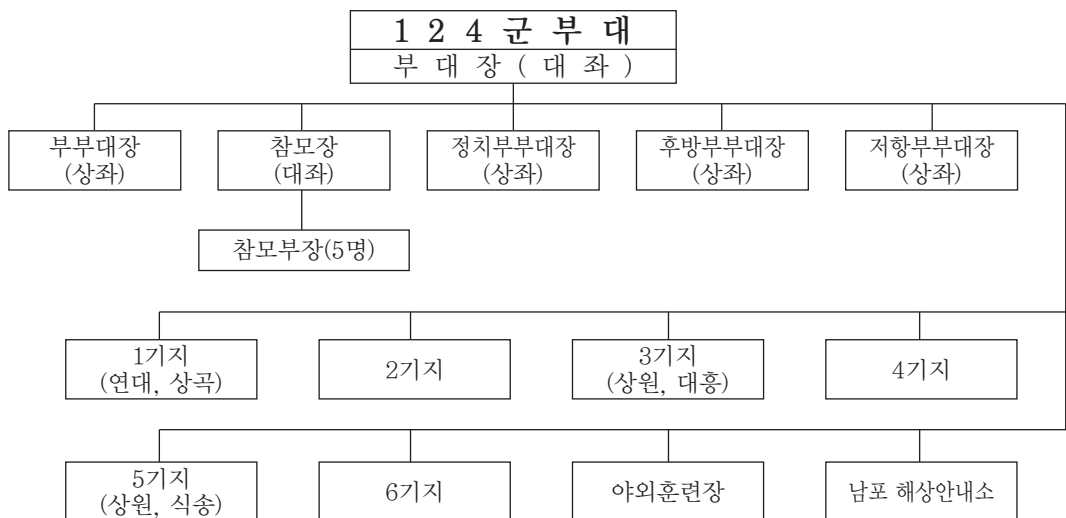


도표 <3-5> 124군부대 편성



## 주(註)

- 1 육군본부, 『간첩침투사건 편람 II 집( 53~ 68)』, 1986, 18쪽, 이 노선은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2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53쪽
- 3 『북괴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113쪽 ; 『국방사 제3권』, 52쪽
- 4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72~273쪽
- 5 강인덕, “예상되는 북괴의 동향”, 『한국 안전보장 논총 제3집』, 1971, 319쪽
- 6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54~55쪽
- 7 『북한총람』, 514~544쪽 ; 육군본부, 『북괴 4반세기 분석』, 1972, 590쪽 ;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55~57쪽
- 8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370~373쪽
- 9 『국방사 제3집』, 372~373쪽
- 10 이후 북한은 1972년 헌법을 개정, ‘국가주석’ 직위를 신설하여 국가수반으로 하고, 국가주석 예하에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노동당중앙위원회 및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와 내각의 중추적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당·정 연합체가 국가주석을 보좌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성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 내에 국방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을 통치하는 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으며, 민족보위상을 인민무력부장으로 개칭했다.
- 11 국방부, 『국방백서 1967』, 삼성인쇄, 1967, 49쪽
- 12 국방부, 『국방백서 1968』, 삼본문화, 1968, 43~44쪽
- 13 『국방백서 1968』, 44~45쪽
- 14 『대침투작전사(전사연구 제6집)』, 48~63쪽
- 15 이는 북한이 남한에서 ‘체 게바라식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초기에는 깊은 산중에 설치된 근거지에 잠복해 있다가 기회를 이용하여 기습을 감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격투쟁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규합하면서 투쟁세력을 확대하여 점차 민가가 있는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주민과 접촉한다. 그리고 대중정치공작을 통해 이들 주민들의 유격전 참가를 증대시키고 이들에게 정보망을 부식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기습 테러, 파괴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부는 분봉하는 식으로 이른바 ‘미해방지구’에 파견하여 주민들을 포섭하여 유격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하여 최종 단계에서는 도시주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중화기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정규전으로 발전시켜 적화혁명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체 게바라의 혁명이론은 벽지 농촌을 근거지로 하여 게릴라전을 벌여 농민을 포섭·규합하여 정부군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혁명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1956년 11월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는 약 100명의 게릴라를 인솔하여 멕시코 대서양 해안에서 출발, 쿠바로 침투하여 유격근거지를 구축한 후 이를 점차 확대하여 결국 쿠바혁명을 성공시켰다.
- 16 최초 민족보위성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62년 11월 제1, 2집단군에 소속 변경되어 휴전선을 중심



으로 한 정찰활동 및 군사정보 수집, 통로개척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1963년 7월경 다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7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전사연구 제6집)』, 1978, 78~80쪽

18 『대침투작전사(전사연구 제6집)』, 102~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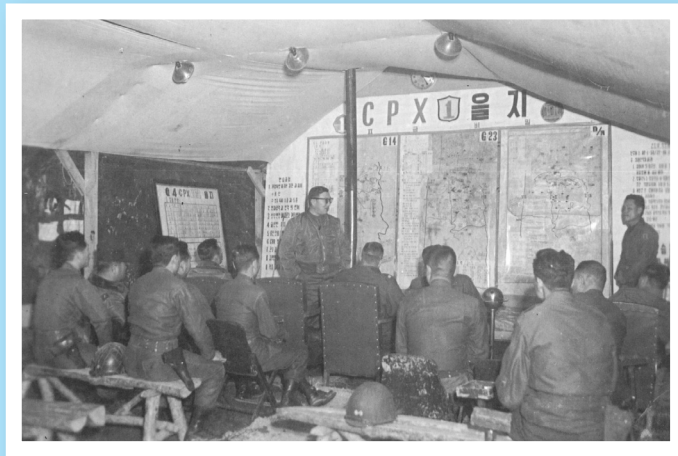
## 제 4 장

# 국방정책과 군사대비태세

제1절 국방정책

제2절 국방 조직과 군의 전력

제3절 군사대비태세



제1군사령부 을지연습 지휘소훈련 강평(1967. 2)

## 제 4 장

# 국방정책과 군사대비태세

196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4·19혁명’ 결과 수립된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5·16군사정변’에 의한 군부세력의 집권과 2년 7개월간의 군정, 그리고 제3공화국의 탄생을 겪는 격동기를 겪었다.

이러한 격변기에 탄생한 제3공화국의 국방정책은 ‘반공’을 국시로 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자유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간접침략을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우리의 국방여건과 국방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방조직과 지휘체제, 군의 전력, 그리고 군사대비태세에 중점을 두어 기술했다.

### 제1절 국방정책

#### 1. 국방여건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륙세력에게는 해양진출의 발판으로서, 그리고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환경은 주변국과 남·북한의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의 한반도의 군사환경은 동·서양 진영이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전략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국방은 1960년대 후반기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의 병력은 60만을 계속 유지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비 총액(1964년)의 60% 이상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여 왔으며, 장비는 물론이고 장비의 운영유지비까지도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로 충당했고, 한국정부의 예산으로는 겨우 병원유지를 위한 급식과 급여 정도를 감당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국방비의 자주적 부담 비율이 점차 늘어나 1968년도에 들어서는 국방비 총액의 50%선을 넘게 되었다.<sup>1</sup>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6·25전쟁 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래 계속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었다. 국방운영은 국방의 기초가 되는 기획·계획 기능이 결여된 채, 다만 현존 군사력 수준의 유지를 위해 매년 미국이 배정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군사력건설을 위한 장기 정책·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실존하는 북한의 무력위협과 도발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정보지원을 받아 이를 평가·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었다.<sup>2</sup>

## 2. 국방정책

국방정책은 국방을 위한 군사력의 건설,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국가의 방침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안보환경, 위협의 실제, 그리고 자국의 국력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1960년대 국방부는 “평시 전쟁억제와 평화보장, 전시 격퇴와 반격으로 실지회복과 국토통일을 기한다”는 국방목표를 세우고,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대비한 대북한 군사대비태세 완비”로 설정했으며, 국방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국방목표를 설정해 나갔다.

1968년도의 국방목표는 ① 임전태세의 확립 ② 정신무장 및 교육훈련의 강화 ③ 장비의 현대화 ④ 잠재전력의 배양 ⑤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⑥ 자유우방국가와의 군사유대 강화 및 베트남전의 계속 지원 ⑦ 국가적 개발계획 지원 및 사회문화 향상에의 기여 등으로 설정되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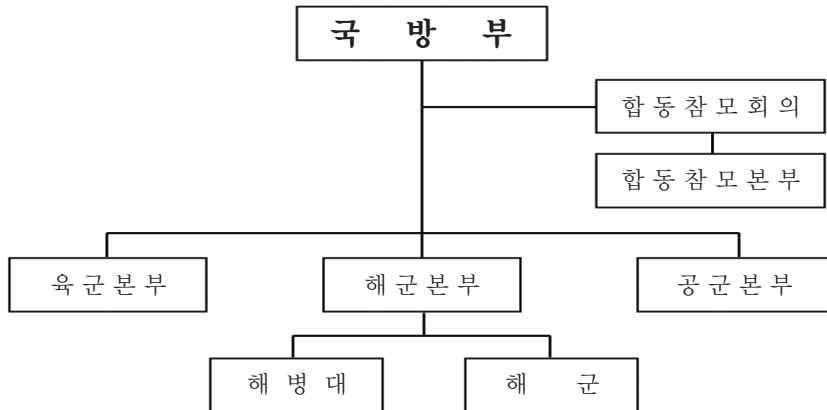
## 제2절 국방 조직과 군의 전력

### 1. 국방 조직

#### 가. 국군의 조직

1960년대 국군의 조직은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탄생,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베트남 파병, 그리고 북한의 도발 격증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발전했다. 1·21사태 발생 당시의 국군의 조직은 1963년 전문 개정된 국군조직법(법률 제1343호)에 기초하여 편성되어 있었다.<sup>4</sup> 당시 국군의 조직은 도표<4-1>과 같다.

도표 <4-1> 국군의 조직도



직책	계급	성명	재임기간
국방부장관		김성은	1963.3.16~1968.2.27
합참의장	육군대장	임충식	1967.4.10~1968.8.6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심홍선	1967.1.10~1968.8.6
육군 참모총장	육군대장	김계원	1966.9.2~1969.8.31
해군 참모총장	해군대장	김성관	1966.9.1~1969.4.1
공군 참모총장	공군대장	장지량	1966.8.1~1968.7.31
해병대사령관	해군대장	강기천	1966.7.1~1969.6.30

합동참모회의는 군령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군령 관련 심의기관으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즉, 전략지침, 전략계획,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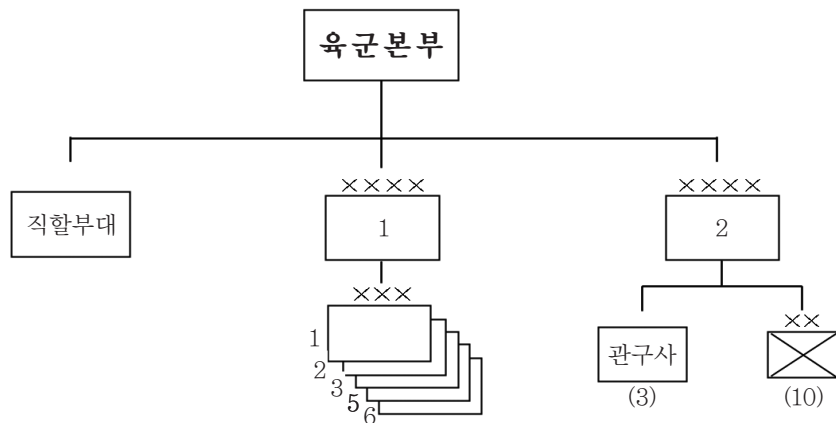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두었으며, 이 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sup>5</sup>

합동참모회의의 위원은 합동참모회의의 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고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 나. 육군의 조직

육군은 1967년부터 지휘조직의 합리화와 작전지휘체통의 전력화 및 기동능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육군 전반에 걸쳐 편제 조정작업을 하여 동년 11월 1일 완료했다. 육군의 편성은 도표<4-2>와 같다.<sup>6</sup>

도표 <4-2> 육군의 편성



#### ◇ 군단 및 예하사단 편성

구 분	제1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5군단	제6군단
군 단 장	중장 김재명	중장 노재현	중장 최세인	소장 이민우	중장 이세호
예하사단	3개 사단	3개 사단	3개 사단	4개 사단	4개 사단

\* 사단 명칭은 오늘날의 편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안상 미 기록

◇ 3개 관구사령부

관구사명	제3관구사	제5관구사	제6관구사
예하사단	37, 51사단	36, 39, 50사단	30, 33, 38사단

◇ 10개 예비사단

사단명	30	33	38	37	51	35	31	36	50	39
책 임 지 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북부)	경북 (남부)	경남

◇ 수도권경비사령부 : 제30보병대대(경북궁 위치), 제33보병대대(경기도 소사 위치), 제5헌병대대, (육본 직할) 제822수송중대로 편성

## 2. 지휘체계

당시의 지휘체계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을 통해 국군을 지휘감독했고,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대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부대에 대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동참모회의는 심의기구로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참모회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1950년 7월 17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래 한국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도 군에 대한 공식적인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국방부장관과 각군 총장은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간첩작전은 거의 한국군이 관장하고 있었고,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었다. 1968년 2월 2일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의 '무장공비의 침입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대간첩작전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이 부대를 이렇게 옮겨라, 저렇게 옮겨 달라고 얘기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최대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sup>7</sup>라고 보고한 바 있다. 군의 지휘관계를 도표화하면 도표<4-3, 4>와 같다.

도표 <4-3> 국군의 지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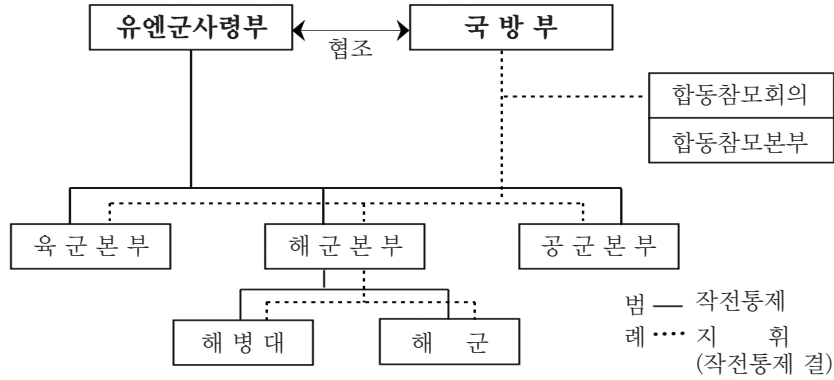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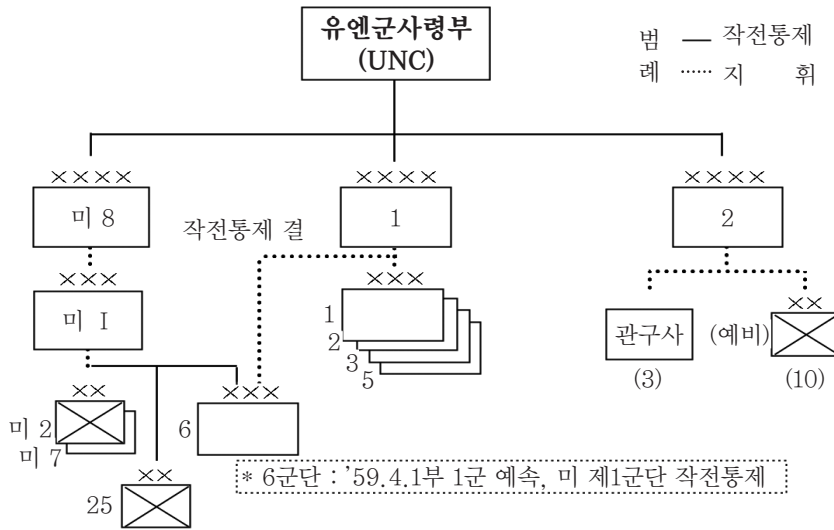


도표 <4-4> 한·미 지상군의 지휘관계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의 한국군 해병여단과 제25사단을 직접 작전통제하고 있었으며, 한국군 제6군단과 그 예하의 제20·26·28사단은 6군단을 통해서 작전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1군단 산하의 모든 한국군에 대한 인사, 행정, 군수지원은 한국군 제6군단이 담당하고 있었다.<sup>8</sup>

### 3. 군의 전력(총 병력 : 62만 6천 8백 명)<sup>9</sup>

#### 가. 육군

육군은 5개 군단, 27개 사단(전방사단 17, 후방예비사단 10)으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54만 8천 6백 명이었으며, 주요 전투장비는 도표 <4-5>와 같다.



도표 <4-5> 육군의 주요 전투장비<sup>10</sup>

기 동	화 력	방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차 853대</li> <li>장갑차 329대</li> <li>전투용 차량 545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포 1,725문</li> <li>박격포 5,650문</li> <li>무반동총 1,965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공미사일 84기</li> <li>대공포 88문</li> </ul>

나. 해 군

해군의 병력은 5만 천 명이었으며, 주요 전투장비는 도표 <4-6>과 같다.

도표 <4-6> 해군의 주요 전투장비

합 정 종 류		척 수	합정종류	척 수
계		247(척)		
전투함	소 계	24	수송함	7
	구축함	2	상륙함	20
	호위구축함	3	상륙(주)정	108
	초계호위함	4	소해함	11
	호위초계함	4	경비정	4
	경비통제함	4	고속정	3
	구잠함	3	지원함/기타	70
	중형구잠함	1		
	호위소해함	3		

다. 공 군

공군의 병력은 2만 7천 백명이었으며, 주요 전투장비는 도표 <4-7>과 같다.

도표 <4-7> 공군의 주요 전투장비

항공기 종류	대 수	항공기 종류	대수
계	428(대)		
전투기 F-5A, F-86F	164	수송기 C-46D, C-54D	38
요격기 F-86D	26	연락기 L-19A, L-26A, LC-180	18
정찰기 RF-86F	105	구조기 H-19B/D, UH-1H	12
훈련기 T-33A, T-28A, F-5B	65		

## 제3절 군사대비태세

### 1. 대비방향

1960년대 군사전략은 한·미 연합방위전략에 입각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미 본토로부터의 전력증강을 기초로 수립된 것이었다.<sup>11</sup> 이러한 개념하에 군사대비태세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며 평화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전면전 대비태세**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기습 및 배합전에 의한 단기속결전을 감행하여 한국군의 전력을 수도권 전방에서 분쇄하고 조기에 서울을 고립시킨 후 계속적인 기동으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이전에 한반도를 석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공격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태세는 한·미 연합으로 지·해·공 합동작전태세를 확립하여 수도권 전방에서 적을 저지·격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기경보태세를 완비하고 초전 즉응태세를 유지함과 아울러 수도권 및 후방지역 방어태세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국지도발 대비태세** 북한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국지도발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강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아울러 예상되는 각종 국지도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지·해·공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비정규전 대비태세** 1960년대 한층 강화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조된 공동방위체제를 갖추고, 특히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간첩대책본부의 창설과 향토예비군 창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다.<sup>12</sup>

### 2. 비정규전 대비태세

우리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자 1965년 북한은 한반도 휴전선에서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켜 파병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간접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무장공비 침투를 강화하고 있었다.

베트남 파병 본격화 이후 북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북한군의 적극적인 도발동향 보고에 긴장했다. 그리하여 1967년 각 군 초도순시 때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군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선 도발뿐만 아니라 해상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근처에서의 조업어선 피랍, 해안침투 등 그 도발형태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격렬해져 갔다.

1967년 10월초, 윤필용 방첩부대장<sup>13</sup>은 북한이 특수부대인 124군부대를 창설했다고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북한은 1967년 5월경 124군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이 부대는 남한의 각 도에 비밀기지를 설치하고 무기·식량을 조달하면서 게릴라전법으로 남한 현지에서 무장투쟁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대는 신체조건이 뛰어나고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전원 정규군 장교 출신들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남한의 8개 도(道)(제주도 제외)에 각 300명씩 침투시킬 목적으로 총 2,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함경도·평안도·강원도 등의 훈련기지에서 폭파·파괴·방화·살인·암살·납치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sup>14</sup>

### 가. 대통령훈령 제18호 제정

이와 같이 격렬해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군 및 관계기관의 대간첩작전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부는 196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17호로 “대간첩봉쇄대책위원회”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했다.<sup>15</sup>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참모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각 군(해병대 포함), 내무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했다. 이 위원회는 대간첩작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기초하여 “대통령훈령 제18호 : 대간첩봉쇄지침”(1967. 12. 15)이 마련되어 1967년 12월 15일 공포되었다. 이 지침에는 북한의 대남침투공작에 대처하여 이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군의 유기적인 지휘 및 협조체제, 휴전선 일대의 봉쇄책, 해상 및 해안 봉쇄책, 후방지역 각군 부대 사용지침, 국가중요시설 경비강화책, 전투경찰 배치 및 효과적인 운용, 통신운영 개념, 추가 장비 및 물자 소요, 각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sup>16</sup>

### 나. 비상치안회의 개최

정부는 1968년 1월 6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치안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북한의 도발준비 상황과 대통령훈령 제18호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전 각료들이 단단한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회의를 준비하라.”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야전군사령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및 대공분실장, 임충식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전국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등 173명의 인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전 국민, 전 국가기관이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전국 각도의 도지사, 검찰까지도 참석시켰다.

이 회의 개식사에서 박 대통령은 “금년 1968년도는 전년도보다 열 배 이상의 무장간첩이 남하할 것인데 이는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욱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예견된다.”고 경고하고, “북괴 만행을 봉쇄하고 무장간첩을 섬멸하는 데 있어 유의할 일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범국민적 대간첩작전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해 향토방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법을 잘 운용하여 지방 주민의 승공정신을 강화하고 지역적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중앙정보부 강인덕 분석과장이 ‘최근 북한의 대남침투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때 강 과장은 “이번 1월부터 시작될 동계작전은 종래와 다른 대규모 게릴라작전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 이후 북한의 도발이 점차 극렬해져 1967년에는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자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구체적 주요사건, 즉 1967년 발생한 해군 56함 피격사건(1967. 1월), 중부전선 203초소 습격사건(1967. 2. 3), 판문점 후방 미군막사 습격사건(1967. 8. 28), 경원선 철로 폭파사건(1967. 9. 5), 경의선 철로 폭파사건(1967. 9. 13), 임진강 미군 경비병 피습사건(1967. 10. 6), 동해 어선 228호 피랍사건(1967. 11. 3), 신광호 및 대광호 등 어선 7척 피랍사건(1967. 12. 6) 등 10여 건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대간첩작전 시 중앙정보부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며, 더 이상 군 작전에 월권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년도 대간첩작전 실적보고와 박 대통령의 작전지침 강조, 그리고 대간첩작전의 작전지휘 단일화 문제, 육·해상으로 침투하는 무장공비 봉쇄를 위한 각 군의 협조 및 민간방위체제 강화 문제, 주요 산업과 병참시설 보호방안, 향토방위법 제정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그리고 대간첩대책본부 창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간첩대책본부 실무팀은 각군의 정보국장(군), 치안국 정보국장(경찰), 중앙정보부 국장(중정), 검사장(검찰) 등으로 하고 적의 침투 상황에 따라 대처할 작전의 강도를 구분했다.

즉 1~2명의 간첩 접선 등 가벼운 사안은 대간첩대책본부에 알릴 필요 없이 해당기관에서 처리한다. (‘갑종사태’) 무장공비 5~10명 정도의 소규모로 한 지역 내지 두 지역 출몰 시에는 ‘을종사태’로 하여 전투경찰대, 중정, 필요시 군에서 출동 지원한다. 무장공비 수가 20명 이상으로 군이 아니고는 섬멸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병종사태’로 하여 군이 담당하고 경찰, 중정은 협조하기로 하는 등 상황별 대처 방안을 확인했다.<sup>17</sup> 이 회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했다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대통령 훈령 제18호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행을 강조하는 회의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제반 조치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 주(註)

- 1 『국방사 제3집』, 253쪽
- 2 『국방사 제3집』, 16~17쪽
- 3 『국방백서 1968』, 49쪽
- 4 국방부, 『국방조직 변천사』, 1992, 63~64쪽
- 5 법률 제1343호(‘국군조직법 개정법률’ : 1963. 5. 20) 제12·13조
- 6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970』 127, 287~293쪽 ; 육군본부,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상권 7~8쪽
- 7 국회사무처, “제63회 국회회의록 제2호”, 1968. 2. 2, 54쪽
- 8 이세호,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대양미디어, 2009, 356쪽, 이세호 중장은 당시 6군단장으로 대간첩작전을 현장 지휘했다.
- 9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970』, 127, 287~293쪽 ;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상권, 7~8쪽, 하권, 11쪽
- 10 해병대의 병력은 해군에, 주요 지상전투장비는 육군에 포함했다.
- 11 그러나 1969년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후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고 155마일 전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자, 전시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면 수도서울이 휴전선에 너무 가까워 적의 포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취약점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전쟁발발 시 전방에서 초전 방어 후 반격한다는 개념의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했다.
- 12 『국방사 제3집』, 388~389쪽
- 13 육군 방첩부대는 1968년 9월 23일 육군 보안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4 김성은,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템플 코리아, 2008, 771~772쪽
- 15 국방부, 『국방조직 변천사』, 1992, 989쪽
- 16 합동참모본부, 『합참사 1948~1981』, 1982, 435~453쪽(대통령훈령 제18호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 17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77~778쪽, 사건 당시에는 위협의 정도가 낮은 사태 순으로 감중사태-을중사태-병중사태로 구분했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병중사태-을중사태-감중사태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김 전 장관이 회고록을 집필한 2008년 당시에는 위협정도가 낮은 순으로 병중사태-을중사태-감중사태 순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착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제 5 장

#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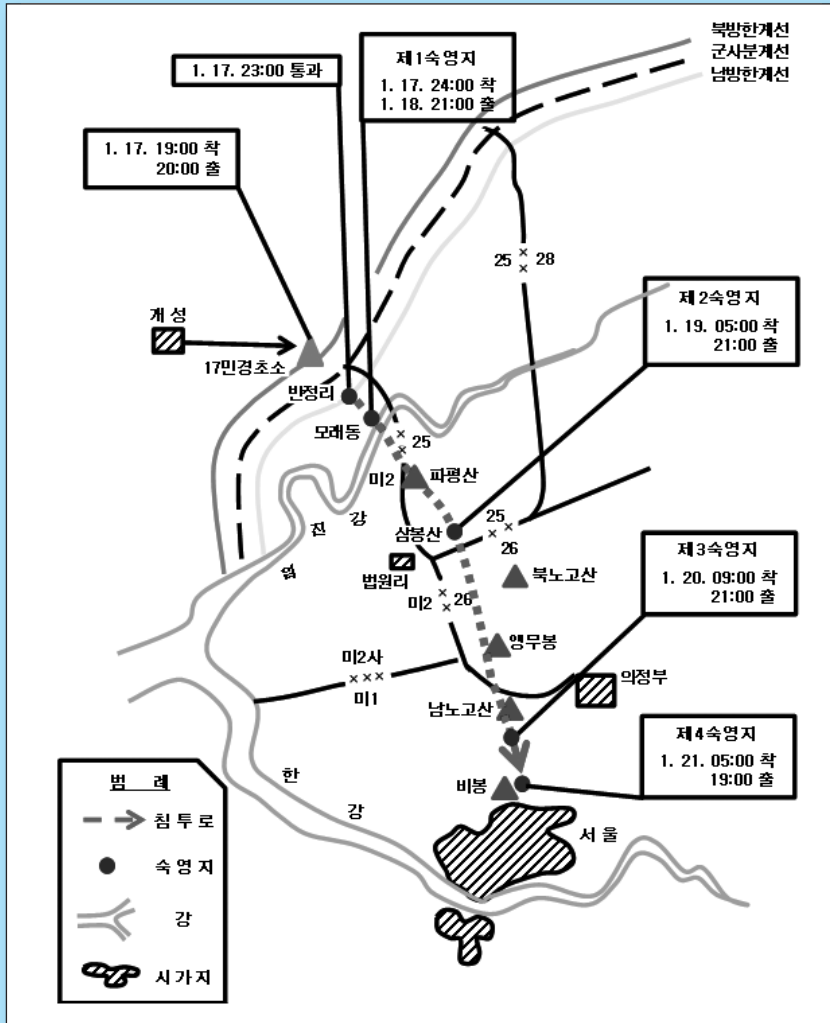
제1절 북한의 1·21사태 도발 의도

제2절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계획

제3절 무장공비의 침투와 초기 대응

제4절 무장공비 소탕작전

제5절 정부·국회의 조치 및 국민 여론과 협조



무장공비들의 침투로 및 숙영지



## 제 5 장

###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7년도부터 북한의 대남도발이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급기야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기습하여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1·21사태 도발의도를 분석해보고 사건의 경위와 대응과정을 군사조치는 물론 정부조치까지 망라하여 정리했다. 대응단계는 편의상 경기 파주군 법원리 거주 나무꾼에 의한 무장공비의 침투 신고 시부터 청운동에서 무장공비와 접촉 이전까지의 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로 했고, 그 이후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완료되는 1968년 2월 3일까지를 소탕작전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 제1절 북한의 1·21사태 도발 의도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초·중반 대내외의 이중적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1965년 이후 대남전략을 폭력적 혁명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966년 8월 소위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사상의 주제,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를 외치면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국은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대미관계의 결속이 점차 굳어가는 가운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 북한은 1·21사태를 일으켰는 바, 그 의도는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남한을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남한의 발전을 방해하면서 미국과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 주요 관련자의 언급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조 일당이 훈련을 받고 있던 1968. 1. 17, 개성 초대소에서 124군부대 부대장 이재형 대좌는 청와대 습격목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sup>

첫째, 남한 정치 및 민심을 혼란시킨다.

둘째, 1967년에 지하간첩망 3분의 1 가량이 파괴되어 잔여 공작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으니 남한의 지하공작원들의 사기를 제고시킨다.

셋째, 청와대를 습격한 후 남한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방송으로 공개하여, 남한 내의 무장봉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구실로 소위 정의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정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잘 운영되어 있어 대남공작에 지장이 많으니 그를 살해하면 4·19 당시 집권자가 재등장할 것이므로 남한이 무질서해 질 것이다.

당시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본부장)이었던 심흥선(沈興善) 육군 중장은 사건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2</sup>

북괴가 빚어낸 6·25의 참상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한 이 때 북괴는 다시 1970년의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내세우고, 그 행동이 점차로 전쟁불사의 오만하고 극히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괴의 이러한 기도는 이번의 '청와대사건' 과 또 때를 같이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보다 노골적으로 대두되어 우리 국민에게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나, 북괴는 이러한 야욕을 위해 이미 오랜 시일을 두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즉 북괴는 그간 북한민을 인간 이하의 생활 수준으로 강요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적 실력준비에 광분했던 북괴의 기도는 1970년을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연도로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적화통일의 기운을 성숙시키기 위해 그들의 대남공작이 점차 작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과거의 정보수집 위주의 소극적인 간첩행위에서 국가전복을 위한 요인암살, 국가중요시설 파괴, 민심교란 등 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1970년도의 소위 적화통일 목표달성을 위해 1967년을 대한민국에서의 지하당 조직과 유격활동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고 기반을 닦는 해로 삼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예로 작년 1년간 휴전선 일대에서 북괴가 침범한 횡수와 인원수는 그 전년인 66년도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격증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1968년에 접어들면서 북괴는 한층 더 그들의 도발행위를 노골화했으며, 1968년과 1969년을 소위

적화통일의 기회를 촉진 또는 성숙시키는 해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1일에 일어난 서울 수도권 침입사건도 바로 이것을 위한 첫 시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북괴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교묘하게 관련, 유발시킴으로써 한·미간 이간책을 꾀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력 분산으로 북베트남을 직간접으로 돕는 보다 고차원적이며 악랄한 방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청와대를 기습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8년 2월 1일 개최된 '68-1차 국회 본회의의 '무장공비의 침입상황에 관한 보고' 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sup>3</sup>

북한 괴뢰가 1966년까지 대한민국 내에 지하조직을 강화하고 거점을 확보한 뒤에 무장공비를 남파시켜서 이 양자가 결부되어 가지고 내부에서 혼란을 가지고 올 때에 허점이 노출되면 기회를 보아서 는 무력을 가지고 행사하겠다 하는 것이 북괴 김일성이 항상 부르짖어 오던 평화통일이라는 이 목표를 전환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북괴 김일성은 지하조직에만 중점을 두어 오던 대남사업 책임자 이호순을 66년도에 경질하고 가장 강경파이며 북괴 육군대장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허봉학을 임명하고, 사로잡힌 김신조 증언에도 나옵니다만, 124군부대를 300명씩 8개소에서 특공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 합계가 2,400명이라는 숫자에 달하고, 이에 겹쳐서 17정찰여단, 283군부대 이것을 합하면 15,000명 이상에 달하는 대남유격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2년 전부터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이러한 특공대 훈련소에 있어서나 노동당 간부회의에 있어서나 공산당회의에 있어서나 70년대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사용을 불가피하게 하는 통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는 것을 역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년 전부터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어 왔던 고 혁(高赫) 같은 온건파를 숙청을 하고 강경파 일색으로 개편을 한 뒤에는 소위 말하는 내적 모든 여건을 강화 보완하기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힘써 왔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써는 모든 군사 생산공장을 지하에다가 두고 또 행정부나 군의 작전지휘본부를 전부 지하에 넣고, 심지어는 공군부대 활주로, 기타 비행기 엄호까지도 지하시설을 완비하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괴 김일성은 말하기를, 모든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내적 모든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외적 요건을 하루바삐 조성을 해 가지고 무력으로써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15,000명 이상의 특수훈련을 시킨 북괴 정규군을 남파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한 시험기라고 생각할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떠한 단일 목표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파괴를 하고 이 단일 목표의 파괴가 성공을 할 진대는 이 목표를 연결하는 선(線) 혹은 면(面)으로 내년, 후년에는 확대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외적 요건이 그네들이 말하는 조성이 될 때에는 전면 무력사용을 해 가지고 통일을 하겠다. 이것이 대략 김일성이 기도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앞의 이재형, 심흥선 장군의 발언, 국무총리의 보고에서 북한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북한의 의도를 대외적 동기와 대내적 동기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외적 동기

첫째,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세대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으며,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경험과 제2공화국 시기에 활발했던 남한의 통일운동 고조현상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남북장벽이 곧 허물어질듯 한 상황에서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1964~65년 시기에 한일조약 체결 반대시위로 남한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해지자, 김일성은 남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베트남식의 전복활동에 적합할 정도로 남한 정세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한·미·일 3각 동맹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주민에게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남한 정부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남한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자신들의 정통성 논리가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북한의 국위를 더욱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북한은 5만의 한국군과 상당수의 미군이 베트남에 투입되어 있는 취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폭력투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다.

셋째, 1960년대 들어와 중·소 분쟁의 격화 및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북한의 대남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 분쟁은 사회주의권의 다원화를 촉진하면서 국제사회주의 진영을 분열시켰고, 특히 중국과 소련 양대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에 의지하는 북한에게 외교와 원조면에서 커다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위적인 군사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들의 대남전략은 폭력적인 혁명전략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1965년부터 북한이 중국편향 외교에서 친소련 외교로 전환하자, 소련은 1962년 이래 중단되었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재개하였는데, 이는 대남 폭력혁명 수행에 유리하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 2. 대내적 동기

북한은 1966년 자주노선을 선언한 이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축에 광분했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을 찬미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추진한 결과 소련,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정치 분야에서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67년)이 실패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 주민에게 가혹한 노동력 동원과 내핍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았고, 경제가 침체되어 북한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누적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국방우선정책을 추구한 군사파와 합리적 경제발전의 지속을 주장한 당료파와의 대립이 초래되었다. 결국 1967년 5월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면서 당조직책임 박금철과 대남사업총책임자 이효순 등 당료파를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일인 지배체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에서의 자주’에 이어 ‘경제에서의 자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김일성 주체사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김일성 자신의 수령(首領)으로서의 지위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주민의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가 자원의 분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외적요인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1966년 10월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군사우위정책을 재천명하고, 항일 빨치산 출신 군부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워 4대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남조선 폭력혁명을 위한 대남도발을 강행했다.

이효순의 뒤를 이어 대남사업총국장에 임명된 허봉학 대장은 그 자신이 강경파였을 뿐만 아니라, 이효순이 ‘대남공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숙청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남공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취임 후 1967년 5월 하순경부터 124군부대를 창설했고 7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여 대남무력도발을 본격 추진했다.

1967년부터 북한은 산간 밀거지 구축 목적으로 무장게릴라들을 대량 남파함과 동시에 비무장지대에서도 대남무력도발을 급격히 늘려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1월 21일 124군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을 남파시켜 대통령을 살해하여 무정부 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남한의 베트남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었다.<sup>4</sup>

다음 도표 <5-1>은 1967년부터 북한의 대남도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도표 <5-1> 196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및 작전결과<sup>5</sup>

구분 연도	침투경로(진/명)				작전결과(명)				
	계	육 상	해 상	불 상	계	사 살	검 거	자 수	도 주
1960	86/157	26/38	51/99	9/20	157	12	104	6	35
1961	86/115	28/32	54/79	4/4	115	12	67	7	29
1962	58/104	14/26	39/71	5/6	104	26	57	9	12
1963	36/57	16/27	19/29	1/1	57	7	33	5	12
1964	47/96	17/33	29/62	1/1	96	10	42	4	40
1965	60/142	20/49	40/93	0/0	142	21	48	16	57
1966	91/210	21/62	68/146	2/2	210	33	45	12	120
1967	184/694	96/359	82/311	6/24	694	297	62	13	322
1968	141/601	104/386	35/202	2/13	601	376	27	3	195
1969	144/429	97/254	46/172	1/3	429	94	26	5	304

## 제2절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계획

### 1. 도발 계획 및 준비

1·21사태는 단순히 북한의 일부 강경파 군부에 의해 주도된 일회성 침략행위가 아니라 김일성의 사주와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1·21사태는 육군 중장 김정태 민족보위성 정찰국장이 지휘하는 124군부대가 이를 수행했는데 이는 인민군 총참모장인 최 광 대장에게조차도 비밀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은 잘 훈련된 기습부대를 침투시켜 전광석화와 같은 작전으로 대통령을 암살하고 즉시 북으로 돌아오게 하여, 자신들의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통령 살해를 남한의 반정부 청년들의 테러에 의한 것으로 덮어씌운다는 의도를 가지고 도발을 계획했다.

김일성은 노동당 대남사업총국장 대장 허봉학과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중장 김정태에게 이러한 의도를 전달하면서 이를 수행할 우수한 특공대 30여 명을 선발하여 단시일 내에 특수훈련을 마칠 것과 이들이 임무수행 중 체포될 시는 극약 자살을 해야 한다는 등 절대 비밀을 엄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선발대로 남한 출신인 윤종문, 안승택 두 명을 훈련 남파시켰으나 이들은 자수 문제로 다투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자수하고 말았다.

민족보위성 정찰국 직속 124군부대 6기지 제1중대원으로 청와대 습격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가 생포된 김신조의 진술<sup>6</sup>에 의하면, “북한은 침투대장 상위 김종용을 남방한계선 일대까지 미리 침투시켜 침투로와 퇴각로를 답사시키고 총조장으로 지휘를 맡게 했다. 또한 그들은 6·25전쟁을 일으킬 때 일요일을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일요일을 공격 개시일로 삼았고, 청와대까지 침투하는데 5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역산하여 1월 17일 북을 출발하기로 계획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했다.”고 한다.



군사지도를 보며 당시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신조(2012년 1월 13일)

그리고 1967년 12월 제6기지 내에서도 특출한 대원 35명을 선발했다.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김정태가 직접 이들을 모아 놓고 청와대 습격 임무를 부여한 후, 당시 중위였던 몇 명을 제외하고 상사였던 김신조를 포함한 전원을 소위로 임관시키는 사령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이 때 차출된 인원들은 각기 소속이 달랐고 총조장인 김종용을 포함하여 각 공작조의 조장도 임시 조장이었다.<sup>7</sup>

그리고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지도를 가지고 황해북도 사리원에 있는 인민위원회 청사를 청와대로 간주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습격훈련을 했다. 훈련은 사리원 노동적위대원 수백

명을 무장동원하여 인민위원회 건물을 삼엄하게 경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때 김신조 등은 실제 경계하는 병력과 총격전까지 벌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노농적위대원 12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정말로 남한의 특공대가 침입했던 것으로 알았다 한다.

## 2. 목표 선정<sup>8</sup>

1968년 1월 2일, 124군부대 부부대장 상좌 우명환이 이들 124군부대 제6기지(위치 : 황해북도 연산군 방정리) 소속 특공대원 5개조 35명에게 청와대·미 대사관·육군본부·서대문형무소·서빙고 대공분실 등을 습격하여 건물을 폭파하고 요인을 살해한 후 잡혀 있는 간첩을 대동 월북시키라는 최초 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1월 13일에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중장 김정태가 제6기지를 방문하여 “이번 공작은 처음인 만큼 우선 청와대만 해 보자.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다른 것도 해 보자.”라고 제시하자, 124군부대 부대장 대좌 이재형과 부부대장 상좌 우명환<sup>9</sup>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습격목표가 청와대로 축소 조정되었고, 인원도 당초 35명에서 3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리하여 습격조 31명은 1월 14일과 15일에 집체사격훈련을 했고, 16일 14:00에 기지를 출발하여 개성에서 1박했다.

## 3. 편성 및 장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습격인원은 최초 3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정찰국장 김정태의 제안으로 31명으로 변경되었다. 휴대장비는 지상 침투, 박 대통령 암살, 청와대 폭파 등 임무 수행에 꼭 필요 것들만 휴대했다. 세부 현황은 도표 <5-2>와 같다.

도표 <5-2> 청와대 습격대 편성 및 장비 현황

◇ 최초 계획

조	인원(명)	습격 목표	임무
1	15	청와대	대통령 및 비서관 살해
2	5	미 대사관	대사 및 가족 살해
3	5	육군본부	장성 및 가족 살해
4	5	서대문 형무소	정문 파괴, 죄수 방면
5	5	방첩대 서빙고 분실	체포 간첩 대동월북
계	35		



◇ 수정 계획

조	인원(명)	습격 목표	임무
지휘	3	습격조 통제	지휘 및 연락
1	5	청와대 2층	살해 및 파괴
2	5	청와대 1층	살해 및 파괴
3	4	청와대 경호실	살해 및 파괴
4	4	청와대 비서실	살해 및 파괴
5	7	정문 및 본관 보조	살해, 외곽엄호
운전	3	차량탈취(3/4톤)	철수 시 운전
계	31		

◇ 장비

장비명	기관단총	권총	대전차 수류탄	방어용 수류탄	단도	위장복	탄약	식량
전체수량	31정	31정	62발	248개	31개	31착	9,300발	155일분
개인당	1정	1정	2발	8발	1개	1착	300발	5일분

※ 기타 : 무전기 2대, 수신용 라디오 2대, 쌍안경 3개, 암호문 5조 등

#### 4. 세부 습격계획

##### 가. 침투 시기, 장소, 방법

북한은 침투시기를 동계혹한인 1월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임진강 결빙으로 도하가 용이하고, 혹한으로 순찰조·민간인 등 인원 왕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군 대간첩작전 출동 시 수색이 곤란하고, 그리고 간첩이 한겨울에 침투한 사례가 없어 한국군이 방심할 수 있으므로 기습달성에 유리한 것 등이었다.

침투 장소는 미 제2사단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곳은 한국군 제25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이루고 있는 취약지역으로 경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침투 방법은 주간에 숙영(04:00~18:00)하고 야간에 이동하되, 고도 300m 이상의 7~8부능선을 이용하고 부락·도로·소로·협곡 등은 우회하며 흔적을 철저히 인멸토록 했다.

##### 나. 습격시간 및 소요시간 판단

습격 개시시간은 1968년 1월 21일 20:00로 정했다. 이때는 일요일 저녁이라 박 대통령이

통상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며, 습격 후 당일 복귀에 유리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습격 소요시간은 증원군 도착 이전에 임무를 완수하고 도주하는데 최소 3~4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시간이 소요되면 청와대 증원군에 의해 습격조가 격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했다.

#### 다. 습격 단계 및 요령

청와대 습격은 5단계로 나누어 대담한 방법으로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다.

- ① 습격 전날 북악산 부근의 청와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주간 숙영을 하면서 관측 및 정찰을 한다.
- ② 최종 숙영지에서 청와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작원 전원이 사복 하의에 외투를 입고 외투 속에 무기를 휴대한 후, 전 공작원이 외투에 술을 뿌려 술 냄새를 풍기고 술 취한 사람인 양 비틀거리며 효자동 대로를 경유하여 청와대로 접근한다.
- ③ 청와대 접근 대형은 무질서한 종대 대형으로 청와대 정문을 담당할 제5조를 선두로 6~7m 후방에 기타 조가 따른다.
- ④ 선두의 제5조가 청와대 정문에 이르러서는 더욱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공작원끼리 시비하다가 보초에게 접근하여 수작을 부리는 동안 다른 공작원은 휴대한 방망이와 단도로 보초 2명을 살해한다.(북한은 청와대 정문 보초를 2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 ⑤ 제5조에 의하여 보초가 살해되면 6~7m 후방에 따라오던 나머지 조들은 즉시 청와대 내부의 각자 습격목표로 침입하여 무자비한 살상과 파괴를 한다.
- ⑥ 습격이 끝나는 즉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분승하여 문산 방면으로 최대 속도로 도주하여 북으로 복귀한다.

각 조별 임무는 도표 <5-3>과 같다.

도표 <5-3> 청와대 습격대의 각 조별 임무

구 분	임 무
제5조	청와대 정문보초를 살해한 후 계속하여 본청 주변 보초를 사살하고 증원군을 방어할 준비를 한다.
지휘조	청와대 본청 정문 앞에 위치하여 전 공작조를 지휘한다.
제1조	청와대 본청 2층에 침입하여 기관단총으로 무차별 사격하여 인원을 살상하고 수류탄을 투척한다.
제2조	청와대 본청 1층에 침입하여 제1조와 같은 요령으로 행동한다.
제3조	경호실에 침입하여 경호원을 사살하고 수류탄을 투척한다.
제4조	청와대 비서실에 침입하여 제1조와 같은 요령으로 행동한다.
운전조	청와대에서 3/4톤 차량을 탈취하고 시동을 걸어 정문 부근에서 출발 대기한다.

### 제3절 무장공비의 침투와 초기 대응

1968년 1월 15일, 제124군부대 제6기지(황해북도 연산군 방정리 소재) 회의실에 김신조 등 5개조 31명이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민족보위성 경찰국장 김정태는 침투로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치안상태, 군경과 마주칠 때 이들을 피하기 위한 대비책(기관원으로 사칭 등)을 다시 철저히 교육했다. 그리고 공비들은 다음날(1월 16일) 제6기지를 출발했다.

#### 1. 1월 17~18일 상황

1968년 1월 17일, 김신조 등 무장공비 31명은 한국군 군복에 제26사단 마크를 부착하고 20:00경에 북한 제17민경초소(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CT 646079))를 출발하여 23:00경에 파주 북측의 제25사단과 미 제2사단 경계지역 근처의 미 제2사단 책임지역인 고랑포 서쪽 반정리(CT 089055)<sup>10</sup>의 남방한계선 철책을 통과하여 18일 02:00경에 임진강 북방 모래동(CT 089033, 제1숙영지)에 도착하여 각 조별로 숙영하면서 은밀히 상황을 파악했다.

최초 미 제2사단 지역 통과 시 철책은 제6기지 1중대 정치부중대장 상위와 동(同) 중대 3소대 2분대장 김태화가 절단했다. 당시 철책은 남쪽 방향으로 철주가 설치되어 있고 철망이 북쪽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다. 따라서 철주 뒷부분의 철책을 절단한 뒤 다시 원래대로 연결해 놓으면 남쪽에서는 철주에 가려 절단여부를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철책을 직접 흔들어 보아야 절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공비들은 1명씩 조심스럽게 철책을 빠져 나왔으며 맨 뒤 요원이 철책을 다시 원래대로 연결하여 표시가 나지 않도록 위장했다. 31명이 모두 철책을 빠져 나오자 김태화 등은 공비들을 남방한계선 지역까지 안내했다.

1월 18일 무장공비들은 21:00경에 제1숙영지를 출발하여 22:00경에 자하리(CT 101028) 앞에서 임진강을 빙상도섭했으며, 파평산, 미타사 옆을 경유하여 19일 05:00경에 법원리 동 북방 3km 지점인 초리골 뒷산 삼봉산 능선(CS 157917)에 도착하여 숙영(제2숙영지)했다.

이들은 침투 시 5개 조로 편성하였는데 제1조 척후조, 제2조 지휘조, 제3조 좌측 감시조, 제4조 우측 감시조, 제5조 후방감시조였다. 이동 시 이들은 견제 순 1열중대로 제1조와 제2조는 4~5m, 기타 조는 조간 거리 없이 개인 거리만 1~1.5m를 유지했다. 이들은 가급적 7~8부 능선을 이용했고 특히 부락, 소로, 협곡도로 등 사람이 왕래하기 용이한 지형은 최대한 우회했으며, 행군은 야간에 하고 숙영은 04:00~18:00 여간에 했으며 언제나 흔적을 없애는데 신경을 썼다. 무장공비들의 침투 및 숙영지 요도는 도표 <5-4, 5>와 같다.<sup>11</sup>

도표 <5-4> 무장공비 침투로 및 숙영지 요도<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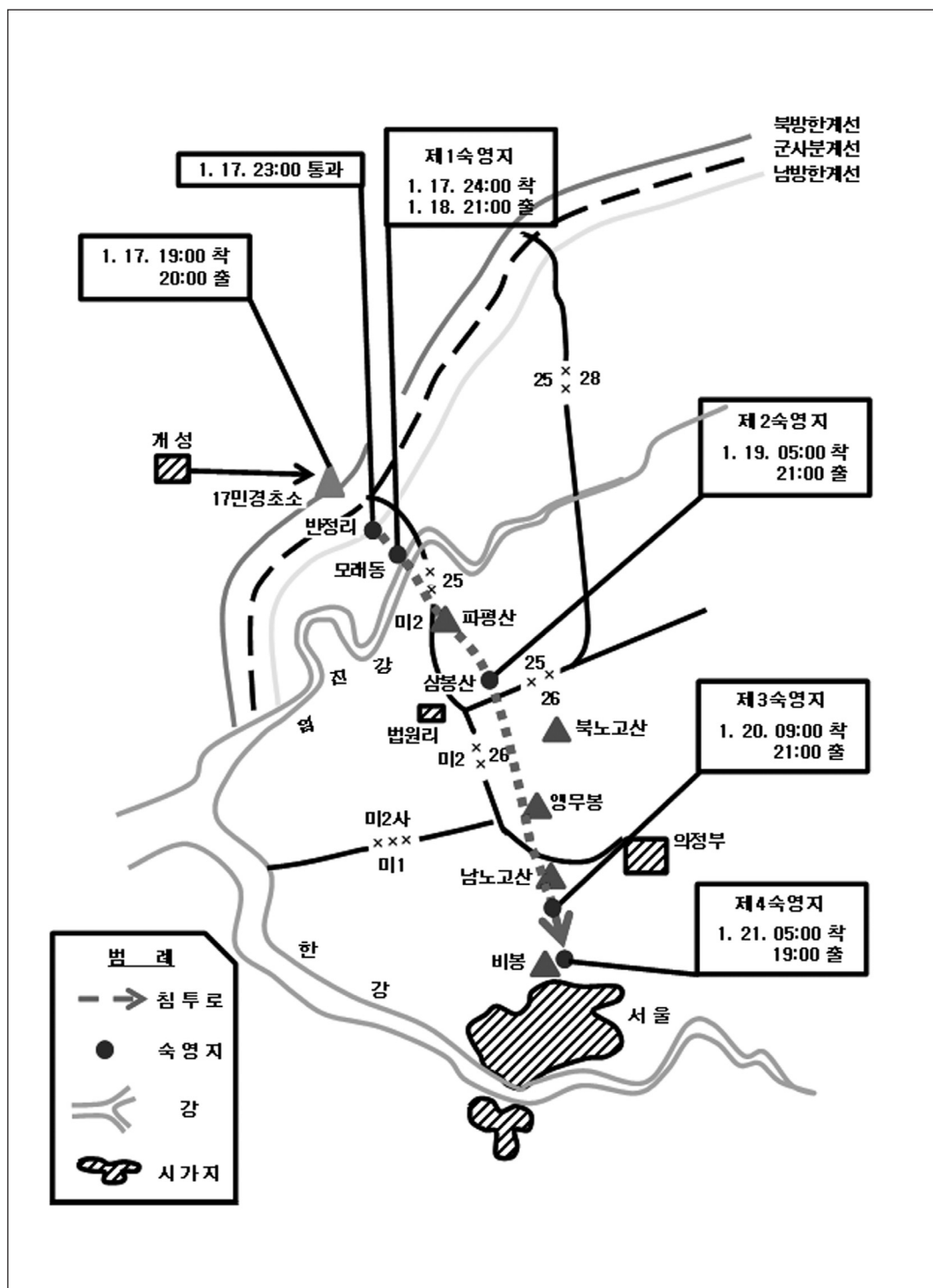


도표 <5-5> 남방한계선 → 삼봉산까지의 침투로 및 침투 모습



반정리 남방한계선 침투지역에 밀랍인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 현장 안보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 2. 1월 19~20일 상황

1월 19일, 상기 제2숙영지에서 숙영 중, 14:00경에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초리동에 사는 우희재(30세), 우경재(22세), 우철재(21세), 우성재(20세) 등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온 4형제와 조우했다. 공비들은 이들을 억류한 다음 억센 북한 사투리로 “우리는 미제 억압을 받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러 온 인민군 선발대다.”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북으로 가자. 이북에 가면 잘 살게 해 주겠다. 집도 주고 학교도 대학까지 보내 주겠다.”라고 나무꾼들을 회유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세뇌교육을 시켰다.

공비들은 우씨 형제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한 다음 그들이 가져온 공산당 입당원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했다. 나무꾼들이 마지못해 서명을 하자 이들에게 엿·과자·시계 등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공비들은 이들 형제들을 일몰까지 잡아두고 있다가 어둠이 깔린 뒤, “만약에 신고하면 당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가족을 몰살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후 19:00경에 귀가시켰다.<sup>13</sup>

이 때 공비들이 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동무들의 성명, 연령, 가족사항은?
2. 미군은 한국군 장교가 차를 세우면 세워 주는가?
3. 법원리 지서의 위치 및 경찰관 수는?
4. 법원리에서 문산까지의 거리 및 검문소 위치는?
5. 법원리에서 서울, 의정부, 동두천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6. 법원리에서 서울까지의 검문소 수, 위치, 배치인원 수는?
7. 서울에 가서 청와대를 보았느냐? 청와대로 가는 거리를 잘 모르나,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8. 우리는 인민 혁명당이다. 68년도는 통일이 된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우리를 지원해 달라.
9. 너희는 우리가 간첩이라면 신고하겠는가? 우리는 이북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니 절대로 신고하지 말라

- 전연 모른다고 답변함 -

김신조의 증언에 의하면, 민간인 조우 시에는 무조건 살해하라는 방침에 따라 살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토론 결과 “4명 모두 죄 없는 농촌 빈민들이다. 우리가 대남공작을 하는 이유도 이런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들을 죽이면 문기 위해 언 땅을 파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단기간 공작이라 신고하더라도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난 뒤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총조장의 결심으로



2차 숙영지인 삼봉산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우철재 씨(2011. 12. 14)

이들을 교양시킨 후 북으로 가는 듯이 하여 침투로를 허위로 알리고 귀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숙영지는 원래 능선 후방의 7~8부 지점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날씨가 춥고 야간 행군을 한 관계로 발이 젖어 있어 좀 더 따뜻한 남쪽 능선에 정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법원리에서 우씨 4형제를 둘러보낸 무장공비들은 21:00경 제2차 숙영지를 출발하여 앵무봉, 노고산을 거쳐 20일 09:00경에 비봉 북방에 도착하여 21:00까지 숙영했다. 이들은 원래 7~8부 능선을 이용해 이동해야 했으나, 우씨 형제들을 풀어준 관계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삼봉산을 멀리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산의 와지선, 능선, 소로, 개울 등을 따라 시간당 10km 이상 속도로 강행군을 했다. 이들이 행군 도중 약 50m 떨어진 2개 부락에서 개들이 짖었으나 군경이나 민간 인들과 조우하지는 않았다. 제2차 숙영지에서 3차 숙영지까지의 침투로는 도표 <5-6>과 같다.

무장공비들에게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우씨 형제는 1월 19일 21:00경에 파주의 천현지서 정 재봉 순경에게 “무장괴한 약 30여 명이 출현했다. 이들은 제26사단 마크를 단 국군 군복을 입고 가족으로 만든 털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배낭과 처음 보는 총도 메고 있었다”라고 신고했으며, 괴한들로부터 받은 질문내용과 월북권유 및 북한 선전 내용도 아울러 진술했다.<sup>14</sup>

천현지서에서는 신고한 우씨 형제들에 대한 심문을 마치는 즉시로 파주경찰서에 보고했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파주경찰서는 21:15경에 경찰병력 80여 명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으나, 이미 괴한들이 출발한 후였으므로 적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파주경찰서는 경기도 경찰국에 이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23:25에 미 제2사단에 연락했으며, 23:45경 제25사단에도 통보했다. 경기도 경찰국은 23:45에 치안국에 보고를 했다.

도표 <5-6> 삼봉산 → 비봉북방까지의 침투로 및 제3차 숙영지



비봉에서 바라본 3차 숙영지 (진관사 남방, 비봉 북방)

### 가. 제25사단의 조치

제25사단(사단장 소장 윤봉주)은 경찰로부터 “무장괴한 30여 명 출현”이라는 첩보를 받아 즉각 제71연대를 출동시켜 1월 20일 01:50~02:30 파평산 일대를 포위하여 작전을 전개했다. 제71연대 제1대대를 서남 측에서, 제2대대를 동남 측에서, 제3대대를 북쪽에 배치하여 지역 내 정밀 수색을 했다.<sup>15</sup> 05:00경 제71연대에서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2리(CS 158926) 지점에서 공비의 유기물로 보이는 동내의, 야전삽 등 29개 품목을 습득함으로써 민간인 신고의 신빙성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걱정은 발견하지 못했다.

### 나. 제6군단의 조치

공비 침투지역이 미 제1군단 책임지역이었으나, 이후 이 지역의 현지 작전 지휘는 제6군단(군단장 중장 이세호)이 하게 되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제6군단장 이세호 중장은 1968년 1월 15~19일 실시한 군단 지휘소훈련(CPX : Command Post Exercise)<sup>17</sup>을 마치고 1월 19일 귀대하던 중 군단 방첩대(CIC : Counter Intelligence Corps) 대장으로부터 무장공비 출현 보고를 들었다.

동 보고에 접한 군단장은 즉각 군단 전체참모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군단장은 상당수 참모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작전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고, 1월 19일 밤부터 작전에 돌입하여 이날 23:00까지 송추초등학교에 전술지휘소(TCP : Tactical Command Post)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1. 20. 12:00 개소) 그리고 1. 19. 24:00 진군 “4”를 발령하고 군단 예비인 제26사단을 송추로부터 문산에 이르는 도로를 연해 1월 20일 04:00까지 병력배치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sup>18</sup>



송추초등학교(현재 모습)

그리고 군단장은 미 제1군단장 크라이츠(Harry H. Chraitz)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미 2사단과 한국군 25사단 지역 사이에 공비가 출몰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간 첩작전인 비정규전은 내가 경험이 많고 한국인의 심성과 지형 등 여러 면에서 장군보다 내가 이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 2사단과 한국군 25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나에게 이양,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크라이츠 장군은 “잘 알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을 주겠다.”하면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약 2시간 후에 다시 제6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크라이츠 장군은 당시 직속상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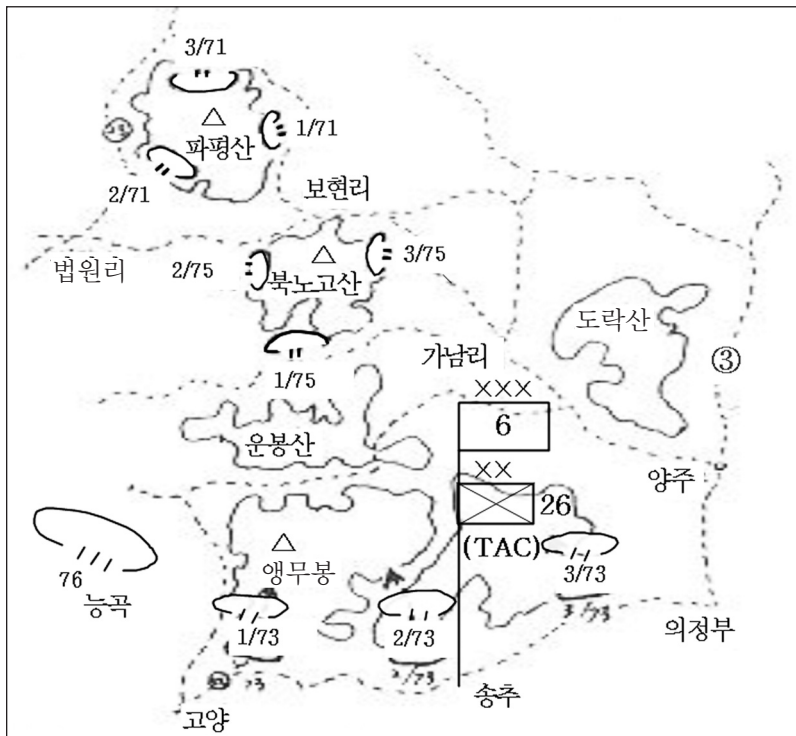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관 찰스 에이치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장과 논의, 승인을 받아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이세호 군단장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25사단장에게 철책선 이상유무를 확인 보고하게 했다.

제26사단(사단장 한무협 소장)은 제75연대를 북노고산 일대에 배치하여 북노고산 일대를 수색하도록 하고, 제73연대를 의정부에서 송추를 연하는 2X도로<sup>19</sup>(현재의 39번 도로) 일대에 배치하여 앵무산 일대를 수색하도록 했으며, 제76연대를 능곡 일대에 배치하여 공비침투를 차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단 예하부대들은 20일 04:00경에 배치되어 차단작전과 수색작전을 전개했다.

제1군사령부 전문 제54호에 의거 군견 30두가 NH-1D 헬기편으로 긴급 수송되어 1. 20. 13:30에 제25사단에 10두, 제26사단에 20두가 배치되어 각각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군견을 동반하여 수색작전을 하던 제26사단 수색중대가 16:40경 고양군 벽제면 방환리(CS 171751)에서 소련제 권총 실탄 케이스 1개와 실탄 8발을 습득했다. 작전요도는 도표 <5-7>과 같다.

도표 <5-7> 1월 20일 제25·26사단 작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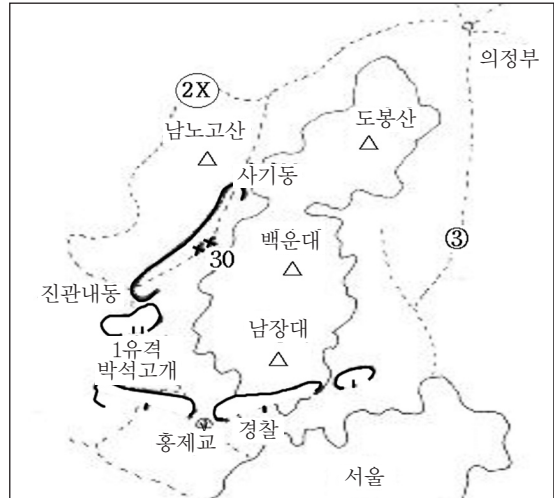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3쪽

#### 다. 제6관구사령부의 조치

제6관구사령부(사령관 김재규 중장)는 1월 20일 02:00경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공비출현에 대한 통보를 받고 06:50에 제1유격대대를 제30사단<sup>20</sup>에 배속하여 박석고개를 차단토록 했고, 제30사단(사단장 허 준 준장)은 07:30~08:20에 진관내동에서 송추에 이르는 도로 중 진관내동(CS 165667)으로부터 사기동(CS 202717) 간을 연하는 선에 병력을 배치 완료 후 남노고산 일대를 수색했으며, 17:00경에는 공병시설대를 세검정과 남가좌동간의 도로를 연하는 선에 배치했다. 한편 경찰은 제6관구사령부와 협조하여 홍제동-세검정-성북동을 연한 서울 외곽에 배치되었다. 작전요도는 도표 <5-8>과 같다.

도표 <5-8> 1월 20일 제6관구사와 경찰의 작전요도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3쪽

#### 라. 미 제2사단 및 미 제8군의 조치

미 제2사단은 1월 20일 03:00경에 인접지역 한국군 정보기관과 대책을 협의한 후 기동타격중대를 봉쇄진지에 배치하고 사단 책임지역 내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했다.

미 제8군은 작전지원을 위해 헬기 출동 준비를 했고, 20일 09:10경 미 제36공병단에게 미 제1군단사령부(의정부시 소재 Camp Cloud) 부근의 고지 일대를 경계토록 했다. 그리고 09:30에 보병 2개 중대 규모로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갈곡리에서 두곡리 남방(CS 156900~202900)간의 2Y도로<sup>21</sup>(현재의 56번도로)를 연해 봉쇄진지를 점령토록 했다.

#### 마. 육군본부의 조치

육군본부는 1월 20일 02:00경에 최초로 보고를 접수했으며<sup>22</sup>, 04:00경 참모총장(김계원 대장) 지시 제1호를 하달하여 미 제1군단 후방지역에 대한 작전임무를 제6군단에게 부여하고 수도경비사령부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이어서 07:00경 작전지시 제2, 3호를 연달아 하달했다. 참모총장 지시는 다음과 같다.<sup>23</sup>

〈참모총장 지시 제1호(1. 20. 04:00)〉

1. 제6군단은 미 제1군단 후방지역 내를 수색할 것.
2. 제6관구사는 미 제1군단 후방지경선 일대를 경계할 것.
3. 수도경비사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4. 합동참모본부에 연락, 상황보고 시간과 보고관계를 명확히 할 것.
5. 군경이 서울 시내에서 행동할 때 필히 암호를 숙지하고 행동할 것.
6. 군경간에 암호에 대한 협조가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것.
7. 미 제1군단 후방지역 내에서의 대간첩작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것.
8. 괴한의 침입 경로를 알 것.

〈참모총장 지시 제2호(1. 20. 07:00)〉

1. 헌병은 경찰과 협조하여 서울 시내에 외출한 군인에 대하여 주야간 검문검색을 철저히 할 것.
2. 암호 사용을 철저히 할 것.
3. 5분대기조 운용을 재확인할 것.
4. '68. 1. 19. 19:00 이후 5분대기조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라.
5. 지역수색을 금일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및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병력을 운영하라.

〈참모총장 지시 제3호(1. 20. 07:10)〉

1. 제1공수단 병력을 제2군에 배속하라.
2. 의정부로부터 서울까지 배치된 행정군무부대에 대한 순찰 강화
3. 상황보고의 신속한 전파

**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조치**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1월 20일 09:00경 사건을 보고받았다.<sup>24</sup> 김계원 육군참모총장이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출근과 동시에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이다.

공비의 출몰지역이 파주 법원리였다는 보고를 받은 김성은 장관은 이들의 휴전선 월경지를

미 제2사단 책임지역인 임진강 자유교 동쪽 약 1.5km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침투로는 그들이 서울까지의 가장 짧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앵무봉-송추를 잇는 지역을 택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김성은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25</sup>

월경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곳은 바로 임진강 자유교 동쪽 1500여 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아닐까 하고 추측했다. 그 이유는 나는 6·25전쟁 시 임진강의 자유교 건너 도라산 전방에서 격전을 치렀고 해병대 사단장을 그 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예상 침투지인 겨울의 임진강 결빙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진강은 서해에 접해 만조 시 바닷물이 자유로이 자유교 북방 500여 m까지 올라오는데 이로 인해 추운 날씨에도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다. 결빙이 되지 않은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겹겹이 쌓이기도 하고 간조 시 바닷물이 빠질 때는 해류를 따라 얼음 덩어리들이 흘러가고 하여 이곳은 건널 수가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자유교에서 동쪽으로 1500여 m 정도 떨어진 지역은 강이 항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바로 이곳으로 월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비들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진관외리에서 모래내, 수색, 불광동, 송추, 의정부의 도로망을 따라 군을 배치하고 그 북쪽의 각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색을 할 생각을 했다.

김계원 육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은 김성은 장관은 장관실에서 각군 참모총장과 주요 직원들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했다.<sup>26</sup>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공비 침투 관련정보를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우선 육군 정보국에 법원리 뒷산 현지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25사단에게 철책선 정밀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미 제1군단 후방지역에 이미 투입된 제6군단의 작전을 승인하면서 의정부로부터 능곡에 이르는 철도와 도로를 연하는 선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원래 미 제1군단 후방지역으로부터 서울시 경계선 사이의 지역은 대통령훈령 제18호에 의거 경기도 경찰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수송 차량도 없고 통신장비도 미약했다. 또한 전투경찰도 1967년도 여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경험이 부족했다. 김성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모두 서울 외곽방비에 투입하고 대신에 제26사단을 투입토록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김 장관은 제6군단은 현 병력 배치선 북방으로, 경찰은 그 남방으로 각각 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09:30경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 현재 상황과 조치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담담하게 이를 승인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오후가 되어 김 장관은 육군 정보국으로부터 법원리 뒷산을 조사해 보니, ‘아지트’ 5개가 있는데 한 ‘아지트’는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으며, 거기서 국군 복장과 일부 유기를 수집해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제25사단으로부터는 사단 정면의 철책을 정밀 수색

했으나 발자국 등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김 장관은 제6군단과 제26사단의 투입만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육본 직할로 김포에 주둔하고 있던 제1공수특전단<sup>27</sup>(단장 정병주 준장) 및 제1유격대대를 제6관구사에 배속하여 작전에 투입토록 했다.

이러는 동안에 경찰, 방첩대, 미 제1군단 정보대, 미 제2사단 정보대 등 각 기관에서는 “무장괴한 30여 명의 출현”이란 충격적인 첩보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위해 민간인 4명에 대하여 심문을 계속하고 있었다.<sup>28</sup>

#### 사. 경찰의 조치

경기도 경찰국장(국장 이종학)은 보고를 받고 즉시 파주경찰서로 출동하여 파주 경찰서장실에서 파주, 고양, 의정부 경찰서장과 제101·102전투경찰중대 중대장을 소집해서 긴급 작전회의를 갖고, 위 3개 경찰서 병력 322명을 75개소에 배치하고 제102전투경찰 중대를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에 배치했다. 그리고 인천 일대에서 해안경비를 맡고 있던 제101전투경찰중대를 의정부로 이동시켜 검문검색과 매복을 하도록 조치했다.

치안국장(국장 채원식)은 1월 19일 23:45에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무장간첩이라고 판단하고 합참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치안국 정보과장을 24:00경에 현지로 파견했다.

1월 20일 03:40경, 제102전투경찰중대 이상열 경사 외 1명이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CS 157757) 남방 400m 지점을 통과하는 거수자들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상부에 했으나, 상급관서의 판단착오로 첩보보고에 그치고 이와 관련 특별한 추가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9</sup>

서울시 경찰국(국장 안명수)은 1월 20일 04:00경 서대문서 경찰 병력 95명을 갈현동-홍제교-세검정을 연해서 배치하고, 시경 기동대 병력 165명을 세검정 북문을 연해서 배치했으며, 성북서 경찰 병력 60명을 성북동-청수동을 연하여 배치했다. 그리고 동일 11:00경 서울시경 병력 48명을 비봉 일대에 투입하여 수색작전을 하였으나 무장공비의 흔적발견이나 조우는 하지 못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과 경기도 및 서울시 경찰국장들의 보고를 받은 치안국장은 1월 20일 04:30 이들을 불러 작전회의를 했다. 치안국장은 최초 신고 내용과 이상열 경사의 첩보보고를 듣고 무장간첩들이 남방으로 침투해 오고 있으며 서울로도 침투해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서 서울 외곽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고 특히 해안선을 중점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채 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경은 청와대 외곽 산악거점 7개소에 250명, 주요 검문소에 512명, 순찰과 예비대로 1,464명 등 총 2,226명을 투입하여 주간 수색작전, 야간 매복작전을 했다.

그러다 1월 20일 오전 국방부 지시로, 미 제1군단 후방지경선 이북 지역(경기도)은 한국군 제6군단이 진입해서 작전을 담당하고, 미 제1군단 후방지경선 이남 지역(서울시)은 내무부(치안국)가

관장하여 작전을 하도록 했다.

이 지시를 받은 치안국에서는 경비과장을 송추에 있는 제6군단 지휘소로 파견하여 작전 협조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1월 20일 제6군단과의 협조하에 전투경찰 제101중대와 제102중대를 철수시켜 경기도 경찰국에서 서울시 경찰국으로 배속전환하여 20일 19:00까지 정릉과 홍제동 선을 연하는 도로상에 배치 완료했다.<sup>30</sup>



↑ 바위 밑에 밀랍인형으로 당시 공비들 은거모습을 만들어 놓고 입구에 안내 입관관을 설치하여 현장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① 부암동 고개에서 바라본 비봉과 사모바위
- ② 공비들이 숙영한 바위와 안내 입관관(서울경찰청 설치)
- ③④ 바위 입구에 설치된 사건경과 및 작전 상황도
- ⑤ 바위 밑 동굴에 은신한 공비 모습(밀랍인형)
- ⑥ 공비 은신 바위에서 바라본 승가사, 북악산, 인왕산

### 3. 1월 21일 상황(무장공비 발견 전까지)

20일 21:00경에 제3숙영지를 출발한 무장공비들은 21일 05:00경에는 비봉 동쪽의 사모바위 바로 아래, 승가사 북방 200m 지점에 도착하여 동일 19:00경까지 제4차로 숙영했다. 김신조 진술에 의하면, 원래 계획은 20일 밤에 북한산 형제봉을 경유하여 북악산 근처까지 접근해서 마지막으로 숙영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봉 일대의 지형이 험한데다 바위가 많고 눈이 덮여 있어 미끄러웠던 관계로 수차례 넘어지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 보니, 20일 밤새 겨우 비봉을 넘는데 그치고 말았고 날이 밝아 오에 따라 예정에 없던 사모바위 근처에서 숙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아군 수뇌부는, 21일 아침에 청와대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국방부장관 공관에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부장, 정보국장, 작전국장, 육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치안국 조사과장 등이 모여서 공비들의 침투기도 분석과 향후조치 등을 논의했다. 여기서 공비들의 기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판단했는데, 서울에서 동두천에 이르는 철도파괴, 서울 북방에 있는 미군부대나 한국군 주요시설 습격, 통로개척 또는 침투가능성 확인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부대에는 부대경계 강화를, 교통부장관에게는 철도경계 강화를, 내무부에는 서울 주변의 경계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군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전원이 철모를 착용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파주, 고양, 양주군에 주둔하고 있는 전 국군의 외출을 금지시켰다.<sup>31</sup>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등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하여 아침과 점심까지 같이 하면서 17:00경까지 지도를 보며 공비 출현상황과 작전 개요, 군 병력 배치, 체포·섬멸 방안 등을 자세히 보고하고 논의했다. 이 때 대통령도 궁금해 하는 것이 공비들의 침투목적이었지만 청와대 기습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sup>32</sup>

군경은 주간에는 수색작전, 야간에는 매복작전을 계속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1일 주간에도 병력 추가배치 및 수색작전을 계속했다.<sup>33</sup>

육군본부는 필요한 장비 및 탄약을 보급하는 한편 21일 02:00에 예비사단인 제1사단(사단장 박영식 준장)에 출동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제1군사령부(사령관 서종철 중장)는 어제의 배치선에서 부대별 수색구역을 부여하여 제6군단 예하 각 부대로 하여금 앵무봉, 노고산, 도봉산, 백운대, 비봉 일대를 수색하게 하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1개 소대를 공중기동시켜 북한산을 수색하게 했다. 그리고 제6군단 작전참모(전체현 대령)는 OH-23 헬기를 타고 비봉 일대를 공중 수색했다. 14:40경 제25사단 방첩대와 파주경찰서, 방첩대, 미 MIG(Military Intelligence Group : 군사정보단) 대원들이 민간인 신고자들을 대동하고 공비 최초 출현 지점 일대를 답사하던 중 쌍안경, 체코제 기관단총 실탄 38발 등 공비 유기물 6건을 발견했다.

제6관구사령부는 07:30에 공병시설대를 철수시켜 대기토록 하고, 제30사단과 제1공수특전단에서 병력 66/272명을 차출하여 비봉 일대를 수색했다. 12:10경 제30사단 제91연대가 비봉 북방(CS 202664)에서 체코제 기관단총 실탄 3발, 적색 손수건 1매와 서울 방면으로 향한 7~8명의 족적을 발견했다. 치안국에서 파견된 경찰 감식관은 이 손수건은 북한제 포플린 직류에 가장자리를 흑색실로 뜬 것이고 그 안에 장미꽃 한 송이를 수놓은 것으로 공비가 대변을 보고 이 손수건으로 닦은 것으로 설명했다. 제30사단 및 공수단 병력은 더 이상 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17:00경 수색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수도경비사령부(사령관 최우근 소장)는 21일 10:00~17:00에 북악산 일대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경복궁에 대기하고 있던 30/741명을 각 검문소에 증강 배치했다.

우씨 형제가 공비들을 만난 장소와 제30사단에서 발견한 족적과 손수건을 주운 장소를 연결했을 때 공비들이 향하는 방향은 대체로 서울 방향이었고 공비들은 이미 제6군단 지역을 통과하여 서울 방면으로 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사실 무장공비들은 19일 저녁 아군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무서운 속도로 행군을 하여 앵무봉-남노고산을 거쳐 20일 아침 09:00경 이미 비봉 북방에 도착해 있었다.)

공비들은 소나무 가지를 잘라 바위틈 입구를 막고 동굴 안에 은신해 있었기 때문에 공중정찰에 발견되지 않았고, 군경은 노고산, 앵무봉, 우이동 일대의 산들, 그리고 비봉 일대를 수색했으나 하필 공비가 은거해 있던 지역까지는 군도 이르지 못하고 경찰도 이르지 못한 채 해가 저물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주간 수색에서 공비들을 발견하지 못한 군경은 17:00에 야간작전으로 전환했다. 군은 17:00경 구파발~사기동 간에 배치되었던 제30사단 (38/572명)을 남가좌동(CS 200628)~세검정(CS 150605)에 이르는 도로를 연해 재배치하고, 제26사단 제76연대의 배치방향도 남쪽을 향하도록 일부 조정했다. 경찰도 어제 홍제동-청수동-북악산-345고지 선에 배치했던 병력(445명)을 이날 20:00경에 홍제동(CS 202630)~정릉(CS 244634)~북악산(CS 211162-244630)의 도로를 연하는 선에 재배치했다.<sup>34</sup>

그러나 이때도 공비의 침투 목적이 청와대 기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까닭에 청와대 자체 경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서울 외곽에서의 적 침투 저지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경비는 상당히 허술한 편으로 수경사 1개 대대(제30대대)가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일대를 경계하고 있었고 정문에 경찰 보초병력, 내부에 경호실 요원에 의한 경호가 전부였다. 이와 관련 김성은 장관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35</sup>

지금 생각하면 저들의 청와대 습격을 통한 대통령 살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섬뜩해진다. 당시 청와대 경비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적에게 완전 노출되어 있었다. 즉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청와대 침투와 대통령 살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자하문을 지나 효자로를 따라 약 300m만 지나면 나타나는 청와대 정문, 그때 청와대 경비라야 정문의 경찰 보조 정도였다. 경복궁 부대가 청와대를 경비했지만 사실 이들은 청와대 직접 경비가 아닌 청와대를 두르고 있는 외곽 산등성이에 배치되어 외각 경계가 목적이었다. 청와대 효자동에는 방첩대가 있었지만 이 부대 역시 청와대의 직접 경비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만일 저들의 습격 시나리오대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뺨 뚫린 효자로 길을 그대로 내려왔다면 청와대 정문의 한 두 명 있는 경찰 경비병에 접근,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 칼이나 단도 등으로 간단히 해치우고 청와대 현관으로 잠입, 경호실 직원까지 해치운다면 대통령 유고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실제 그날 밤 저들이 벌일 침투 시나리오로, 만일 그날 경찰을 제2선에 투입하지 않아 효자로 길이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음은 그동안 김종웅(무장공비 총조장) 등이 수많은 사전 탐사로 청와대 경비상황을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남하했을 때 북의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김정태는 김일성에게 99% 성공 가능성을 장담했다고 한다.

## 제4절 무장공비 소탕작전

### 1. 공비 발견 및 최초 접전

아군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무장공비들은 국군 군복을 벗고 배낭 속에 넣어온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벗은 옷과 배낭은 모두 땅 속이나 바위틈에 묻어 버리고 각자 기관단총 1정, 권총 1정, 실탄 350발, 개인용 수류탄 8개, 대전차 수류탄(북한말로 반땅크수류탄) 2개, 그리고 단도를 하나씩 차고 그 위에 바바리코트를 덧입었다.

이렇게 최종 준비를 마치고 1월 21일 19:00에 제4차 숙영지를 출발하여 승가사 능선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내려갔다. 공비들은 성북구 구평동 버스 종점에 이르러 세워져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이를 보고 원래계획을 변경하여 버스를 탈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총조장 김종용의 결심으로 최초 계획대로 도보로 침투하기로 했다. 이들은 등산로와의 분기점에 이르자 길가에 바짝 붙어 차도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 때가 21:40경으로 그 동안 적지 않는 통행인과 군경을 만났으나 검문을 당하지 않았다. 이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밑으로 나 있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세검정으로 향하고 있었다.<sup>36</sup>

이후 전개된 상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 이각현(李珪鉉) 총경은 전영도 소년계장, 김종윤 형사와 함께 지프차로 만화장호텔 근처의 산악지대에 배치된 제102전투경찰중대의 근무상황을 순찰 후 세검정 파출소로 복귀하던 중, 21:55경 세검정 삼거리 동북방 약 600m 지점(CS 205632)에서 도로를 따라 약 30여 명의 괴한들이 2열중대로 두 세 명씩 조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 서장은 즉시 세검정 파출소로 와서 이 상황을 유·무선으로 서울시경에 보고하면서 자하문과 효자동에 병력배치를 요청했고, 아울러 세검정 근처의 기관원 훈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홍제동 파출소에 주둔하고 있던 제30사단 작전참모에게 병력동원 요청을 하고, 즉시 헌병 3명을 포함한 군·경 14명을 끌어 모아 짚차 2대와 3/4톤 1대에 탑승시켜 괴한들을 추적하면서 감시하도록 했다.

서대문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서울 시경국장은 22:00경 제6관구사령부와 수도경비사령부에 파견한 연락관으로 하여금 군 병력 지원을 협조하도록 하고, 경찰 기동대 및 종로경찰서장에게 병력을 효자동 파출소로 출동하도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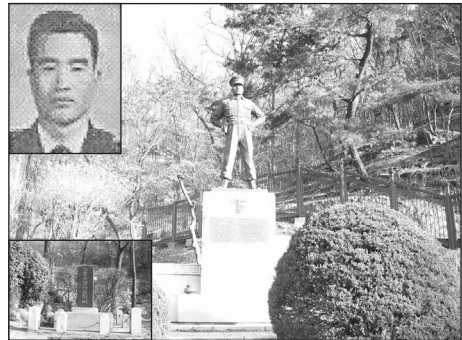
세검정 파출소  
지금도 당시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

한편, 자하문까지 접근한 무장공비들은 동일 22:05경 과학수사연구소 앞도로 상에 설치된 임시검문소에서 종로경찰서원 2명과 침투 후 처음으로 조우했다. 이 날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종로경찰서 수사 2계 박태안, 정중수 형사가 괴한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검문했다. 공비 대열에서 선두로 가던 김종웅이 누구냐고 묻는 경찰관들에게 “CIC다”라고 답변했으나 경찰관들이 계속 증명서를 요구하자, “증명서는 부대에 두고 왔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본부까지 따라오라.”고 하면서 검문소를 통과하여 행군을 계속했다.(이 때 공비들이 검문하는 경찰에게 본부로 따라 오라고 한 것은 가는 도중에 경찰을 감쪽같이 살해하고 곧장 목표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옥신각신 하는 도중에 박 형사는 외투 속으로 총구가 살짝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법원에서 신고된 공비들이란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공비들과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무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형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맨 뒤에 가고 있던 공비(정치부조장 김춘식 중위)에게 말을 걸면서 따라갔다.

같은 시간, 종로경찰서장 최규식(崔圭植) 총경은 상황파악을 위해 경찰 3명을 태우고 짚차로 현지로 이동 중 청운중학교 뒤 근처의 청운동 노상에서 괴한들과 조우했다. 최 서장과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다. 짚차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최 서장은 권총을 뽑아들고 이들을 막아서며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CIC다.”  
 “나, 모르겠나?”  
 “모르겠다.”  
 “나 종로경찰서장이다. 내 허락 없이는 못 간다.  
 이곳은 내 관할 구역이다.  
 나도 모르면서 CIC냐? 신분증을 보자.”  
 “신분증은 부대에 두고 왔다.”  
 “도대체 그 오바 속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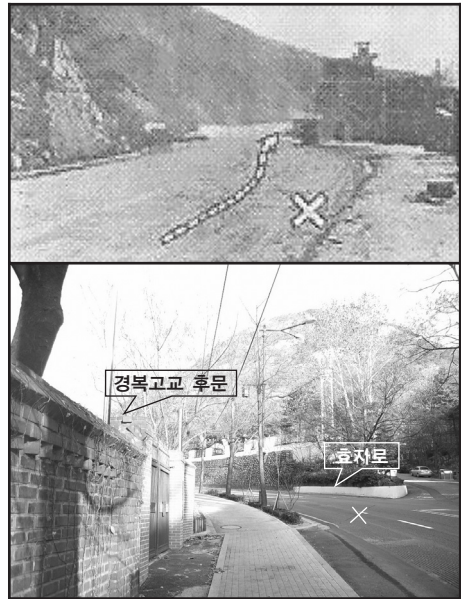
자하문 고개에 있는 최규식 총경 동상과 정중수 경사 추모비(위쪽은 최총경 사진)

그러자 최 서장이 김종웅의 외투 자락을 열어 했고, 그 순간 김종웅이 곧바로 옷 속의 기관단총을 최규식 서장에게 발사했다. 최 서장은 “기동타격대를 불러라, 청와대를 사수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이후 최 총경은 태극무공훈장 서훈과 더불어 경무관으로 추서되었다.)

같은 시간, 공비 대열 뒤에서 김춘식과 말을 걸고 있던 두 형사가 김춘식을 쓰러뜨렸다. 박 형사가 김춘식의 목을 죄면서 돌맹이로 머리를 내려쳤고, 김춘식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박 형사가 손목에 수갑을 채워 그를 체포했다.(이후 김춘식은 채원식 치안국장에 의해 치안국 별관으로 끌려가 21일 22:40경 수사과장실 앞 복도에서 무장해제 도중에

수류탄 안전고리가 주머니에 걸려 빠지면서 수류탄이 폭발하여 폭발했다. 이 때 채 치안국장이 김춘식을 복도 끝으로 밀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옆드라라고 소리쳐 다친 인원은 아무도 없었다.)

최 서장을 살해한 공비들은 청와대를 향해 전진하려 했으나, 곧 총소리를 듣고 달려 온 수경사 제30대대(대대장 전두환 중령) 병력과 경복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부딪혔다. 이 때 버스 두 대가 자하문 고개 너머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넘어왔으며 효자동쪽에서도 버스 두 대가 올라오다 사건 현장 전방에서 멈추어 섰다. 공비들은 이 버스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했다. 수류탄 폭발로 탑승했던 승객 중 청운중학생 1명과 회사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사와 버스 안내양이 부상당했으며 버스도 반파되었다. 공비들은 이 버스를 아군의 증원병력을 실은 버스로 잘못 알고 공격했던 것이었다.<sup>38</sup>



공비-최 총경간 최초 조우지점  
(위 그림 × 표, 사건 당시의 효자로)  
수경사 제30대대와 최초 교전지역  
(아래 그림 × 표, 현재의 효자로)

쌍방간에 총격전이 벌어지자 공비 총조장 김종웅이 “분산하지 말라! 청와대를 향해 돌격 앞으로!”라고 소리쳤으나 소용이 없었고, 공비들은 자하문 고개, 북악산, 인왕산 방향으로 분산 도주했다. 공비들은 도망가면서 박태안, 정종수 두 형사에게도 사격을 가했다. 박태안 형사는 무사했으나 정종수 형사는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정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며칠 후 숨졌다.)

## 2. 무장공비 소탕작전

### 가. 1월 21~22일 작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일 22:10경 청운동 노상에서 경찰과 교전이 벌어지자 군경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 포위 및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2~3분 내에 각군, 합참, 국방부는 즉각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합동참모본부로 나와 작전조치를 취했다. 공군본부(참모총장 장지량 대장)에 지시하여 사건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탄을 투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공군은 C-46 비행기를 이용하여 불광동에서 북악산 일대에 조명탄 900여 발을 투하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제1야전군 예비로 경기도 현리에 주둔하고 있던 제1사단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유엔군사령관과 협조를

했다.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을 기습공격하려고 제1사단을 문산 일대에 집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김 장관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공비들을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여 섬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여 제1사단 투입 승인을 받았다.

최초 교전이 벌어지자 청와대 외곽경비를 맡고 있던 수경사 예하 제30대대는 즉각 81mm 박격포 조명탄을 북악산 일대에 쏘아 올렸다. 공군과 박격포 조명탄 투하로 사건지역 일대는 대낮 같이 환하게 되어 공비들은 도주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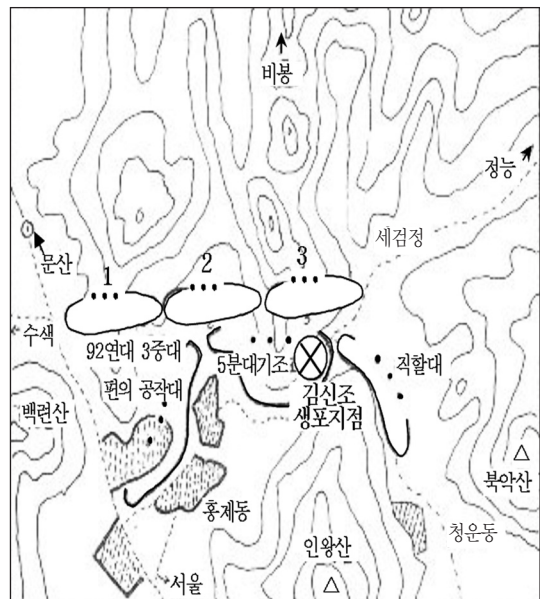
21일 23:30, 제6군단은 능곡 일대에 배치된 제26사단 제76연대를 이동시켜 퇴로차단을 위해 1번 도로상에 배치를 했다. 그리고 미 제1군단 차량 60대를 지원 받아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삼송리~원당을 연결하는 선과 도봉산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200~300m 간격으로 배치하여 헤드라이트를 비추도록 하여 적을 기만토록 했다.

21일 23:00경, 제30사단은 홍제동 쪽에서 괴한 1명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사단 전술지휘소를 홍제동 파출소에 설치했다. 그리고 22일 02:25 제92연대 잠정 1개 중대(3중대)와 5분대기조를 인왕산 하단과 비봉에 이르는 능선 하단에 배치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22일 00:15, 제6관구사령부는 제30사단으로 효자동(CS 207610)-홍제동(CS 186620)-녹변동(CS 180628)까지를 봉쇄하고, 제33사단(사단장 이남주 소장) 잠정 전투1·2타격대 병력 54/615명과 제1201공병단 28/600명으로 녹변동(CS 180628)-불광동(CS 173642)까지를 봉쇄함과 동시에 관구사령부 편익대를 신촌(CS 177586)-성산동(CS 159584) 일대에 배치했다. 그리고 배속되어 있던 제1공수특전단으로 중앙청으로부터 인왕산 방면으로 수색을 했고, 제1유격대대는 홍제동에 집결하여 예비로 운영했으며, 제6관구 공병시설대를 제30사단에 배속했다.

22일 01:20, 제26사단 제73연대 수색중대 5/71명은 21일 23:00경 진관외리(CS 167677)에서 못절리(CS 182678)로 이동하여 5개 조로 나뉘어 잠복근무 중이었다. 근무 중에 김기운 일병이 5~6명의 괴한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으나 공비들은 기관단총 사격으로 응사하며 비봉 방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아침 일찍 현장을 수색한 결과 수류탄 2발, 기관단총

도표 <5-9> 김신조 체포 당시의 작전요도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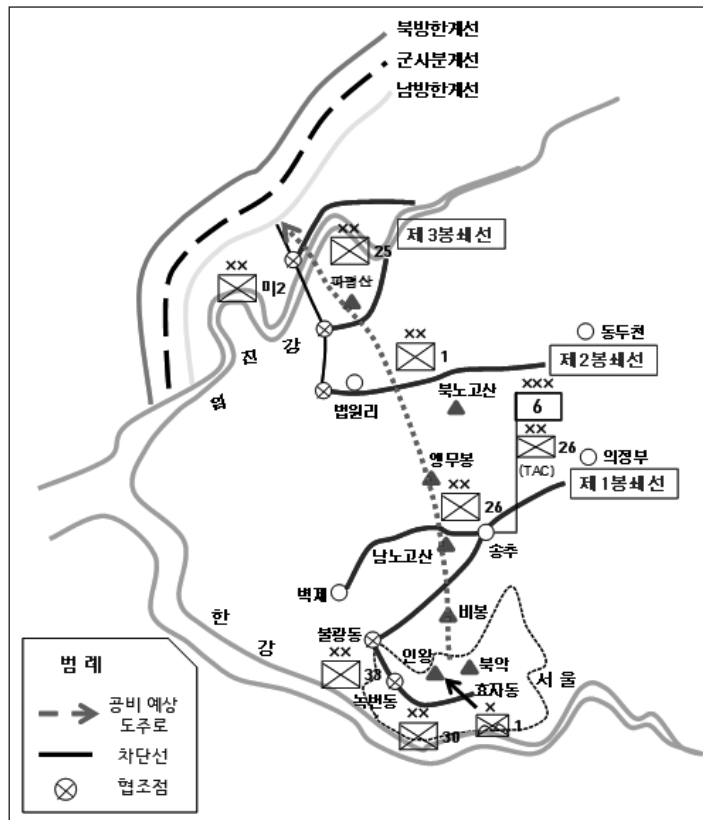
1정, 탄입대 1개를 습득했다.

22일 03:00경, 홍제동에서 비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하단에 배치되어 주변을 수색 중이던 제30사단 제92연대 제3중대와 5분대기조가 이 능선 기슭의 독립가옥에 은신한 무장공비 1명(김신조)을 생포했다. 김신조 생포 당시의 작전요도는 도표 <5-9>와 같다.

김신조가 체포된 후 김성은 장관은 그들이 재집결지와 복귀로를 우선적으로 심문하라고 했고, 김신조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간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공비들이 북악산·인왕산-비봉·백운대-앵무봉-파평산-모래동을 경유하여 임진강을 도하 월북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상되는 퇴각로를 3~4중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인왕산, 북악산, 홍제동, 효자동을 중심으로 작전 중인 제6군단, 제6관구사, 수경사, 경찰 등으로 제1봉쇄선을 형성하고, 경기도 현리에 있던 제1사단을 이동시켜 덕정에서 문산에 이르는 2Y도로를 연해 배치하여 제2봉쇄선을 형성토록 했으며, 제25사단을 임진강을 연하는 선에 배치하여 제3봉쇄선을 형성토록 했다. 1월 22일의 전반적인 작전요도는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1월 22일 전반적인 작전요도



22일 04:00, 제25사단은 합참(대간첩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자유교 동쪽 임진강선 차단에 중점을 두고, 제70연대를 임진강 북방을 연해 자지포(CT 116060)-토막포(CT 171019)까지, 제71연대를 파평산 남방의 영평산(CS 120950)-마지리(CST 171019)까지, 포병연대 및 직할대를 1번 도로를 따라 배치하고 제72연대를 예비로 마지리에 집결 배치했다.

22일 05:32, 제1사단 역시 합참 지시에 따라 제6군단 통제하에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출동준비를 했다. 출동준비 경과는 도표 <5-11>과 같다.<sup>39</sup>

도표 <5-11> 제1사단의 출동준비 경과

05:32 출동 준비지시 접수				
06:00 출동준비 경보 발령				
07:30 제6군단에 배속(제1야전군사령부 전문 제85호에 의거)				
07:40 이동명령 접수 및 하달				
07:50 사단장실에서 포병사령관 및 각 연대장에게 출동명령을 구두로 하달				
08:00 출동준비 완료				
* 출동 인원				
계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직할대
416/6,636(명)	114/2,019	109/1,935	114/1,782	79/900
18:30 부대이동을 위해 제1군단 수송자동차대대 차량 150대 지원				
1. 23. 08:40 부대이동 개시(제11-12-15연대-직할대 순)				
13:00~19:00 부여된 작전지역에서 수색작전 실시				

22일 07:10, 제26사단은 미 제1군단으로부터 지원된 헬기 4대에 제75연대 수색소대를 탑승시켜 비봉(CS 195655)으로부터 송추동(CS 213755)까지 공중수색을 했다.

22일 08:08, 수경사 예하 제33대대는 부암동(CS 196620)에서 공비 3명을 사살했으며, 09:30에 북악산 동측 계곡(CS 219618)에서 1명을 추가 사살했다.

22일 12:50, 제26사단은 승가사 부근에서 라디오, 암호문, 아군 제26사단 마크 등 공비 유기물 40여 점을 노획했다.

육군본부는 대형 확성기를 제6관구사령부에 지원하여 공비들에 대한 귀순유도 방송을 하도록 하고, 22일 14:30경 제1·2군에 해안선 경계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미 제8군은 미 제2사단 지역의 이미 점령된 봉쇄진지 및 지역 내 수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소형 헬기를 여의도 비행장에 대기시켜 요청 시 즉각 응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경은 성북경찰서장 및 기동대장으로 하여금 세검정, 북악산 일대를 연하는 도로에 민간인 통행을 최대한 제한하고, 기동대장은 북악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기동대 병력 일부를 수경사 제30 및 제33대대에 파견하여 상호 협조토록 했다.

22일 22:50, 제26사단 제73연대 제3중대 윤경섭 일병 외 2명이 진관사 북방 2km 신둔리 일대(CS 196 692)에서 잠복근무 중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의심스런 물체에 대해서 수하를 하자, 공비는 “나다.” 하면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기관총을 난사했다. 아군이 은폐하는 동안 공비는 남노고산 방향으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아군 1명이 전사했으나 전과는 없었다.

이날 작전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신조를 생포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교전이 벌어지자 김신조는 경북고등학교 후문으로 뛰어들어 운동장을 가로질러 인왕산으로 도주했다. 여기서 김신조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수류탄 하나만 휴대했다. 무기를 휴대하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민간인처럼 행세하기로 했던 것이며, 유사시 자폭하기 위해 수류탄 하나 만을 휴대했던 것이었다.



김신조가 도주한 인왕산 능선

김신조는 청와대에서 봤을 때 인왕산 정상에서 우측으로 세 번째 봉우리 옆 능선을 넘어 북서쪽으로 도주했다. 김신조는 홍제동의 인왕산 하단부 도로를 건너다 아군 수색대와 조우했다. 김신조는 급히 근처 판잣집 지붕을 타고 도망가다 네 번째 지붕이 폭 꺼지는 바람에 부부가 자는 방으로 떨어졌다. 부부가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 하고 외쳤고 김신조는 급히 도망해서 비붕을 향해 홍제동 뒷산 쪽으로 올라가다 능선에 잠복한 아군 병력들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누구냐?” 김신조는 가만히 있었다. 이 때 뒤돌아서 도망치면 사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김신조는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뒷걸음쳐서 산비탈을 살살 내려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했다 싶을 때 뒤돌아서서 은폐물을 찾았다. 홍제동 계곡 옆에 창고 같은 독립가옥이 있고 그 옆에 바윗돌이 있었으며 그 뒤는 산비탈이었다. 김신조는 벧짚으로 앞을 가리고 숨었다.

김신조를 추격하던 제30사단 제92연대 소대 병력은 괴한(김신조)이 독립가옥으로 도망가 자취를 감추자 이 집을 포위했다. 그리고 “나와라! 나오면 살려준다.”라고 하면서 자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김신조는 바위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소대장 박원조 소위는 분대장 하 용 하사에게 분대의 병력을 괴한이 은신한 부근에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괴한의 은신 가능지점에 접근했다. 박 소위는 독립가옥 옆에 있는 바위를 우회하여 가옥 뒤로부터 접근하려고 할 때 하반신을 짚으로 덮고 숨어 있는 괴한을 발견했다. 박 소위가 플레시를 비추자 김신조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박 소위는 재빨리 되돌아와서 바위를 향해 15발의 위협사격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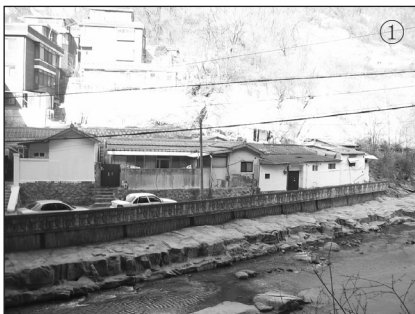
박 소위는 다시 “나오면 살려준다. 손들고 나와라.”하고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나 김신조는 나가지 않았다. 다시 총탄이 쏟아지자 김신조는 수류탄을 꺼내 들었다.

“나와라!, 자수하고 나오면 산다.” 자수를 권고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김신조는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 곤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배신자가 되어 죽지 말고 잡히면 자폭해라.”는 지도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 이왕 죽을 바엔 깨끗이 죽자, 다시 수류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러나 마음 저 밑바닥에선 그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 올라왔다. 김신조는 생사의 기로에서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우물쭈물 하지 말고 어서 나와라. 우린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때 김신조는 차량이 가까이 와서 멈추는 소리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병력이 추가되고 있음을 느꼈다.

김신조는 아무래도 자폭을 선택해야만 할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고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는 순간, “뭐 하나? 빨리 나오지 않고, 살려 준다. 믿고 나와라.” 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그래 살고 보자! 세상에 나는 하나, 내 생명도 하나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 아닌가?” 김신조는 자기도 모르게 왼쪽 손에 수류탄을 쥔 채 두 손을 치켜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이 때 수류탄 안전핀 2개 중 하나는 빠져 있었다.)

박 소위와 하 하사는 김신조에게 수류탄을 버리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김신조는



① 김신조가 생포된 홍제동 계곡 계곡 상류쪽 80여m 지점에 옥천암 마애석불이 있다. 현재는 당시 상황 관련 아무런 표식도 없고, 오래된 판자집들이 있을 뿐이다.  
② 생포되어 홍제동 파출소로 끌려온 김신조  
③ 방첩대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신조



심사숙고하는 표정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박 소위는 사살할까도 생각했으나 생포해야겠다는 의욕으로 끝까지 설복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이 때 짚차로 세검정에서 홍제동 방면으로 순찰을 하던 제30사단 제90연대 제3대대장 주희준 소령이 이를 목격하고 차량 라이트를 비추면서 “너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수류탄을 버리면 너의 생명은 보장한다.”라고 타일렀다. 김신조의 손에 들려 있던 수류탄이 맥없이 떨어졌고 그는 체포되었다. 이 때 시각이 22일 03:00경이었다. 김신조는 자신의 핵대로 묶인 채 홍제동 파출소로 끌려갔다.

22일 새벽 홍제동 파출소에서 김신조는 중앙일보 손석주 기자의 “침투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청와대를 까리 왔다.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고 답하여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김신조는 22일 19:00 방첩대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신상, 침투경로, 침투목적, 복귀로, 공비들의 복장과 휴대장비, 그리고 124군부대에 대한 정보<sup>41</sup> 등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이는 대간첩작전 수행에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 나. 1월 23일 작전

이날 전반적인 작전상황은, 제1봉쇄선 작전은 제6관구사와 수경사, 제6군단이 수행하고, 제2봉쇄선 작전은 제1사단이 경기도 현리에서 08:40부로 부대이동을 개시하여 13:00경부터 봉쇄선을 점령하고 수색작전에 들어갔다. 제1사단 배치도는 도표 <5-12>와 같다. 제3봉쇄선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25사단이 점령하여 수색작전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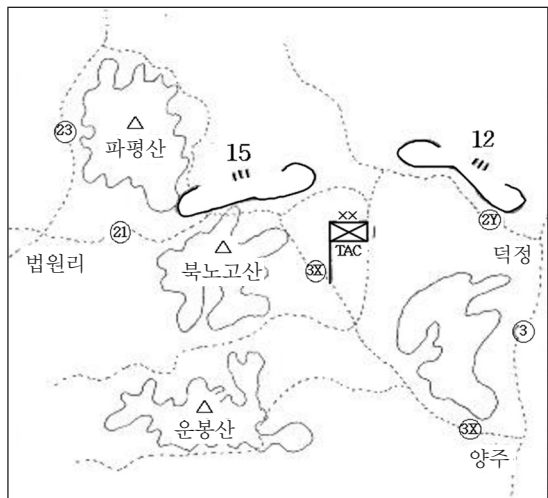
특히 작전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더욱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협조는 대간첩작전 수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작전병력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격려는 장병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불타는 전의와 확고한 신념을 갖게 했다.

이날 밤 공비들은 수 개 지역에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아군과 산발적인 접촉을 했다. 각 부대의 보고를 종합하면 공비 대부분이 제1봉쇄선 근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6사단 제73연대는 24:00, 01:25, 01:30 등 몇 차례나 공비들과 교전했으나 전과는 없었다.

03:00, 제6군단장은 “적은 아군 제1봉

도표 <5-12> 1월 23일 제1사단 배치도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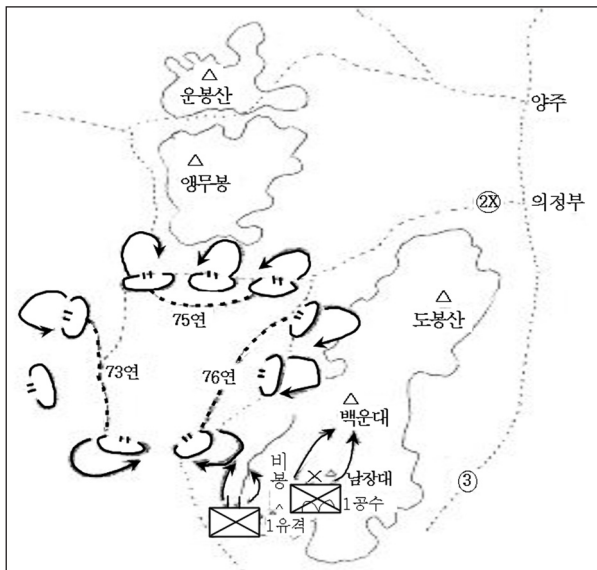
쇄선에 도달했고 부상 중이다. 이들은 결사적으로 봉쇄선을 돌파하여 부상을 기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야간에는 수하 없이 사격하여 한 놈도 부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03:45, 벽제 북서방 1.5km 지점인 목암리(CS 168759)에서 공비 1명과 접촉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06:29경 구과발 동북방 2km 지점인 중골(CS 183681)에서 5~6명으로 추산되는 공비와 접촉했고, 연이어 이 지점에서 동북방으로 400m 지점에서 3명과 접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06:40경에는 앵무봉 북서방 1km 지점인 대고령(CS 154807)에서 1명과 접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 신고는 공비들이 부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10:00, 김계원 참모총장 주재하에 서종철 제1군사령관, 정래혁 제2군사령관, 주요 부대장, 육본 장성급 전 참모가 참가한 가운데 육본 기밀실에서 육군 최고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대간첩작전 상황 분석, 각 부대간 협조문제, 정보교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11:30 육군본부는 작전지시 제7호를 발령하여 제1공수특전단, 제1유격대대 및 제1201건설공병단을 제1군에 배속했다.

도표 <5-13> 1월 23일 제26사단 배치도

제1군은 13:30 육본으로부터 배속 받은 이들 부대를 제6군단에 재배속했고 제6군단은 다시 제26사단에 재배속하면서 무장공비들이 극히 험악한 지역에 은신할 것을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단과 제1유격대대를 산악지역에 운용하도록 했다. 즉, 제1공수특전단은 남장대 일대를, 제1유격대대는 비봉일대를 수색한 후 각각 그 지역에서 봉쇄진지를 점령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1201건설공병단을 2X도로(현 39번 도로)를 연한 선에 배치하고, 군단 및 제26사단 직할부대들을 앵무봉 일대에 배치했다. 제26사단 배치도는 도표 <5-13>과 같다.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3쪽

이 날 작전결과 제26사단 공병대대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CS 195763)에서 공비 1명을 사살했는데 작전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26사단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석(47세)과 지무섭(25세)의 신고로 가옥에 은신하고 있는 공비를 추적했다. 이 때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제26사단 예하의 공병대대(11/140명),

사단 수색중대(7/129명), 제73연대 수색중대(3/78명), 제75연대 수색중대(3/73명) 등 24/420명이 투입되었다.

13:30경, 사단공병대대 제2중대 중대장 김상만 대위 등 3/28명이 신고자를 대동하고 공비의 도주로를 따라 수색을 하던 중, 계곡에 낙엽이 불룩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포위한 후 소대장과 분대장이 의심지역을 향해 1발씩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공비가 일어나면서 기관단총으로 응사해 오므로 포위한 병력이 집중사격을 가해 공비를 사살하고 기관단총과 권총 각각 1정을 노획했다.

#### 다. 1월 24일 작전

제6군단은 1. 24. 00:01부로 유효한 작전명령을 아래와 같이 하달했다.

“제1공수특전단과 제1유격대대는 비봉 및 남장대 일대에서 북서방향으로 수색한 뒤 삼상리(CS 170710, 구파발 북방 4km) 일대에 집결보유한다. 제1사단 제11연대 1·3대대는 송추로부터 올때고개(CS 242780, 송추 북서방 3.5km)를 연하는 선에서 북방으로 수색완료 후 1개 대대는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집결보유한다. 제26사단과 제1사단은 현 배치선 일대에서 각각 지역수색을 실시한다.”

04:20~08:40, 제26사단 제75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연곡리(CS 195866)에서 공비를 발견하고 추적 중, 북노고산(CS 186896) 서북방 덕도리(CS 191901)에서 공비 3명을 재발견했다. 여기서 교전으로 공비 1명을 사살하고, 북노고산 방향으로 도주하는 공비를 추격하여 2명을 추가 사살했다. 그러나 교전과정에서 아군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04:30, 송추에 거주하는 조강현 집에서 보리, 쌀, 이불, 냄비, 김치 등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26사단 제76연대 제1대대는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 추적 중 사패산에서 참나무로 위장하고 있는 공비 2명을 발견 사살했다. 그러나 교전 과정에서 아군 2명이 전사했다.

07:57~14:40 제1사단 제15연대가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북방(CS 185 900)에서 공비 3명을 발견하고 제2대대, 사단수색중대, 연대수색중대, 전투지원중대 등을 투입하여 북노고산 일대에서 공비 3명 모두 사살했다. 그러나 공비의 완강한 저항으로 제15연대장 이익수 대령 등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희생도 막대했다.

09:30, 제259수송자동차대대가 양주군 회암리(CS 325899)에서 공비 2명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하고 1명은 도주했으나 제1110야전공병단에 의하여 회암리 북동방(CS 375905)에서 사살되었다.

09:30, 제26사단 제75연대가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CS 193970)에서 1명을 사살했다.

10:25, 제26사단 제73연대 수색소대가 도봉산 동굴(CS 248748)에 은신한 공비 1명을 사살했다.

18:20, 미 제2사단 제17포병이 파주군 문산을 이천리 북방(CS 097959)에서 공비 1명을 사살했고, 20:30에 파주군 법원읍 금곡리(CS 135947)에서 1명을 더 사살했다.

한편 제6관구사는 제30사단으로 인왕산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했으나 접적 없이 끝났으며, 제33사단은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 철수했다.

이날 많은 희생자를 낸 북노고산 전투경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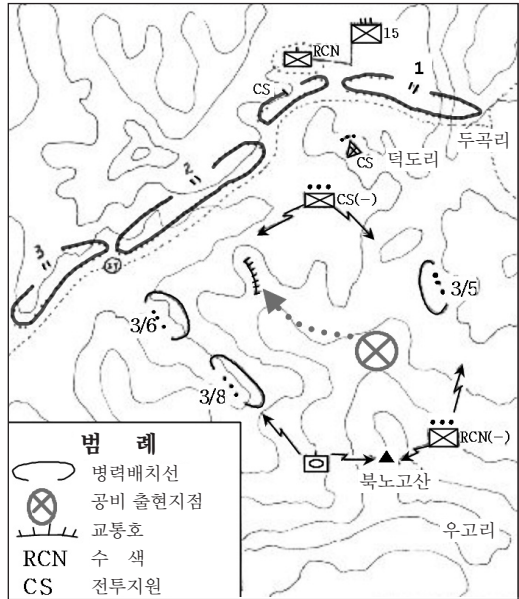
제1사단 제15연대는 04:20 제6군단으로부터 공비 5명 2개 조가 북노고산 서측(CS 196896)에서 북노고산(CS 185895) 방향으로 도주 중에 있으며 제26사단에서 이를 추격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1사단은 무장공비의 야간행군 능력과 복상통로를 분석한 결과

약 3시간 후에는 2Y도로를 연해 공비의 복상로를 봉쇄하고 있는 제15연대 병력과 조우할 것으로 판단했다. 07:00에 군단으로부터 덕도리(CS 191901)에서 무장공비 5명과 제26사단 병력이 교전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제26사단과 필요한 협조를 하는 한편, 제15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단 수색중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했다.

07:57, 제15연대는 우고리 북서방(CS 185900) 소나무 사이로 무장공비 3명을 발견했다. 제15연대는 즉각 예비인 연대 수색중대와 제2대대 일부 병력, 사단에서 배속받은 사단 수색중대와 연대 전투지원중대 1개 소대를 투입하여 공비들을 완전 포위하고 포위망 압축을 위해 각 포위부대에서 4개 소개 규모를 포위망 안으로 투입시켜 2중 포위망을 형성했다. 제1사단 제15연대의 작전요도는 도표 <5-14>와 같다.

08:40, 북노고산 북서쪽 능선에서 공비들과 제2대대 제8중대의 조우로 최초 교전이 벌어졌으나, 공비들은 그 일대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교통호로 은신하여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다. 공비들이 은신한 교통호는 북노고산으로부터 북서쪽 능선 끝에 위치한 해발 300m 고지로 주변은 60~80°의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잡목이 무성

도표 <5-14> 1월 24일 제1사단 제15연대 작전요도



출처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4쪽



당시 공비들이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호, 주변의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있다.

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지형을 분석한 제15연대장은 제2대대장 지휘하에 북쪽 고지에서 저지로 제6중대(중대장이충진 대위)를 공격시켰으나, 양호한 진지를 점령한 공비들의 사격을 받아 아군의 전사상자만 냈을 뿐 적을 살상하지는 못했다. 제6중대는 09:50경 무장공비와 30m까지 접근하여 10:30까지 국부적인 돌격을 시도하여 적 1명을 사살했으나 아군도 수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때 2Y도로 방향에서 접근한 연대 수색중대도 10m 지점까지 육박하여 수류탄 수발을 투척했으나 급경사와 잡목으로 인해 적을 살상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중대장 손강수 대위가 수류탄 2발을 꺼내들고 교통호를 이용하여 육박했으나 호 내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전사하고 말았다.

10:30경 공비로부터 불과 100m 거리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제15연대장 이익수 대령은 사단 수색중대를 이용하여 측면공격을 하기로 결심하고 중대장을 대동하고 20m 가까이 접근하여 “5분 내로 손 들고 나오라.”고 고함쳤으나 공비들은 사격으로 응수했다. 그러자 연대장은 옆에 있던 부하의 수류탄을 빼어 들고 능선으로 뛰어 오르며 투척하려고 할 때 공비들의 사격을 받아 심장 관통상을 입고 전사하고 말았다.



고 이익수 대령

연대장의 전사 소식을 들은 부대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연대장을 대신해 부대를 지휘한 제2대대장은 포위부대 중에서 특공대를 조직했다. 이만우 소위 등 10명으로 편성된 특공대가 중앙돌파를 시도했으나, 공비들의 집중사격을 받고 이만우 소위 역시 전사하고 말았다.

이 때 전투지원중대 병력이 특공대가 육박하는 틈을 이용하여 교통호에 접근, 최후 발악을 하는 공비 1명을 사살했으며, 14:40경 잔여 1명을 사살함으로써 일당 3명을 완전 소탕했다. 이로써 북노고산 작전은 장병 13명의 희생을 내고 끝이 났다.

#### 라. 1월 25일 작전

제1야전군사령부는 현재까지의 공비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주로 야간에 행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병사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주간에 휴식을 하면서 야간에 적을 포착 유인하여 격멸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갖추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그리고 14:00부로 제1공수특전단을 미 제2사단에 작전통제시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동거리 헬기장(CS 098827)에 집결보유하여 임진강변 작전에 운용토록 했다.

제25사단은 파평산과 1번 도로를 따라 봉쇄선을 형성했고, 제30사단은 인왕산 일대에 대해 수색과 매복작전을 했다.

이 날 공비들과의 접적상황은 없었으나, GOP지역에서 적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즉 04:00,

장파리 북서방 2.5km지점의 미 제2사단 제38감시초소(CT 089029)가 7~8명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제25사단 565GP 전방DMZ에서 북한군 2명이 야간관측경(Starlight Scope)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무장공비들의 월북을 유도하고 이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육군본부는 적 주력의 태반이 격멸되었고, 작전지역이 북상되었기 때문에, 1번 및 2X도로에 배치되었던 1201건설공병단을 제1군으로부터 배속해제시켜 복귀토록 했다.

국방부는 미 제8군과 항구적인 대간첩작전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장비의 도입과 미 제1군단 후방지역에 대한 한국군 1개 전투단의 배치문제를 협의했다.

#### 마. 1월 26일 작전

이날까지의 작전을 통해 잔존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비는 9명이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부대를 재수습하고 봉쇄선을 북으로 신장하기 위해 먼저 앵무봉과 노고산 일대를 재수색하도록 계획했다.

이에 제6군단은 제26사단으로 하여금 10:00부터 현 위치에서 북방으로 수색 후 유동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결하도록 지시했다.

이 날 집적상황은 05:25, 앵무봉 북방 5km지점인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CS 160854)에서 제26사단 제75연대 제7중대 제1소대장 유영석 등 15명이 잠복근무 중 약 20m 전방에서 접근하는 공비 1명<sup>42</sup>을 발견, 최후까지 발악하는 공비를 끝까지 추적하여 사살했다.

08:30, 미 제2사단 병력이 파평산 남방 2.5km 지점인 파주군 법원읍 금곡리(CS 132945)에서 매복작전 중 수 미상의 공비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아 미군 1명이 전사했다.

09:05, 미 제2사단이 장파리 북서방 3km 지점인 파주군 진동면 갈산동(CT 076037)에서 공비 1명을 사살하고, 추가 수색 중 갈산동 북방(CT 073038)에서 공비 시체 1구를 발견했다.

11:20, 제25사단 제71연대가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의 파평산 북서방 산기슭(CS 125990)에서 공비 1명을 사살했다.

한편 작전지역이 북상됨에 따라 대간첩대책본부는 제6관구사 예하의 제33사단을 14:30에 완전 철수시켰고, 16:30에는 인왕산에 배치된 1개 중대를 제외하고 제30사단 전원을 복귀시켰다. 이들 부대가 철수한 지역은 서대문 및 성북경찰서가 담당하여 산악초소, 검문소, 주요 거점에 경찰병력을 배치 운용했다.

#### 바. 1월 27일 작전

대간첩대책본부는 봉쇄선을 강화하고 야간 매복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실시했다.

04:20, 제25사단 제71연대 제7중대는 매복작전 중 파평산 하단부(CS 125998)에서 공비

1명을 발견 사살했다.

10:40, 민간인이 25~26일 엿과 밥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제226보안부대 이길준 대위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헛간 벧집 속에 은신 중이던 공비 1명을 사살했다.

제6관구사와 경찰은 작전을 계속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제1유격대대의 잔여 2개 중대를 한국공군 헬기로 공수하여 제6군단에 배속했다.<sup>43</sup>

#### 사. 1월 28일 작전

이날도 작전은 계속되었으나 접적상황은 없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인왕산에 배치했던 제30사단 1개 중대를 철수시켰다.

#### 아. 1월 29일 작전

이날 역시 접적상황은 없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일부 부대를 원복토록 조치했다. 08:00에 제1사단과 제1공수특전단을 제6군단으로부터 배속해제시켰으며,<sup>44</sup> 제1사단은 13:00에 출발하여 19:00에 원대복귀 완료했다.

제6군단은 13:00에 전술지휘소를 철수하여 18:00에 복귀 완료했고, 제26사단 제76연대 제2대대를 복귀토록 하고 대신 5개 수색소대를 주요 지점에 배치토록 했다.

#### 자. 1월 30~31일 작전

1. 30. 22:00,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발랑고리 금병산 우단(CS 145868)의 김중철(78세) 씨 집에 공비 1명이 잠입하여 식사 요구를 했다. 김 씨는 공비를 방으로 안내 후 푸짐한 대접과 동시에 2~3일 투숙을 허용한다고 안심시킨 후, 다음날 04:00에 아들(김재흠, 32세)을 시켜 제26사단에 신고했다.

1. 31. 04:00, 신고를 접수한 제26사단 제75연대 제2대대 수색소대 박수웅 소위 등 17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미 제2사단 수색중대장 등 15명과 합류하여 투항을 권유했으나 공비는 자폭하고 말았다.

제6군단은 잔존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계속 수색작전에 임했고, 나머지 부대들도 의심지역에 대한 수색활동을 계속했으며, DMZ에서는 공비의 월복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울타리 이상유무를 지속 확인했다.



차. 2월 3일 작전

나무꾼의 신고로 법원리 천현지서에서 공비 1명을 사살함으로써 작전을 종결했다.

3. 작전결과<sup>45</sup>

작전결과는 도표 <5-15~18>과 같다.

도표 <5-15> 작전결과 총괄

장교/사병

작전 기간	1968. 1. 20~2. 3(15일)
군 동원병력	16개 부대 19,186명(1,094/18,092)
전 과	사살 28명, 생포 1명(2명은 도주한 것으로 추정) <sup>46</sup>
피 해	전사 31명(5/26), 부상 51명(3/48)
탄약 소요	총 24만발(1명 사살 : 8,317발)

도표 <5-16> 출동병력 현황 : 총 1,094/ 18,092명

단위 : 명(장교/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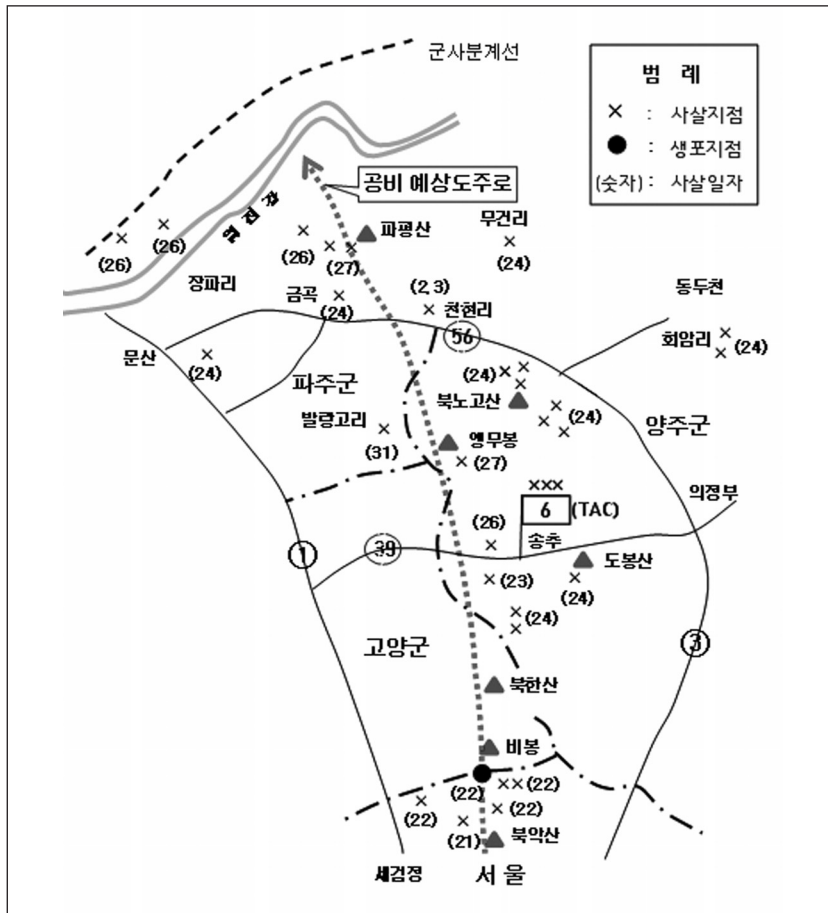
부 대		인 원	부 대		인 원
1군	1사단	394/6,653	2군	30사단	38/572
	25사단	186/4,457		33사단	54/615
	26사단	114/2,098		공병시설대	11/150
	8사단	15/368		1201공병단	28/600
	1110공병단	23/299		소계	131/1,937
	109공병대대	6/120	육직	수 경 사	58/1,269
	ASC	12/19		제1공수단	73/287
	6군단 본부	61/183		제1유격대대	10/270
	소계	811/14,197		육 본 사	11/159
			소계	152/1,958	

도표 <5-17> 부대별 전과 및 피해 현황

단위 : 명(장교/사병)

구 분	계	1	25	26	30	수경사	1110 공병	259 수차대	미 2 사 단	경 <sup>47</sup> 찰	민 간	기 타
		사 단	사 단	사 단	사 단							
전과	사살	28	3	2	10	4	1	1	4	2		1
	생포	1			1							
피해	전사	5/26	3/9		/5		1/	/2	/4	1/1	5	
	부상	3/48	2/17	/4	1/7	/2	/1	/3	/10	3	1	

도표 <5-18> 공비 사살 장소 및 일자



## 제5절 정부·국회의 조치 및 국민 여론과 협조

### 1. 정부조치

1월 19일 우씨 형제의 신고로 대간첩작전이 전개되고 21일 공비와 최초교전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 언론은 혼연일체가 되어 대간첩작전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대간첩작전 관련 정부조치는 주로 22일과 23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4일 이후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관련조치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23일까지의 정부조치를 다루고 그 이후 조치는 제6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정부조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8</sup>

#### 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치

1월 19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장괴한 침투사건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대간첩작전을 승인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했으므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19일 11:00 국방부 초도순시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한 국방력의 조속 배양’, ‘장병 정신무장 강화’, ‘장병 처우개선’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신속하고 일관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9일 오후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대간첩협의회’ 규정을 의결했다.

21일 무장공비와 최초 교전상황이 발생하자 정부 주요 인사들은 긴급히 청와대로 달려 왔다. 정일권 국무총리, 김성은 국방부장관, 이 호 내무부장관, 홍종철 공보부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김시진 정보비서관, 신범직 청와대 대변인, 신직수 검찰총장, 김현옥 서울시장 등이 속속 청와대로 들어왔다. 박 대통령과 각료들은 대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1월 19일 우씨 형제에 의해 무장공비 출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줄곧 해운 언론통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통제는 22일 07:00부로 해제되었다.

22일 오전 대간첩작전으로 혼란스런 와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중앙청 회의실에서 경제각료, 무역업계, 금융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에서 작전 논의 중인 박 대통령  
좌로부터 김계원 육군총장, 박종규 경호실장, 서종철 제1군사령관, 이세호 제6군단장, 박 대통령, 이후락 비서실장이다.

22일 14:30, 청와대는 아래와 같은 대통령 강조사항을 하달했다.

1. 침투된 적은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전멸시켜라.
2. 모든 행동은 작전 위주로 하되, 그 때 그 때의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라.
3. 서울 지방 작전지역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관 재량으로 통금을 설정하고 국민과 협조하라.
4. 전방 작전지구에 있어서는 계엄과 흡사한 조건하에서 부대지휘를 하라.
5. 금일부터 등산객은 전무(全無)토록 할 것이며, 금후 계속 등산자는 일단 괴한으로 간주하라.
6. 서울 경비에 있어서 수도경비사, 제6관구사, 경찰, 청와대 경호실 등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작전지휘체제를 단일화하라.
7. 그 때 그 때의 상황, 즉 괴한의 도주방향, 인상착의 등을 국민에게 보도하여 국민의 협조를 얻도록 하라.

22일 22:50, 박 대통령은 치안국 작전상황실을 불시 방문하여 약 30분간 이 호 내무장관과 채원식 치안국장으로부터 작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서 북괴 유격대의 북상루트를 철저히 봉쇄하고 모조리 일망타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합참 대간첩 대책본부에 들러 임충식 합참의장으로부터 작전상황 보고를 받고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23일 오후, 정부는 정일권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이 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상과 대간첩작전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밤 박 대통령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중앙정보부장, 합참의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대해 논의했다.

## 나. 국방부 조치

국방부는 최초 교전이 발생하자 22일 01:00 합참본부에서 김성은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각군 수뇌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무장공비 소탕을 위한 각군의 조치를 논의했다. 또한 모든 대간첩작전을 대간첩대책 본부가 지휘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를 대외에 발표했다.

22일 15:00, 국방부장관실에서 국방장관 주재하에 ‘대간첩작전 실무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병력배치 문제, 각 부처간 협조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이 호 내무장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임충식 합참의장,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22일 19:00, 윤필용 방첩부대장(육군 소장)은 김신조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에 침입한 무장간첩단의 소속, 침투 목적·경위, 도주방향 등을 브리핑하고, 향후에도 북한이 이와 같은

대규모의 간첩단을 남파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23일 오전, 김성은 장관은 대간첩작전 관련 추가지침을 각군에 하달했다. 그 내용은 ① 전 부대는 1월 23일까지 5분대기조 편성을 완료할 것. ② 전 예비사단(후방사단)에 대간첩작전 기동타격대를 1월 말까지 편성 완료할 것. ③ 북한의 후방교란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줄 것. ④ 주요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를 강화할 것. ⑤ 휴전선의 철책 설치, 레이더 설치 등 대간첩작전 준비를 앞당겨 1월 말까지 완료할 것. 등이었다. 이어 동일 13:30 김 장관은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1, 2군사령관 등과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했다.

동일 16:00,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이 호 내무부장관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간첩색출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다. 내무부 조치

치안국은 21일 22:00을 기해 전국 경찰에 갑호(甲號) 비상령을 내리고 전 경찰을 비상대기에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각 골목마다 삼엄한 경계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일 23:00 이후 효자동, 삼청동길 통행을 완전 차단했다.

22일 07:15, 채원식 치안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규식 총경의 사망사실을 밝히고 전 국민이 대간첩작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치안국은 언론을 통해 “무장괴한들이 양민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입산하지 말 것과 무장공비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장괴한들이 특수부대원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그리고 김신조 심문을 통해 얻은 무장공비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이 때 공개한 공비들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다.

- 1. 31명의 괴한 전원은 25~26세 가량의 청년이다.
- 2. 공비들은 짙은 회색 신사복 코트를 입고 있고, 코트 속에는 계급장 없는 괴뢰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고 있으며, 흰 고무줄을 두른 흑색 농구화(제조처 미상)를 신고 있다.
- 3. 외투 속에 권총, 기관단총, 수류탄 및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한 치안국은 22일 밤부터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고 민간인의 입산을 금지토록 했다. 통행금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22: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2시간 연장했고, 파주·고양·양주군과 의정부시에 대해서는 19:00에서 뒷날 06:00까지 7시간 연장했다. 이어서 23일 밤부터는 통금시간 연장지역을 확대하여 경기도 연천·포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도 통금시간을 19:00에서 뒷날 06:00까지 7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본 통금시간 연장조치는 1월 31일 밤부터 환원되었다.(기간 중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금을 위반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22일 서울특별시는 김현옥 시장 주재로 각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간첩대책회의를 열고 대간첩작전 지원대책,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홍보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통금시간 연장에 따라 43대의 시내버스를 동원하여 통금시간이 넘어 서울에 도착한 열차 승객들을 23개 방향에 2대씩 편성하여 승객을 수송했다. 이 때 승객들에게 손바닥에 스탬프를 찍어 통행증을 대신했다.

#### 라. 공보부 및 외무부 조치

공보부는 22일 07:00부로 언론통제를 해제한 데 이어 홍종철 공부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괴가 남파한 무장간첩의 악랄한 도발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물샐틈없는 경비태세로써 그들의 파괴행위의 사전 방위와 대간첩 섬멸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정부의 철저한 안전조치를 신뢰해서 동요하지 말고 간첩에 대한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간첩작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는 25일 해외주재 한국 공관을 통해 1·21사태의 진상을 우방 각국 정부에 설명하도록 훈령을 하달하고, 26일 서울 주재 각국 외교사절들에게도 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획한 공비들의 무기와 장비를 보여주었다.

## 2. 국회 조치

국회는 22일 10:30에 국방위를, 12:00에 내무위를 각각 긴급소집하고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공화·신민 양당의 간부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임충식 합참의장과 내무부 당국자로부터 사건 진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날 공화당은 김종필 의장 공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기획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긴급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경이 무장간첩 31명의 서울 침투를 막지 못한 것을 질타하면서 무장간첩의 조속한 전원 체포와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건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관계관을 인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여야는 양당 총무회담(공화당 김진만 의원, 신민당 김영삼 의원)을 열고 1월 31일 긴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는 회기는 30일로 하고 1월 31일 개최식, 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양당 총무 외 81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이 의장은 23일 이를 공고했다.) 2월 1일과 2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2일 민기식 국방위원장 등 군 출신 국회의원 16명은 합참 대간첩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임충식 합참의장으로부터 작전상황을 브리핑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3. 미국정부 및 유엔군사령부 조치

미 국무부는 22일 로버트 매클로스키 공보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휴전협정을 빈번히 위반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서울 근교에 침투한 북한 유격대 사건은 1953년 이래 가장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군사적 조치 외에, 22일 09:00 공산 측에게 군사정전 위원회 본회의를 1월 23일 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2일 12:20 북한 측 대표 박중국 중장은 23일이 아닌 24일에 열자고 회신했다.(이 회의는 24일 11:00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 4. 언론의 반응

21일 이전까지는 보도통제로 인해 무장공비 침투 관련 언론보도가 일체 없었고, 21일은 일요일이라 신문은 발행되지 않았다. 22일 07:00 보도통제가 해제되자 각 언론기관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으며, 주요 신문은 일면에 톱으로 보도했고 호외도 발행했다. 언론의 논평은 대체로 무장공비들이 서울까지 침투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데 대해 개탄을 하면서도 무장공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방첩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 5. 국민의 북한만행 규탄과 대간첩작전 협조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인 규탄대회가 10일 이상 지속되었다. 규탄대회에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노동자, 연예인, 학생 등이 참가했다. 1월 29일 서울시내 광신교교, 경희중고 등 9개교 학생 만여 명이 규탄대회를 열고 김일성 화형식을 했으며, 30일 영등포여중고 등 5개교에서 8천여 명, 31일 서울공고, 숙명여중고 등 7개교 만여 명의 학생들이 잇달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2월 3일 대학교수 등 지식인 3천여 명이 규탄대회를 열었고,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기업인, 노동자들도 영하의 혹한을 무릅쓰고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공비 소탕에는 국민의 협조와 성원이 절대적이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월 22일 23:20경 서대문구 홍제동 거주 이용선 씨(체신부 직원)는 누나 이용희 씨 집에서 막 잠이 들었는데 양철 지붕 위를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씨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옆집 기와지붕에서 괴한 2명이 이 씨의 양철 지붕 위로 뛰어내리다가 그 중 1명은 부엌지붕이 푹 꺼지는 바람에 부엌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용선 씨와 누나는 괴한의 허리를 부등켜 안고 “간첩이야!”라고 외치면서 주먹과 신으로 공비를 마구 때렸다. 그러자 공비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발사하여 이용선 씨가 복부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 총소리를 듣고 근처에 있던 군경이 뛰어 왔으나, 공비들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간 후였다.

1월 30일 22시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발랑고리에 거주하는 김종철 노인의 집에 공비 1명이 침입하여 식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공비를 방에 안내한 후 식사를 후하게 대접하고, 2~3일간 투숙을 허용하겠다고 하여 공비를 안심시킨 후 다음 날 아침 04시경에 미 제2사단과 제26사단에 신고했다. 양개 사단 병력이 출동하여 공비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끝내 공비는 자폭하고 말았다.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되었던 장병들은 군단장, 사단장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잠도 못자고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작전을 했는데 주민들의 위문이 큰 힘이 되었다. 작전 지역의 주민들은 따뜻한 쌀밥과 국, 떡 등을 가지고 위문을 했는데 그 중에는 파평산 봉우리까지 위문을 한 4명의 소위 양공주(洋公主)도 있어 감동을 주었다. 김계원 참모총장 부인 등 군인가족들이 수도통합병원을 위문하여 부상자들을 돌보기도 했고, 위문금을 내는 인사도 많았다.



## 주(註)

- 1 합참 정보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사례집』, 2011, 52쪽
- 2 국회사무처, 시론 “북괴 도발행위의 새 양상과 대비책”, 『국회보 제76호』, 1968. 2월, 37쪽
- 3 국회사무처, “제63회 국회회의록 제1호”, 1968. 2. 1, 4~5쪽
- 4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1978, 99~106쪽
- 5 육군본부, 『간첩침투사건편람 II 집( 53~ 68)』, 1986, 866쪽 ;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1998, 360쪽
- 6 필자가 2012년 1월 13일 김신조를 직접 만나 증언을 청취했다.(증언 내용은 부록 참조)
- 7 김신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동아출판사, 1994, 67~68, 159~164쪽  
김신조는 이로 인해 서로의 마음속으로부터의 지휘체제가 잘 서지 않아 서로 단결이 잘되지 않았고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잘 훈련된 견제 소대를 차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 8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1998, 32~35쪽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1~352쪽 ;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159~164쪽 ; 김신조 증언
- 9 124군 부대장 이재형 대좌와 부부대장 우명환 상좌는 1965년 7월 18일 발생한 소위 ‘노성준 무장간첩사건’의 멤버였다. 당시 노성준 소좌(조장), 이재형 소좌(조원), 우명환 대위(조원) 등 3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하고 침투하여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송추 유원지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고정간첩이 이미 한국 경찰에 포섭된 줄 모르고 접선하다가 치안국의 역공작에 걸려 미리 매복한 서울시경 소속의 경찰과 교전하게 되었다. 이 때 노성준은 체포되었으나 이재형은 체포되기 직전 경찰과 사투 끝에 탈출해서 북부에 충을 맞아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상태에서 월북했고, 우명환도 도망쳐서 결국 월북에 성공했다. 이들은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특진했으며, 124군부대가 창설되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맡게 되었다.(『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488~490쪽 ; 김신조 증언)
- 10 현재 이 지점은 한국군 제25사단의 책임지역 내에 있다.
- 11 『간첩침투사건 편람 II ( 53~ 68)』, 761~762쪽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1~352쪽 ;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31~37쪽
- 12 『간첩침투사건 편람 II 집( 53~ 68)』, 770쪽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9쪽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에는 제1숙영지 도착시간 1. 18. 02:00, 출발시간 20:00, 제3숙영지 도착시간 07:00, 제4숙영지 도착시간이 06:00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나, 필자는 1차 사료에 가까운 위 두 권의 책과 김신조의 증언을 통해 위 도표에 기록된 시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 13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36~37쪽, 우철재 증언  
우철재 증언은 2011년 12월 14일 필자가 법원리 초릿골 현지를 방문하여 청취했다. 삼봉산은 봉우리가 세 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우철재의 증언 내용은 부록 참조)
- 14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37쪽 ; “제63회 국회 회의록 제1호”, 6, 16쪽

- 15 제25사단은 공비들이 “북쪽으로 간다.”고 했다는 우씨 형제들의 신고에 따라 책임지역 내 예상 도로 상에 있는 파평산을 수색했다.
- 16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359~362쪽
- 17 미 제1군단 통제하에 실시한 지휘소훈련으로 훈련명은 “캐피톨 힐(Capitol Hill)” 이었으며, 미 제1군단의 예하부대 및 작전통제를 받는 한국군 연대급 이상 부대가 참가했다.
- 18 『육군사 제12집(상)(1968년도)』, 650~651쪽 ; 제6군단사령부, 『진군약사(1954. 5. 1~1976. 4. 40)』, 1976, 1968년도 약사
- 19 이 도로는 의정부에서 벽제에 이르는 도로로 현재의 39번 도로이다. 2X도로라는 명칭은 당시 미군이 붙인 것으로, 1:5만 군사지도에도 2X도로로 표기되어 있다.
- 20 당시 30사단은 후방예비사단(향토사단)으로 기간편성되어 있어 평시 병력은 상비사단의 약 1/10 수준이었다.
- 21 이 도로는 덕정에서 법원리에 이르는 도로로 당시는 316번 도로였으며 현재는 56번 도로이다. 2Y도로라는 명칭은 당시 미군이 붙인 것으로, 1:5만 군사지도에도 316번도로와 2Y도로가 병행 표기되어 있다.
- 22 육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 1978, 383쪽
- 23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5~356쪽
- 24 국방부와 합참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성은 장관의 국회 진술과 그의 회고록에서 20일 09:00경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25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83쪽
- 26 “제63회 국회 회의록 제1호”, 16~17쪽
- 27 이 부대는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으로 육본 직할부대로 창설되어 1959년 10월 1일 부로 제1공수특전단으로 개칭되었다. 3개 특전대대와 1개 공수교육대로 편성되었으며 당시 김포 양서에 위치하고 있었다.
- 28 『간첩침투사건 편람 II(’53~’68)』, 762~763쪽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2~356쪽 ; 『대비정규전사 II(1961~1980)』, 39~40쪽
- 29 『대비정규전사 II(1961~1980)』, 36~37쪽 ; 『간첩침투사건편람 II 집(’53~’68)』, 762쪽
- 30 “제63회 국회 회의록 제1호”, 6~7쪽(이 호 내무부장관의 국회 답변내용)
- 31 “제63회 국회 회의록 제1호”, 17쪽(김성은 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 내용)
- 32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88쪽
- 33 정식 출동준비 명령은 22일 05:32 합참(대간첩대책본부)에서 하달했다.
- 34 『대비정규전사 II(1961~1980)』, 39~40쪽
- 35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85~786쪽
- 36 김신조,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동아출판사, 1994, 52~54쪽
- 37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6~357쪽 ; 『대비정규전사 II(1961~1980)』, 40~43쪽 ; 『간첩

침투사건편람 Ⅱ집( 53~ 68)』, 763쪽 ;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88~791쪽 ; 『한길로 섭졌던 내 조국』, 364~367쪽 ;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54~66쪽 ; 『제 63회 국회 회의록 제1, 2호』(김성은 국방부장관과 이 호 내무부장관의 국회 답변내용) ; 당시 신문 기사(1968. 1. 22~24, 동아·경향·조선·전우신문 등) ; 김신조 증언(2012. 1. 13)

- 38 세검정 파출소는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통과시키는 과오를 범했으며,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출소장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파면됐다.
- 39 제1보병사단, 『전진약사 제2집(1966. 1. 1~1978. 9. 30)』, 137쪽
- 40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60~66쪽 ;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56~357쪽 ; 김신조 증언
- 41 장지량 공군참모총장은 김신조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SR-71 정보기를 띄워 북한 전역에 포진한 124군부대의 위치를 촬영해 주도록 요청했고, 항공사진 촬영결과는 김신조의 증언과 윤희용 방첩부대장이 보고한 결과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 나이다.”』, 774쪽)
- 42 이 때 사살된 공비가 총조장 김종웅이다.(김신조가 시신 확인)
- 43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650~651쪽  
『대비정규전사 Ⅱ(1961~1980)』, 45쪽에는 28일 10:00에 제6군단에 배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차 사료에 가까운 육군사를 기준으로 기술했다.
- 44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650~651쪽  
『대비정규전사 Ⅱ(1961~1980)』, 45쪽에는 28일 10:00에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7쪽에는 1. 27. 10:00에 제1공수특전단을 배속 해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육군사를 기준으로 기술했다.
- 45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70쪽 ; 『대비정규전사 Ⅱ(1961~1980)』, 46~47쪽
- 46 ① 작전 종료 당시 최종 사살된 것으로 확인된 공비는 27명이었다. 그러나 작전종료 후 임진강(미 제2사단지역)에서 민간인 차림의 시체 1구가 떠올랐으며, 시체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지만 정황상 도주자로 처리하여 사살인원에 포함했다. 2명은 끝내 도주하여 월북했거나, 추운 날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동사했거나 기아로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그해 가을, 북에서 생산된 송이버섯 300상자를 전달하러 한국에 온 북한군 박제경 대장이 1·21사태 때 생존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탈북 귀순자도 있으나, 박제경의 사진을 본 김신조는, 눈 위쪽 부분은 맞는 것 같으나 그 아래쪽은 살이 많이 썩어서 그런지 사건 당시 모습과는 많이 달라 확신을 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2012년 2월 13일 필자에게 증언)  
② 2012. 2. 5, 《중앙선데이》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익명의 탈북자 진술을 근거로, “침투한 무장공비가 33명이었고, 이중 2명(우명환, 임태영)이 한국 정보기관의 잠수협박에 굴복하여 한국의 고정간첩이 되어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군 상장과 중장까지 진급했으나, 1998년 신분이 드러나 사형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당시 목 없는 공비시신 사진과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때 임태영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제시했다. ⇒ ㉔ 침투 인원수와 관련하여, 당시의 모든 기록이 31명으로 되어 있고, 김신조도 31명이라고 증언했으며, 우철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비 총조장 김종웅이 우씨 4형제를 풀어주기 직전 전 공비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악수를 하게 했는데 세어보니 31명이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㉕ 임태영과 우명환이 침투조에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임태영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우명환은 북한군 상좌로 124군부대 부부대장이었다. 만약 우명환이 침투조에 포함되었다면 계급으로 볼 때 총조장은 김종웅 상위가 아니라 당연히

우명환이어야 했다. 임태영과 우명환이 “후방차단조로 옥상에 있다가 도주했다.”라는 부분도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임태영이 “권총을 차고 팬티 바람으로 임진강을 건넜다.”라는 말도 당시 임진강이 얼어붙은 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다만 목 없는 공비시신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

- 47 기존의 기록에는 전사자가 1명(최규식 총경)으로 되어 있으나, 최 총경과 함께 전사한 정종수 경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2명으로 기록했다.
- 48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78~800쪽 ;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357~375 “제63회 국회 회의록 제1호”, 4~7, 16~19쪽, 1월 21~23일 신문기사(전우신문, 동아, 경향, 조선, 매경 등)

## 제 6 장

#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제1절 푸에블로호 동해 투입 배경과 경위
- 제2절 사건 발생과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 제3절 미국정부의 조치와 한·미 갈등과 협력
- 제4절 승무원 송환 관련 미·북 협상
- 제5절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의도



북한 응징을 위해 한국 해역으로 이동 중인  
미 제7함대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1968. 1)



## 제 6 장

#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한국 내에서 대간첩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와중에 1968년 1월 23일 14:00(한국시간)경, 동해의 원산항 인근의 공해 상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USS Pueblo)가 북한의 '미그 21' 전투기 2대와 4척의 함정에 의해 승무원 83명과 함께 원산항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초기에는 강경한 군사 대응조치를 강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 방법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북한간에 길고 긴 난항을 거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강력한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원했으나, 미국은 협상을 선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자 한·미간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한 연구 범주는 ① 푸에블로호의 투입 배경과 준비 과정 ② 사건 발생 과정 ③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과정 ④ 미국의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 ⑤ 한국정부의 조치와 한·미 갈등 ⑥ 군사정전위원회 협상 과정 ⑦ 푸에블로호를 피랍한 북한의 의도 분석 ⑧ 피랍된 승무원들의 고초와 행적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다. 이 사건의 특성상 군사분야에 비해 정치·외교에 관련된 분야가 훨씬 방대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정보수집보조함 푸에블로호

이 책이 국방부의 기록임을 감안하여 군사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외교 등과 관련된 분야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랍된 승무원들이 북한에서 겪은 고초와 행적 관련 분야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부에서 전례없이 많은 비밀자료들을 포괄적으로 공개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들어온 원본 자료들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자료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본서는 1차 사료인 ‘미 국가안보국(NSA : National security Agency)<sup>1</sup>의 보고서’<sup>2</sup>,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발간한 사료해제집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V,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sup>3</sup>에 복사본으로 수록된 1차 사료, 비밀해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미첼 비 러너(Mitchell B. Lerner)<sup>4</sup>의 『푸에블로호사건 : 미국의 정보수집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sup>5</sup>, 주일 미 해군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주한미군 징후정보과장으로도 근무했던 모블레이(Mobley) 중령<sup>6</sup>의 기고문 ‘푸에블로호(PUEBLO)’<sup>7</sup> 등의 제한된 미국자료와 기타 국내 관련자료 및 신문 등을 참고하여 편찬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푸에블로호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수많은 비밀자료를 탑재한 채 북한군에 납치되어 원산항으로 끌려갔으나 미국은 이를 막지 못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왜 그렇게 당하고 말았는지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된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푸에블로호가 동해에 투입된 배경과 경과를 포함하여 사건의 발생 및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과정을 비교적 상세했다. 이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이 과정이 오늘날에도 해군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외교적 측면의 연구자료는 상당수 있으나 군사와 관련된 연구자료는 국내에 거의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 제1절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 배경과 경위

### 1.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 배경

1960년대 소련은 비전투용 선박을 활용하여 미국 연안에서 정보수집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해군은 소련의 트롤선에 의한 신호정보 수집 방법(Soviet SIGINT Trawler Collection Program)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전투용 선박을 이용한 정보수집 프로그램(AGER<sup>8</sup> Program)을 계획했으며, 미 국방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sup>9</sup>

이에 따라 미 국가안보국과 해군은 1960년에 시험적으로 연안 물자수송용 선박을 개조하여 국가안보국 통제 아래 정보수집에 활용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국가안보



국과 해군은 향후 운영되는 신호정보수집함은 국가안보국이 지휘하되 해군이 선박의 인원배치 및 운영을 맡기로 합의하고,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정보수집함 7척을 운용했다.

해군도 이러한 선박을 활용한 정보수집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 선박들은 국가안보국이 통제하고 있었다. 1965년 4월 미 국방차관보 유진 풀브리니(Eugene Fulbrini)의 제안에 의해 해군도 단계적인 정보수집함 개조 및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우선 1척을 개조해서 태평양에 배치한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연도에 2척을 추가로 배치한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12척으로 증가 운용한다.”는 것으로, 1965년 9월 태평양함대사령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1966년 3월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세부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 자체는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통제하고 있었지만 세부 임무는 일본 요코스카에 위치한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통제했다.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구체적인 임무제안서를 작성하고 태평양함대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모든 비밀작전을 승인하는 미국 정보위원회(USIB : United States Intelligence Board)가 이를 평가했다. 임무에 대한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합동참모본부는 출동명령을 내리고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이 모든 사항을 관장했다.

계획의 첫 단계로서 ‘방아벌레작전(Operation Click-beetle)’이라는 작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표준이 되는 단일 모델의 선박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표준선박은 보조일반환경조사선(AGER)으로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개조되기 이전에는 경화물선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길이는 약 180피트(54.8m) 내외, 무게 950톤 내외, 최대속력은 13노트(24km/h) 내외의 작은 선박이었다. 이 선박은 크기가 작고 개조비용이 저렴한 대신 정보수집 능력은 다소 제한되었다. 이 타입의 표준선박으로 배너(Banner)호(AGER-1), 푸에블로(Pueblo)호(AGER-2), 팜비치(Palm Beach)호(AGER-3) 등 3척을 제작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들 선박들은 ‘고급 국가정보목표 지원을 위한 해군정찰 및 정보수집업무’ 수행을 위해 신호정보와 수로정보 수집능력을 구비하도록 특별히 개조되고, 주로 사진, 음향, 수로 및 기타 정보를 단독으로 수집 가능한지를 평가한 후에 임무지역에 투입하도록 계획되었다.<sup>10</sup>

우선적으로 배너호가 실험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 배는 보통의 예인선보다 작은 길이 176피트(53.6m), 무게 960톤의 선박으로 마리아나 제도에서 정기 화물선으로 이용되던 배로써 곧 폐선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해군은 이 배를 워싱턴주에 위치한 푸젯 사운드(Puget Sound) 해군기지에서 개조했다. 선박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그 중 다수가 시정되지 않았지만 해군은 개조를 완료하고 1965년 10월 1일 워싱턴주 밖 해안에서 시험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들이 드러났지만 해군은 개의치 않고 배너호를 임무에 투입했다.

배너호의 첫 번째 임무는 동해에서 소련 해군부대와 기타 접촉물에 대한 전술적 정찰과 정보수집을 위한 일련의 정찰 임무였으며, 특히 시베리아 가까이 위치한 포보로트니만

(Povorotny Bay) 연안으로 기동함으로써 소련의 반응태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너호는 목표지역을 향해 출항했는데 목표지역 도달 전 소련 구축함들과 경비정들이 배너호를 포위했다. 그 중 몇 척은 배너호의 23m까지 근접했으나 소련은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때 해군 당국자들은 소련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련이 미국의 정보 수집행위를 목인한 것으로 확신하여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 이후 이 임무의 불길한 징조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말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너호는 소련 연안에서 임무를 몇차례 더 수행했으며, 결과는 만족스러워 워싱턴은 추가로 두 척을 더 개조하기를 원했다. 배너호는 이후 3년간 16차례나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수행 중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엔진고장으로 목표해안에서 표류하다 예인선으로 끌려오기도 했고, 조타장치는 임무 때마다 4~5차례 고장이 났으며, 주요 항해 장비인 레이더와 로란(LOLAN)도 5마일이나 위치를 틀리게 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 또한 주일 미 해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전보가 12시간 이상 걸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심지어 24시간 이상 소요된 때도 있었다.

임무 수행 중 소련 군함으로부터 현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경고와 침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소련 트롤선에 포위되거나 전투배치를 한 군함이 가깝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소련 전투기가 저공비행하면서 감시하거나 심지어 소련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배너호는 함장과 승무원의 노력, 그리고 일시적인 행운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안보국과 주일 미 해군사령부의 정보 담당자들은 거의 모든 임무마다 수반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선이 어디에 배치되던 안전하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안일한 태성으로 인해 특히 지원세력에 대한 규정 적용이 모호하게 되어 버렸다. 초기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일본 후추에 있는 제5공군사령부의 항공기들을 대기시키고, 제7함대사령부의 구축함을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작전이 큰 문제없이 거듭됨에 따라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배너호의 임무를 ‘위험성이 아주 적다.’ 라고 평가했고, 이에 따라 지원세력의 대기조치는 전적으로 해당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또한 위협평가 시 표적국가에 대한 전문가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예로, 배너호의 열 번째 임무는 북한해역에서 단기간에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위험한 지역에서의 첫 번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전투기 지원대기 요청도 하지 않았다.<sup>11</sup>

배너호의 성과에 고무된 책임자들은 두 척을 더 개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2단계 ‘방아벌레작전’에 착수했다. 개조 대상으로 이미 퇴역한 육군 화물선이 채택되었다. 남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 정박중이던 FS-389호는 팜비치호(USS Palm Beach)로, 캘리포니아주 리오 비스

타에 정박 중인 FS-344호는 푸에블로호(USS Pueblo)로 개조하기로 했다.

미국 정보위원회는 푸에블로호를 개조하여 동해의 북한과 소련 연안 일대에 투입하여 신호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을 임무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은 수시로 남한에 대한 도발을 자행해 왔으나 1967년 이후 특히 그 도발 횟수나 강도가 대폭 증가되었다. 미국 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정보위원회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정부수집 자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푸에블로호를 동해 상으로 투입하여 북한의 군사시설, 장비, 부대이동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하고자 했다.<sup>12</sup>

## 2. 푸에블로호의 개조와 동해 투입 준비

FS-344호는 원래 1944년 육군수송사령부의 일반 보급선으로 건조되어 미 육군의 보급선으로 사용되다 1954년 퇴역한 선박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오리건주의 클레스카니항, 캘리포니아주의 리오 비스타항에서 녹이 슬었던 FS-344호는 1966년 봄에 미 육군에서 미 해군으로 관리전환되었다. 이 배는 길이 177피트(54m), 폭 33피트(10m)로 미 해군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작은 소형 선박이었다. 8기통 디젤엔진 2기와 두 개의 프로펠러로 구성된 추진장치에서 나오는 속력은 그 최고속도가 13노트(24km/h)였는데 이는 일반 구축함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FS-344호는 1966년 4월 22일 예인선에 이끌려 워싱턴주의 브레머튼항(Port Bremerton)에 도착했다. 이 배는 이 항구에서 4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0개월에 걸쳐 개조되었다. 이 선박의 임무가 고급비밀로 분류되었던 까닭에 개조작업에 참여한 대다수 사람들이 이 배의 용도를 모르는 상태<sup>13</sup>에서 개조를 한 관계로 작전요구능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충족에 많은 결함이 발생했다.

이런 연유로 개조작업 시부터 이 배의 함장으로 임명되어 작업에 참여했던 로이드 피트 부처(Lloyd Pete Bucher) 중령이 작전요구능력 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개선요구와 건의를 했지만 대다수가 묵살되었다. 푸에블로호의 개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확한 개조작업의 내용을 몰랐고, 푸에블로호의 임무를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14</sup>

개조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항해, 통신, 비밀파기 문제였다. 항해장비인 로란(LORAN)은 배너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종 5마일이나 오차를 보일 정도로 부정확했고, 자이로컴퍼스의 방향지시도 20% 가량의 오차를 보이고 있었다.

통신체계는, 함내 통신 수단은 유선전화기와 방송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방송장비 설치과정

에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특수작전부실을 비롯한 일부 주요 공간에 방송 확성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함장의 지휘통제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암호 송신과 해독기능을 하는 KW-7 암호기를 통해 운영되는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장비로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카미세야(Kami Seya) 통신소<sup>15</sup>와 주파수 동조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장비의 낮은 출력과 동해의 작전환경,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타 선박의 전파 출력 등으로 동조에 많은 방해가 받게 되어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엔진, 항해, 통신장비, 승무원 생활여건 등에서 결함이 많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푸에블로호의 비밀파기체계의 결함이었다. 이 배에는 2대의 문서 세절기가 있었지만 한 번에 3~4장의 문서만 세절할 수 있었고 작동 속도도 느렸다. 부처 함장은 소각기 설치 요구가 무시되자 승무원 복지예산으로 할당된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상업용 소각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책이나 묶음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일일이 손으로 찢어서 날개로 소각해야 하고, 한 번에 4파운드의 종이만을 소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낮고 작은 소각기였다. 한 장교는 푸에블로호에 탑재된 약 200kg의 문서자료와 70kg의 자체 조사자료를 완전히 파기하는데는 9~12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신호정보 수집장비 파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무거운 금속박스 안에 들어 있어 효용성이 거의 없는 대형 쇠파쇄기와 화재 진압용 도끼가 고작이었다.

이와 같은 빈약한 비밀파기 장비에 비해 푸에블로호에는 너무 많은 비밀자료가 실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해군 담당자의 사무 착오로 호위함에 보내져야 했던 비밀자료들이 푸에블로호로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푸에블로호에는 제7함대사령부, 태평양함대사령부, 주일해군작전사령부, 태평양 전자정보센터에서 발간된 문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비밀들이 탑재되게 되었다. 이들 비밀 대부분은 푸에블로호 임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해 서로 상이한 유형의 장비와 지침서(예컨대 1급비밀인 KW-7, KWL-37, KL-7)들이 탑재되어 있어 푸에블로호는 온통 비밀 덩어리였다.

부처 함장과 그의 참모들이 불필요한 비밀문서의 반납과 비밀파기 장비의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비밀반납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해군은 개선된 파기장비의 추가 탑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1967년 6월 부처 함장은 마지막으로 비밀파기 장비를 개선해 달라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개선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푸에블로호의 개조작업은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이루어졌던 관계로 해군의 관심 밖에 있었고,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sup>16</sup>

어쨌든 푸에블로호는 1967년 5월 13일 취역식을 가지고 6월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시운전은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푸에블로호는 동년 8월 23일 전반적인 검사를 받았다. 9명의 장교로 구성된 점검관들은 3일 동안의 점검을 마치고 85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체적으로 462개소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 중 77건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점검관들은 “임무 개시 전 반드시 수리되어야 함.”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점검관들의 지적에 따라 브레머튼 정비창에서 대부분의 결함을 교정했지만 여전히 결함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푸에블로호는 1967년 9월 11일 임무에 앞서 전비태세 훈련을 받기 위해 브레머튼을 떠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항으로 향했다.

푸에블로호는 동년 9월 21일 샌디에이고항에 도착해서 5주간의 훈련과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점검관들은 태평양함대사령부와 해군 대잠수함 학교의 전투준비태세 검열 부서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푸에블로호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수송함에 적용되는 표준절차에 따라 훈련과 점검을 했다. 더구나 접근이 차단된 특수작전부실과 통신사들의 능력은 점검에서 빠졌다.

평가 전반에 걸쳐 부처 함장은 승무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여 전체적인 성취도는 기대수준을 넘었다. 이에 고무되어 점검관들은 상당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푸에블로호는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준비된 상태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지었다. 점검관들은 함정이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었다. 태평양함대 전비태세검열 부서 소속의 한 대위가 “아무도 걱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외부의 공격 가능성이 도외시되었다.<sup>17</sup>

전비태세 점검을 받고 푸에블로호는 1967년 11월 초 하와이를 거쳐 동년 12월 1일 주일본 미 해군사령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 해협에 진입했다. 항해 중에 조타장치의 전기·기계장치가 모두 고장 나서 예인선이 항구로 예인할 때까지 이 해협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요코스카에 머무는 동안에도 부처 함장은 함정의 개선을 계속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대신 미 해군은 부처 함장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방어용 무기를 설치했다. 출항 8일 전인 1968년 1월 3일 전부(前部) 갑판과 후부(後部) 갑판에 구경 50기관총 거치대 2개가 설치되었고 구경 50기관총과 60만발의 탄약이 탑재되었다.

원래 보조일반환경조사선에는 상대 국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눈에 띄만한 무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7년 6월 시나이반도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신호정보 수집함 리버티호가 이스라엘 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미 해군 참모차장 호레이쇼 리베로(Horacio Rivero) 제독이 “현재 무장을 하지 않은 해군의 취역함정에 방어용 무기(20구경 이하)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푸에블로호도 기존에 보관되고 있던 톱슨 기관단총 10정, 구경 45권총 7정, 구경 30장총에 추가하여 구경 50기관총 2정으로 무장을 하게 됨으로써 비전투함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임무에 대한 위협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구경 50기관총은 원래 보병무기로 흔들리는 선박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은데다 거치대가 갑판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엄호 장갑판도 설치되지 않아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격훈련도 승무원 절반 정도가 3~4발 연습사격을 한 것이 전부였다. 임무가

시작된 지 며칠간 부처 함장은 무기사용법을 포함한 현장훈련으로 미숙한 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결과는 변변치 않았다. 10분 이내에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는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유효사거리가 2,000m라는 미 해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수들은 50m 거리에 있는 표적도 제대로 맞히지 못했다.<sup>18</sup>

푸에블로호의 부실한 상태는 선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장교 6명, 사병 73명, 해병대 통역담당 2명, 민간해양학자 2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경험이 부족했다. 승무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승무원 절반가량이 처음 배를 타는 인원이었다. 일부 예비군이었던 승무원들은 2주간의 신병훈련과 2주간의 함정실습만 수료한 상태였다.

부처 함장은 잠수함 근무경력은 화려했지만 수상함은 지난 13년간 타 본 적이 없었고 함장 임무도 처음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부장(副長) 머피(Murphy) 대위는 1965년 이후로 개인 사정으로 육상근무를 했고 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장교들도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경험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오직 스테판 해리스(Stephen Harris) 대위만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폭 넓은 보직 경험을 한 상태였다.

특히 통역담당자였던 해병대 병장 로버트 해몬드(Robert Hammond)와 로버트 치카(Robert Chicca)의 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1965년 국방언어연구소에서 9개월짜리 한국어 과정을 수강했으나, 이후 몇 년간 한국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이 푸에블로호에 전입 왔을 때 한국어를 사전 없이는 제대로 읽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들 두 대위는 요코스카로 출항하기 3일 전에야 전입을 왔기 때문에 부처 함장은 이들의 능력을 평가할 여유가 없었다. 부처 함장은 이들이 유사 시 대응할 능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출항했다. 후에 부처 함장은 “제대로 된 통역자로 대치될 때까지 임무수행을 거절했어야 했다. 이들이 능력 있는 통역자였더라면 아마도 1968년 1월 23일 북한군의 경고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납치를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밀과 장비의 파기를 보다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회상했다.<sup>19</sup>

### 3. 푸에블로호의 지휘계통

푸에블로호에 대한 지휘체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는 임무 수행 중일 때는 주일 미 해군사령관 프랭크 존슨(Frank Johnson) 해군소장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제7함대사령관 윌리엄 브링글(William Bringle) 해군중장의 통제하에 있었다. 한편 일본 사세보에 있는 태평양기지사령부<sup>20</sup> 예하 제3지원단장 노벨 워드(Norvell Ward) 해군소장은 푸에블로호의 행정을 통제했다. 태평양사령부와 주일 미군의 지휘체계는 도표 <6-1>과 같다.

주일 미 해군사령부에는 실질적인 전투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존슨 제독은 보조일반환경조사선의 임무 지원을 위해 제7함대사령부와 제5공군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제7함대

도표 <6-1> 태평양사령부와 주일 미군의 지휘체계<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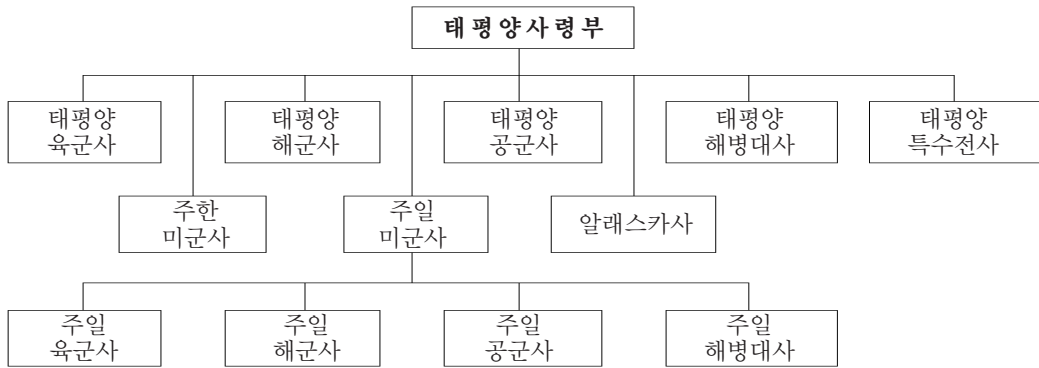


도표 <6-2> 사건 발생 당시 주요사령부 위치 및 수장

주요 사령부	위 치	수 장
주일 미 해군사령부	일본 요코스카	존슨(Frank Johnson) 소장
제5공군사령부	일본 후츄	맥키(Seth J. McKee) 중장
제7함대사령부	순양함 프로비덴스호 (베트남 통킹만 작전 중)	브링글(William A. Bringle) 중장
태평양공군사령부	하와이 호놀룰루	라이언(John D. Ryan) 대장
태평양함대사령부	〃	하이랜드(John J. Hyland) 대장
태평양사령부	〃	샤프(Ulysses S. G. Sharp) 대장
합동참모본부	워싱턴 D.C.	휠러(Earle Wheeler) 대장
국방부	〃	맥나라마(Robert McNamara)
국무부	〃	러스크(Dean Rusk)
중앙정보국	〃	리차드 헬름(Richard Helms)
국가안보국	메릴랜드 주 메데항	카터(Marshell Carter) 대장
백악관	워싱턴 D.C.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안보 특별 보좌관 : 로스토우 (Walt W. Rostow) · 대통령 : 존슨(Lyndon B. Johnson)

사령관이 푸에블로호를 직접 작전통제 했더라면 브링글 중장은 존슨 제독의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쉽게 전력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미 해군은 일찍이 푸에블로호를 제7함대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두는 것을 고려했었지만, 국가안보국에 관련된 정보업무의 지휘통제는 워싱턴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우선시되어 주일 미 해군사령관 통제하에 두기로 하였다.<sup>22</sup>

지휘체통의 복잡성에 추가해서 지휘 및 지원 계통에 있던 각 사령부의 위치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지휘통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사건 발생 당시 주요 사령부 위치 및 수장은 도표 <6-2>와 같다.

모든 지휘체계가 통신설비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신장되어 있는 실제거리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해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했다. 사실 북한 원산항에서 16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지휘체통은 일본을 경유해서 통킹만으로 내려가고, 다시 동쪽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워싱턴까지 뺀 거리는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도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sup>23</sup>

#### 4. 푸에블로호 임무지역에 대한 위협평가

‘방아벌레작전’의 기획은 정보부서와 해군 관련부서간의 정기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대략적인 감시범주를 선정하면 해군 정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포함한 일반계획을 수립하여 주일 미 해군사령부로 하달하고,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세부계획에는 임무의 목적, 교전규칙, 작전통제, 지원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협평가 시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위협을 ‘최소한(Minimal)’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 계획은 상부에 보고되어 태평양함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303위원회’<sup>24</sup>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푸에블로호의 비극적인 항해의 근원은 1967년 3월 정보부서와 해군 관련부서간의 정기회의에서 한국과 소련의 접경지역에서의 정보수집 일반목표를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태평양함대사령부 정보부서는 목표의 우선순위와 일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일 미 해군사령부로 보냈고,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1968년 초부터 6개월간 푸에블로호와 배너호에 임무를 할당했다.

작전지령서에 따르면, 푸에블로호는 1월 북한지역 1회, 4월 소련의 파블로프스크항 지역 1회, 2월과 4월에 동해에서 2차례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1967년 11월 28일,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목표물 지역의 정보, 지원계획, 위협평가 등을 포함하여 푸에블로호를 이용한 정보수집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 때 임무에 수반되는 위협을 ‘최소한(Minimal)’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 1968년 1월 3일 존슨 제독에게 공식 하달되었다.

위협평가는 7개의 요소(과거 임무경험, 임무지역의 위치, 예상 기상, 선박상태, 정보수집의 범위, 목표물의 민감성, 지원세력의 가용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선박이 공해상에 위치하는 한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협을 ‘최소한’으로 평가했으며, 태평양함대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도 이와 같은 결론에 동의했다.<sup>25</sup>

사실 이러한 위협평가가 진행될 무렵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1966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정전위반 사례는 50여 건이었다. 그러나 1967년 들면서부터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13개월 동안 610건에 달했고, 북한의 대남(對南) 침투병력 200명 이상이 사살되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선박들이 북한 해안선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은 1961년에서 1967년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남한의 해군 선박과 무장 첩보선이 북한 연안에 침투하여 북한 어부를 공격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주장 후에는 보복의 위협이 뒤따랐다.

예를 들면, 1967년 1월 19일 한국 해군 초계정이 북한 해안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어선들을 지키고 있었다. 북한 해안포대들이 포사격을 했고 북한 해상 6.4km 지점에서 한국 초계정은 침몰했다. 그 함정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12마일(19.2km)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남북한 해역의 중간선인 해안 3마일(4.8km)은 침범하지 않았었다. 과거의 경우 남한이나 북한 어선들이 경계선을 서로 침범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북한이 이런 극단적인 도발은 하지 않았었다. 이런 도발을 하면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모든 도발은 남한이 하고 있다고 덮어 씌웠다.<sup>26</sup>

또 다른 경고는 북한 자체에서 나왔다. 북한 당국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간첩선’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1968년 1월 6일 평양방송은 “최근 동해 연안에서 끊임없이 호전적 행위를 자행해온 미 제국주의 군대가 오늘 아침 또 다시 많은 수의 무장선박을 우리 연안으로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그 다음 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미국의 선박이 2주 이상 더 머무른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성명을 보도했다. 1월 11일 평양방송은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가 오늘 아침 일찍 동해안에 간첩선을 보냈으며, 이를 가장하기 위해 수 백 척의 어선들과 같이 보냈다.....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가 간첩선을 보내 엽담행위를 하는 한 우리 해군은 단호한 대응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1968년 1월 북한은 1966년 후반과 1967년 초 배너호가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때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이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 1968년 1월 6일자 북한의 성명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본토에 보고되었지만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이를 일상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1월 11일 북한성명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주일 미 해군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남한 해군함정을 격침시킨 사실을 포함하여 동해에서의 북한 해군활동의 증가사실을 알고 있었고,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임무와 연관된 해군 지휘관들도 북한의 움직임에 인식하고 있었으나, 임무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푸에블로호의 임무를 취소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한 누구도 배를 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군부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sup>27</sup>

만약 이 때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위협을 ‘최소한’ 이상으로 평가했다면 상급부대에서는 위협을 재평가하도록 했거나 작전을 취소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받은 작전명령은 차상급부대인 태평양함대사령부에서 하달한 것으로 작전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하급부대에서 작전의 취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최소한’ 이상의 위협평가를 내리기는 군의 생리상 쉽지 않았던 것이다.<sup>28</sup>

주일 미 해군사령부의 보고를 받은 국가안보국 전문가들은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위협을 과소평가했다고 결론지었다. 1967년 12월 29일 마셜 카터(Marshall Carter) 국가안보국장은 이러한 결론을 밝히는 전보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펜타곤에 있는 정보국 신호사무소가 수신처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도착까지는 30일이나 지연되었다. 국가안보국 실무자들은 직권으로 이 작전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에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sup>29</sup>

## 제2절 사건발생과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 1. 푸에블로호의 동해 투입에서부터 피랍까지의 경과

1968년 1월 5일, 푸에블로호는 요코스카 항을 출발하여 사세보에 잠깐 입항했다가 1월 11일 마침내 사세보항을 출발하여 북한 연안으로 향했다.

푸에블로호는 공식적으로는 “해양, 전자기와 관련된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연구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과 인류에게 바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용되는 해양조사선이였다. 실제 이 배에는 바다의 수심, 온도, 염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민간인 해양학자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여된 임무는 북한과 소련의 레이더, 소나, 무선교신과 같은 전자정보를 감청 및 수집하고, 청진, 성진, 마양도, 원산 등 북한 항구 연안에서의 북한 해군활동을 조사하며, 가능하다면 쓰시마 해협에서 활동하는 소련의 선박을 추적하여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푸에블로호는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해 원형 덮개를 덮었으나, 다용도의 안테나, 방향지시기와 기타 돌출물 탓에 대략 부풀어 오른 임신부처럼 보였고, 눈에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봐서도 전자장비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였다.<sup>30</sup>

푸에블로호는 1월 16일 최초 임무지역인 청진항 인근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17일 성진항 인근으로 이동했고, 19일 계속 남하하여 성진항 남쪽 40마일 지점에 있는 마양도 근처에 도착했는데 마양도에는 북한의 소련제 위스키급 잠수함 4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푸에블로호가 최초로 위협에 부딪친 것은 1월 21일 오후 마양도 근처를 향해하고 있을 때였다. 북한의 서호급(SO-1) 대잠함이 나타나 푸에블로호 450여m까지 접근했으나 부처 함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북한군이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푸에블로호는 원산항<sup>31</sup> 외곽지역에 도착했다. 그날 오후 원산항에서 대략 32km 떨어진 지점에 정지하여, 통신사들은 통신을 감청하고 해양학자들은 수로측량을 위한 도구들을 바다 속으로 투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트롤선 2척이 접근해 왔다. 이 배들은 450여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푸에블로호 주위를 선회했다. 부처 함장은 승무원 규모를 감추기 위해 승무원들을 갑판 아래에 대기하도록 명령하고 이 상황을 일본의 카미세야 통신기지에 보내기 위해 상황보고서(SITREP-1 : Situation Report-1)를 준비하도록 했다. 부처 함장은 북한 트롤선과 통신을 하려고 했으나 통역병인 치카와 해몬드가 이들과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

잠시 후 북한 선박들은 그 명칭을 알아볼 있을 정도로 푸에블로호에 20여m까지 서서히 접근했다. 이들 북한 선박에는 승무원들이 19명씩 타고 있었고 이들은 푸에블로호를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었다. 북한 선박들은 몇 바퀴 돌더니 이내 원산 방향으로 사라졌다. 부처 함장은 두 번째 상황보고서(SITREP-2)를 보냈으나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푸에블로호는 공해상에 위치했고 수로측량을 하고 있다는 국제기(旗)를 게양했으며, 정당한 수로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북한군 또한 적대의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1월 23일, 푸에블로호는 원산 입구에 있는 작은 섬 옹도로부터 대략 25km 떨어진 목적지에 도달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북한의 통신 소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통신사들이 부처 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통역병들의 능력이 크게 부족했던 관계로 이들이 사전을 보고 해석한 결과는 이미 4~5시간 전에 교신한 내용이 되고 말았다.

승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시간에 북한군 서호급 대잠함(35호) 1척이 푸에블로호에 접근해 왔으며 약 450여m 거리에서 선회를 했다. 정오가 지나자 북한 대잠함은 “국적이 어디인가?”를 묻는 국제기를 게양했다. 부처 함장이 이 질문을 무시하자 약 15분간의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때 번호가 601, 604, 606이라고 적힌 소련제 북한 어뢰정 3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해 왔다. 어뢰정 3척 모두 최대 속력이 50노트를 넘었으며 12.7mm 기관총과 2문의 18인치 단일 어뢰관을 장착하고 있었다. 이때 부처 함장은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연안으로부터 15마일(24km)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던 북한의 서호급 대잠함

북한 대잠함은 푸에블로호를 1/3바퀴쯤 돌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는 내용의 국제기를 게양했다. 이 때 부처 함장은 세 번째로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재확인했는데 북한 영토로부터 15.8마일(25.3km) 떨어진 공해상이었다. 이에 부처 함장은 자신있게 “우리는 공해상에 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무를 예정이다.”라는 국제기를 올려 답했다.

통신장교 슈마허(Schumacher) 대위는 신속히 통신실로 이동하여 일본 카미세야 통신기지로 12:50에 상황보고서(Pinnacle-1/JOPREP-3 : Joint Operational Report-3)를 송신했다. 이때까지의 상황보고서는 그 우선순위를 국가안보국, 국방부, 백악관을 포함하여 모든 지휘제대에 즉시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위급(CRITIC)’ 대신에 ‘즉시(FLASH)’로 표기했다.(이는 푸에블로호의 장교들이 현 상황을 아직은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전보의 우선순위는 ‘위급’으로 바뀌었다.<sup>32</sup>

푸에블로호만 상부에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푸에블로호가 Pinnacle-1 보고를 하고난 몇 분 후, 북한 대잠함도 그들의 상부에 보고를 했다. “목표물에 접근 완료. 목표물 선박 명은 GER-1. 정보수집함으로 판단됨. 미국 배임. 무기는 없어 보임.”

부처 함장이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있을 때 북한 어뢰정들은 더 가까이 접근했으며 상황은 급방 악화되었다. 2대의 소련제 미그 전투기<sup>33</sup> 엔진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고 멀리 원산 쪽에서 또 다른 대잠함과 어뢰정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승무원들은 ‘26’이라는 선체에 쓰인 번호를 보고 이를 전에 만났던 배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부처 함장은 전투배치 여부를 묻는 부하의 질문에 망설였지만 푸에블로호의 보잘 것 없는 화력으로는 전투배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투배치 대신 비밀 긴급파기 준비를 하고 상급부대에 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23일 13:06, 북한의 서호급 대잠함도 상부에 의도를 보고했다. “현재 지침에 따라, 통신을 차단하고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제압한 후 예인하여 원산항으로 입항할 예정. 현재 승선 중임.” 그리고 10분 후 제771부대 소속의 무장 병력이 대잠함에서 어뢰정으로 뛰어 내렸다. 북한 어뢰정이 5m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자 부처 함장은 명령했다. “양현 앞으로 1/3” 푸에블로호는 어뢰정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배려에 감사한다. 이 지역을 이탈하겠다.”라는 국제기를 달았다. 푸에블로호가 최대 속력으로 이탈하자 북한 함정들은 수 분 이내에 거리를 좁혀 왔다. 어뢰정 2척은 뒤에서 추적하고 2척은 함수 앞에서 탈출로를 봉쇄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기동했다. 13:18, 통신사는 “북한 함정의 숫자가 증가했고 승선을 시도하려 한다.”는 내용의 전문(Pinnacle-2)을 보냈다.

북한 대잠함은 그들의 어뢰정들을 푸에블로호에서 떨어지게 하고 57mm 함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어뢰정들도 기관총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과거 남한 어선을 침몰시키기 위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과는 달리,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기 위해 흘수 이하는 사격하지 않고 함선의 상판구조물에 대해서만 집중사격을 가했다. 포탄이 함교에 빗발쳤고 승무원 4명이 부상당했으며 부처 함장도 배 부위에 작은 부상을 입었다. 조타실 유리창이 박살났고 마스터에 설치된 안테나 연결장치도 피해를 입었다. 부처 함장은 곧 전투배치를 명령했으나 기존의 배치계획을 변경시켜 갑판 밑에서 배치 중인 대원들을 위로 올라오지 말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부처 함장은 비밀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부처 함장은 푸에블로의 현 위치(동경 127도 54.3분, 북위 39도 25분)와 함께 긴급구조신호(SOS : CRITIC message)를 보내도록 명령했다.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배가 포위되었다.”라고 보고하라고 통신반장에게 지시했다.

비밀 파기 명령에 따라 승무원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일부 승무원은 라이트로 종이에 불을 붙였고 일부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으며, 또 일부는 비밀자료를 찢어 변기에 흘려보냈다. 소각장치는 방대한 비밀자료를 파기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더구나 우현 갑판에 노출되어 있어 사용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승무원이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가며 종이를 손으로 찢어 소각로에 집어넣었다. 수심이 64m 밖에 되지 않아 비밀들을 반출가방에 넣어 바다로 던진다 해도 북한군이 쉽게 이를 건져낼 수 있었으나, 통신병은 우선 급한 대로 반출가방을

꾸렸다. 그러나 가방 11개 중 1개만 바다에 투척되었고 나머지 10개는 그대로 방치된 채 북한군에게 납치되었다.(나중에 북한군 잠수부들이 이 지역에 버려진 장비들을 어렵지 않게 인양했다.)

특수작전부실의 상황은 특히 더 나빴다. 특수작전부실의 대원들이 격실에서 불을 붙이자 환기장치가 없는 특수작전부실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차 파괴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통신사들이 대형 망치와 도끼로 장비를 파괴하려 했지만 워낙 튼튼히 만들어져 있어 망치 자루만 부러지고 기계는 끄떡없었다. 첫 번째 파괴대상인 녹음기도 금속함에 단단히 보관되어 있어 파괴되지 않았다. 다른 기계들도 금속함 속에 나사로 조여져 있었는데 드라이브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를 해체할 수가 없었다. “파기 과정은 고통스러운 정도로 느렸다. 파기를 완료하려면 아마도 9~12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통신사 해리스(Harris)는 회고했다. 후에 미 해군은 특수작전부실의 비밀자료 중 10% 정도만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긴급파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북한 함정들은 푸에블로호 주변에서 진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와는 달리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처 함장은 배를 멈출 것인가를 고민했다. 비밀을 파기하느라 배 안에는 불길과 연기가 자욱했고, 57mm 포탄 8발이 선체에 명중하여 노천 함교는 파손되고 상부 구조물들이 손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안테나도 부러졌다.

부처 함장은 북한 함정이 그들의 상급부대와 어떤 교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자 교신을 하고 싶었지만 통역이 문제가 되었다. 통역 담당자는 부처 함장에게 “엄청나게 빠른 말이 오고가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북한말이라는 것뿐입니다.”라고 보고했다.

통신사는 계속 지원요청을 했지만 수평선에 미국의 지원세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부처 함장은 “양현 정지”의 벨을 울리도록 명령했다. 푸에블로호가 정지하자 북한 함정의 사격도 멈추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의 대잠함을 따라 5노트 속력으로 나아갔다. 13:45, 갑판 밑에서 통신사는 일본의 카미세야 통신소로 상황을 보고했다. “원산항으로 끌려가고 있음. 우리는 아마도 원산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송신함. 원산임.” “지원병력은 보냈는가?” 돌아온 답변은 약간의 위안을 주는 것에 불과했다. “상황이 모든 부서에 전달되었음.”

배가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비밀파기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갑판에 비밀자료들이 흩어져있고 상당량의 정보수집 장치들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부처 함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배를 멈추기로 결심하고 기계고장으로 가장하기 위해 엔진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푸에블로호가 멈추자 북한 대잠함은 곧바로 사격을 가했으며 어뢰정들도 사격에 가세했다. 많은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 명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1명은 한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사격수 두웨인 호지스(Duane Hodges)였다. 호지스는 북한군들이 승선하고 나서 결국 사망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국 해군에 복무한 것이 큰 영예였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처 함장은 배를 다시 움직이도록 명령했고 배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으며 이 와중에서도 비밀파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채 몇 분이 안 되어 부처 함장의 시간끌기 의도를 간파한 북한군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부처 함장은 실내 방송을 통해 이름, 계급, 군번을 제외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강조 전파했다. 함교 밑의 통신사는 계속적으로 전신타자기를 두드려 카미세야 통신소로 상황을 송신했다.

14:08경,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푸에블로호에 탑승했다. 30분이 지나자 북한군 영관장교에게 푸에블로호의 모든 통제가 넘어갔다. 푸에블로호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14:33, 통신사는 마지막으로 전보를 보냈다. “4명 부상, 1명은 생명이 위독함. 현 시간부로 통신은 두절될 것이며 본 장비를 파괴할 것임.” 북한군들은 쉽게 배를 장악했고, 총부리를 함장에게 겨누는 채 모든 승무원들을 갑판에 집합시켰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가차 없이 구타가 가해졌고 권총을 휴대한 대원들은 얼어맞아 기절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으로 끌려갔다.<sup>34</sup>

## 2. 푸에블로호 피랍에 대한 미국의 초기 군사대응

### 가. 미 태평양사령부

주일 미 해군사령부의 조지 1월 23일 화요일 정오가 막 지난 무렵 주일 미 해군사령부 당직장교인 칼 엘 호켄슨 주니어(Carl L. Hokenson Jr.) 소령은 전날 저녁에 푸에블로호가 보낸 상황보고-1(SITREP-1) 전문을 보았는데 북한 트롤선 2척에 둘러싸여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10분 후 상황보고-2(SITREP-2) 전문을 보았고 그 내용은 밤 시간에는 북한 선박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두 번째 전문을 마지막으로 푸에블로호는 무선 침묵으로 전환한 것 같았다. 이 두 통의 전문은 전날 당직장교(Duty Officer)가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부 정보게시판(Intelligence Interest Board)에 게시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채 한 시간이 안 된 오후 12:52 카미세야는 합동작전보고서 Pinnacle-1 전문을 푸에블로호로부터 받았는데, 보고 내용은 (북한 선박으로부터)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전문의 표지는 함참, 국가 군사지휘본부와 백악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합동작전보고서(JOPREP)로 되어 있었다.

이 전문은 신속히 호켄슨 소령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즉시 참모장 포레스트 에이 피스(Forest A. Peace) 대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전문을 읽어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군,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 13:25, 호켄슨 소령은 Pinnacle-1 전문과 SITREP-2 전문을 가지고 거리가 수백 야드 떨어진 건물에 있는 작전참모 윌리엄 에이치 에버렛(William H. Everett) 대령에게 보고했다. 작전참모는 전문을 보고 북한의 행동을 단순한 괴롭힘이나 위협으로 해석했다. 일찍이 소련도 동해상에 있던 배너호(Banner)에 유사한 위협을 가한 적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푸에블로호에 대한 위협평가는 순식간에 급변했다. 주일본 미 해군사령부의 정보참모실은 13:39에 푸에블로호로부터 Pinnacle-2 전문을 받았고 이는 피스 대령에게 전달되었다. 북한군이 승선을 시도하려 한다는 보고서는 피스 대령을 놀라게 했다. 피스 대령은 이를 에버렛(Everett) 대령에게 알리고 “제5공군에게 이 전문을 전달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호켄슨 소령에게 지시했다. 이때 피스 대령은 푸에블로호에 대한 (제5공군의) 긴급 지원 엄호전력이 대기하고 있었고 필요 시 즉각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정보참모부는 긴급전문 타전 준비를 했고, 거의 동시에 통신소는 푸에블로호와 직통(Point to Point)으로 통화한 내용을 온 라인으로 정보참모부에 중계하기 시작했다. 13:36,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푸에블로호에서 보낸 Pinnacle-2 전문을 근거로 ‘위급(CRITIC)’ 전문을 최초로 송신하기 시작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주일본 미 해군사령부 작전참모부의 에이저 엘 윌슨(Ager L. Wilson) 소령은 후츄(Fuchu)에 있는 제5공군 지휘본부(Fifth Air Force Command Center)와 보안전화로 통화를 했다.

13:46, 주일 미 해군사령부에서는 북한군이 승선하고 있다는 푸에블로호 통신사의 말에 따라 2차 위급전문을 보냈다. 이 때 프랭크 엘 존슨(Frank L. Johnson) 주일 미 해군사령관(해군 소장)은 태평양사령부 연례회의(‘TROPICAL CYCLONE’)에서 환영사를 하기 위해 도쿄의 사노(Sanno) 호텔에 있었다. 존슨 사령관은 피스 참모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헬기편으로 복귀, 15:10에 사령부 상황실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았다.<sup>35</sup>

**제5공군사령부와 태평양공군사령부의 조치** 제5공군사령부에서는 푸에블로호 작전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제5공군사령부는 1967년 12월 보낸 태평양함대사령부와 주일 미 해군사령부의 계획전문에는 수신처로 되어 있었지만, 1968년 1월 5일의 시행전문에는 단지 배부선 중의 하나로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제5공군사령부의 정보·작전부서의 장교들 중 제한된 일부 인원만이 시행전문을 보게 되었다. 시행전문에는 제5공군사령부에 공중엄호(Air cover)나 비상대기태세(Strip alert)를 요청하지 않았고, 계획전문에는 작전에 수반되는 예상위협이 ‘최소한(minimal)’으로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5공군의 작전참모나 지휘부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푸에블로호의 정보수집작전이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13:45, 후츄의 제5공군 지휘본부에서는 레이몬드 에이 프리스트 주니어(Raymond A. Priest, Jr.) 소령이 윌슨 소령의 전화를 받았다. 윌슨 소령은 푸에블로호가 2대의 북한 미그 전투기와 함정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공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리스트 소령은 푸에블로호에 관해 들은 바가 없었고 통화우선권도 위급이 아니었던 관계로 이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푸에블로호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무실로 가다가 도중에 제5공군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제7함대사령부의 연락장교 토마스가 맥도널드(Thomas E. McDonald) 중령을 우연히 만나서 월슨이 전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맥도널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 때가 13:50이었다. 맥도널드 중령은 곧바로 제5공군의 담당장교에게 알리고 작전참모에게 브리핑을 했다. 그들은 차트에 푸에블로호의 위치(항적)를 표시하고 제5공군 항공기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14:15, 제5공군사령관 세스 제이 맥키(Seth J. McKee) 중장이 작전참모와 정찰참모, 수색대장 그리고 맥도널드 중령으로부터 푸에블로호 사건을 보고 받았다. 맥키 장군은 즉시 지휘본부로 가서 보안전화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공군사령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맥키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의 카데나(Kadena) 기지에 있는 제18전술비행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즉시 F-105 전투폭격기들을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시킬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14:46, 태평양공군사령관 존 디 라이언(John D. Ryan) 대장은 하와이사령부에 도착해서 보안전화로 푸에블로호의 상황과 제5공군이 취한 조치를 보고받았다. 그의 참모도 맥키 장군이 푸에블로호를 지원하기 위해 공습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공습은 어두워지기 전에 전투기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안 3마일선 도착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라이언 장군은 이미 취한 조치와 건의를 승인했다. 15:20, 라이언 장군은 맥키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과 맥키 장군의 의도를 듣고, 맥키 장군에게 푸에블로호 부근에 있는 북한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 해안 3마일 밖의 해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거기다 푸에블로호를 감시하고 있는 북한 미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있지 않으면 F-4 전투기를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카데나 기지의 제18전술비행단은 푸에블로호를 지원하기 위해 12대의 F-105전폭기에 대해 출격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푸에블로호에 대한 지원대기 요청이 없었고 그 위협도 ‘최소한’으로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격대기 전투기가 없었던 관계로 출격은 지연되었다.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무장을 해야 했고, 또 그중 몇 대는 훈련임무를 취소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전투기가 비상대기만 하고 있었다면 40분 이내에 출격하여 1시간 내에 푸에블로호가 있는 위치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겨우 두 대의 전투기만 출격명령 수령 후 1시간 23분 만에 이륙했고, 이어서 4대의 전투기가 더 이륙했으며 나머지 전투기들은 더 지체되어 이륙했다. 먼저 이륙한 전투기들은 제 시간에 오산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필요하면 재배치를 할 수는 있었으나, 어두워지기 전까지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북한군을 공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밤이 다가오면서 이들 전투기들은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추후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5공군사령관 맥키 중장은 푸에블로호를 지원할 방침을 결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망은 암담했다. 한국의 오산기지에는 F-4 항공기 4대가 즉각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이들은 30분 이내에 푸에블로호가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전투기에는 핵무기만 적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들 전투기들은 무장교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시간 30분 정도면 이를 완료하고 출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맥키 장군은 원산 일대에 미그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스크린 화면)를 보고는 이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는 방안을 건의하지 않았다. 그는 원산일대에 100대 이상의 미그기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暗示)했으며, 라이언 장군도 이에 동의했다.

원산항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일본 미사와(Misawa) 공군기지의 제356전술비행전대에서는 4대의 F-4C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전투기들도 기종 전환 중에 있어서 1월 31일 이전에 받도록 계획되어 있는 작전준비태세 검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작전준비태세 검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들은 공식적인 전투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인식되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당시 이들 전투기들이 이륙명령을 받았더라면 푸에블로호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인 16:00경 원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요코타(Yokota) 공군기지에 있는 제347전술비행단도 기종 전환 중이었는데, 기존의 F-105 전투기들을 태국으로 보내고 새로운 기종인 F-4C로 바꾸고 있었다. 2대의 F-4C가 출격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들 전투기에는 모두 핵무기만 장착되어 있었다. 폴 한슨(Paul Hanson) 단장(공군 대령)은 나머지 6대의 전투기에 전투준비 명령을 내렸지만 폭탄과 폭탄 장치대를 연결하는 무장케이블이 아직 기지에 도착하지 않아서 출격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원산항에는 해지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도 없었다. 비행 소요시간은 약 1시간 45분이었지만 1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둠이 깔리기 때문이었다.

미 해병대의 상황도 유사했다. 푸에블로호 피랍 현장에서 5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일본 이와쿠니(Iwakuni) 공군기지에는 4대의 F-4와 4대의 A-4 전투기가 있었지만, 사전 경고가 없었기에 출격까지는 3시간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했으므로 해지기 전까지는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공군은 다수의 전투기와 요격기가 출격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미국 군사지도자들은 푸에블로호 피랍과 관련된 정보과악이 아직 되지 않은데다가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제2의 6·25전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 한국 공군을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를 거부했다.

요컨대 미군은 1시간 30분 내에 출격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6개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푸에블로호를 지원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출격할 수 있는 항공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사전 경고와 준비만 되었더라면 공군력은 충분히 사용할 여건이 되었지만, 이것이 없었던 관계로 공군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제5공군사령부와 태평양공군사령부는 해가 지기 전까지 푸에블로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은 없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제5공군사령관 맥키 장군은 오키나와의 제18전술비행단장에게 F-105전투기 대대의 한국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C-130수송기 3대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필요시, 일본에 있는 모든 가용 항공기(요코타기지 F-105 4대와 F-4 6대, 미사와기지 F-4 7대)들을 이타주케(Itazuke) 공군기지에 전개할 준비를 24일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태평양공군사령관 라이언 장군도 이를 승인했다. 추가해서 라이언 장군은 제5공군의 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공군기지의 제13공군사령관에게 38기의 공대공 미사일을 이들을 적재할 수 있는 병력들과 함께 일본의 이타주케 공군기지로 공수해 주도록 지시했다.(이것을 공수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라이언 장군은 제5공군사령관에게 RF-4(F-4를 정찰기로 변형한 기종)를 1월 24일 원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위치시킬 것과, RB-57기를 이용한 측면 해안 촬영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sup>36</sup>

**미 제7함대의 조치** 미국 최대 핵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Enterprise)호가 푸에블로호에서 남쪽으로 약 510마일(816km) 떨어진 동해상에서 필리핀 군도의 수빅만(Subic Bay)으로 향진하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최근 미국에서 출항해서 일본 사세보(Sasebo) 항에 잠시 기착한 후 최대한 빨리 필리핀에 도착해서 통킹만 작전 준비를 위해 며칠간 항공 재보충을 할 예정이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태평양 향해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나서 항공기 여러 대가 침수와 부식으로 수리 중에 있었다. 엔터프라이즈호에는 F-4B 팬텀 전폭기 4대와 조종사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었지만, 이들 전폭기에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되어 있었고 공대지 공격 무기들은 장착되지 않았다.

오후 14:30, 제7함대 주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는 위급통신(CRITICOM) 채널로 중계해준 푸에블로호의 첫 번째 전문(Pinnacle-1) 사본을 접수했다. 이 전문은 즉시 기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승하고 있던 제71기동함대(TF 71) 사령관인 호레이스 에이치 에페스 주니어(Horace H. Epes, Jr.) 소장에게 전달되었다. 에페스 소장은 푸에블로호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일이 만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일이라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푸에블로호의 임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설명들이 있을만한 해군 발간자료를 찾아오도록 하고, 해도(海圖)를 가져와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푸에블로호는 원산항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페스 소장은 원산항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고, 엔터프라이즈 함장으로부터 항모에 있는 항공기들의 상황과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 에페스 소장의 참모들은 선상에 있는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 자료들, 예컨대 해도, 공군 전투서열, 미사일과 대공 전투서열, 원산의 기상조건, 일몰시간 등을 확인했다.

15:00, 에페스 소장은 충격을 받았다는 푸에블로호의 추가 전문을 받고는, 푸에블로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폭기를 출격시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폭기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나 도착할 즈음이면 푸에블로호는 이미 북한 해안 3마일 한계선 이내로 폭 들어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탑재하고 있던 F-4B 팬텀기는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대신 공중전에 필요한 사이더와인더 미사일과 스페로우 미사일만 장착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함상에 대기 중인 4대의 전폭기 조종사들도 푸에블로호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바가 없었고, 그 누구에게서도 엔터프라이즈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페스 장군은 항공모함 무장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또 무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이륙갑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전폭기들의 연료 충만과 재무장 등 발진준비를 완료하는 데는 1시간 30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킹만에서는 제7함대 기함인 유도탄 순양함 프로비던스(Providence)호가 남지나해를 향해 항진하고 있었다. 프로비던스호는 지난 몇 주간 베트남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나 사건 당시 며칠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홍콩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국시간으로 1월 23일 14:10, 프로비던스호도 무장한 북한군이 승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푸에블로호의 두 번째 전문(Pinnacle-2)을 받았다. 이 정보는 필리핀에 있는 해군 통신국에서 텔레타이프를 중계해 준 것이었다.

잠시 후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전문을 통해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4명이 다치고 (북한군으로부터) 원산항으로 따라 오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듣자 제7함대사령부 참모들은 사령관 윌리엄 에이 브링글(William A. Bringle) 중장에게 즉각 보고했다. 불행하게도 사령관은 푸에블로호의 임무를 모르고 있었고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 있는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제7함대에 푸에블로호의 항해명령 사본을 전자송신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군사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했고 기함 프로비던스호에는 1월 27일에야 도착했던 것이다.

한국시간으로 15:06, 브링글 중장은 푸에블로호의 상황과 위치를 검토한 후, 푸에블로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71기동함대에 지시를 했다.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핵추진 유도탄 프리깃함 트룩스톤(Truxton)호가 함께 최대속도로 항진하여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원산에서 40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기동하여 그 곳에서 사태추이를 보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이어서 브링글 장군은 구축함 히그비(Higbee, 사세보항), 콜레트(Collett, 요코스카 남쪽 120마일 지점), 오바논(O' Bannon, 요코스카항)호도 항진하여 엔터프라이즈호, 트룩스톤호와 합류하도록 전문지시했다.<sup>37</sup>

태평양사령부 조치 호놀룰루 현지시간 1월 22일 19:15(한국시간 1월 23일 14:15), 태평양사령부의 워룸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국가군사지휘본부로부터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보하는 전화를 접수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위급통신망으로 중계된 푸에블로호의 전문-1(Pinnacle-1)이 도착했고, 이어서 동일한 첩보전문들이 단편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전문

내용들은 기획작전참모부장 로얄 비 엘리슨(Royal B. Allison) 공군 소장을 포함한 태평양함대 관련 참모들에게 즉각 전파되었다. 5분 후에 푸에블로호 사건은 태평양함대사령관 존 제이 하이랜드(John J. Hyland) 대장에게 보고되었고 태평양함대 정보센터는 신속하게 감시요원을 증강시켰다.

하이랜드 제독은 제7함대에게 푸에블로호 예인과 승무원 구출을 위해 가능한 빨리 구축함을 원산 앞바다 12마일 영해 밖에 띄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제7함대사령관 브링글 제독은 하이랜드 제독에게 동해상에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전개시켜 북한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을 즉시 송환하라는 요구를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물질적인 피해와 인명손상에 대한 보상과 범죄집단에 대한 조치, 사후 재발방지 보장을 (북한에게) 요구할 것과,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북한 내 적절한 군사 목표물에 대해 해군 공중공격을 할 것을 건의했다.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었다. 즉 지상기지 공군력으로 타격하는 것, 항모 엔터프라이즈호와 트루스톤호, 그리고 몇 척의 구축함을 동해로 보내고 우선 항공사진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공해상에서 특정 북한함선을 납치하는 것, 중무장 호위를 받는 정보보조함 배너호를 원산지역으로 보내서 문제해결과 푸에블로호에 대한 지원 결의를 보여주는 것, 원산항을 봉쇄하는 것 등이었다.

태평양함대사령부 참모장교들은 태평양사령부, 주일본 해군사령부, 요코스카와 사세보 주둔 함대, 제5공군사령부와 직통전화를 개통하고 푸에블로호를 지원할 수 있는 가용 전투력을 결정하고자 했다. 하와이 시간 22일 19:41(한국시간 23일 14:41), 태평양함대사령부 정보센터는 푸에블로호의 Pinnacle-2 전문을 접수했고 북한군이 승선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태는 긴박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이후 45분 동안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요코스카에서 보내는 모든 후속 위급(CRITIC) 전문을 수신했다. 이 전문들을 통해 푸에블로호의 악화된 상황, 인원부상, 장비파손, 통신장비의 최종 불능화 처리 상황 등을 알 수 있었다.

이 무렵 태평양사령관 율리시스 에스 지 샤프(Ulysses S. G. Sharp) 대장은 남부 베트남 다낭(Danang)에서 웨스트 모어랜드(Westmoreland) 대장, 쿠쉬맨(Cushman) 중장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북베트남의 공격위협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샤프 제독은 다낭에서 회의를 마친 후 즉시 제77기동함대(TF 77)의 기함인 항모 키티호크로 이동했다. 한국시간으로 23일 18:00경, 제7함대사령관 브링글 중장과 제77기동함대사령관 쿠즌(Cousins) 소장이 그를 영접한 후 푸에블로호 사태에 대해 즉시 보고했다. 그날 밤 샤프 제독은 건의할 방책을 발전시켜 한국 시간으로 1월 24일 07:00경 이를 합동참모본부로 발송했다.

샤프 제독은 북한의 행위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즉각적인 석방, 해적행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를 예인하거나 승무원 구조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구축함을 원산항 12마일 해역에 배치하는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분명하게 승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이랜드 제독은 이미 이 명령을 하달해 놓고 있었다. 샤프 제독은 원산 앞바다에 미군함을 배치하는 것이 푸에블로호가 비록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함정과 승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미국 쪽으로 신속히 되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방침을 시행할 때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이렇게 하는 목적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샤프 제독은 사전에 지시되고 목적이 통보된 상태에서, 원산항 밖 공해상에 구축함을 주둔시키는 계획을 시행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그는 엔터프라이즈호와 호위 구축함들이 원산에서 100마일 떨어진 공해상으로 전진하고, 이 때 적대적인 군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축함들의 지원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샤프제독은 제5공군의 F-4 전투기들이 지원을 위해 비상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up>38</sup>

#### 나.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에이치 본스틸 3세(Charles H. Bonesteel III) 대장은 1월 23일 14:25에 요코스카로부터 푸에블로호 상황을 전해 듣고, 즉시 이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고 주한미군 자체의 정보 및 감시태세를 격상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지휘소를 편성 운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데프콘(DEFCON : Defence Condition)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키는 절차를 검토했다. 이 때 한국은 1·21사태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고, 한국군은 이미 경계태세를 강화해서 침투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을 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북한 추가도발에 대비하고 있었다.

본스틸 장군은 데프콘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시키지는 않았다. 당시 본스틸 장군은 한국 정부를 다독이는 입장이었다. 유엔군사령관 직위도 겸하고 있는 본스틸 장군로서는 방어준비태세를 격상시키면, 한국군도 이를 빌미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결국 데프콘을 격상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본스틸 장군은 지대공 미사일과 핵무기 기지에 대한 북한의 침투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었다. 1월 24일, 그는 이들 기지에 대한 국지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 제7사단에서 1개 대대를 차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특히 경계강화를 위해 미 제8군을 신속히 증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해상경계를 위해 두 척의 구축함과 해상초계기로 한국군 해군과 공군을 곧 증강시킬 것을 건의하고, 연이어 해상초계와 차단활동을 전개했다.<sup>39</sup>

## 다. 미국 수뇌부

워싱턴 현지시간 1월 22일 23:15(한국시간 1월 23일 13:45), 국가군사지휘본부와 메릴랜드(Maryland)주 메데항(Port Meade)에 있는 국가안보국(NSA)에 푸에블로호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첫 번째 위급(CRITIC) 전문이 도착했다. 이 전문을 받은 국가군사지휘본부 상황담당자들은 20분간에 걸쳐 백악관 상황실, 국무부 당직실, 합참의장 얼 휠러(Earle Wheeler) 대장,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국가안보국 상황담당자는 국장인 마셜 카터(Marshall Carter) 대장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에게 보고했다.

**합참과 국방부의 조치** 펜타곤은 태평양공군사령관 라이언 장군에게 1시간 45분 이내와 3시간 이내에 푸에블로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와 숫자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제5공군의 답변은, 1시간 4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고 3시간 이내에는 4대의 F-4 전투기가 가능한데 재래식 폭탄은 탑재 가능하지만 공대공 전투능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합참의장 휠러 장군은 “어떻게 미군이 푸에블로호가 납치되는 것을 막지 못했나?” 하는 의문들이 곳곳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태평양사령관에게 긴급전문을 보내면서 동시에 태평양함대사령관, 태평양공군사령관, 태평양육군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도 참조할 수 있도록 전문 사본을 보냈다. 전문 내용은, 보고 시점까지 일어난 사건경위와 푸에블로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이를 지원할 수 있었던 전력의 위치, 형태, 수량, 준비태세를 보고하고, 아울러 지휘관들이 고려했던 조치와 고려했으나 배제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1월 23일 08:00(워싱턴 시간) 이전까지 가능한 신속히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정보국(DIA : Defense Intelligence Agency)에 북한 함정의 발포여부, 부상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합참의장과 함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이어서 국방부 공보담당 필립 지 골딩(Phillip G. Goulding)과 함께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기사발표 준비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워싱턴 시간 1월 23일 02:31(한국시간 1월 23일 16:31), 모든 부대에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한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않도록 태평양사령부에 지시했다.

펜타곤은 푸에블로호에 대한 정보를 국가안보국에 요청했다. 03:20, 국가안보국은 푸에블로호가 사건 발생 전까지 무선침묵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건 전에는 아무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합참은 국가안보국에 1968년 1월 8일 이후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신호정보 자료들을 모든 기지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가안보국은 03:55에 이를 위한 지시를 예하 신호정보 수집기지에 내렸다.

09:15, 국방부는 백악관, 국무부 등과 논의한 후에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언론발표를 했다. 국방부는 푸에블로호가 미국 정보수집보조함(AGER-2)이며 배의 크기, 승무원 정원,

배의 규모에 관해서 자세히 발표했다. 이 날 정오 국무부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이 사건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해군선박에 대한 불미스러운 복괴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극히 중대한 사태’(A Matter of Utmost Gravity)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소련에 대해 선박과 선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전달하도록 긴급 요청을 했고, 향후 유엔에도 이 사건을 제기할 것이며, 이와 함께 여러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10:30(한국시간 1월 24일 00:30), 태평양사령부와 그 예하 사령부들이 필요 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합참의장 윌러 대장은 태평양함대사령관 하이랜드 장군에게 사고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지 말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특히 공군 및 해군의 정찰과 사고해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원산 앞바다에 구축함을 배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재배치 중인 함대 전력도 현재 위치에서 더 북상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최소한 당장은 푸에블로호 납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1월 23일 늦은 저녁시간에 합참은 태평양사령부의 각 사령부에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미 해군과 공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80해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엔터프라이즈호 선단은 위도 38도 이남의 동해에서 작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합참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태평양사령관에게 통보했다.<sup>40</sup>

백악관의 조치 푸에블로호 나포 소식이 백악관에 도달한 것은 워싱턴 시간으로 1월 22일 23:15경이었다. 백악관 상황실장 짐 브라운(Jim Brown)은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다 자정(한국시간 23일 14:00) 무렵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월트 더블류 로스토우(Walt W. Rostow)에게 전화를 해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알렸다. 내용은 “약 한 시간 전에 푸에블로호라는 작은 배에서 보낸 위급전문을 수신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결론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로스토우는 이 내용을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 로버트 맥나라마(Robert McNamara) 국방장관, 윌리엄 번디(William Bundy) 국방차관에게 전화로 급히 알린 후 백악관으로 들어왔다.

23일 01:00(한국시간 23일 15:00)경, 로스토우는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 와중에도 푸에블로호에 대한 전보가 계속 들어왔지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로스토우는 국가안보국 카터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푸에블로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휘통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3일 01:30, 카터 장군은 정보수집 작전에 관해서는 국가안보국과 합참 사이에 분명한 책임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국은 신호정보 수집 임무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과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위협평가와 함정배치 책임은 합참과 합동 정찰본부(JRC : Joint Reconnaissance Center)에 있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카터 장군은 푸에블로호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합참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군과 통화한 후 로스토우는 하와이로 전화를 걸어서 원산에서 푸에블로호까지의 거리와 진행된 지원 노력과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고, 태평양사령부는 구조가 가능한 시간에 푸에블로호에 도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로스토우는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통화한 후, 1월 23일 02:25(한국시간 23일 16:25)에 존슨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가 대통령에게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 중인 정보수집함 1척이 22일 22:52과 23일 00:32 사이에 납치되었다는 것과 4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중 1명은 중상이라는 것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당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다시 상세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대통령은 사건이 여전히 뿌연 혼돈과 혼란 속에 있음을 알았다.

1월 23일 오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로스토우 특별보좌관, 윌러 합참의장, 리처드 헬름(Richard Helms) 중앙정보국장, 니콜라스 비 카첸박(Nicholas B. Katzenbach)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이프리스 문제만 협의하고 푸에블로호 사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고 추가 정보를 계속 수집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푸에블로호에 탑재되어 있던 비밀자료들과 승무원들이 운용하고 있던 정보수집 장비와 비밀자료들은 미국 정보부와 미 해군 전체의 통신망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었다. 이를 인식하고 합참은 관계기관에 피해 평가를 요청했으며, 신호정보 관계자들이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치적 차원의 대응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심사숙고했다.<sup>41</sup>

미국 당국이 푸에블로호의 비상사태를 알고 나서 24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다. 관련 미군부대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푸에블로호의 피랍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떠한 즉응 반격도 배제되었다. 푸에블로호의 정확한 현재 상태는 승무원의 거취와 마찬가지로 알 수 없었다. 정보함에 북한군이 승선할 때의 정확한 위치 정보도 거의 없었다. 푸에블로호에 대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진촬영이나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항공정찰도 하지 못하게 했다. 사태 확대를 우려한 합동참모본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군사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 경고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푸에블로호가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 어느 미 해군 관계자가 곤경에 빠지더라도 아무 도움도 기대하지 말라고 부처 함장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sup>42</sup>

1968년 2월 22일, 국방부 국제안보부차관보 폴 씨 완케(Paul C. Warnke)는 하원 청문회 준비를 위해 보낸 바버 비 코너블 주니어(Barber B. Conable, Jr.)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왜 미국의 군사지휘관들이 푸에블로호를 지원하지 못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적시하고 있다.<sup>43</sup>

아전지휘관들은 푸에블로호의 지원요청에 응할 수 있는 부대들에 경고(준비) 명령을 하달해 놓고, 지원전력을 보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3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둘째, 북한군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려 한다는 전례도 없고 터무니없는 기도를 알아차린 후,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아 납치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 오끼나와, 그리고 향해 중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있던 전투기들은 납치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원임무에 맞는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사건 현장에 어떤 전력을 보내든 약 500대의 항공기를 갖춘 북한의 대공방어망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결국 푸에블로호를 도울 수 있는 전력을 보내지 못했다.

### 제3절 미국정부의 조치와 한·미 갈등과 협력

#### 1.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동기에 대한 미국 수뇌부의 최초 판단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보국장 헬름은 북한의 의도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국방정보국과 국가안보국 등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냈다. 1968년 1월 23<sup>44</sup>일의 보고서는 푸에블로호 납치는 계획적인 도발이었고 북한군 현지 지휘관이 아니라 고위급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북한군은 상당기간 직면하게 될 고조된 긴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함정에 대해 항공공격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승무원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긴장이 고조되면 소련은 개별적으로라도 은밀히 북한 편을 들 것이며, 북한에게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권고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앙정보국은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했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정확한 동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건 초기 존슨 행정부는 미 해군과 정보담당자들이 따랐던 냉전시대의 시각에 사로잡혀, 김일성이 순전히 내부의 동기로 말미암아 행동했다고는 믿지 않았다.<sup>45</sup> 존슨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조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나마라 장관의 후임자로 내정되어 있던 클라크 클리포드(Clark Clifford)는 “대통령은 그 사태가 자신과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도전의 일환이며, 우리의 의지와 자원을 고갈시켜 파탄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후에 회고했다.

존슨의 참모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했다. 로스토우(Rostow)는 푸에블로호 납치가 “태평양에서 소련의 다른 행위들”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소련 선박을 납치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대칭적(symmetrical)”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이 비록 거부되기는 했지만, 맥나마라도 같은 생각이었다. 납치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소련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고위층에서는 국제공산주의자 음모론이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하부 실무계층의 정책입안자들이 제법 있었다. 특히 국무부의 정보조사국은 북한이 소련의 꼭두각시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푸에블로호 납치 작전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1월 24일, 국무부 정보조사국장은 “소련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도록 북한을 부추겼거나,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를 거부했다.<sup>46</sup>

## 2. 미국의 대응정책 결정과 시행

### 가. 미국의 정책방향 결정

1월 23일 존슨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하는 오찬 모임을 주재했으나,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수집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대통령은 위기사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수립을 하기 위해 ‘푸에블로호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자문단은 로스토우 안보특별보좌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리스크 국무장관, 카첸박 법무장관, 조지 볼(George Ball) 국무차관, 헬름 중앙정보국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 날 오후 자문단을 포함한 다수의 인사들이 국무부에 모여서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목적과 향후 작전, 미국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했다. 로스토우는 이번 도발의 배후 세력은 소련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를 미행하는 러시아 함선을 한국으로 하여금 납치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의견에 대해 반대를 했다. 윌리 함참의장은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를 제안했지만, “무슨 조치를 취하든 사전에 정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공군 예비전력 소집을 포함한 군사력의 증강과 복무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결국 회의는 가능한 압박방책 목록을 작성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방책은 북한 항구봉쇄, 북한 함선 납치, 북한에 대한 항공 또는 지상공격, 푸에블로호 대신 배너호를 배치하는 것 등이었다. 여러 가지 보복조치가 거론되었으나 최종 방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푸에블로호 자문단은 6일 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1월 29일 해결책을 제시했고 존슨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선의 방책은 미국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83명의 승무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미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 한국을 달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존슨 대통령이 우선 조치해야 할 것은 군사적 대응이었다. 신속하게 무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다. 전직 함참의장 무어(Moorer) 대장은 “푸에블로호 석방을 위해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선체와 승무원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원산에 구축함을 보낼 것을 건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본스틸 대장은 북한 김일성에게 핵무기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 밀러(jack Miller : 공화당-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단순히 관문점에서 항의하는 것

보다는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이 정부가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앨버트 왓슨(Albert Watson : 공화당-남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커다란 방망이”가 “물에 젖은 면발이 되어 버렸다.”라고 개탄했다. 군과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쳤다. 초기의 울분이 가라앉은 후인, 2월에 실시된 갤럽 여론 조사에서도 군사적 대응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숫자가 외교적 대응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미국 국민은 여전히 무력행동을 원했다.<sup>47</sup>

미국 정부(푸에블로호 자문단)는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방안들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방안은 북한 선박의 납치와 승무원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무엇보다 김일성이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과 교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공해상을 오가는 대부분의 북한 배들은 주로 폴란드 승무원들이 운용하는 북한-폴란드 공동운영 선박이었다. 이러한 선박을 납치하게 되면 주미 폴란드 대사가 엄중히 항의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위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공산진영 국가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호전적인 로스토우만이 이 위험한 방안을 지지했다.

두 번째 방안은 북한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교역상대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충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항구를 봉쇄하는 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방공력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소련이 북한의 방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잘 방어된 원산항에 억류하고 6척의 코마(KOMAR) 유도탄 고속정으로 에워싸고 있어, 다수의 미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푸에블로호의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 번째 방안은 북한에 대해 공습을 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 역시 소련제 MiG-15·17·21을 포함한 약 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북한의 항공기와 연료 공급시설들은 잘 산재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동굴이나 엄폐된 방호시설에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군사조치 분야 평가담당 특별반은 “공습을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실질적인 타격이나 교란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네 번째 방안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특별반은 유사한 결론을 제시했다. 즉 이는 1953년의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푸에블로호 납치 직후 북한이 내린 총동원령에 의해 동원중인 수많은 소련제 T-54·55 탱크와 광범위하게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PPS-43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난관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조치들은 38도선 이남에 대한 북한의 보복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미국 관리들은 남한의 국방력으로는 북한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공군력만 보아도 북한은 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남한은 거의

20년이 넘는 F-86과 공대지 타격능력이 결여된 F-5 전투기를 포함하여 3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8</sup> 따라서 위와 같은 공격을 하게 된다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미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은 클리포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는 “푸에블로호와 83명의 승무원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한국전쟁을 또 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베트남에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행정부는 또 하나의 아시아 전선이 생기는 것을 사활을 걸고(desperately) 막으려고 했다. “현재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재개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줄 것이다.”라고 러스크 국무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카첸박 법무장관도 “한 번에 한 개의 전쟁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응수했다.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한요소들로 말미암아 존슨 대통령은 군사적 조치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복조치의 실행은 승무원들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여러 방안들을 동시에 시도하더라도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인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0개의 각기 다른 계획을 보고했지만, 존슨 대통령은 “어떠한 방안도 승무원들을 살려서 데려 올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행정부는 비밀리에 12대의 F-105 전투기를 원산항으로 보내, 공산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 배를 폭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존슨 대통령은 끝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느린 협상 속도에 실망하고,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미 행정부는 현명하게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의 외교를 복원하여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존슨 대통령은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통령은 “나는 논쟁에서 이기고 협상에서 지고 싶지 않다.”라고 참모진에게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4년 통킹만 사태에서 제반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군사적 대응을 함으로써, 대화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베트남전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인내심이 요구되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던 것이었다.<sup>49</sup>

#### 나.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군사조치 실행

미국의 군사조치 존슨 대통령은 그의 외교적 노력에 병행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두 가지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첫 번째 작전은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항공모함 선단과 배너호를 동해로 전개시켜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 이 작전의 암호명은 ‘별 대형(隊形) 작전(Operation Formation Star)’으로 명명되었다. 두 번째 작전은 다수의 항공기를 한국으로 전개시키는 것으로, 이 작전의 암호명은 ‘여우사냥 작전(Operation Combat Fox)’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현역으로 소집하자는 맥나라마 국방부장관과 휠러 합참의장의

건의를 수락했다. 예비군 소집령 발령은 1962년의 쿠바사태 이후 처음이었다. 항공 예비군 소집령에 따라 공군예비 8개 부대, 해군예비 6개 부대, 주방위 공군 14개 부대의 총 병력 14,600명과 372대의 전투·공격·정찰·수송·구조기가 1월 26일까지 동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3척의 항공모함과 1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해군 기동부대를 한국 동해 연안에서 120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보내고, 배너호로 하여금 이 선단에 합류하여 푸에블로호의 임무를 대신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전투기 7개 부대, 전술 정찰기 2개 부대(미국 본토 112대, 오키나와 63대, 필리핀 13대, 일본 4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26대의 B-52 전폭기와 10대의 KC-135기도 오키나와와 괌에 전개시켰다. 이리하여 1월 26일에서 2월 7일 사이 한국에 배치된 항공기의 숫자는 214대에서 406대로 증가되었으며, 그 중 308대는 수 백, 수 천 파운드의 재래식 폭탄과 탄약을 적재하고 전투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

미국은 푸에블로호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존슨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검은 방패 항공정찰(Black Shield Reconnaissance Flights) 작전’을 1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승인했다. 이 임무는 네브라스카(Nebraska)주 오마하(Omaha)에 있는 전략공군사령부(SAC : Strategic Air Command)가 맡았다. 합참은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과 협조하여 전략공군사령부에게 A-12와 SR-71 정찰기를 이용하여 세 차례 북한 전역을 정찰토록 했고, 여기에는 ‘범블 버그(Bumble Bug)’라는 무인정찰기도 가세했다.

1월 26일, SR-71 항공기가 북한전역에 대해 고고도 항공촬영을 했고<sup>50</sup> 푸에블로호의 위치를 확인했다. 사진 분석가들은 푸에블로호는 원산 문천 해군기지에서 북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장자완 만에 정박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sup>51</sup> 푸에블로호의 옆에 P-6 모터 어뢰정들이 계류되어 있었고 다목적선도 1척 좌현 쪽에 정박해 있었다. 사진이 흐려서 함정이 훼손되거나 장비를 제거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

미국은 사고해역 일대에 대해 항공정찰뿐만 아니라 해상정찰도 병행했다. 한 척의 고속 공격용 핵잠수함과 통상 정보수집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디젤-전기 엔진의 볼라도함(USS Volador, SS-490)을 보내 수색정찰을 했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특수 장비들을 바다에 버렸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부근에서 푸에블로호의 유기물이나 잔해, 그리고 구조작업을 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미국이 항공정찰을 하고 있을 때 소련, 중국, 북한의 레이더가 미국의 항공기들을 추적했지만, 요격을 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응은 절제되면서도 단호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면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은밀히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sup>52</sup>

소련의 군사적 반응과 미국의 조치 미국이 동해상에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소련도 이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수단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소련 함선들은 동해 남방에서 엔터프라

이즈호 선단을 발견했다. 1월 26일경 엔터프라이즈호를 미행하던 소련 정보수집함 기드로로그호(Gidrolog)는 소련의 킬딘급(kil' din class) 로켓 구축함, 리가급(Riga class) 호위함, 유조선 등과 합류했다. 킬딘급 소련 구축함은 1월 24일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항을 출항한 후 신속히 남하해서 쓰시마해협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위함 및 유조선과 합류했고 이어 기드로로그호와도 합류했던 것이다. 소련 공군기들도 감시활동에 합류했다. 1월 24일 오전 정찰 비행을 시작한 2대의 TU-16 항공기가 동해상에서 기동 중인 미국의 전함들을 정찰했다.

한편 배너호가 요코스카 항을 출항한지 3일째 되는 저녁, 아직 배너호가 쓰시마해역에 있을 때 소련의 리가급 호위함이 410m 정도까지 접근해서 10분간 라이트를 비추었다. 그때 소련 군은 푸에블로호의 그림자 같이 유사한 모습의 또 다른 배의 출현에 혼동을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절차를 취했다. 소련 군함은 4.5km의 거리를 두고 약 두 시간 동안 배너호를 추적하다가 방향을 돌려 다시 초계활동을 계속했다. 1월 30일 06:30, 배너호는 한국 포항에서 15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엔터프라이즈호 선단과 합류하여 정박했다.

미국이 동해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동안 소련도 이 해역에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었다. 2월 초까지 소련은 크루프니급(Krupny Class), 코틀린급(Kotlin Class), 카신급(Kashin Class)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정보수집함 2척, 수 척의 잠수함을 비롯하여 16척의 함정을 동해에 배치했다.

소련의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미 군부 지도자들도 자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재빨리 사고해역에 도착하고 있던 부대들에게 무력시위를 하지 말도록 명령했고, 푸에블로호 구조와 예인작전은 취소되었다.

“나는 외교수단으로 승무원의 송환을 추진하려는 현재의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어떤 군사적 조치도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태평양사령관 샤프 제독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샤프 제독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원산항 기뢰부설과 무장을 갖춘 전력의 엄호하에 배너호를 사고해역으로 보내는 조치 등을 준비하겠다고 함참의장에게 약속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핵무기 사용방안도 준비할 것이다. 어떤 군사조치도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송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북한에게 가르침은 줄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sup>53</sup>

#### 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그 실패

제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존슨 행정부는 초기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순전히 국내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존슨 대통령은 이를 모스크바가 조종하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국제분쟁의 일부라고 판단한



미 행정부는 본능적으로 국제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미국은 우선 소련과 접촉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소련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한에 영향을 미칠만한 나라들과 접촉하여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이 모든 노력들이 무산됨에 따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단독협상에 임하게 되는 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판단한 존슨 대통령은 1월 23일 첫 번째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그는 주소련 대사 류일린 톰슨(Llewellyn Thomson)에게 즉시 소련 지도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톰슨 대사는 곧바로 소련 외무차관 바실리 쿠즈네트소프(Vasily Kuznetsov)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쿠즈네트소프는 톰슨 대사에게 미국은 즉시 북한과 직접 접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소련과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존슨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쿠즈네트소프가 사전에 준비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의 중심에 모스크바가 있다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소련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련은 푸에블로호 피랍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소련의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소련은 이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후 소련이 북한에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김일성은 이를 무시했다. 2월 소련이 북한에게 미국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체와 승무원들을 돌려보내라고 권고했지만, 김일성은 이를 다시 무시했다. 몇 달 후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소련이 “푸에블로호 피랍 이후 북한에 대해 아주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명백히 모스크바가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존슨 행정부는 소련이 관여했다는 믿음을 감추지 않으면서 소련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공개적으로는 조소를 보냈지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은밀히 비공식 채널을 가동했다. 소련은 미국의 국회의원, 제3국의 대사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소련 정부는 피랍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흘렸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자 미국 행정부는 자신들의 결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피랍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미국 국무부 직원들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 두 공산 강대국들과 사전

에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여 존슨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소련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여전히 김일성이 국내 내부사정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은 믿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피랍사건이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믿음에 더해, 1월 30일 개시된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는 이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그들은 베트남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려 우리를 압박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3년 후에도 “북한은 8일 후 계획되어 있는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미국의 군사역량을 분산시키고,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의 2개 사단의 철군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참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월 24일의 자문단 회의에서, 로스토우 안보특별보좌관,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라마 국방장관과 그 후임으로 내정된 클리포드는 ‘북한의 행동은 양동작전이며 진정한 목표는 베트남에 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주베트남 미군사령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 대장, 서울의 포터 대사까지도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맥나라마는 “미국은 푸에블로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베트남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작은 명백히 성공했다.”고 푸념했다.<sup>54</sup>

푸에블로호 피랍 이후 미국은 소련뿐만 아니라 북한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접촉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우루과이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 미국 대표를 보내 승무원과 선박의 송환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거나 대안에 응하도록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도 성공하지 못했다.

1월 26일, 존슨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엔주재 미국대사인 아더 골드버그(Arther Goldberg)는 푸에블로호 선체 및 승무원 송환과 함께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엔의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방안은 한국과 북한의 대표를 유엔에 초청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케 하는 것, 중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비밀리에 중재를 하기 위해 루마니아 대표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유엔 주도의 해결방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월 26일, 존슨 대통령은 제네바 주재 미국대사인 로저 터비(Roger Tubby)를 국제적십자위원회(IRC : International Red Cross)에 보내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 정부와 긴급 접촉하여 포로들의 복지와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적십자사는 그 날 오후와 그 다음날, 그리고 2월 15일 다시 한 번 더 김일성에게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고작 미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신문사설 복사본 1장을 보내는 것으로 대꾸할 뿐이었다.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 중립지역에서의 비밀회담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 등의 방안들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김일성이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와도, 자신들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협상하지 않겠다며 제시하는 방안들을 간단하게 거부해 버렸기 때문이었다.<sup>55</sup>

#### 라. 푸에블로호의 북한영해 침입 여부에 대한 평가

푸에블로호가 과연 북한의 영해를 침입했는가? 하는 것은 미·북 양측의 핵심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미 정보국장 헬름은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북한이 적어도 며칠간은 이 문제를 대단한 선전용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워싱턴 시간으로 2월 24일 11:30경 평양의 북한 중앙방송은 부처 함장의 것으로 여겨지는 자백서를 한국어로 소개한 뒤 영어로 방송했다. 방송에서는 부처 함장이 직접 자백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이 방송의 진실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록 자백하는 사람이 미국 엑센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말이 어색하고 미국인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문장 구조와 표현을 구사하고 있었다. 발표문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준비된 것 같이 보였다. 영어로 자백한 사람의 음성이 정말 부처 함장의 음성이었는지 의문이 있었다. 국가안보국 음성연구부는 음성 분석결과 이 음성이 부처 함장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부처 함장 부인은 자기 남편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sup>56</sup>

자백의 진실성에는 의문이 있었지만, 자백 내용 중 소위 북한해역의 ‘범죄적’ 침범과 ‘중앙정보국에서 임무 수행’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은 즉각적인 반박이 필요했다. 즉시 국방부는 반박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를 정리하여 그날(2월 24일) 16:30 언론사에 배포했다. 배포자료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있었다.

북한군들의 레이더를 추적한 결과 푸에블로호의 위치는 북위 39도 25분, 동경 127도 56분으로 확인되었다. 푸에블로호는 임무를 시작할 때부터 북한 영토로부터 적어도 13해리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푸에블로호의 무선통신 자료와 북한의 내부보고 통신자료들에 명령이 지켜졌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 뉴스자료는 푸에블로호가 피랍될 당시 북한군의 푸에블로호에 대한 레이더 추적을 포함한 통신교신을 미국이 도청하였음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언론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부처 함장의 ‘자백’을 서둘러 반박하려는 조급함이 있었다. 국방부 공보실 담당장교 브루스 브라운(Bruce Brown) 중령에 따르면, 언론발표 자료는 국무부의 버거(Berger) 대사와 백악관 공보비서 조지 크리스찬(George Christian),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실무자의 착오로 국가안보국장 카터 대장과 중앙정보국장 헬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터 대장은 1월 25일 신호정보와 통신보안 활동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특수임무 팀을 국가안보국에 설치하고, 북한통신 감청 내용과 미국의 통신기지들이 수신한 내용들을 분석했다. 주유엔 미 대사 골드버그는 1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 분석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존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국가안보국은 골드버그에게 분석자료를 제공했고, 골드버그는 이를 기초로 회의록과 프리젠테이션용 차트를 준비했다. 골드버그는 최종 발표문을 존슨 대통령의 사전 검토를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했다.

26일 오후, 골드버그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피랍될 때, 북한 영해로부터 최소한 13해리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푸에블로호는 북위 39도 25분, 동경 127도 56분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와 도표를 제시했다. 이 지점은 가장 가까운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16.3해리, 옹도로부터 15.3해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북한 대잠함의 수동 모스 부호 교신내용과 사건 관련 북한 함선간의 음성교신을 도청하였음을 공개했다. 골드버그는 북한군이, 푸에블로호가 미국 배이며, 실제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격 및 피랍 시 공해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수차례의 정확한 대화가 포함된 사실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소련 유엔대표 플라톤 모로소프(Platon Morosov)는 골드버그의 연설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부처 함장의 “푸에블로호는 노도(Nodo)에서 7.6해리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골드버그는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기록이지 사후에 관계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조작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군은 적어도 1월 20일경에는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동해상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를 추적하면서 온전한 상태로 납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푸에블로호의 지휘 통제시설이 있는 갑판부분에만 집중사격을 가했음은 앞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결국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채 한 달도 안 되어 6차례의 영해침범 증거를 공표했다. 영해 침범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는 도표 <6-3>과 같다.

북한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영해침범을 시인하는 승무원들의 자백, 푸에블로호의 항적과 위반지점이 분명히 표시된 항해도, 북한이 찍은 항해사가 작성하는 선박 ‘공식 위치일지’ 사진과 ‘시각 기록일지’ 사진이었다.

그러나 존슨 행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 증거자료 중 승무원들의 자백은 모진 구타와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허위 자백서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서호급 대잠함과 육상간에 감청된 통신기록과 북한 해안 레이더 통신기록은 모두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 밖 13해리 이상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미국의 카미세야 기지를 포함하여 태평양 전역에 있는 전파탐지기는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 밖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6개소의 영해 침범 시간과 장소를 분석해 본 결과, 푸에블로호의



도표 <6-3>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침범 시기 및 장소

번호	시기(1월)	장 소		북한 영해로부터 이격 거리
		위도(북위)	경도(동경)	
①	15일 07:45	41도 25분	130도 03분	오랑단에서 11.2해리
②	16일 13:41	41도 51분	130도 10분	개탄에서 9.8해리
③	18일 03:25	40도 28.1분	129도 36.7분	남도에서 10.75해리
④	18일 04:32	40도 27.3분	129도 30분	남도에서 11.3해리
⑤	21일 18:30	39도 48.9분	128도 1.9분	북한 해안에서 8.2해리
⑥	23일(납치 당시)	39도 17.4분	127도 46.9분	여도에서 7.6해리

최고 속도를 고려할 때 제시된 시간 내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도 있고, 푸에블로호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게 침로를 급격하고 비논리적으로 변경해야만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에 도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 위반지점이 선박 ‘공식 위치일지’ 나 ‘시각 기록일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항해도가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해도의 오른쪽 밑에 “부장/항해사 에드워드 머피 2세가 그렸음.(drawn by)”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항해사들은 보통 ‘그렸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점하였음.(plotted by)’ 이라고 쓰고, 머피도 항상 ‘기점하였음.’이라는 표현을 써 왔었다. 승무원들은 송환된 후 이 항해도가 조작되었음을 증언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은 북한의 강요에

의해 자백서를 쓴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최대한 미국인이나 미 해군들이 쓰지 않는 용어로 기술했다고 증언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사위원회(Board of Inquiry)는 “레이더 사용의 제한, 항해장비 로란(LORAN)의 오류, 불확실한 기상여건, 불확실한 해저 등고선(등심선) 정보 등으로 인해 푸에블로호의 위치 계산에 특히 야간에, 5마일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결론지었다.<sup>57</sup>

### 3. 한·미 갈등과 미국의 무마조치

#### 가. 미국의 대(對)북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조치

군사적 대응을 거부한 존슨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을 달래서 베트남전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는 미국의 두 번째 달성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피랍은 한국을 침공하기 위한 김일성의 일련의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김일성이 먼저 특수부대 공격을 통해 한국사회를 교란시킨 후 이어서 38도선을 넘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지금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이에 고무되어 향후 더욱 심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국의 정부, 국회, 언론, 일반국민 할 것 없이 모두 1·21사태보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더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단독협상에 나서는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북한 강경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의 자서전에서, 당시의 분노와 배신감을 이렇게 적고 있다.<sup>58</sup>

그 당시 한·미 관계는 베트남 파병 등으로 한층 두터워져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교활한 수단에 맹방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견고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이 때 나는 베트남 파병까지 함께 했던 미국조차도 자국이 이익 앞에서는 동맹국을 헌신짝 같이 버리는 것을 보고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냉정함을 더욱 실감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나무랄 마음은 없다. 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 정부를 무시한 채 판문점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 더욱이 북한은 폭력을 휘두르고도 회담 당사자라고 버티며 미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우롱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경멸했겠는가?

미국은 북한 공비들이 미군 관할지역을 뚫고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오 시인이나 사과논커녕 어떤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맹방이라는 미국은 한국 대통령의 생명까지 위협한 사태는 물론 척하고 자국민의 생명에만 매달렸다. 더구나 살인마들을 협상 대상이라고 앞에만 얹혀놓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보다도 사건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갑자기 달라진 미국의 태도에 배신과 모욕을 느꼈고, 미국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한국 정부 · 국회의 반응과 조치** 한국 정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1월 24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제1차 정부-여당 연석회담을 열어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외무·내무·국방·공보부 장관, 공화당 의장 및 정책위의장, 3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1월 25일, 정부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안전에 대한 위해 행위”, “가장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짓고,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은 전 세계 자유애호 국가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김용식 주유엔 대사를 통해 우탄트(U Thant)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외무장관 성명서를 발표했다.<sup>59</sup> 같은 날 박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 포터를 청와대로 초치, 두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군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한국 연합으로 북한의 비행장 폭격과 동해안의 북한 함정을 공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을 불러 대책을 협의했다.

1월 26일, 박 대통령은 제2차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방·외무·내무·공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회의 사무국장, 공화당 의장 및 정책위의장 등과 3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까지 참석시켜 군사문제를 포함한 제반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포터 대사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미국에 경제 및 군사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한국주재 모든 외신기사를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만약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의 군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월 29일, 정부는 주유엔 한국대사를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1·21사태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룰 것과, 유엔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요청하는 각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한편, 임충식 합참의장은 본스텔 장군에게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의 철수계획 작성 착수를 요구했다.

2월 1·2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 두 사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묻고, 군 장비 현대화와 경찰장비 증강, 주요시설의 자체 방위체제 강화 등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2월 5일, 임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이 무장공비 남침사건보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더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미국의 강경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떠한 도발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두 사건 처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접촉방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각서를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 그리고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과 함께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을 불러 북·미 군정위 협상경과를 듣고, 2월 2일과 4일 미국이 비밀리에 북한과 단독으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한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날 오후 늦게 판문점에서 제3차 군정위 회담을 열었다.

2월 6일, 중앙청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하에 외무·국방·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합참의장과 포터 미 대사 및 본스틸 유엔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포터 대사와 본스틸 장군은 북·미 군정위 회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불가피한 입장과 회담 개최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정일권 총리는 미국의 유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참여 없이 3차례나 군정위 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 그리고 미국 측의 확고한 대책을 요구하고,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김동조 주미 대사를 소환했다.

2월 7일, 박 대통령은 하동의 경전선 철도 개통식전에서 ‘자주국방 정책’ 추진을 선언하면서, “올 해 안에 250만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무장시킬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무기공장을 연내에 건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정부는 전 장병의 제대를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월 6·7일, 국회는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미국 존슨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적 분노’라고 일컫는 ‘안보결의안 9개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한국 단독으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회의에서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 2개 사단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정일권 국무총리는 “미온적인 미국의 대응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6·25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지체 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다.

2월 8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각당 대표 시국 간담회를 열어 ‘국방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긴급장비 도입계획, 무기지원 관련 대미 교섭 상황, 무기공장 건설을 위한 한·미 합작투자 교섭상황 등에 대해서 밝히고 각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sup>60</sup>

**한국의 국민여론** 한국의 여론도 정부의 생각과 다른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여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둘째, 한·미 동맹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1·21사태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보다 더 중대한 안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셋째, 북한의 도발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과 제재조치를 한·미 공동으로 취해야 하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한국 단독으로라도 대북 응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푸에블로호 사건을 1·21사태와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의 연계성을 갖는 사건들로 취급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대북협상에서 한국 측도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와 같은 한국의 요망사항들을 수렴하지 않을 시 독자적인 행동은 물론, 베트남전에 파견된 부대들의 철수,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의 근본적인 재수정 또는 폐기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응방향이 평화적 대응으로 기울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다. 두 사건에 대해 시민, 학생, 지식인, 법조인, 교사 등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약 15일간 규탄대회가 이어졌다. 또 경제인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1월 31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반공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약 100,000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시가행진을 하면서 깃으로 김일성 형상을 만들어 불태우기도 했다. 2월 8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구, 광주의 미국 문화원 앞에서 “굴욕적인 회담을 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특히 서울대생들은 판문점 미·북 비밀회담에 대해 항의하면서 베트남에 파병 중인 한국군을 철수시킬 것을 주장했다. 2월 20일, 한국맹인협회 사무총장 박재석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혈서와 잘린 손가락 마디를 탄원서에 붙여 보내는 등 한국민은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북한과의 단독협상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일간지들도 이에 적극 가세했다. 2월 6일, 중앙일보는 “미국의 굴욕적인 자세”를 공격했고, 이틀 후 코리아 해럴드는 “북한이 자행하는 일련의 호전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보복을 하는 대신, 세계 최대강국이 공산당의 선전공작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사설은 미국의 보복조치 촉구, 판문점 비밀회담에서의 1·21사태 토의 요구, 미국의 명확한 태도표명 촉구, 브라운 각서의 완전이행과 대한군원의 증액 요구, 한국의 대간첩 방위태세의 허술함에 대한 지탄, 국민의 반공 정신무장 촉구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sup>61</sup>

## 나. 미국의 대한(對韓) 무마조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정책 목표 세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병력의 철수를 막기 위해 한국을 달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푸에블로호가 피랍되고 김일성이 총동원령을 하달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심각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베트남에 파병 중인 두 개 사단을 철수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실제로 1월 29일 합동참모본부는 본스틸 대장에게 베트남에 파견된 병력의 철수계획 작성을 요구했고, 2월 7일 국회에서는 미국이 남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베트남 파견병력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엄청난 규모의 해·공군 전력의 동해 전개,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서는 베트남에 파견 중인 한국군 2개 사단을 손실한다는 것은 기겁할 노릇이었다. 이의 손실은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베트남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경고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독적인 응징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존슨 대통령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38도선 이북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기 위해 베트남 파견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것을 용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러스크 장관은 “우리는 베트남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미 행정부는 결국 한국 국민과 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존슨 대통령은 남한에 대한 과장된 약속을 하며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발언들을 했다. 푸에블로호 피랍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과 그의 판단에 무한한 존경심을 표한다. 박 대통령의 판단은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판단에 따른 조치들이 매일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주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푸에블로호 협상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박 대통령은 “용기있는 지도자로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칭송했다.

이러한 정감 있는 표현은 약간의 효과를 거두었다. 2월 8일 박 대통령에게 미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포터 대사는 “좀처럼 웃거나 미소를 띠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포터 대사에게 김일성의 위협과 남한에 대한 미국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냉랭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뜻을 알아차린 포터 대사는 미 국무부에 “실질적으로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다수의 품목을 가장 큰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신속히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

포터 대사와 마찬가지로, 존슨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달래 수 있는 것은 칭송성 편지보다는 실질적인 지원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월 초, 존슨 대통령은 이미 승인된 대남(對韓) 원조 외에 별도로 1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의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원조액수는 2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재원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에 한국군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좋은 동맹국 중의 하나이다.”라고 의회지도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존슨 대통령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총애하는 문제해결사 사이러스 알 밴스(Cyrus R. Vance)를 한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밴스가 부여 받은 임무는, 박 대통령을 설득하여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거두고,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며, (가장 중요한) 베트남에 한국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었다.

2월 11일, 밴스는 1억 달러의 당근과 함께 채찍도 준비하여 서울에 도착했다. 채찍은, 박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Whole package)이 ‘한국군의 베트남 주둔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지시키고, 베트남 파견 병력의 철수는 상호원조계획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참도 줄어들게 할 것임.”을 경고하는 존슨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밴스 특사는 서울에 도착하자 곧 포터대사, 최규하 한국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접촉했고, 2월 12일 박 대통령을 방문했다. 2월 14일 10시간에 걸친 논쟁과 토의 끝에 최 장관과 공동 성명을 작성했다. 밴스는 이 안을 가지고 2월 15일 박 대통령을 면담했으며 몇 시간의 설전 끝에 마침내 박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과 밴스 특사간 합의내용은 제 7장에서 다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한다.

밴스 특사의 방한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정전위원회 회담에 대한 한국의 비난도 줄어들었고, 보복타격 주장도 수그러들었다. 3월, 박 대통령은 미국이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고 구축함과 헬리콥터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면 추가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베트남 파견병력 1인당 연봉 4,000달러의 급여를 요구했다.(당시 한국에서의 급여는 연봉으로 약 600달러에 불과했다.) 4월, 한국은 군사지원품 목록을 제출했고, 이후 6월까지 미국과 줄다리기가 계속 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를 수용하려고 힘썼다.

7월 8일, 마침내 미 의회가 행정부의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5,800만 달러 상당의 F-4D 전 폭기대대(18대)를 포함한 1억 달러의 추가 군원이 한국에 지원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루기로 한다.<sup>62</sup>

## 제4절 승무원 송환 관련 미·북 협상

### 1. 초기 협상(1. 24~5. 7) : 미국의 다양한 협상안 제안과 북한의 거부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제261차)가 최초로 열린 것은 1월 24일(한국 시간)이었다. 그러나 원래 이 회담은 1·21사태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가 1월 22일(한국 시간) 소집 제안을 한 것이었고,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이 회담에서 두 사건 모두 다루어졌다.

미국대표 스미스(Smith) 해군 소장은 1·21사태와 관련하여, 김신조의 기자회견 녹음 내용을 북한 측에 제시하며, “북한 무장유격대의 서울 침입사건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극악한 도발과 침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게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 송환과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미국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 수석대표인 박중국 중장<sup>63</sup>은 1·21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판전을 부렸고,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해서는, “1월 23일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무장 간첩선을 우리 영해에 침입시키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발행위를 저질렀다.”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 측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은 미국의 모든 우회적인 시도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신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암시를 보였다. 1월 27일, 북한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박중국 중장은 정전위의 한 미군 참모에게 비밀편지를 보내, “미국이 언제 포로들을 석방할지를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협상 또는 토론할 용의를 보여준다면 푸에블로호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통보했다. 같은 시기 유엔주재 헝가리 대표도 유엔주재 골드버그 대사에게 김일성이 승무원의 송환을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그 장소는 판문점이어야 한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1월 31일,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부수상인 김광협이 유엔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가 푸에블로호 사건을 불법적으로 유엔에 가져가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어버리고 전 세계 여론을 호도하려는 사전에 계획된 수작이다..... 만약 미국이 이 문제를 이전의 방식대로 풀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다.

협상을 갈망하던 미 행정부는 이러한 힌트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로스토우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존심을 최대한 지키며 협상을 하느냐입니다.”라고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월 28일, 러스크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대표인 스미스 제독에게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라고 명령했다.

이후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끝에 2월 2일 최초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스미스 제독은 미국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중국 중장은 푸에블로호의 행위를 “가장 악랄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승무원들은 침략자이자 범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2월 4일, 맥나라마 국방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을지도 모르나, 승무원들이 석방되기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침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판문점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의 박 대표는 “귀측이 이 문제를 양측, 즉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국간의 문제로 다루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중국 대표가 몇 차례의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했음을 전해들은 포터 대사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의 목적은 이 회담을 정부 대 정부간의 정식 협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이를 본국에 보고했다. 회담이 끝난 후 포터 대사는 박 대통령을 방문하여 미국의 입장과 회담 경위를 설명했다. 2일 1차 회담이 끝난 후에는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을 찾아가 설명을 했었다.

2월 5일, 제3차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사과 요구를 취하하고, 사과나 유죄 인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승무원 송환에 대해 기꺼이 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북한 대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지만, 미국 측에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당국자들을 고무시켰다.

2월 10일, 미국은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만약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유감 표현’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2월 15일, 박 대표는 스미스 대표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해에 푸에블로호라는 무장 간첩선을 보내서 간첩활동과 적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때만이 우리가 승무원 석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곧바로 그 제안을 거부했다.

2월 중순, 미국은 “공정한 사실조사체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이 조사체가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을 내리면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승무원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미국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승무원들을 중립국으로 석방해 달라.”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3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측은 “워싱턴의 도적 같고 터무니없는 논리”라며, ‘인정·사과·보장’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압력을 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련과도 계속 접촉했지만, 소련의

알렉세이 코시긴(Aleksei Kosygin) 총리는 “이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제 3자의 개입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월이 저물어 갔지만 사태는 한 달 이전보다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세 가지 목표 중에 두 개는 달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인 승무원 소환에는 진전이 없었는데, 이는 대체로 다른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이 김일성과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를 희생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정치·경제적 압력이 김일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존슨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의 사용이었으나, 이는 다른 두 가지의 목표를 포기함을 의미했다. 존슨 대통령은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면서 현 정책을 바꾸기를 거절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하게 되었지만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은 11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미국의 위신도 추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2월 말 골드버그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우리는 미국의 답답한 상황과 향후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다. “북한이 우리를 지지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북한을 지지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존슨 대통령은 “전쟁(War-War) 보다는 논쟁(Jaw-Jaw)이 낫다.”고 결론지었다.<sup>64</sup>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의 외침은 강렬했던 것만큼이나 빨리 찾아들어 3월이 되자 이 사건은 미국 시민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갔다. 이는 미국사회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사건 이후 큼지막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3월 존슨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4월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암살, 6월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의원의 암살,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등 굵직한 사건들이 뒤를 이으면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잊혀가고 승무원 가족과 친지들의 항의만 계속되었다.

어쨌든 미국 정부의 송환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를 위한 미·북 회담은 26차례나 계속되었고, 그러는 동안 5월 미국 측 대표는 스미스 제독이 물러나고 길버트 우드워드(Gilbert Woodward) 육군 소장으로 교체되었다. 북한 박 대표는 그들의 3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국의 제안들을 거부하면서도 회담은 계속 갖기를 원했다. 5월 회담에서도 성과가 없자, 포터 대사는 “북한은 회담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 2. 협상 교착(5. 8~12. 16) : 북한의 사과문 제시와 미국의 대안 찾기

5월 8일, 북한의 박 대표는 자신들이 작성한 한 장짜리 사과문을 우드워드 장군에게 전달하면서 만약 이 문서에 당장 서명한다면 승무원들의 석방 교섭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sup>65</sup>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해를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 침범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중요 군사 및 국가기밀을 염탐하기 위한 간첩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해방군 소속 해군함정의 자위권 행사에 나포된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이 작성한 자백문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가 작성한 서류 증거들을 인정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해를 침범한 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미국 군함이 저지른 중대한 간첩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과 정중한 사과를 표한다. 그리고 향후 미국 군함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해를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굳게 보장한다.

어쨌든 미합중국 정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미 합중국 정부가 앞에서 언급한 사과 및 보장과 함께, 납치된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 전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정직하게 자백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해 관용을 요청한 사실을 참작하여,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리해 줄 것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에 진지하게 요청한다.

존슨 대통령은 다음 회담에서의 좀 더 나은 진전을 기다리면서 북한 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우드워드 장군은 그 다음 회의에서 지난 3월에 미국이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중립국에 의한 사실조사를 제안했고, 박 대표는 다시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는 무력감에 빠졌다. 8월, 존슨 대통령은 일부 참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겹쳐쓰기 방법(Overwrite Formula)'<sup>66</sup>을 쓰기로 결심했다.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존슨 대통령은 “활기차게 추진하자.”라고 격려하면서 “적절한 말을 찾아 보라.”고 지시했다. 많은 고민 끝에, 우드워드에게 북한의 서한에다 아래와 같은 한 문장을 더 쓸 것을 제안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 한 문장은 “오늘 판문점에서, 살아 있는 82명의 미합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해군 두웨인 호지스(Duane Hodges)의 시신이 나에게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가지고 우드워드 장군은 8월 29일, 9월 17일, 9월 30일, 10월 1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5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다. 이 제안에 의한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 회담에서 북한 박 대표가 우드워드의 거만한 태도에 대해 화를 내고 비난하면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 3. 협상 타결(12. 17~23) : 미국의 '레너드안' 제시와 북한의 수락

11월 말, 미 국무부 한국지부장 제임스 레너드(James Lenard)가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 우드워드 장군이 서명하기 전에 사과문이 무효라는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이를 허락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사과문에 서명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존슨 대통령은 소위 이 '레너드 제안'을 승인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우드워드 장군에게 “행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제안의 제시”를 위해 회담을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리스크는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북한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의 대통령직 인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도록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조치도 병행했다. 소련에 이것이 마지막 제안임을 통보하고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북한이 네덜란드에 주문해서 1969년 초에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인 한 척당 1,400만 달러짜리 원양어선 2척을 납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실제 실행에 옮길 것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사전 공작을 했다.<sup>67</sup> 그리고 일본 정부에 소형 냉동어선의 대(對)북한 민간 판매를 금지해 주도록 요청했고, 일본 정부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12월 17일, 양측은 다시 판문점에 모였다. 우드워드 장군은 박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난 번 추진했던 ‘겹쳐쓰기 방법’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제안은 자신이 서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

①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불법 활동에 종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미국 정부는 귀측이 주장한 푸에블로호의 영해침범 증거를 수궁하지 않는다. ③ 미국 정부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우드워드는 미 행정부가 8일 남은 크리스마스를 승무원의 석방을 위한 최종일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23일 철회될 것임을 박 대표에게 강조했다. 50분의 휴회 후에 다시 회담장에 돌아온 박 대표는 두 번째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서명에 대한 것과 승무원 송환에 따른 세부절차에 대해 토의했다. 우드워드 장군은 문서 서명 시 3명의 북한 기자가 회담장에 위치하고 25명의 사진기자들이 사천교 북단에 위치하는 것에 동의했다. 미 행정부는 보도진의 존재가 김일성의 정치선전에 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로 인해 승무원의 인수인계가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결정에 대해 미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리스크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회상했다. 미국인의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승무원 인수 중’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 대신, 공개적으로 사과를 부인하면서 ‘사과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이 바보처럼 보였다. 어떤 기자가 “어째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훨씬 유리해 보이는 ‘겹쳐쓰기 방법’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카첸박 법무장관에게 물었을 때, 카첸박 장관은 “우리들 누구도 그것이 특별히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리스크 장관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는 마치 당신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몸값으로 5만 달러를 요구하고, 당신은 몸값으로 5만 달러 수표를 주면서 유괴범에게 이 수표는 은행에서 지급정지되었다고 말했는데도 유괴범이 당신 아이를 돌려 준 것과 같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생각은 냉전구도에만 초점을 맞춘 미 행정부가 북한에서는 국내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주체사상을 선전한다는 측면에서 ‘레너드 제안’은 ‘겹쳐쓰기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철권통치로 미국의 부인 사실을 북한 사회가 결코 알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겹쳐쓰기 방법’ 제안에서 요구한, 북한이 준비한 문서에다 우드워드가 직접 손으로 쓴 ‘승무원 인수 중’이라는 문장을 추가한 문서, 특히 이 문장을 대각선으로 겹쳐 쓴다면 이 문서를 숨기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클리포드는 10년 후에야 그 이유를 이해했던 것 같다. 그는 “아마도 북한은 자국 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고, 문제가 제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제안을 수락했던 것이었다.”라고 결론지었다.<sup>68</sup>

이후 미·북 양측은 12월 19일과 22일 두 차례 더 회담을 했다. 그리고 12월 23일 09:00, 북한 측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양 대표는 다시 만났다. 우드워드 장군은 서명을 하기 전에 준비해 온 성명서를 낭독했다.

푸에블로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판문점 협상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동 함정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었고,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를 단 한차례라도 침범했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일어났다고 믿지도 않아 왔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서명하려는 문서는 북한이 준비했던 것으로 상기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서명으로 사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 달라질 수도 없다. 본인은 승무원들의 석방, 오직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이내 우드워드 장군은 서명을 하고 그 문서는 박 대표에게 건네졌다. 박 대표는 그 서류에다 석방시간은 11:30이라고 적어 넣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12월 22일 밤 기차편으로 평양역에서 개성역에 도착했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탄 끝에 12월 23일 10:30에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끝단에 도착했다. 11:30, 북한 병사 1명이 부처 함장에게 다가와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라, 함장! 멈추지도 말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어떤 나쁜 행동도 하지 말고 진지하게 걸어가라, 자 출발!”하고 명령했다. 부처 함장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녹음된 자신의 자백 음성이 방송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려 나왔고, 이어서 북한이 그들 당국을 찬양 해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해주는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승무원들의 자백 음성들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부처 함장이 미국 측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존 루카스(John Lucas) 대령이 그를 가장 먼저 맞았다. 부처 함장은 뒤돌아서서 다리를 건너 오는 대원들을 확인했다. 부처 함장 뒤를 이어 두웨이인 호지스의 시신이 나무관에 실려 다리를 건너왔고, 이어서 나머지 승무원들이 낮은 계급 순으로 30초 간격으로 건너왔다. 부처 함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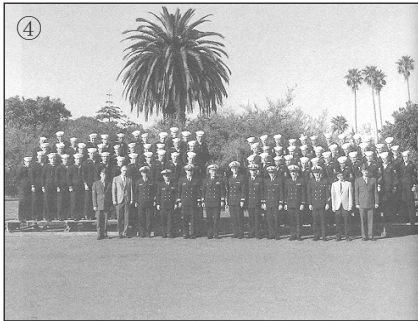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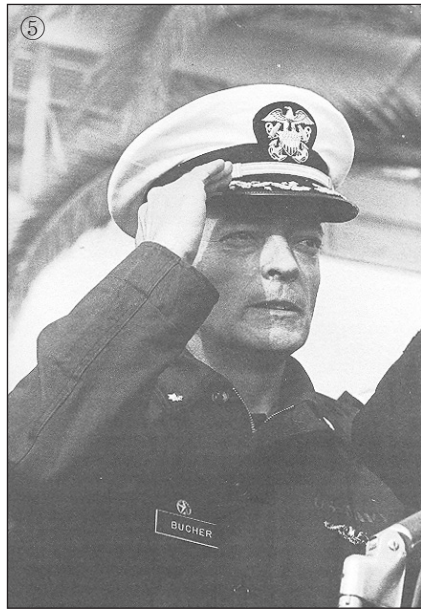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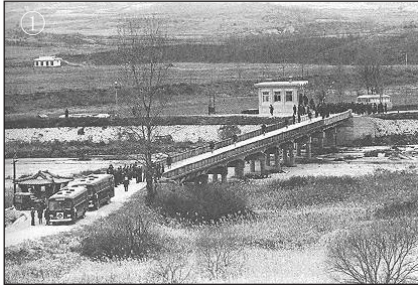
대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굳은 악수로 그들을 맞이했다. 승무원 전원이 76m에 이르는 행진을 마치자 이들은 3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판문점 전진기지로 이동했고, 이후 헬기로 서울 미군기지 내에 있는 미 육군 제121후송병원에 도착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 부처 함장은 병원 도착 즉시 최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맨 먼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구금생활을 함께 했던 자기 대원들이며, 그들은 미국의 정신이나 신념을 결코 잃지 않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납치 과정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북한에 대해,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완전히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곳”<sup>69</sup>이라고 답했다. 승무원들은 12월 2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다.

미국이 결국 북한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서방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를 환영했다. 런던의 더 인디펜던트 타임(The Independent Time)지는 “인내와 외교의 승리”라고 했고, 쿠알라룸푸르의 베리타 하리안(Berita Harian)지는 “위기에서 외교는 여전히 유효하고, 위기를 맞아 자제함으로써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존슨 대통령을 칭찬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지는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이 미국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가증스런 일들이 한 가지 결론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대내 선전공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인 대부분은 사건 해결에 갈채를 보냈으나, 일부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지는 “미국은 약간의 위신 손상을 받아들이면서, 군사력에 의한 해결보다는 더 나은 현명한 길을 택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타임스(Times)지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그 문서에서 서명하면서도, 미국의 정직성에 대한 세계의 존경에 손상을 받지 않는 척 하기 위해 이 문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기만이고 부정직한 짓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우방국 중 한국만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포터 대사는 사전에 박 대통령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박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한국의 언론은 비난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그 합의를 “수치스런 행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응징 대신 별 볼일 없는 북한 공산주의와 비밀협상을 한 것”이라고 개탄했고, 한국의 한 관리는 “미국은 자유세계의 안전보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석방에 더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공산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소련은 협상 관련 기사를 1968년의 주요사건 목록에만 올리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스크바는 자국의 관여 없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였다. 하노이의 공식신문 난단(NhanDan)지는 이 협상에 대해 “미국의 수치스런 패배이며, 미 제국주의의 완고하고도 믿을 수 없는 특질을 보여주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sup>70</sup>



- ①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
- ② 트럭에 두웨인 호지스의 시신을 옮기고 있는 북한군들
- ③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에서 서명하고 있는 우드워드 장군
- ④ 송환된 82명의 푸에블로호 승무원들(발보아 미 해군병원, 1969년 1월)
- ⑤ 푸에블로호 함장 로이드 부처 해군 중령

## 제5절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의도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의도에 대해 대략적인 추정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김일성이 푸에블로호를 피랍한 핵심적인 동기는 ‘주체사상 강화’를 통한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의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유일지배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이 봉착한 난관, 푸에블로호 납치 이후 북한의 반응과 조치, 승무원들에 대한 자백강요와 선전활동, 미국과 협상과정에서의 북한의 태도와 요구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봄으로써 위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제2장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 형성과정과 1960년대 중반, 북한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지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음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김일성이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국방에서의 자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본 후, 푸에블로호 납치 후의 북한의 반응과 조치, 승무원들에 대한 자백강요와 이를 이용한 선전활동,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와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김일성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1. 흔들리는 ‘주체사상’과 ‘국방에서의 자위’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68년 초 당시 김일성 주체사상의 사상·정치·경제·국방의 4대 영역 가운데 달성된 것은 오직 ‘사상에서의 주체’만 달성되었다. 나머지 3대 영역 중 정치·경제 영역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그 와중에 김일성이 추구한 주체는 위협을 받을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감히 밖으로 불평을 드러낼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했다고 하지만, 노동당 내에서도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만만찮을 정도였다. 결국 1967년 5월 군사력 증강보다는 경제발전 우선 노선을 지지하는 박금철, 이효순 등 당료파를 숙청하면서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이후 1969년 말 군부 강경파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참모장 최광,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화 등을 숙청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김일성은 당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신을 진정한 수령(首領)으로 받들어 모시도록 할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경제에서의 주체는 1차 실패를 했고 당장 다시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이제 김일성은 당장 추구할 수 있고 달성 가능한 위치에 있는 ‘국방에서의 자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자위’는 필요 시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거나 관심을 밖으로 돌리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었고 또한 주체사상 구현의 핵심이었다.

주체사상에서 북한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에서의 자위’ 개념을 보면, 여기에 ‘주체’

라는 개념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은 한 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방위능력은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자주국방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자주권을 행사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이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군사적 담보로써 어떠한 외래 침략자들의 침공에도 대처하여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건설하는 원칙이다.<sup>71</sup>

김일성은 주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정치 : 자주, 경제 : 자립)이 없어지자, 유일하게 추진 가능한 '자위'에 더욱 공격적으로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먼저 한국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일성은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남도발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1967년에 이르자 그 강도와 횡수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2, 3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966년부터 제3세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북한은, 그해 북베트남에 약 50명의 조종사와 약 30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물자지원을 늘려가는 등 제3세계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김일성은 군소(群小) 공산국가들로 하여금 북베트남을 지원하도록 자주 호소하고, 국제문제에 있어서 보다 독립성을 발휘하도록 부추기면서 제3세계에서 보다 확고한 역할을 찾고자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1950~1964년 15년 동안 불과 12개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1965~1970년 6년 사이 11개국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이 왜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명백하게 보인다. 부연하면, 김일성 자신의 노력으로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본질적인 원칙이 되어왔다. 따라서 김일성은 수령(首領)으로서 주체사상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인민을 사회주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어야 했다. 그런데 수령이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도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 초반과 같이 주체를 향한 세 가지 경로가 모두 열려있을 때는 김일성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 그 수단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뜻하지 않게 두 경로가 모두 막혀 버림으로써 김일성은 남아있는 한 가지 경로에 노력을 배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더욱 호전적인 모습을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3세계와의 외교에 역량을 쏟고 있던 김일성은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신생 제3세계 국가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이들 국가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할 기회를 잡고자 했다.

미첼 러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푸에블로호 납치를 거대 강대국간의 투쟁으로 보는 견지에서 벗어나, 북한 고유의 내부사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봐야하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만이 그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의 위급함이 모스크바, 북경, 워싱턴의 관심을 지배했기에, 실질적으로 북한사회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강령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sup>72</sup>

## 2. 푸에블로호 납치 후 북한의 반응과 조치

1월 22일, 북한은 1·21사태를 “남한 내의 혁명그룹에 의한 암살계획”이라고 공포했다. 1월 23일, 북한 민족보위상 김창봉은 원산에서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해군 장병들을 접견하고 이들을 격려하면서 특히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는 “새로운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엄중한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1월 25일, 김창봉은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현 비상사태하에서 적의 여하한 도발음모도 단호히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고, 27일, 북한은 완전한 입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언했다.<sup>73</sup>

김일성은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들을 억류해 놓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보복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은 단합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심지어 그는 허구(虛構)로 미국의 공격을 만들어 내고 용맹스런 인민들의 저항으로 격퇴되었다고 꾸며댔다. 김일성은 2월에는 서부 비무장지대의 초소에 대한 미군의 공격을 격퇴했고, 3월에는 오성산 부근과 소안리 서쪽에서 미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간첩선들이 북한에 침투했는데, 이들 중 하나는 2월 16일 수리도를 공격하려다가 격퇴되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가끔 이런 주장을 하는 선전공작을 했지만, 푸에블로호 납치 이후 이런 유의 발표를 자주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일성은 인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힘을 과시하는 사례로 이용했다.

북한의 선전용 특별 성명에서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강조되었다. 지난 1월 말 이후에는 국제연합이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8일 평양신문은 “국제연합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는 글을 머리기사로 실었다. 이 기사에서 북한은 외부 세력이 북한의 주권에 간섭하려는 것을 김일성이 막았다고 과장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추켜세웠다. 김일성은 부처 함장과 슈마허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음모를 인정했다는 자백서를 공개한 후, 북한군에게 “혁명적 경계, 군사적 기민성, 어떠한 도발적인 책동도 분쇄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 것을 요구하는 두 개의 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며칠 후, 김일성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경제적 내핍(耐乏)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국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위능력을 굳건히 할 때만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힘을 강화할 수 있고, 제국주의 침략을 압도하여 세계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음모에 대항할 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강력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항하는 김일성의 용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북한의 혁명 보전을 위해 국가를 단합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내핍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김일성이 이 사건을 주체사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푸에블로호 납치 후 11개월 동안, 김일성의 선전문들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한은 300단어가 넘는 푸에블로호와 관련된 선전용 글들을 91건이나 언론에 배포했다. 91건 중 냉전이나 국제경쟁을 주요 주제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국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중 52건은 향후 미국의 엽담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발표문은 북한의 ‘정권의 불안감과 고립에 대한 공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스탈린식 정치와 경제시스템 유지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다.<sup>74</sup>

### 3. 승무원들에 대한 북한의 자백 강요와 선전활동

납치 이후 북한의 행동을 살펴보면, 납치가 냉전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북한 국내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푸에블로호에 적재된 1급 비밀인 신호정보 수집장치, 수 천 쪽의 비밀서류, 다수의 정보전문가와 그들의 신상정보 등 푸에블로호의 정보가치는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정보가치는 거의 무시했다. 대신 납치사건을 국내 선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만 찾았다.

북한군은 승무원을 자주 폭행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 어떤 가치 있는 군사나 정보에 관련된 첩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첩행위의 ‘자백’과 반성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후에 머피(Murphy)는 “조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되었으나, 나를 고문한 한 가지 이유는 영해침범과 간첩행위의 시인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슈마허(Schumacher)는 “북한군들은 일부 승무원들이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했고, 우리의 정보수집 작전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우리의 가치는 단지 선전용 인질에 불과했음이 분명했다.”라고 회고했다. 북한군은 푸에블로호를 납치할 때도 승무원이 비밀자료를 소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승무원이 사격에 노출되면서도 서류들을 소각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지만 이들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선전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푸에블로호의 군사 및 정보가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 군사 관련 정보를 묻는 질문도 대개 단순하여 답변 또한 거의 평문에 해당

하는 것이었다. 미국 해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국가방위군은 몇 명인가? 중앙정보국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군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대답을 얻기 위해 승무원들을 구타했다. 북한군은 부장 머피에게도, 신상명세서에 정보수집장치 전문가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슈마허와 통신사들에게도 정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 여자들이 해변에서 어떤 옷을 입는가를 묻기는 했지만, 베트남전에서의 미국의 공격계획이나 남한의 방어능력, 해군의 무기와 기술 또는 기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자료들은 거의 전혀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질문과 답변서는 나는 어떻게 간첩행위를 했고, 나의 자백이 ‘진실’이 아닌 경우 총살되어도 좋다는 내용과, 북한 해군과 북한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말로 채워졌다.

김일성은 납치사건에 대한 국내 선전을 통해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북한 당국은 이 대담한 행위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승무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기록되었고 대중에 전파되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원산항에 예인된 몇 시간 후에 승무원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기차 편으로 평양에 보내 국내언론에 신속히 배포했다. 김일성은 이 사진이 미국에 도착될 것이고, 이것이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불을 붙일 것임을 예견했음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여전히 사진들을 공개해 나갔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후 11개월 동안 승무원들의 사진이 자주 언론에 배포되었다.(통상 ‘잭 워너’(Jack Warner)라는 별명의 평범한 사진작가의 이름으로) 사진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은 극장, 서커스, 연주회, ‘미국만행 박물관(Museum of American Atrocities)’에서 종종 대중들 앞에 섰다. 북한 조사관들이 사진촬영 전에 승무원들의 얼굴에 멍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에서 이 사진들이 선전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자백 시인서와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사본 또한 평양신문에 자주 등장했다. 자백서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미국의 침범을 인정하고 북한의 힘을 칭송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국제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문단의 구조 역시 거의 정형화된 것으로, ‘자백자’는 먼저 개인 신상과 푸에블로호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적고, 다음에는 간첩행위와 영해침범을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었다.

북한과 김일성에 대해 칭송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지만, 소련, 중국,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사실, 대부분의 자백서에는 마치 바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2월에 전 승무원이 서명한 ‘공동사과문’의 35개 구문 어디에도 한반도 외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김일성이 냉전의 영향을 받았다면 적어도 우연이라도 북한 국경 근처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신 초점은 단순히 북한과 수령의 ‘위대함’에 맞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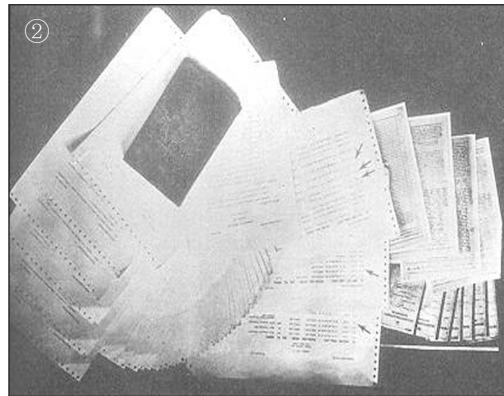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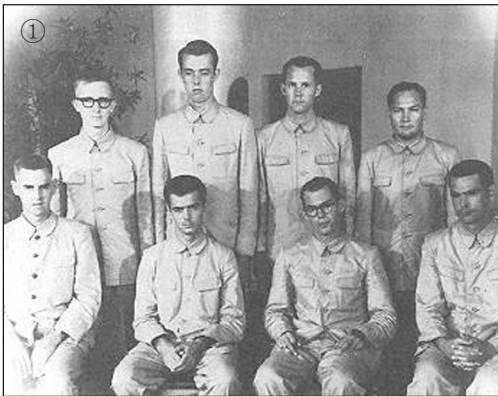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답변으로 종종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 역시 국내 정치선전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기자회견에서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은 국제정세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고, 대신 북한의 힘과 지혜를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2월 13일 가졌던 첫 기자회견에서 부처 함장은 그의 푸에블로호 납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회상했다. “우리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여 간첩행위를 수행해 왔다. 우리는 북한군의 방어능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영해에 접근할 때 아주 불안했고 망설여졌다. 북한 영해에서 작전을 할 때도 승무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우리는 북한의 공정한 대우에 대해 칭송한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2월 15일 평양방송을 통해 보도되었고, 그 다음 주 평양신문은 “미 제국주의 무장간첩선 장교들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인 침략행위를 재확인하다.”라는 제목하에 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9월 12일, 북한 정권수립 제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다수의 외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5시간짜리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소련 또는 베트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부처 함장은 북한 해군의 능력을, 위생병 허만 발드리지(Herman Baldrige) 하사는 북한의 의료시설을,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은 북한의 지혜와 관용에 대하여 칭송했다. 냉전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sup>75</sup>



북한이 선전용으로 촬영한 사진  
 ① 납치 직후의 승무원들  
 ② 푸에블로호의 항해도와 항해일지  
 ③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승무원  
 (일어서 있는 사람이 부처 함장)

#### 4. 미·북 협상과정에서의 북한의 태도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건 초기 김일성은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와도, 자신들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협상하지 않겠다며 미국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모두 거부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유엔의 중재도 거부했고, 심지어 소련의 권유마저도 무시하면서 오직 판문점에서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서의 협상만을 받아들였다. 협상과정에서도 오로지 ‘인정·사과·보장’ 만 되풀이하여 주장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합의에서 문서로는 ‘인정·사과·보장’을 약속하면서 구두로는 이를 부정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리스크조차 북한의 마지막 제안 수락에 대해 “북한 사람들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북한을 얼마나 고집스럽고 영퐁한 집단으로 보았는지 이해가 갈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진짜 목적이 ‘주체사상 강화’를 통한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있었다는 사실과, 자국 내의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조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모든 행위들이 이해되고 또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승무원들이 석방된 후 어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카첸박 법무장관에게 이 제안이 이전에도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이전에는 다른 방안들만 추진했다. 솔직히 이 방안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좀 더 일찍 그러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김일성은 그런 제안을 거부했을 것이다. 김일성이 자신의 주체사상 선전에 인질들을 이용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머피는 “정치공세가 끝난 거였죠, 우리들의 이용가치가 끝남에 따라 이제 우리들이 짐이 되기 시작한 거였죠”라고 회고했다.

북한은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정치공세에 이용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사과문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평양 방송은 “미국이 엄중한 사과를 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이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도적 같은 범죄와 그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의 증거로써,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써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서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굴욕적인 패배이며, 미 제국주의가 막강하다는 통념을 깨버린 조선인민의 위대한 또 하나의 승리”라고 결론지었다. 노동신문은 1969년 1월 8일 첫 면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하면서 “평화는 구걸해서는 안 되며, 인민대중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미 제국주의자 무장간첩선인 푸에블로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들은 우리 국가의 영예와 존엄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이익도 지킬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미국대표 우드워드 장군의 성명발표는 당연히 없었던 것과 같이 처리되었다.<sup>76</sup>

이제 독자들은 김일성이 푸에블로호 피랍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미국 관리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건이 정말 베트남전과는 무관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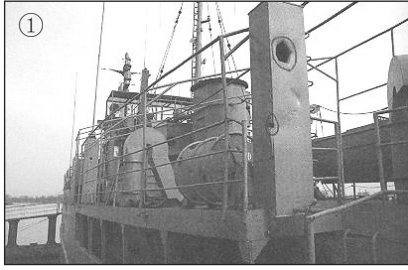
것인가?”하는 의문에 대해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는 한 문장을 추가하고자 한다. 초기 대응방법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허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 부통령은 베트남전 협상에 푸에블로호 사건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푸에블로호 사건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석방은 전체 협상과정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북베트남 대변인은 그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면서 “푸에블로호 피랍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sup>77</sup>

김일성에게 푸에블로호 납치에서 오는 이득은 막대했다. 그것은 김일성이 다른 방법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웠을 시기에 주체사상의 융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전 KGB 국장 올레그 카루긴(Olehg Kalugin)은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 김일성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수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끌어 올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미국에 도전했고, 미국인을 감옥에 억류했으며, 푸에블로호를 북한 인민들의 손에 쥐어주고 결코 놓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78</sup>

미국의 군사 및 정보 관련자들은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들의 거대 공모에 종속된 작은 동반자이기보다는 국내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관계로, 최악의 시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선박을, 위험을 무릅쓴 임무를 위험한 적 가까이에서 수행하도록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82명의 미국 승무원들을 북한 교도소에 억류되게 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위신 손상과 동맹국 한국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반면에 전쟁의 위험을 무릅쓴 김일성의 모험은 성공했다. 김일성은 흔들리던 자신이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 굳어져 가게 되었다.

푸에블로호의 선체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 오늘날까지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로 1999년부터 푸에블로호를 소위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1866년 미국의 제너럴셔먼호(USS General Sherman)를 격퇴했다는 대동강의 한 장소에 전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 배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배의 식당에서 납치로부터 석방에 이르는 주요 장면들을 담은 2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80회 생일 때 당시의 승무원들을 손님으로 초청했고, 마지막까지도 “그 때의 간첩들이 후회하면서 과거의 적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국제 언론에 보도했다.<sup>79</sup>



- ① 북한군 공격으로 처참해진 푸에블로호의 모습
- ②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는 푸에블로호의 모습
- ③④ 안내원들이 관광객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 이 사진자료는 김동욱이 번역한 『푸에블로호 사건 :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에 수록된 사진(부경대학교 최종화 교수 제공) 자료를 스캔한 것임.

## 주(註)

- 1 국가안보국은 미국의 신호정보체계 전반을 지휘하는 단일기구로 1952년에 창설되었다. 이 기관의 책임자는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 필요시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Robert E. Newton,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Washington D.C. : National Security Agency, 1992), p.13. 이 특별보고서는 1992년 작성 당시에는 외국군에게는 공개가 불가능한 TOP SECRET UMBRA(1급 비밀)로 작성되었으나, 2006년 NSA에 의해 평문으로 재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8군 역사자료실에서 획득했다.
- 3 연세대학교 양승함, 박명림, 윤민재 교수가 사료해제를 했고, 2010년 동화인쇄공사에서 인쇄 발간했다.
- 4 러너는 호하이주 주립대학 역사학 교수이며, 버지니아대학 밀러연구소의 회원이다.
- 5 캔사스 대학 출판사(University Press of Kansas)에서 2002년 발간했다.
- 6 모블레이 미 해군중령은 미국 국방대학원(National War College)을 졸업하고 조지타운대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본 카미세야 기지의 전 해양정보감시소 조사국 선임장교, 주한미군 징후경보과장(1996~1998년), 미 국방정보국 영국 연락장교로 근무했으며, 항모 엔터프라이즈호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 7 이 글은 미 해군대학 발간지(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01, vol.7, No.2)에 실렸으며, 이 자료는 미 제8군 역사실에서 획득했다.
- 8 AGER : Auxiliary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 Vessels(보조일반환경조사선)
- 9 Robert E. Newton,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 13.
- 10 Trevor Armbrister, *A Matter of Accountability*(New York : Coward-McCann, 1970), pp.82~85 ; Carl F. Schumacher with George Wilson, *Bridge of No Return*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60(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Lawrence, Kansas 66049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pp.10~11에서 재인용)
- 11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p.86~87 ; House Pueblo Report, pp.1647~1648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3~15에서 재인용)
- 12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13
- 13 심지어 개조작업의 총 책임자였던 정비창장인 플로이드 슐츠(Floyd Schultz) 해군소장과 행정통제권을 가진 태평양기지사령부 제3지원단장 노벨 워드(Norvell Ward) 해군소장도 푸에블로호의 임무를 정확히 몰랐다 한다.
- 14 Lloyd Pete Bucher with Mark Rascovich, *Bucher*(Garden City : Double-day, 1970), pp.19~20 ; Edward Murphy with Gentry, *Second in Command*(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p. 46 ;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p.114~116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27~30에서 재인용)

- 15 요코스카에서 29마일 떨어져 있는 주일 미 해군사령부의 통신소
- 16 Statement by Admiral Frank Johnson, *Hearings before the Special Subcommittee on the USS Pueblo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Bucher, *Bucher*, p.129, pp.132~133 ; *The Report of the Special Subcommittee on the USS Pueblo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Ninety-first Congress, First Session, July 28, 1969(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1648(*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30~35에서 재인용)
- 17 TRAPAC Report from Bucher, *Bucher*, p.107 ; propulsion problem in Newsweek, February 5, 1968 ; interview with Lieutenant Jack Alderson, June 21, 1999(*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38~40에서 재인용)
- 18 House *Pueblo Report*, p. 1646 ;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14~15(*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41~43에서 재인용)
- 19 Letter to Lerner from Stu Russel & Ralf McCintock, 1999 ;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21, pp.115~116 ; “Finding of Facts” pp.28~32 ; Bucher, pp.81~82(*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44~48에서 재인용)
- 20 태평양기지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지원사령부이다.
- 21 한미연합사,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해』, 2008, 187쪽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 ‘주일 미군 현황’ 자료
- 22 Statement of Rear Admiral Frank Johnson, NHC, Operation archives branch, command file, post 1 Jan. 46, individual ships, USS Pueblo, “statement by Various Officers” ; Daniel Gallery, *The Pueblo Incident*(Garden City, N.Y. : Doubleday, 1970), pp.16~1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48에서 재인용)
- 23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73
- 24 이 위원회는 국가의 고위험 비밀작전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간 협의위원회로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AS), 국방정보국(DIA)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위협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명칭은 위원들의 회합장소였던 구 집행사무소 건물 303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 25 House Pueblo hearings, pp.771~772 ; “The Operational Assessment of Risk : A Case of the Pueblo”(Santa Monica, Calif. : RAND Corporation, 1971), NHC, Operational Archives branch, pp.10~12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51~52에서 재인용)

- 26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4
- 27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27 ; *New Times*, January 27, 1968, p.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61~62에서 재인용)
- 28 Oral history of Vice Admiral U.S. Grant Sharp, NHC, Operational Archives branch, vol. 2, pp.568~569 Lerner's interview with Donald Showers, July 20, 1999(*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53에서 재인용)
- 29 House Pueblo Report, p. 1654 ; Gene Sheck quoted in James Bamford, *Puzzle Palace* (New York : Penguin Books, 1983), p.250(*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 58에서 재인용)
- 30 Murphy, *Second in Command*, p.109(*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68에서 재인용)
- 31 원산항에는 북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다. 제1함대사령부는 4개의 전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총 6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6)
- 32 *Bucher*, p.165~168 ; *Schmacher, Bridger of No Return*, p.71 ; *Matter of Accountability* p.36 ; SITREP-1, PINNACLR-1, Reprinted in House Pueblo hearings, pp.841~842(*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73~76에서 재인용)
- 33 동해안 지역에는 북한공군의 제2비행사단이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선덕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단예하의 제26, 27, 28비행연대에 111대의 MIG 15 · 17 전투기가 편성되어 있었다.(*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6)
- 34 Brant, *Last Voyage of the Pueblo*, p.40 ; Analysis of Communication/Command/Control Functions involved in USS PUEBLO Capture, NA2, po 133-6, Korea N-US, 1/1/68 file ; Harris in CIB #47-69 ; CIA, Intelligence Information Cable, "Implications of Reported Relocations of USS Pueblo", 12 February 1968, document #0651, file 56, DDRS, 1999(*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76~82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63
- 35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74~76
- 36 Statement by Admiral Frank Johnson to House of Representatives, March 14, 1969, NHC, Operational Archives Branch, command File, post 1 Jan 1946 ; Testimony of General Earle Wheeler, House Pueblo hearings, p.900(*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93~95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75~79, p.83
- 37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77~78 ; Richard Mobley, "PUEBLO", in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01, vol.7, pp.104~106
- 38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74~84
- 39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CINCUNC) Message date-time group

231607Z Jan. 68, General Wheeler Records(이 전문에, 본스틸 장군이 한국의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의 긴급한 공격징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는 데프콘 3단계 격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자, 김 장관은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PUEBLO”, in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01*, vol.7, No.2, p.104, 106에서 재인용) ; CINCUNC Message date-time group 070820Z Feb. 68, Korea-Pueblo Incident-Military Cables, vol 2, 2/68-3/68, boxes 263~264, Korea Country File, NSF, LBJ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83 ;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 동화인쇄공사, 2010, 16쪽

- 40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79~85
- 41 Lyndon Johnson, *The Vantage Point*(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pp.532~534 ; Lerner’s interview with Walt Rostow, January 19, 1998 ; Armbrister, *Matter of Accountability*, p.23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25~126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94~95
- 42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25
- 43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 Reply refer to : 1-1593/ 68”, 1968. 2. 28, p.1~2,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 p.195의 영문원본 복사본을 번역하여 재인용)
- 44 이 글 이후의 날짜는 모두 미국 워싱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45 김일성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동기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46 Clifford, *Counsel to the President*, p.466 ; Notes from meeting of the Pueblo Group, 1/24/68, 10:30 A.M., JL, Tom Johnson’s notes of meetings, box 2, set. 2 ; January 24, 1968, memo from Huges to Rusk, “Soviet Police towards North Korea and Pueblo Incident”, JL, NSF, country file, Asia and the Pacific, box 257, Korea-Pueblo Incident, pt B, vol. 1(through January)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37~138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95
- 47 Report on meeting of the advisory group, January 29, 1968, JL, NSF, Files of Walt Rostow, box 10, the president’s file for Korean and Vietnam ; CINPACFLT in oral history of Admiral U.S. Grant Sharp, NHC, vol.2, pp.582~585 ; Watson in Congressional Record, February 1, 1968, vol. 14, pt. 2, p.1901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26~127에서 재인용)
- 48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부록 참조
- 49 Dean Rusk with Richard Rusk, *As I Saw It*(New York : W. W. Norton, 1991), p.392 ; CIA Intelligence memorandum. “Disposition of North Korean Merchant and Fishing Ships”, January 26, 1968, JL, NSF, country file : Asia and the Pacific, Korea, box 259, Korea-Pueblo Incident ; Telegram #68838 from CSAF to SAC, January 30, 1968, JL, NSF, country file : Asia and the Pacific, Korea, box 263, Korea-Pueblo Incident, Military cables, vol. 1, 1/60 folder ; Notes of president’s January 25, 1968 luncheon meeting, JL, Tom Johnson’s notes of meetings, box 2 ; Johnson, *Vantage Point*, p.536(*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28~129에서 재인용)

- 50 1·21사태 시 장지량 공군총장이 김신조가 진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124군부대의 시설들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요청했는데, 미 제5공군사령관은 이 때 찍은 항공사진 결과를 분석하여 장 총장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신조는 그의 자서전에서 미군은 초기에는 김신조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미군도 이 항공사진 촬영 결과를 보고는 김신조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51 인간정보에 의하면, 푸에블로호는 2월 12일 원산항 문평리의 북한군 해군시설 인근으로 옮겼고, 4월 29일 나진항으로 옮겼다.(소련 국경에 가까운 나진항으로 옮긴 것은 소련이 푸에블로호에 탑재된 정보장비들을 보다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 52 CINCPAC command history, 1968, NHC, vol. 4, pp.246~250 ; Historical Reports Relating to Diplomacy during the Lyndon Johnson administration, NA2, p. 67 ; Report on Meeting of Advisory Group, January 29, 1968, JL, NSF, country file : Asia and the Pacific, Korea-Pueblo Incident, vol. 1, pt. B, box 25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29~130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102
- 53 CINCPAC telegram # 240008Z, JL, country file : Korea-Pueblo Incident, military cables vol. 1, boxes 263~264 ; Telegram to Wheeler from Sharp, January 31, 1968, NA2, RG 218, Records of JCS, records of Chairman (Gen.) Earle Wheeler, 1964~1970, 091 Korea, box 29, Chairman Wheeler's file(*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30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100~101
- 54 Defense Department news release # 68-73, JL, NSF, NSC History, Pueblo Crisis, 1968, boxes 27, 28, "Pueblo Crisis, 1968", vol.3, day by day documents, pt. 1 ; "Chronology of Diplomatic Activity in Pueblo Crisis", NA2, p.10 ; Johnson, Vantage Point, p.180, 535 ; Porter in telegram #8517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tate Department January 24, 1968, JL, NSF, country file Asia and the Pacific, box 257, Korea-Pueblo Incident, vol.1, pt. A, box 257 ; Summary meeting notes, January 24, 1968, 10:30 A.M. Meeting, JL, NSF, files of Bromley Smith, meeting of Pueblo Group(*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38~142에서 재인용)
- 55 Transcript of minutes of Security Council meeting, January 26, 1968, JL, NSF, NSC Histories, Pueblo crisis, 1968, boxes 31~33, vol.13, public statements folder ; State department telegram # 1862 to U.S. Mission UN, January 25, 1968, JL, NSF, country file Asia and the Pacific, box 257, Korea-Pueblo Incident, vol. 1, pt. A(*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42에서 재인용)
- 56 후에 부처 함장이 귀환한 후 정부 관리들은 부처 함장 부인의 말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처 함장은 이 방송이 나간 1월 24일까지는 자백녹음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36시간 동안 북한군에 걸어차여서 의식을 잃고 쓰아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까지 견뎌냈으나, 자백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승무원들을 한 명씩 쓰아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 결국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던 것이다. 부처 함장이 최초로 자백서에 서명한 날자는 1월 25일이었다.

- 57 Statement of Lloyd Bucher, JL, Clifford Papers, box 17, North Korea-Pueblo Incident : *Bucher*, pp.244~245 ; Analysis of Pueblo Navigational Photographs (c), JL, Paper of Clark Clifford, boxes 23~24, “Pueblo-March 1, 1968~Jan. 20 1969” folder ; “Navy Analysis of Pueblo Documents”, telegram #120759 from State Department to Seoul embassy, February 26, 1968, NA2,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54, 2/25/68 folder(*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87~91에서 재인용) ;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pp.71, 96~99
- 58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805쪽
- 59 성명서 원본(일부 내용)은 부록 참조
- 60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 “외무부장관 성명서”(87쪽), “주유엔 대사에게 보내는 외무부 각서”(107쪽) ; “존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108쪽) ;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 대한 한국이 입장”(164쪽) (이 문서들의 사본은 부록 참고) ; 국회 사무처, “제63회 국회회의록 1~6호, 1968. 2. 1~2, 6~7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전우신문, 1968. 1. 25~2. 9 ; Telegram # 8515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tatement Department, January 24, 1968, JL, NSF,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58, 1/1/68 file ; New York Times, January 27, 1968 ; “Chronology of Diplomatic Activity in the Pueblo Crisis”, NA2, p. 204 ; ROK JCS request in Air Forces Chief of staff memo to subordinate commands, Jan. 29, 1968, JL, NSF, country file, Korea-Pueblo Incident, boxes 263~264, military cables vol.1(*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31~134에서 재인용)
- 61 동아일보 · 중앙일보 · 전우신문, 1968. 1. 25~2. 9 ; 미 제8군사령부 역사실, “미 제8군 연대기 (1968. 1. 1~6. 30)”, ; Telegram # 4015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tatement Department, Feb. 6, 1968 ; New York Times, Jan. 27, Feb. 1, 7, 8, 1968(*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31에서 재인용)
- 62 Notes of meeting of senior foreign policy advisers, February 12, 1968, 1:45 P.M., JL, Tom Johnson’s notes of meetings, box 2, set 2 ; Letter from Rusk to LBJ, “Themes for the Mission of Cyrus Vance”, NA2,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55, 2-8-68 folder ; Chronology of Diplomatic Activity in the Pueblo Crisis, NA2, pp.338~341 ; CINCPAC Command History, 1968, NHC, vol.2, pp.192~19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33~136에서 재인용)
- 63 북한의 장성급 계급은 소장-중장-상장-대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중장은 우리의 소장(Two Star)과 같은 계급이다.
- 64 Chronology of Diplomatic Activity in the Pueblo Case, NA2, p. 170 ; Information memorandum to Rostow from LBJ 27, 1968 ; Telegram # 106096 from State Department to American Embassy Seoul, January 29, 1968 ; Verbatim text of February 26 & March 4, 1968, Panmunjom meeting, NA2,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54, 2/25/68 & 3/1/68 folder(*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43~146에서 재인용)
- 65 Telegram # 160103 from State Department to American Embassy Moscow, May 8, 1968 ;

Notes of president's meeting, Mat 21, 1968, 1:15 P.M., JL, Tom Johnson's notes of meetings, box 3, set 3(*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203에서 재인용)

- 66 '겹쳐쓰기'란 북한이 '타이프'로 미리 작성해 온 상기 문서 위에 대각선으로 겹쳐서 쓰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하단에 우드워드가 '자필'로 한 문장을 추가로 쓴 후 서명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은 오직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서만 서명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위신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승무원들을 송환시키려는 고육지책이었다.
- 67 당시 북한은 원양어선이 없어 연안어업 밖에 못하는 상황이었고, 1968년도 어획량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이 원양어선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이를 압력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 68 Notes from president's meeting, September 9, 1968, JL, Tom Johnson's notes of meetings, box 4, set 2, September 17, 1968 folder ; Memo to LBJ from Katzenbach, "Pueblo Action Memorandum", October 1968, JL, NSF, country file, Asia and Pacific, box 256, Korea, filed by the LBJ Library folder ; Telegram # 247443 to American Embassy Seoul from State Department, September 30, 1968, NA2,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59 ; New York Times, November 25, 1968 ; Clifford, Counsel to the President, pp.466~46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205~213에서 재인용)
- 69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처 함장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자마자 모진 고문과 구타,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 북한군은 부처 함장을 비롯한 장교들을 먼저 고문하여 북한 영해 침범과 간첩행위를 했다는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이어서 사병들로부터도 자백서를 받았다. 부처 함장은 모진 구타와 고문을 참아냈으나,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부하들을 하나씩 총살시키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결국 허위 자백서를 쓰고, 연출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한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제8장에 기록되어 있다.
- 70 Telegram # 291107 to American Embassies London, Moscow, Paris, Saigon and Tokyo from State Department, NA2, 1967~69 central files, pol 33-36, box 2260 ; CINCPAC Command History, 1968, NHC, vol.4, p.231 ; Bucher, Bucher, p.364 ; *USS Pueblo Hearings before the Investigations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1989(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ew Times, December 23, 1968, p.3, 37(*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219~222에서 재인용) ; 동아·조선일보, 1968. 12. 22, 23
- 71 『김일성 주체사상, 그 올바른 이해』, 208쪽
- 72 고병철,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80 ; Kiyosaki,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p.34(*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16~118에서 재인용)
- 73 《노동신문》, 1968. 1. 22, 25, 27
- 74 Pyongyang Times in Bucher, Bucher, p.239 ; Korean Task Force Situation Report,

February 4, 16, March 6, 1968 ; “The Pueblo Incident and South Korean Revolution”, Asian Forum 2, No. 3(1970), pp.201~212(*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19~121에서 재인용)

- 75 Murohy, *Second in Commander*, p.175, 215, 248 ; Schumacher, *Bridge of No Return*, p.123 ; Bucher, *Bucher*, p.324, 333 ; *Time*, January 3, 1969 ; “Alleged ‘Joint Letter of Apology’ by Crew of USS Pueblo to North Korean Government”, JL, NSF, NSC Histories, Pueblo Crisis, 1968, vol. 13, public statements, tab G-1 ; “First Confession of Commander Lloyd M. Bucher”, JL, NSF, NSC Histories, Pueblo Crisis, vol. 13, public statements, tabs G-1(*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p.118~120에서 재인용)
- 76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10, 1969, p.1 ; “Worldwide treatment of Current Issues”, December 23, 1968, report, JL, White House Aides Files, Fred Panzer, box 224 ; Washington Star, December 23, 1968, p.3 ; New York Times, December 23, 1968, p.1 ; Simon, “The Pueblo Incident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p.206(*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213, 222에서 재인용)
- 77 Humphrey in New York times, May 19, 1968, p.45 ; Nguyen Van Sao in New times, May 20, 1968, p.16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95에서 재인용)
- 78 CBS News interview with Oleg Kalugin, 1995, tape # 3, 4(*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122에서 재인용)
- 79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p.228

## 제 7 장

# 교훈과 사후조치

제1절 교 훈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제3절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전력증강



제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1971. 8, 서울)  
정래혁 국방부장관(좌)과 레어드 미 국방장관(우)

## 제 7 장

### 교훈과 사후조치

지금까지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으며,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태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 방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 즉, 적 침투의 저지와 후방 지역 경계 및 방위 능력 문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서 초래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전력의 문제 등이 그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6일 주한 미 대사 및 유엔군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협상을 계속 한다면 한국 단독으로라도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언질을 주는 등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의 국방은 거의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수준이었으므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문제는 실로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보장을 위한 외교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총력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1968년 2월 20일 ‘향토방위예비군’ 조직에 착수했다.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하반기에는 ‘방위산업정비 3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군원(軍援) 확보와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 장에서는 두 사건이 주는 교훈과, 이를 토대로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전력증강, 그리고 향토방위예비군 창설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기술했다.

## 제1절 교 혼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건은 오늘날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도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들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변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시의 교혼을 재음미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1·21 사태’에 대한 기존의 기록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도출된 교혼만 기록하고 있으나, 본 사건사에서는 보다 차원 높은 대비를 위해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등 군사 외적인 측면의 교혼도 도출했다.

이 절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교혼을 정치·외교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정치·외교적 측면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건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크게 네 가지의 교혼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김일성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발도 자행할 수 있으며, 군인들의 생명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남·대미 도발을 그들의 독재자에 대한 충성과 경제적 내핍 감수 및 단결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은 경제침체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가고 군내에서마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자신의 권력과 ‘주체사상’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도발을 자행했다. 즉,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고,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던 것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1·21 사태’를 ‘남한의 불순 청년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우기면서 사살된 공비들의 시체마저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비인륜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일성 집단에게 공비들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요 자국의 국민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다.<sup>1</sup>

북한은 푸에블로호 납치라는 우연히 얻은 기회를 김일성 우상화에 철저히 이용했다. 납치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강요된 자백내용을 선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인정·사과·보장’을 끈질기게 관철해 냄으로써, 김일성은 미국도 굴복시키는 위대한 수령임을 북한 주민에게 과시했다. 이로써 흔들리고 있던 ‘주체사상’은 북한을 지배하는 변함없는 근본 원리로 자리매김했고, 이를 통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는 확고해지게 되었다.

둘째,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여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67년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967년 12월 15일 ‘대통령 훈령 제18호’를

제정 공포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했었다. 그러나 민·관·군이 통합된 대비태세를 갖추는데는 부족함이 많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경계·보안 강화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작전간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대국민 홍보와 언론 협조 조치도 미흡했다. 정부는 1월 19일 우씨 형제들의 신고 이후, 무장공비들이 침투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제하여 이를 국민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 또한 1월 21일 밤 총성이 난 이후 다음날 07:00까지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전초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작전기간 중 작전 관련 일관된 보도자료 제공 및 협조 미비로 각 언론기관의 경쟁적인 과장 보도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혼란과 필요 이상의 불안을 초래하게 하기도 했고, 아군 작전행동에 대한 보안유지가 되지 않고 언론에 노출되어 북한이 이를 역이용<sup>2</sup>하여 공비들의 복상을 지도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월 22일 공보부장관이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이튿날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합동으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푸에블로호 피랍과 북한의 전군 전투태세령 하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대간첩작전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1·21사태’는 높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확인하고, 총력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 신고한 우씨 형제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비들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림 없이 곧장 신고를 했다. 주민 신고는 공비 발견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당시 제6군단장이었던 이세호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농가에 숨어든 무장간첩에게 밥을 해 먹이면서 안심하게 한 후 신고를 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한 노인도 있었고, 작전하는 아군 병력에게 팔죽이나 고구마 등 야식을 가져오는 시골 아낙네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sup>3</sup>

당시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본부장)이었던 심홍선 육군 중장은 “1·21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일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을 태평안일의 꿈에서 깨우쳐 주고 반공 재무장을 국민의 마음 스스로부터 그리고 강력하게 불러 일으켜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흥계가 무엇이며, 또 그들의 수단방법이 어떠한지를 인식한 이상 온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으로 이들 북한의 침략 야욕을 저지 분쇄하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4</sup>

셋째, 한국과 미국의 ‘정보실패’<sup>5</sup> 문제이다. 먼저 ‘1·21사태’에 대해 살펴보면, 무장공비의 침투 시기, 목표, 방법 등에 대한 정보실패로 기습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군은 무장



공비의 침투나 도발 시기를 당시 군사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흑한기인 1월에는 공비의 침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군사적 측면 못지않게 북한의 정세나 권력 변동이 침투 및 도발 시기 판단에 중요한 영향요소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당시 북한이 침투시기를 1월이라는 흑한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기습을 노린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더 큰 배경은 정치적인 것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제5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7년 5월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사업총국장 이효순이 숙청되었다. 이효순의 뒤를 이어 대남사업총국장에 임명된 허봉학 대장은 그 자신이 강경파였을 뿐만 아니라, 이효순이 '대남공작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숙청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남공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취임 직후인 1967년 5월 하순경부터 124군부대를 창설하고 7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민족보위성 산하의 제283군부대를 비롯한 각 부대에서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여 가히 살인적인 훈련을 시켜 이들을 살인병기로 만들면서, 청와대 등의 기습을 계획하고 총조장 김종용으로 하여금 사전 정찰을 하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김일성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허봉학은 침투 준비와 침투요원들의 훈련이 완성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를 실행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허봉학 으로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침투에 적절한 녹음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며, 계절적인 불리함을 무릅쓰고라도 조기에 침투를 감행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6</sup>실제 당시 방첩부대장 윤필용 소장은 1967년 10월 초 북한군 정세와 더불어 124군부대 창설 정보를 김성은 국방부장관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었고,<sup>7</sup> 중앙정보부 강인덕 분석과장은 1968년 1~2월이 취약시기라고 보고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비들과 청운동에서 최초로 교전이 이루어지고 김신조가 생포되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북한의 목표가 청와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sup>8</sup>는 것은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작전 시 무장공비들의 행군 능력을 알지 못하여 이들이 이미 통과한 지역에 차단선을 형성함으로써 조기에 공비들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청와대 직전까지 침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정보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냉전주의적 사고에 젖어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 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는데, 이것 역시 정보실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초기 푸에블로호 피랍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공산주의 음모로 판단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협상과정에서도 북한의 납치 동기와 교활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국의 민주주의적 사고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순진한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계속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 및 동북아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은 그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21사태’가 한국의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발생하자 미 군부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군사조치를 취했고, 스틸웰 유엔군사령관도 데프콘-3 격상조치 절차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양 사건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83명의 자국 국민의 희생과 제2의 6·25전쟁 발발 위험은 감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강경대응 요구는 무시되었고, 북한 압박수단으로 취한 군사적 대응도 북한이 강력한 저항의지를 보이고 소련의 군사적 움직임이 뒤따르자 결정적 순간에 멈추고 말았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강력한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북한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빌미 제공과 함께 북한이 계속 유사한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국과 위기관리를 위한 적절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가 납치되는 시점에서 미 제5공군 예하부대 중에서는 즉각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투기가 없었으나, 한국 전투기들은 즉각 투입이 가능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 전투기의 투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하게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의논조차도 하지 않고 실행가능한 방책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북한과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미국의 조치에 불만이 고조된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철수와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독 무력보복 의지까지 보였다.<sup>9</sup> 그 결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4D 팬텀 전투기 1개 대대(18대)를 포함한 1억 달러의 추가 군사지원을 얻었고,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 개최와 ‘한·미 연합기획참모단’ 창설 등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 2. 군사적 측면

### 가.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은 북한이 그동안 시도했던 침투사건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었고, 우리의 허를 찌르는 기습이었다. 침투시기면에서 일반적으로 침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겨울을 선택했고, 그 목표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청와대를 선택했으며, 그 규모도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31명이라는 대규모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다.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야간행군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초기 차단작전에 차질을 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은 시기, 목표, 방법 등에서 기존의 행태와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한 우리의 작전에도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본 북한 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투시기면에서 우리 군이 침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혹한기인 1월을 선택했으며, 청와대 공격시기도 취약한 일요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동계에는 아군의 경계가 소홀하다는 점과 임진강이 결빙되어 도강이 자유롭다는 점 등 우리의 취약점을 역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타격목표 선정 측면에서 북한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한민국 대통령 살해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1970년도를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1965년 이후 대남전략을 위장 '평화통일 전략'에서 '폭력혁명 전략'으로 전환한 후 대남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특히 1967년을 대한민국에서 지하당 조직과 유격활동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고 기반을 닦는 해로 삼고 대남도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도발은 주로 비무장지대와 철책선 일대에서의 GP(Guard Post : 경계진지) 습격 및 경계병 암살, 철로 폭파, 군사시설 습격 또는 촬영, 근거지 구축 등이 주를 이루었다.<sup>10</sup>

셋째, 편성 및 훈련면에서 공비들은 과거 소수 인원 분산 침투에서 탈피하여 31명으로 집단 편성되었고, 전원 고도로 훈련되고 투철하게 정신무장한 장교로 편성된 특수요원이었다. 이들은 중무장(개인당 기관단총과 권총 각 1정, 대전차수류탄 2발, 대인수류탄 8발, 단도 1개 등)을 하고도 야간에 시간당 10~12km의 초인적인 평균속도로 강행군을 하였으므로 아군의 작전판단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넷째, 침투 및 복귀로 선정면에서 침투로는 목표까지의 단거리를 선택하고 경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군 제25사단과 전투지경선상에 있는 미 제2사단 지역의 철책선을 돌파했으며, 이후 평균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간계곡과 평지를 이용했다. 그리고 작전 성공 후 복귀는 청와대 차량을 탈취하여 경광등을 켜고(청와대 주요 인사의 이동인 것처럼 가장) 1번 도로를 이용하여 전속력으로 도주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을 한 것이었다.

다섯째, 침투방법면에서 공비들은 복장을 군복과 사복을 혼합 착용하여 지형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은신이나 기만이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우리 기관원이나 아군 훈련부대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 군경의 검문검색 시 대담하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아군을 기만했다.

본 대간첩작전에서 나타난 군사적 측면에서의 도출된 문제점과 교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첫째, 정보(첩보)분석, 상황 전파 및 보고면에서,

① 공비들의 동계 대규모 침투는 곤란할 것으로 오판하여, 최초 법원리에서 우씨 형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각 정보 및 작전기관은 이들의 진술을 반신반의하면서 최초 첩보를 중요시

하지 않고 안이하게 판단함으로써 공비 일당이 서울로 침투할 것이라는 여러 징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② 정보요원들의 능력 미흡으로 현장 검증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첩보에 대한 평가·해석에 오관이 많았으며, 각 정보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판단으로 정보가 불일치하여 혼선을 초래한 경우와 상호협조가 되지 않아 정보보고와 전파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③ 작전간 종합 분석되지 못한 단편적인 속보 및 오보 등에 대한 재확인이나 정정보고, 각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전화 문의 등이 과다했고, 연락관을 파견하여 각 기관별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상황담당관들의 상황 처리를 지연시키고 필요 이상의 혼잡을 초래했다.

④ 관련 기관 및 군부대의 측방 첩보전달 지연과 지휘계통을 통한 신속 정확한 보고의 지연으로 적시적인 봉쇄 및 수색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특히, 최초 전 현지서에서 공비 30여 명이 출현했다는 신고를 한 시간은 1월 19일 21:00경이었으나, 이 내용이 최초로 우리 군 부대(제25사단)에 통보된 시간은 신고 후 2시간 45분이 경과한 23:45경이었으며, 육군본부에 보고된 시간은 최초 경찰에 신고된 시간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1월 20일 02:00경이었다.<sup>12</sup>

둘째, 지휘통제면에서,

① 유사시 미 제1군단 후방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간첩작전이 곤란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대간첩작전은 1967년 12월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18호에 따라 경기도 경찰국장이 미 제1군단장과 협조하여 수행하도록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경찰의 병력과 장비 열세로 대규모 침투공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작전이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작전초기 제6군단장의 결단으로 미 제1군단장과의 협조하에 제6군단이 투입되면서 경기도 경찰국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지휘권이 제6군단장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되어 지휘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제6군단과 제26사단은 이 지역이 평시 자신들의 작전책임지역이 아니었던 관계로 지형의 미 숙지, 사전계획 미 수립, 경기도 경찰국과의 사전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작전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경기도 및 수도 서울에 대한 군경의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작전초기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경기도 지역의 대간첩작전은 갑종사태 시 경기도 경찰국장 책임하에 수행하나, 을종사태 시에는 제6관구사령관이 군 전방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과 한강 이북을 제외한 서울시에 대한 작전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강 이북의 서울시에 대한 작전은 수경사령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 작전간 경기도 지역은 초기에는 경찰이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다 제6군단이 투입되면서 군 위주로 작전을 수행했고, 수도 서울의 경우 제6관구사가 투입되면서 수경사는 청와대 주변의 제한된 지역을 담당하고, 여타 지역은 제6관구사가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기록과 증언 제한<sup>13</sup>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③ 군 작전책임지역은 전투지경선을 기준으로 하고 경찰의 관할지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상호 불일치로 지휘 및 상호협조에 제한을 주었다.

④ 무전기 제한 등으로 인한 합동 통신체계 미 구축, 경찰의 군 음어 미 보유 및 사용요령 미 숙, 작전부대의 통신보안규칙 미 준수 등 작전보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셋째, 작전 계획과 실시면에서,

① 동절기 적의 예상침투로, 숙영지, 은거지역에 대한 사전 거부대책 미비 등으로 공비들이 휴전선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아 군경에 의하여 발견됨이 없이 침투할 수 있었다.

② 군경 검문소 근무자의 안이한 근무자세로 인해 공비들이 침투하는 동안 근무자가 없는 일부 검문소가 있었는가 하면, 세검정에서 기관원의 훈련 후 귀대를 가장한 신원불명의 집단을 발견하였으나 검문자의 주의력 부족으로 조기에 식별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일반 국민은 물론 군경도 평소 기관원에 대해서는 위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비들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담하게 대로를 이용해서 침투를 기도했던 것이었다.

③ 공비들의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과소 평가했다는 점이다. 적의 행군 능력을 과소 평가하여 초기 제6군단이 봉쇄선을 의정부와 송추를 연한 선으로 선정했으나, 공비들은 이미 이 지역을 벗어난 후였다. 또한 공비들은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고, 투철한 정신 무장을 한 특수부대원이었는데도 작전 중 안이하게 접근하거나 무리하게 생포하려다 아군의 희생을 낸 경우도 있었다.(생포 간 또는 생포직전 상당수의 무장공비가 자폭)

④ 야간 작전군기가 문란하고 철저한 수색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야간작전 시 은밀성 결여로 매복위치를 노출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고, 작전에 투입되었던 병력이 야간에 모닥불을 피워 아군의 위치를 노출케 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수색작전 시 수색이 곤란한 암석지대나 낭떠러지 등은 우회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건발생 당일 주간에 우리 군이 비봉 일대를 수색했으나, 비봉 정상 근처의 바위 아래 은신한 공비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⑤ 무모함과 공명심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청운동에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단독으로 31명의 무장공비들을 막아선 것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당시 이미 31명의 무장공비를 대상으로 대침투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최 서장의 행동은 무모한 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고고산에서 교통호에 은신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투입된 제1사단 제15연대장은 무모하게 작전을 서두르다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장교가 전사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보았던 것이다.

⑥ 그러나 적과 최초 교전이 벌어지자 박격포와 항공 조명으로 작전지역을 대낮같이 밝게 하여 공비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작전지역의 조기 확산을 방지하고, 경기도 현리에 있던 제1사단까지 투입하여 조기에 3중 봉쇄망을 형성함으로써 공비들이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이들을 모두 소탕한 것은 국방부·합참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작전에 뛰어 든 제6군단장의 독단조치는 그의 충정과 애국심의 발로에 의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넷째, 경찰의 병력과 장비가 너무 열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비들은 기관단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찰은 고작 카빈 소총에 실탄도 몇 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각현 서대문 경찰서장이 세검정에서 공비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세검정 파출소에 전투준비를 시켰는데, ‘정복 경찰관 다섯 명에 무기는 카빈 소총뿐이며 실탄은 네 발씩밖에 없다.’는 파출소장의 설명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적고 있다.

#### 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푸에블로호 투입준비 과정에서의 부실한 준비와 위협 평가를 들 수 있다.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푸에블로호는 허점투성이의 정보수집보조함으로 개조되었으나, 미국 해군은 이를 완전히 시정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지역에 투입하면서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통역요원을 탑승시켰는데, 이는 푸에블로호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푸에블로호가 최초로 북한 군함과 조우했을 때 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다라면 납치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임무지역의 위협판단에서도 미국의 정보·작전 관련자들은 이미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배너호가 여러 가지 위협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공해상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라는 타성에 젖은 안이한 사고로 푸에블로호에 대한 위협을 ‘최소한’으로 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푸에블로호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 대기전력이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안이한 사고와 무관심으로 다수의 불필요한 비밀문서가 푸에블로호에 탑재되게 되었고, 비밀 문서·장비들을 파기할 도구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임무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탑재된 비밀문서, 푸에블로호가 수집한 신호정보 자료, 암호장비 등이 파괴되지 않은 채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미국의 비밀정보 관리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미국은 1·21사태에 이어 푸에블로호가 피랍되자, 동해상에 항공모함 선단을 파견하고 수많은 전투기를 본토로부터 한국으로 전개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했으나, 결국 강력한 대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과 판문점에서 비밀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했다.

이러한 미국의 처사에 실망한 한국은 작전통제권의 일부 환수를 요구하고,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에 미국은 밴스를 특사로 파견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특별 군원 제공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으로 한국을 달래고자 했다. 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강화되었다.

### 1.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법적근거는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54년 11월 7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두고 있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 안보협의회의)이 개최된 배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가. ‘박-밴스’ 회담(1968. 2. 12, 2. 15)

사이러스 밴스는 존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1968년 2월 11일 방한하여 박 대통령과 2월 12일과 15일 2차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밴스 특사의 방한은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1월 23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에 의한 일련의 도발 행위로 인해 초래된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하 외무부장관, 김성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동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포터 주한 미대사,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이 동

석했다. 이후 밴스 특사는 국무총리 및 외무장관과도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끈질기게 박 대통령을 설득하여 마침내 서명을 받아냈다.

이 때 주요 합의사항은, 첫째,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만행이 계속될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여,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라도 즉각 협의를 개시할 것을 재확인했다.

둘째, 양국은 안보 및 방위 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매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셋째, 양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군원을 제공하고, 향후 노력을 계속 할 것과 예비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 한국군에 소화기(M-16 소총)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양측의 군사전문가 회담을 즉시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 나. ‘박-존슨’ 호놀룰루 정상회담(1968. 4. 17)

1968년 4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호놀룰루에서 존슨 대통령과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북한의 무력도발의 격화, 특히 1968년 1월 21일의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동년 1월 23일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사태에 대한 양국간의 대처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호놀룰루에서 만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

이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위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정신에 의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결정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對韓) 추가 군원의 계속 공여,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무장, 대간 첩작전용 장비 도입, 자주국방을 위한 군수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확인했다. 양국의 합의내용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sup>15</sup>

#### 다.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박-밴스 회담’ 결과와 ‘박-존슨 호놀룰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군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이 1968년 5월 27~28일 워싱턴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방위시설 개선, 한국군 현대화 문제, 한·미 연합기획참모단 설치, 북한의 간첩(공비) 활동 및 침투에 대한 대비책 등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1억 달러의 특별 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제1차 회담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었으며, 4차 회담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1차 대표단은 도표 <7-1>과 같다.<sup>16</sup>

도표 <7-1>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 양국 대표단

구분	직책	계급	성명
한국 측	국방부장관(수석대표)		최영희
	합동참모회의 의장	육군대장	임충식
	합참 작전기획국장	육군소장	류병현
	국방부 기획국장	해병소장	김용국
	국방부 군수국장	육군소장	신원식
	주미 국방무관	육군소장	김필상
	장관 국외담당관	육군중령	한문식
미국 측	국방부차관(수석대표)		폴 니츠(Paul Nitz)
	합동참모회의 의장	육군대장	얼 지 휠러(Earle G. Wheeler)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폴 씨 완케(Paul C. Warnke)
	주한 미 대사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
	미 제8군사령관	육군대장	찰스 에이치 본스틸 (Charles. H. Bonesteel)

## 2. ‘한·미연합기획참모단’ 설치

‘한국방위계획’은 1950년 7월 17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래 계속 유엔군사령부에서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휴전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방위계획’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회수하거나, 유엔군사령부의 계획 입안 시 한국군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의 기획업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뜻을 미국 측에 제의했다. 이러한 한국 측 제의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는 1966년 1월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별개 참모부로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설치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방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의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 간에 수도권 방위전략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한국의 방위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미국의 첫 공식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 6월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신설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1968년 10월 15일부로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설치하고 단장은 미군 측에서, 부단장과 행정장교는 한국군 측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초대 단장으로 캠프(Kemp) 미 공군준장이 임명되었고, 부단장에는 윤흥정(尹興禎) 육군준장이 임명되었다.

이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은 한국군 합참의장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미 합동방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방위계획’ 참모연구 및 참모보고를 준비하고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했다.<sup>17</sup>

### 제3절 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전력증강

군은 대침투작전기간 중인 1968년 1월 30일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 2’ 를, 작전 종료 후인 2월 26일 추가 ‘3’ 을 각각 하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대간첩작전간 도출된 교훈을 토대로 종합 대비지침을 마련하여 ‘대통령훈령 제19호(무장공비 봉쇄 보강지침)’으로 하달했다.

또한 1968년 2월 20일 ‘향토예비군’ 조직에 착수했다. 그리고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 을 수립했으며, 하반기에는 ‘방위산업정비 3개년계획’ 을 수립했다.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 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속전속결전략에 대비하여 작전시설을 보강하고, 무장공비에 의한 파괴행위를 적극 봉쇄하며, 후방지역에서의 대유격전능력 향상을 위해 작전시설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① 3개 예비사단의 전투준비사단화 및 대소 군수지원부대의 창설 ② 팬텀기 등 최신예기 도입에 따른 조종사 특수훈련 실시 ③ 대간첩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부대의 증설과 투입병력의 증원 ④ 주요 작전시설의 지하 요새화 ⑤ 수도방위를 위한 김포반도를 포함한 수도방위 진지의 구축 등을 추진했다.<sup>18</sup>

#### 1. ‘대간첩대책본부’ 창설

대간첩대책본부는 1967년 12월 5일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18호’ 와 ‘원주 치안회의’ 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특별지시에 따라 분산된 대간첩작전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 2월 1일 부로 발족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19일 국무총리 주재하의 국무회의에서 중앙대간첩협의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21사태가 발생하자 1월 22일 대간첩대책본부를 우선 발족시켜 임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1월 30일 대간첩대책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로 하달했다. 이 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간첩작전을 총지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중앙대간첩협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기구로 합동참모본부에 대간첩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2월 1일 부로 합참본부에 대간첩대책본부가 정식 창설<sup>19</sup>되었으며 이의 구성은 합참본부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대간첩작전기획국과 대간첩통신전자국을 조직했다. 그리고 국방부의 기획국장을 비롯하여 합참본부의 전략정보국장과 작전기획국장, 각 군(해병대 포함)의 정보 및 작전의 참모부장과 내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관계기관 대표자가 실무관이 되어 이 기구의 업무를 심의 및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sup>20</sup> 중앙대간첩협의회와 대간첩대책본부의 지휘 및 협조체계와 기구편성, 임무는 도표 <7-2~4>와 같다.

도표 <7-2> 중앙대간첩협의회회의 지휘 및 협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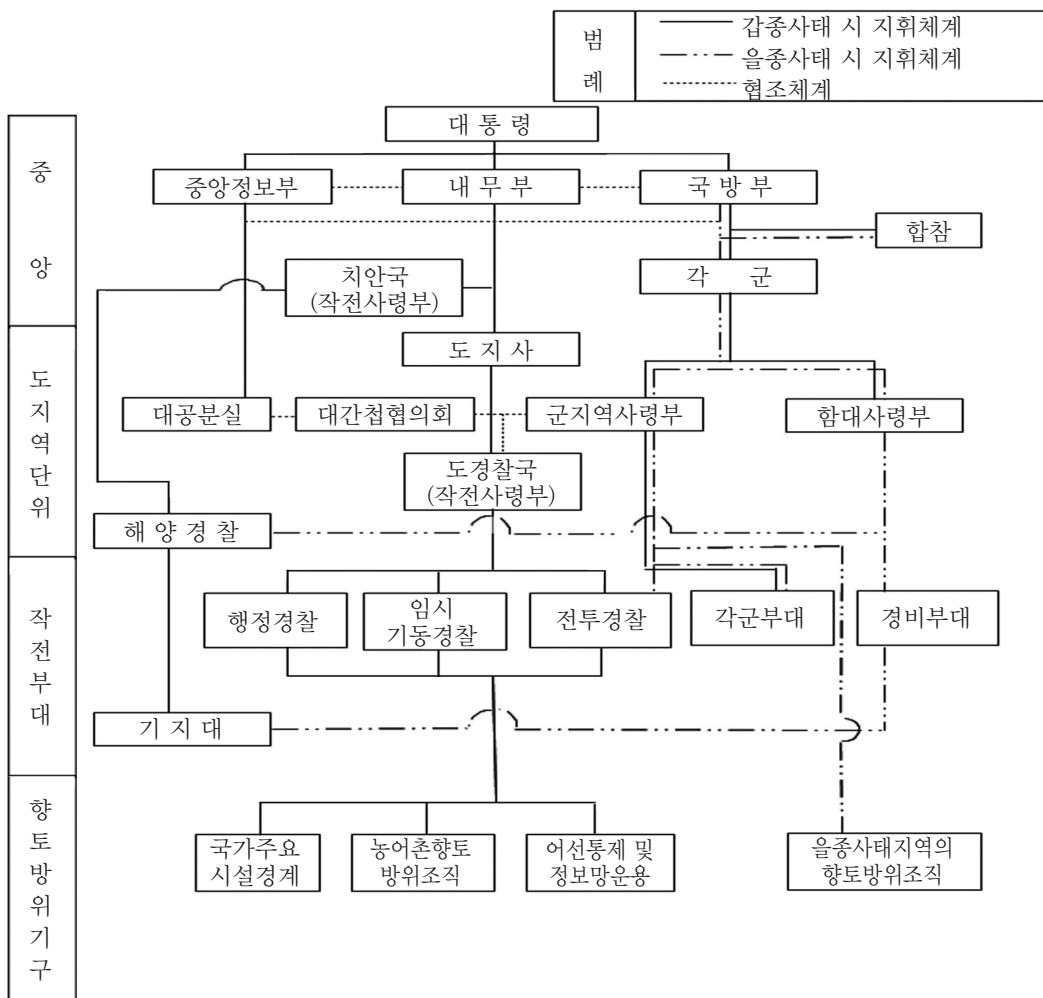


도표 <7-3> 대간첩대책본부의 기구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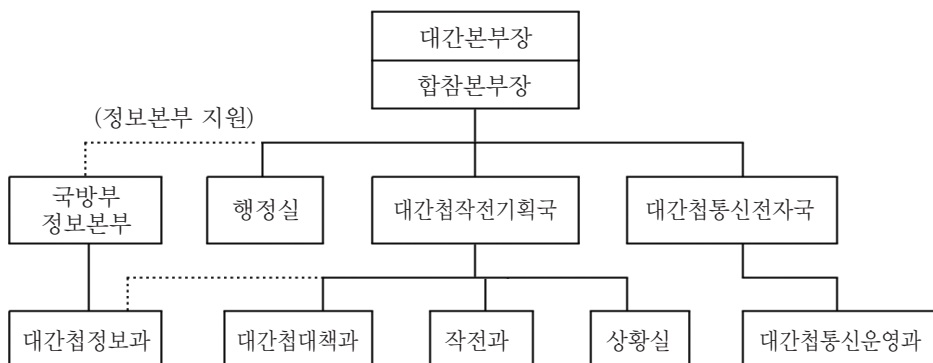


도표 <7-4> 대간첩대책본부의 임무

1.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 각 부처의 대비정규전에 관한 업무 및 사업 진행사항을 조정 통제
2. 대통령훈령 제18호의 시행상태를 확인하여 대통령과 중앙협의회에 보고
3. 대비정규전 작전상황을 종합분석 및 판단하여 대비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4. 필요시 중앙협의회 기능을 대행
5. 대비정규전 및 대비태세 공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6. 기타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

2. 대간첩작전체제 정비 및 부대 증·창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은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2,3’ 과 대통령훈령 제19호(무장 공비 봉쇄 보강지침)을 하달하여 대간첩작전 체제를 정비하고, 부대를 증·창설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은 1항에서 밝힌 바와 같고, ‘추가 2’는 내무부 임무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종 전	변 경
갑종사태에서 을종사태로의 전환을 당해 도지사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력 출동을 요청하며 국방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과 협조하여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하달	갑종사태로부터 을종사태로의 변환 건의를 당해 도지사로부터 받으면 중앙대간첩대책협의회에 상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관계부처 합장 및 당해 도지사에게 하달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3’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이었다.

① 대간첩작전지역 구분 중 후방지역 일부 변경

종 전	변 경
후방지역 : 각 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포항·진해지역으로 구분	후방지역 : 각 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포항·진해 특정경비지역으로 구분

② 갑종사태 시 미 제1군단 후방지역 지휘 및 협조체제 수정

종 전	변 경
미 제1군단 후방지역 : 경기도 경찰국장이 미 제1군단장과 협조하여 지역 내의 대간첩작전 수행	미 제1군단 후방지역(미 제2사단지역 제외) : 제6군단장이 미 제1군단장 및 수도경비사령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협조하여 사태 구분 없이 지역 내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며,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 미 제1군단 후방지역에 대한 대간첩작전 책임은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3’ 이 하달되기 이전에 이미 ‘미 제8군 훈령 2-1’ (1968. 2. 1)에 의거 육군이 인수, 이를 제6군단에 경계 책임을 부여하고 이 지역 경계를 위해 1개 전투단을 1968년 2월 4일 배치했다.<sup>22</sup>

③ 갑종사태 시 다음사항 추가 삽입

추 가 내 용
<p>1. 특정경비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경호실장 : 청와대 내곽경비 책임</li> <li>• 수도경비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내곽을 제외한 외곽경비에 대하여 책임</li> <li>- 제6군단장과 긴밀히 협조</li> </ul> </li> </ul> <p>2.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 해 지역 경비에 있어서 수도경비사령관과 협조하며 지시를 받는다.</p> <p>3. 서울특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경비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태 구분 없이 한강수역 북단 이북지역에 대하여 책임</li> <li>- 제6군단장, 제6관구사령관 및 시 경찰국장과 긴밀히 협조</li> </ul> </li> <li>• 시 경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군단장 책임지역 및 한강수역 이북을 제외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책임</li> </ul> </li> </ul>

대통령훈령 제19호(무장공비 봉쇄 보강지침)는 1·21사태의 교훈을 기초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도발 형태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조)

군은 1968년 3월 10일 부로 10개 예비사단 중 제30·31·33·37·38·39·50사단 등 7개 사단을 경비사단으로, 제35·36·51사단을 전투준비사단으로 명칭을 부여했다.

그리고 위의 대통령훈령 제19호에 따라 제2군 지역에는 해안 및 내륙 취약지역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대대를 창설했다. 1968. 1. 20, 증편된 10개 전투대대와 소집된 예비병으로 해안 경계임무를 수행해온 제2군은 국일명 제12호(1968. 3. 10)에 의거 제1차로 10개 예비사단에 1개 전투대대씩 10개 전투대대를 창설하여 서해 및 동해안 지역 경비에 임했으며, 제2차

로 국일명 제20호(1968. 5. 23)에 의거 10개 예비사단에 10개 전투대대를 추가 창설하여 도합 20개 전투대대로 서해 및 동해안 지역과 내륙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유격근거지로 예상되는 지역 및 취약지역이 많은 제36사단, 제38사단, 제50사단에는 육본 작전지시 제897호에 의거 제3차로 3개 사단에 각 2개 전투대대씩 총 6개 전투대대를 추가 창설했다. 이렇게 하여 제2군 지역에는 총 26개 전투대대가 창설되었으며, 이중 13개 전투대대는 서해 및 동해안 지역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13개 전투대대는 내륙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경계 및 대간첩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5’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북단 도경계선 이남으로부터 경남 울산 특정경비지역 이남의 해안경계 책임이 1968. 5. 30부로 경찰에 이양되었다.<sup>23</sup>

### 3. 장비 및 시설 보강

군은 대간첩작전체제 정비 및 부대 증편뿐만 아니라 대간첩작전 장비와 시설도 크게 보강했다. 특히 미국의 특별 군원으로 지원된 1억 달러를 이용하여 F-4D 팬텀 전투기 1개 대대(18대)와 대간첩작전 장비를 도입했다. 도입된 장비 현황은 도표 <7-5>와 같다.<sup>24</sup>

도표 <7-5> 미국의 특별 군원으로 도입된 장비 현황

군별	장비명	수량	군별	장비명	수량
육군	소 계	4,350	해병대	소 계	4,988
	장갑차(M-113)(대)	95		스타라이트 스코프(대)	36
	스타라이트 스코프(대)	1,210		제논 탐조등(대)	9
	탐지장비(대)	83		야간 시각장비(대)	14
	제논 탐조등(대)	107		M-1900A 레이더(대)	6
	야간 시각장비(대)	117		기 타(점)	4,923
	쇠고리 철조망(km)	34	소 계	8,642	
	AN/GRC-106(대)	35	F-4D 팬텀기(대)	18	
	기 타	2,669	HF-103 RA(대)	5	
해군	소 계	4,613	AN/PRC-41(대)	16	
	81mm 박격포(문)	30	AN/PRC-47(대)	8	
	AN/SRC-21(대)	5	기 타(점)	8,595	
	AN/VRC-58(대)	5	총 계 : 22,593		
	AN/WRT-2(대)	5			
	기 타(점)	4,568			

군은 시설보강에도 박차를 가했다. 1967년 9월에 시작한 휴전선의 목책을 쇠고리 철책선으로 바꾸는 공사를 서둘러 1968년 6월에 완성했고, 영구축성 진지 구축공사도 강력히 추진하여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전방지역은 FEBA<sup>25</sup> “A”로부터 FEBA “C” 선까지의 진지를 구축 완료했다.

#### 4. 향토방위예비군 창설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더불어 향토예비군 창설은 한국방위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7일 하동의 경전선 철도 개통식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종래의 미군 중심의 의존적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향토예비군 창설 및 무장화와 자체무기 생산공장의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동년 2월 2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제정되고, 3월 7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동년 3월 15일부터 전국 191개 시·군·구에 현역 대대장이 파견되어 향토예비군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동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박정희 대통령 주관하에 거행됨으로써 향토방위 전력이 조직화되었다.<sup>26</sup>



전방사단의 요새화된 GP  
우측 위쪽은 구형 유자형 철조망 목책이고, 아래쪽은 신형 쇠고리 철조망 철책이다.



향토예비군 창설식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 무기(우측 위쪽)와 예비군기(우측 아래쪽)를 수여하고 있다.



1968. 4. 1,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로 육군본부 병비국을 예비군부로 개칭하여 일반참모부로 기능을 수행했고, 10개 예비사단에 예비군 단(團)을 창설하는 등 각급 부대에도 향토예비군과 과거의 병비국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기구가 창설 또는 증편되었다.<sup>27</sup>

예비군의 조직·편성은 거주지 단위인 지역예비군과 직장단위인 직장예비군으로 구분했고, 편성 대상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하사관, 제1예비역의 병(兵), 그리고 필요 시 제2예비역의 병(兵)과 지원자로 했다. 지역예비군은 시·군·구 단위에 대대규모까지 편성하여 파견된 현역 대대장이 지휘토록 했고, 읍·면·동(도시) 단위에는 중대규모, 리·부락(농어촌) 단위에는 소대 또는 분대규모로 편성했으며, 직장예비군은 소대급 이하로 편성했다.

향토예비군 부대의 지휘관리는 1968년 3월에 파견된 현역 대대장들에 의해 조직 편성되고 군의 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은 경찰이 담당했다. 그러나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관련 군과 경찰간 협조가 어렵고, 이원적인 업무체제로 복잡성이 야기되어 창설 2개월 후인 5월 25일 각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지휘관리권을 이양하고 군 지역사령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sup>28</sup> 이에 따라 예비군의 편성도 변경되었는데, 지역예비군부대는 중대 단위 이하로 조정되었고, 직장예비군은 직장규모의 확장과 직장 수의 증가에 따라 대대단위까지 편성규모가 확대되었다.

1968년 편성 당시의 예비군 규모는 2,716개 지역예비군 중대와 527개 직장예비군 중대에 인원은 1,725,867명이었다.

향토예비군의 무장은 1968년 4월 30일 취약지역 예비군에게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 중 91,210정의 소총을 지급한 것이 그 최초였다. 그 후 연차적으로 군원 도입, 정부 구입, 직장 자체 구입 또는 현역군의 대체 구형장비 활용계획에 따른 구형 무기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군의 무장이 강화되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연도별 무기 보급 현황은 도표 <7-6>과 같다.<sup>29</sup>

도표 <7-6> 연도별 향토예비군 무기 보급 현황

단위 : 정

구 분	계	1968년	1969년	1970년
계	1,445,017	594,336	782,956	67,725
카빈 소총	1,000,018	534,336	397,957	67,725
M1 소총	358,420	60,000	298,420	.
기관단총	86,579	.	86,579	.

## 주(註)

- 1 반면에 미국은 83명의 자국 국민을 송환하기 위해 국가적 위신 손상과 굴욕을 무릅쓰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고, 결국 이들의 송환을 이끌어 냈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 2 예) 공비들의 도주방향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었고, (김신조 체포 후 진술) 우리 군의 차단작전도 여기에 맞추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1월 22일 밤 도주로상의 인접지역인 아츰 28·20사단 전방 GP에서 봉화를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이는 북한이 우리 군의 차단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비들의 복귀를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침투작전사, 전사연구 제6집』, 360쪽)
- 3 『한 길로 섬겼던 내 조국』, 367쪽
- 4 국회사무처, 시론 “북괴 도발행위의 새 양상과 대비책”, 『국회보 제76호』, 1968. 2월, 38쪽
- 5 여기서는 ‘정보실패’를 정보기관의 실책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정보 사용자)의 무시·편견이나 왜곡된 판단에서 오는 정책실패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6, 323쪽)
- 6 이와 관련하여 김신조는 자기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증언했다. 안타깝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허봉학은 1968년 11월 올진 무장공비 침투가 실패로 끝나자, 바로 대남공작 실패 책임으로 숙청당하고 말았다. 이 때 북한은 ‘대남사업총국’을 폐지하고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두고 당시 노동당 문화부장이던 김종린(金仲麟)을 임명하여 대남사업을 김일성이 직접 관장했다.
- 7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71쪽 ; 조갑제, 『박정희, 제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조갑제 닷컴, 2007, 104~105쪽
- 8 당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1월 21일 청와대에서 임충식 합참의장, 김계원 육군 참모총장 등과 함께 대간첩작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시 궁금해 하는 것은 공비들의 침투 목적이었지만 청와대 기습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회고했다.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787쪽) 김성은 장관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 9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군사력만으로도 일단 북한을 때리고 보자.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탄약과 유류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협의까지 했다고 적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803쪽)
- 10 합참 정보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사례집』, 2011, 472~474쪽
- 11 『합참사 1948~1981』, 467~470쪽 ; 『간첩침투사건 편람 II 집(53~68)』, 767~769쪽
- 12 『대공 30년사』, 383쪽
- 13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김성은 국방부장관, 임충식 합참의장, 심홍선 합참본부장, 김재규 제6관구사령관 등은 이미 타계했고, 류병현 합참 작전기획국장, 최우근 수경사령관은 와병 중이라 증언청취가 불가능했다.

- 14 『60년대 한국외교』, 75~76쪽 ; 『합참사 1948-1981』, 232~236쪽
- 15 『60년대 한국외교』, 42~43쪽, 부록 314~318쪽(공동발표문은 부록 참조)
- 16 『국방사 3권(1961. 5~1971. 12)』, 70~71쪽 ; 『60년대 한국외교』, 76~77쪽 ; 『합참사 1948-1981』, 236쪽
- 17 『국방조직변천사』, 68~69쪽 ; 『합참사 1948~1981』, 221~222쪽 ; 『국방사 3권(1961. 5~1971. 12)』, 114~115쪽, 1974년 7월 이후 ‘한·미연합기획참모단’ 단장직은 한국 측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한국 측 초대 단장에 김재명 육군준장이 임명되었다. 이 기획단은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그 명칭이 ‘운영분석단’으로 개칭되어 ‘한·미 연합군사령부’ 예속으로 변경되었다.
- 18 『국방사 제5집(1961. 5~1971. 12)』, 70쪽
- 19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은 부록 참고
- 20 『국방조직변천사』, 68~69쪽 ; 『합참사 1948~1981』, 431~434쪽
- 21 『합참사 1948~1981』, 454~472쪽
- 22 『육군사 제12집(상)(1968년도)』, 8, 189쪽
- 23 『육군사 제12집(하)(1968년도)』, 43, 45, 460쪽
- 24 『국방사 제3권(1961. 5~1971. 12)』, 280~281쪽
- 25 FEBA : Forward Edge of Battle Area(전투지역전단 : 전투지역의 최일선 선단을 말한다.)
- 26 『육군사 제12집(상)(1968년도)』, 19쪽
- 27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상권 7쪽, 하권 44~45쪽
- 28 1968년 5월부터 경찰에 의해서 예비군이 지휘관리되어 왔으나, 방대한 예비군 조직을 지휘관리하기에는 경찰의 능력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군에서 전역한 간부급 예비역과 경찰간에 잦은 마찰 등으로 인해 1971년 7월에 예비군에 대한 지휘관리권은 다시 군으로 환원되었다.
- 29 『국방사 제3권(1961. 5~1971. 12)』, 337~339쪽

## 제 2 편

8 ·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제 1 장

## 개 요



8 · 18 도끼만행사건 현장(1976. 8. 18)

# 제 1 장

## 개 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11:00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 장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군 경비중대장 아더 지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와 경비소대장 마크 티 배렛(Mark T. Barrett) 중위가 피살되고 미군, 카투사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70년대 초 리처드 엠 닉슨(Richard M. Nixon)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으로 1971년 미 제7사단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 정책은 제럴드 포드(Gerald Ford) 행정부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으나, 차기 대통령 민주당 후보인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동 정책 재추진 공약을 내놓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체제 구축 등으로 인해 한국의 인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과 분위기로 인해 한·미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한미동맹’은 어려움에 처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1976년 11월 실시될 미 대통령 선거와 미국 내 반전(反戰)·반한(反韓)무드를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북한은 1976년 8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비동맹국회의’와 9월에 열릴 제31차 유엔총회에 “한국과 미국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 측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다. 북한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도발을 했다.’고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기에 판문점에서 유엔사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려 했으니, 북한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경제난과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북한은 이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권력을 강화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국내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한 대남·대미 군사적 도발이었다.

1976년 8월 18일 유엔사 경비병력 11명(장교 3, 병 8명)과 한국인 노무자 5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작업반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초소 사이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미루나무 가지를 절단하고 있을 때, 2명의 북한 장교와 9명의 경비병이 나타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사 작업반이 작업을 계속하자 30여 명으로 증가된 북한 장병들이 곡괭이 자루, 도끼 등으로 유엔사 장병을 구타하여 2명의 미군장교가 잔인하게 살해되고, 9명의 유엔사 장병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되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참석차 가 있던 캔자스시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은 포드 대통령은 “사악하고 일방적인 살인행위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고 밝히고, 워싱턴 특별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위기조치를 하도록 했다.

유엔군사령관 리처드 지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장은 판문점에서 유엔사의 합법적 권리를 유지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사의 결의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 대통령의 승인 아래 한·미 양군의 방어준비태세를 격상시키고 미 본토의 전투기와 미드웨이 항공모함 기동전단을 한국에 증파하는 등 엄청난 무력시위를 하면서 8월 21일 문제의 ‘그 빌어먹을 나무’<sup>1</sup>를 절단해 버렸다.

이에 북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8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통해 김일성 최고사령관 명의로 ‘유감’ 표명을 했고, 미국이 이를 사과표시로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사 측과 공산 측의 군사정전위원회 합의로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사 지역과 공산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미국은 무력시위 전력을 복귀시킴으로써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사건이 터지자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는말로 확실한 응징을 해서 다시는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건 초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였던 미국이 결국 외교적 해결로 가닥을 잡았고, 북한을 끝까지 굴복시키지 못한 채 사건을 유야무야하며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여망과 의지는 관철되지 못하고 말았다.

어쨌든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협을 감수할 각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유사한 사건을 되풀이해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증대시켜 주었다는 숙제를 남기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는 참으로 지난(至難)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위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본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글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했고, 제2장은 1970년대 국내외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 1970년대 북한의 군사정책·전략과 군사력 및 대남도발 현황을 제시했고, 제4장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체제와 주요 충돌사건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 북한의 도발의도를 포함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한·미 군 및 정부의 조치, 미루나무 절단작전과 이후 공동경비구역의 분할 경비 과정까지를 상술했다. 그리고 마지막 제6장에서 교훈과 사후조치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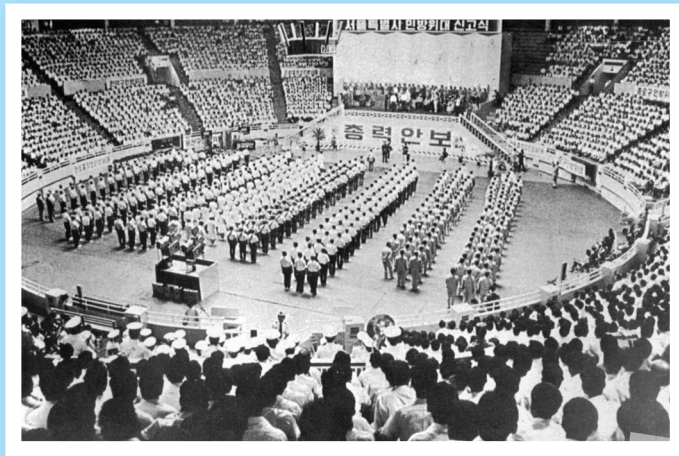
## 주(註)

- 1 스틸웰 장군이 유엔사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 빌어먹을 나무(That damned tree)’를 잘라버리라고 말한데서 연유했다.

## 제 2 장

# 1970년대 안보환경

- 제1절 국제정세
- 제2절 국내정세
- 제3절 북한정세
- 제4절 남북관계



민방위대 창설식(서울운동장, 1975. 9. 22)

## 제 2 장

# 1970년대 안보환경

### 제1절 국제정세

#### 1. 동서화해

1970년대 초반의 국제정세는 중국의 유엔 가입과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 것을 계기로 동서 진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다시 소련 방문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다나카(田中周榮) 일본 수상도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냉전적인 대립상태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1972년 5월 닉슨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은 냉전에 종지부를 찍고 공존관계를 모색하게 하는 전기가 되었다. 양국은 평화공존의 기본원칙하에 핵전쟁의 억제와 국제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sup>1</sup> 미·소의 동서화해 분위기는 1972년 일·소간의 우호조약 체결, 일·중간의 국교수립, 중국·서독간의 국교 수립,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개선, 미·소간의 군비감축 합의 등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개선은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있던 미군의 철수로 연결되었다. 10년 이상이나 끌어 온 베트남전은 마침내 1973년 1월 27일 '파리평화협정'의 조인과 더불어 휴전으로 일단락되었다.<sup>2</sup>

한편, 이러한 동서간이 화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1960년대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중·소 관계는 미·일·중 삼각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1974년 1월 간첩활동을 구실로 한 외교관의 상호 추방사건이 일어났고, 3월에는 소련 국경경비대 헬기의 불시착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간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다.

중·소 양국간의 국경지대에는 소련군 45개 사단 약 50만 명과 중국군 70개 사단 약 150만 명의 대병력이 배치하여 양국간의 분쟁은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 2. '신냉전시대'의 형성

중·소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휴전에 들어갔던 베트남사태가 북베트남의 공세로 재점화되었으며, 1975년 4월 30일 마침내 전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1975년, 중·소분쟁이 고조된 가운데 소련은 앙골라사태에 개입했다.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에 대한 소련의 노골적인 지원과 군사적 개입은 미국의 엄중한 항의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 1976년 2월 서방의 지원을 받은 다른 해방운동단체들을 격퇴하고 앙골라를 적화시킴으로써 미·소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sup>3</sup>

소련은 대미(對美) 화해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군비를 증강시켰다. 그 결과, 소련은 전차나 장갑전투차량, 화포, 잠수함의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었고 심지어 전술항공기와 헬기의 생산에서도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력의 불균형은 결국 '헬싱키협정'을 정점으로 동서의 데탕트가 후퇴하여 새로운 냉전시대로 전환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소련의 군비 증강뿐만 아니라, 미·소 양국간 갈등이 대리 국지전의 양상을 띠게 되자 1976년 미국 내에서는 대소(對蘇) 외교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데탕트(détente)'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애매한 점을 들어 이 용어를 피하겠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전 이래 감축되어 오던 군사비의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 소련과 미국의 군사비 격차는 36%에서 40%로 벌어지게 되었다.<sup>4</sup>

## 제2절 국내정세

### 1. 주한미군 철수와 총력안보체제 구축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후보의 승리로 미국 외교안보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닉슨은 그의 안보담당보좌관(후에 국무장관)인 헨리 에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와 함께 1970년대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노선을 수립했고, 이러한 닉슨의 구상은 7월 25일 꺾에서 발표한 소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sup>5</sup>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알려졌다.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맡는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닉슨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 문제의 한국화(Koreanization)’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주한 미 제7사단을 포함하여 약 2만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인가병력도 63,000명(실제 주둔 병력은 58,000명)에서 43,000명으로 감소되었다.

주한미군의 철수에서 오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우선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남북대화는 1971년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에서부터 진전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72년 7월 4일 남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몇 차례 개최되던 남북대화는 북한의 정략적 이용 태도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sup>6</sup>

닉슨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sup>7</sup>으로 사임함에 따라 1974년 8월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포드 대통령은 제한된 병력으로 선형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진진전략’<sup>8</sup>을 토대로 대한(對韓) 군사정책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sup>9</sup>는 중지되고 주둔 상한선인 43,000명 선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74년 8·15경축 기념식장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門世光)이 박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생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재개와 베트남 공산화로 안보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총력안보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1975년 6월 7일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공포하여 대학생과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7월 11일에는 일반 대학생의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7월 16일 ‘방위세법’을 신설하고, 7월 25일에는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해 10월까지 350만 명에 달하는 민방위대를 조직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했는데, 새마을운동은 그 기본정신<sup>10</sup>과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됨으로써 국민을 결집시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11</sup>

## 2. 자주국방의 기반 조성

북한은 1960년대 들어와서 군사력 증강을 서둘러 매년 GNP의 11~18%가 넘는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한 결과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도 약 2개월간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북한은 소총과 화포는 물론 전차, 군함, 잠수함까지 자체 생산가능한 단계에 이른데 반해, 한국은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남북한간에 전력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은 자주국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방위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1970년대에 울산조선소와 자동차공장, 포항제철, 창원기계공단, 구미공단 등이 건설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방위산업 육성은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총포, 탄약, 통신기기, 차량 등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6~1980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등 정밀무기까지 국산화 능력을 보유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M-16소총 생산공장을 71년 4월 착공하여 72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기관총, 박격포 등의 종합 시험사격을 1972년 4월에 실시했다. 이어서 정부는 ‘제1차 울곡(栗谷)계획’<sup>12</sup>(1974~1980년)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군의 전력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증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증강속도를 따라 잡지는 못하여 1980년 초경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54.2% 수준밖에 이르지 못했다.<sup>13</sup>

## 제3절 북한정세

### 1.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와 세습체제 기반 구축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공산권 내에 다원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김일성은 공산권의 환경변화 속에서 북한 역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소의 영향을 점차 배제하고 사상에서 ‘주체’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sup>14</sup> 김일성은 1960년대를 정치이념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주체사상 구축기’로 정하고 그 기반을 다졌으며, 1970년대를 ‘주체사상 확립기’로 설정하고 ‘온 사회주의의 주체사상화’를 강행해 나갔다.<sup>15</sup>

한편,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점진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위치를 굳혀 나갔으며, 마침내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서 모습을 대내외에 드러내게 되는데, 그가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후계체제 기반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김정일 후계체제 기반구축 과정

1964년 김정일은 당중앙위 호위과 지도원에, 그 이후 1년간은 내각 제1부수상(김 일) 참사실에 지도원으로 배치되었다. 66년 초에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당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67년부터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 직책을 맡았으며, 69년 초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는 노동당의 결정이 한 번에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후계자 결정에 따른 안팎의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 후계자 문제는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김 일, 최용건, 최 현 등 빨치산 원로들의 제의를 시작으로 1971년 4월 당중앙위 제5기 2차 전원회의, 그해 11월의 3차 전원회의, 72년 7월의 4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꾸준히 논의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김일성은 북한 내 정치권력체제를 자신의 일인 지배체제에서 김정일 세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sup>16</sup>

그 첫 번째 시도는 법제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1972년의 헌법개정이 그것이었다. 1972년 12월 27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sup>17</sup>을 채택했다. 북한은 신헌법에서 김일성을 명실상부한 최고 일인 절대권력자로 확정<sup>18</sup>하고, 김일성 교시를 헌법화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을 국가주석인 김일성이 겸무하게 함으로써 김일성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군통수권까지 행사하게끔 만들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권력의 집중을 헌법화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일에게도 자연스레 집중된 권력이

이양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김정일 직접 관장하에 ‘당원증 재교부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10만여 명이 당원자격을 상실한 대신 50여만 명이 새로운 당원이 되어 당내의 세대교체를 본격화시켰는데, 이것은 노동당 내부를 극도로 긴장시켜 반목상쟁(反目相爭)을 야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소위 ‘3대혁명소조’<sup>19</sup>를 결성하여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두시켰다. 이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 기관과 학교 등에 파견되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하고 혁명신화를 창출하여 김일성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구호 아래 김정일 세습체제를 선전선동했다.

네 번째로, ‘반관료주의 투쟁’이었는데, 이는 김정일 세습에 부정적인 고참당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소위 ‘반당관료주의자’ 또는 ‘범무생활 위반자’라는 죄목으로 수 십만 명을 출당, 철직시켰다.

김정일은 1973년 9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사상비서로 발탁되면서 당의 조직지도부장과 선전선동부장을 겸하게 되었다.<sup>20</sup> 그리고 74년 2월 당중앙위 8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당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정치위원이 된 김정일은 2월 19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했고, 이의 관철 수단으로 ’74년 4월 14일 소위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 10대 원칙 마지막 항에서 “김일성 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가야 한다.”로 명시하여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 했다.

1975년 2월, 당 중앙위 제5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식 확정되었고, 76년 중반부터는 김정일이 모든 통치체제에 손을 뻗게 되었으며, 김일성의 군림 아래 김정일이 실제 통치권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이 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김 일-이종옥-오진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주석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10월 14일에 김정일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서열 4위(김일성-김 일-오진우-김정일)였으며,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의의 모든 지위에 동시에 임명된 유일한 케이스였다.<sup>21</sup>

#### 나.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반발과 숙청

김정일 후계체제가 순탄하게 구축된 것만은 아니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당의 사상담당비서직에 올라 3대혁명소조를 지휘하여 자기의 세력기반 조성에 혈안이 되자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이에 김정일 지지세력은 자신들의 후계체제 구축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1960년대 말까지의 숙청이 김일성의 일인 지배체제 구축과 이상화를 위해 정적 또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1970년대의



그것은 김정일 후계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숙청이었다.

김정일 지지세력에 의해서 30만 명이 당에서 축출된 반면 60만 명의 젊은 신입당원들이 보충되었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에 반발한 인물은 김일성 후처 김성애와 부주석 김동규(金東奎)를 비롯한 남 일(南日, 부총리), 유장식(柳章植, 당 중앙위 사회안전담당 비서, 남북조절위원회 북한 대표), 이용무(李勇武, 상장, 인민군 총정치국장), 지병학(池炳學, 상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지경수(池京洙, 중장,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등이었다.<sup>22</sup>

## 2.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

1971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매관자본가·반동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반괴뢰 투쟁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제5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통일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노동당규약이나 헌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실제에서도 8·15광복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북한의 외교 역시 공산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외교정책은 그들이 강조하는 소위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 헌법 제16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대외 기본 정책 방향인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소련·중국 등을 비롯한 국제공산세력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이념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인 지원과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고, 적극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북한 외교활동의 중점은, ① 북한 정권의 정통성 및 합법성 인정 ②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한국방위정책 포기를 비롯한 한국의 방위력 약화 ③ 북한의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 등을 위한 외부지원의 증대 ④ 소위 그들의 ‘평화통일정책’에 대

한 국제적 지지와 지원 획득 등에 맞추어졌다.<sup>23</sup>

1970년대 북한 외교의 특징은 대(對) 국제기구 및 제3세계와의 외교를 강화한 것이었다. 1970년대 들어와 유엔 내에서 동·서 간의 세력관계가 미묘해지고 특히 1971년 중국이 타이완을 대신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자 북한은 유엔 내의 상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변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을 완강히 반대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제의를 ‘한반도 영구분열 흥계’라고 비난하면서도, 한국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유엔기구들에 가입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와 제3세계가 주도하는 비동맹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이들이 반서방·반미 좌경적 성향을 강하게 띠자 북한은 대(對)제3세계 외교를 강화했다. 특히 1975년 8월 북한이 단독으로 비동맹국회의에 가입한 이후부터 그들의 적화통일노선에 대한 비동맹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요컨대 1970년대 북한의 외교는 적화통일전략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와 한·미동맹 및 협력관계의 종식을 최대의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비동맹국가를 비롯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던 것이다.

## 제4절 남북관계

### 1.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그 실패

1971년부터 급진전되기 시작한 미·중관계는 중국의 유엔가입과 1972년 2월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일간의 외교수립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닉슨 정부는 대한반도 정책으로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과 북한이 서로의 존재와 차이를 인정하며,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해 나가기에 희망했다. 중국 또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해 주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국제 및 동북아정세에 부응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무력통일을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남북간의 직접대화는 1971년 8월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이후락(李厚落) 중앙정보부장의 북한 비밀 방문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7·4 남북공동성명’ 선언으로 이어졌다. 1972년 7월 4일 10시,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는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한 각기 7개 항으로 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남북 직통전화 가설·운용에 관한 합의서’가 동시에 공표되었고, 공동성명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24</sup>

그 후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7차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 본 회담이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 측이 ① 남한의 현행 반공법의 철폐 ② 반공활동의 금지와 반공단체의 해체 ③ 대북 사업 참가자의 인신 및 소지품에 대한 불가침, 언론·출판·집회·통행 등 활동의 자유와 편의 보장 ④ 현 군사적 대치 및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조항들을 당국이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이를 내외에 선포하라는 등의 정치적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 특별선언’(일명 ‘6·23특별선언’)을 발표하고, ‘호혜평등의 대원칙하에 소련, 중공 등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의 ‘6·23 특별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이 남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함으로써 2개 조선을 조작하려 한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6·23 특별선언’의 철회와 반국가 보안사법들의 처벌 중지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8·28선언’을 하며 남북대화의 일방적 종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간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수차례 제의했고,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계속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 없이 상당 기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었다.<sup>25</sup>

## 2. 남북관계의 냉각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1974년 8월 15일,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9회 광복절 경축식전에서 재일교포 문세광(文世光)이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저격했고, 영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총탄에 맞아 서거한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는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다.<sup>26</sup>

이런 와중에 1974년 11월 15일 연천 고랑포 동북방 8km 지점에서 제1땅굴이 발견되고, 이어 1975년 3월 19일 철원 북방 13km 지점에서 또다시 제2땅굴이 발견됨으로써 국민들은 북한의 끈질긴 남침야욕에 다시 한 번 경악했고 북한의 남북대화 제스처가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이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폭력투쟁만이 통일의 유일한 수단”임을 공언하면서 남북 대화기간 동안 다소 강도가 약화되었던 대남도발을 강화하자 남북한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그 정점은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이르게 되었다.<sup>27</sup>

## 주(註)

- 1 “미·소 관계의 제 기본원칙에 관한 성명”(1972. 5. 29)
- 2 “베트남전에서의 전쟁종결 및 평화회복의 협정 및 부속의정서”(1971. 1. 27) ; “베트남 휴전협정에 관한 키신저의 기자회견”(1973. 1. 23)
- 3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77. 289쪽
- 4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 1978』, 1978, 28~29쪽 ;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256~258쪽
- 5 닉슨독트린의 주요내용은 ① 미국은 모든 안보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② 미국의 동맹국 혹은 미국의 안보에 극히 중요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이들을 보호할 것이고, ③ 미국은 핵 위협 이외의 외부공격에 대해서 동맹국이 요청하면 안보공약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나 동맹국은 일차적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방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6 한국역사정치연구회 김용직,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394~401쪽
- 7 1972년 6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된 정치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 8 전진전략 개념은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전술핵무기를 전진기지인 한국에 전진배치하여 극동지역에서 전쟁억제를 피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전개로 분쟁 초기에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분쟁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개념이었다.
- 9 이후 포드 행정부에 이어 1977년 1월 출범한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재추진했으나, 의회와 군부의 반대 등으로 1978년까지 3,000여 명만 추가로 철수한 뒤, 결국 1979년 7월 20일 철군은 공식 중지되었다.
- 10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자 정신개조운동으로 추진되었고, ‘근면·자조·협동’ 세 가지가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었다.
- 11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5, 186~189쪽 ; 『건군 50년사』, 258~262쪽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1988, 32~33쪽,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394~401쪽
- 12 당시 국방부는 보안상 전력증강계획을 ‘울곡계획’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침략을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던 울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호를 딴 것으로 유비무환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 ‘울곡’이라는 용어는 1995년 ‘방위력 개선’으로 변경되었다.
- 13 『건군 50년사』, 283, 291, 295, 299쪽 ;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34, 37쪽
- 14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면서 최초로 이른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제시했다.

- 1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133쪽
- 16 『북한총람』, 169, 311~312쪽 ; 중앙일보사,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삼성인쇄주식회사, 1994, 91~92쪽
- 17 북한헌법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며, 1948년 8월 소련의 ‘스탈린 헌법’을 모방 제정한 구헌법을 5차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을 해 오다가 1972년 12월 27일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전문 11장 149조(구헌법은 전문 10장 104조)로 된 신헌법으로 개정되었다.
- 18 종전의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헌법상의 국가원수이고, 김일성이 사실상의 원수로 되어 있었으나, 신헌법에서는 김일성을 최고 권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19 3대 혁명이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말한다. 3대 혁명소조는 1973년 2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제대군인, 대학졸업자, 김일성고급당학교 학생, 사무원 중 열성당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종의 ‘행동대’였다.
- 20 북한 역사상 당의 핵심 직책인 조직지도부장과 선전선동부장을 겸직한 인물은 김정일이 유일하다. 이 때 김정일의 나이는 겨우 31세였다.
- 21 『북한총람』, 314~315쪽 ;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101~109쪽
- 22 『북한총람』, 299~301쪽 ;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100~101, 112~120쪽, 이들은 1974년 김성애로부터 시작하여 1977년 김동규를 마지막으로 모두 숙청되었다.
- 23 『북한총람』, 334~345쪽 ; 국방부, 『국방사 제4집(1972. 1~1981. 12)』, 군인공제회 공우개발사업소, 2002, 56~58쪽
- 24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73, 35쪽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1988, 33쪽
- 25 『건군 50년사』, 273~275쪽 ; 『남북대화 백서』, 1988, 117~118쪽 ; 국방군사연구소, 『방위연감 1945~1989』, 1989, 404~405쪽
- 26 이 사건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 저격음모가 일본의 비합법적인 여권발급에서 비롯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국민들은 일본 규탄대회를 열었고,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한·일 관계는 9월 19일 일본 정부가 시이나(椎名悦三郎) 자민당 부총재를 진사(陳謝)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사죄함으로써 수습되었다.
- 27 『건군 50년사』, 259, 275~278쪽 ; 내외통신, 『북괴의 대남도발사(1945. 8~1980. 4)』, 1980, 118~120쪽

## 제 3 장

#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제1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제2절 북한의 군사력

제3절 북한의 대남도발



무장공비 휴대장비

## 제 3 장

# 북한의 군사능력과 위협

### 제1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 1. 북한의 군사정책

북한은 군사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군사노선’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군사노선의 기초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입각하여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있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미 1960년대에 확정지은 ‘4대 군사노선’을 더욱 강화하여 전 북한사회를 병영화하고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이를 기초로 무력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노선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70년대의 군사정책의 우선순위를 ‘방위태세의 극대화’로부터 ‘공격력의 극대화’에 두고 추진했다.<sup>1</sup>

특히 김일성이 ‘5대 방침’<sup>2</sup>을 제시한 1970년 중·후반기 이후, 4대 군사노선상의 최우선 정책은 초기의 ‘전 국토의 요새화’로부터 상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전군의 간부화’와 ‘장비의 현대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197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마침내 1978년 9월 9일 공산정권 창건 3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 인민 무장화, 전 국토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투사로 강화했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장담하기에 이르렀다.<sup>3</sup>



## 2.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1960년대 전략 추진의 성과와 1970년대의 내외정세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970년대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sup>4</sup>으로 설정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고, 4대 군사노선에 의해 완성된 무력을 바탕으로 유사시 이를 ‘무력혁명노선’으로 전환하여 ‘대남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대남혁명전략 기조를 구현하는 목적에서부터 출발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대외적인 정세변화와 1960년대 후반의 무장도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전략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북한은 닛슨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미·중 접근 등 주변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문제의 ‘민족내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한국 내부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산물로서 반체제계급투쟁이 양성화되리라고 전망했던 것이다.<sup>5</sup>

이러한 정세 판단 속에서 1969년 1월 김일성은 군사사상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6·25 당시와 같은 소련 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투훈련의 실시,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의 배합, 산악전의 연구, 경보병부대의 무장, 인민군대의 현대화 및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의 발전을 결부시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요구에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6</sup> 이것이 이른바 ‘김일성 주체전략’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방침이었다.

요컨대 북한이 추구한 군사전략은 ‘배합전에 의한 속전속결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대남공작을 통해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고, 정규전·비정규전을 배합한 전격전(電擊戰)형식의 기습 속도전으로 한국 내 전 중심을 단시일 내에 석권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수도권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에 따라 북한은 공격 위주의 군사적 태세를 강조하고 군사력의 양적인 팽창을 통해 대남우위의 전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이 공격전략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대규모의 비정규전부대를 보유했던 점 외에도 기습남침을 위한 땅굴 굴착, 속전속결작전을 중요시하는 빈번한 발언, 단기전을 시사하는 귀순자들의 증언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sup>7</sup>

## 제2절 북한의 군사력

1970년대 남북간 화해와 냉각기를 거치는 가운데서도 북한은 이미 1962년 확정된 4대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여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1970년대 북한은 국가예산의 30%와 GNP의 15~20%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연평균 군사비 지출이 1970년 이후 7년간 14억 3,900만 달러에 이르러 한국의 국방비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1970년대 북한의 군사력은 병력뿐만 아니라 전차, 유도탄, 야포, 잠수함, 어뢰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에서도 양·질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더구나 무기들이 모두 지하에 배치되었다는 점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sup>8</sup>

북한군의 전력증강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간 중에 지상군은 81,000명을 늘려 489,000명으로, 해군은 12,000명을 늘려 27,000명으로, 공군은 2,000명 늘려 47,000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북한군은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배합 원칙'에 따라 게릴라전과 국지전 수행을 위한 비정규전 능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특수8군단'을 5개 여단 40개 대대 25,000명으로 증편했고, '경보병여단'을 11개 여단 88개 대대 54,000여명으로 증강했다.

북한군은 1971년 이후 휴전선 북방에 배치된 집단군 예하 포병연대의 152mm 야포를 신형인 130mm 야포로 교체했다. 그리고 각 보병사단과 여단에 편성된 포병 포대의 야포 수를 4문에서 6문으로 증가시켰다.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단에도 새로이 포병연대를 신편하는 등 전후방의 포병화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방의 전차사단과 보병사단에 자주포를 배치했고, 종전의 공병 도하연대를 도하여단으로 증편했다.

1973년도 북한군의 지상화력은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122mm이하의 곡사포와 박격포로써 자체 생산하여 조달한 것이었다. 이밖에 재래식 고사포, 장갑차, 전차 등도 상당수 자체 생산을 하였으며 그 숫자도 괄목할 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북한군은 대대적인 3군 합동훈련과 집단군 차원의 특공작전훈련, 정규군과 노동적위대의 합동훈련 등 고차원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전력의 현대화와 고도의 전쟁준비태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북한은 해군을 동서로 분리하는 지형조건에서 오는 불리한 상황에서 해군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1972년 말 북한은 동해 월산과 서해 월사리에 각각 함대사령부를 신설하고, 해군의 각 기지를 동서 해역별로 통합지휘하게 했다. 그리고 기습공격용인 OSA급 유도경비정(Styx 유도탄 탑재함), 잠수함, 어뢰정, 상륙정 등 전투함을 거의 두 배로 증강시켰다.

공군도 전투기사단을 개편해서 종래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32개 전투기 대대를 36개 대대로 증편했고, 정찰 및 폭격여단을 통합해서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작전통제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MIG-21, SU-7 등을 새로 도입하고 수송기종인 AN-2도 200대 이상으로 증강시켜 특수부대의 침투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북한은 1976년 8월 발생한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기화로 전 인민군에게 전투태세 명령을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전 인민군의 각종 중화기들을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의 군사력은 정규군 56만 명과 노동적위대 126만 명, 붉은 청년근위대 70만 명, 그리고 교도대 26만 명 등 유사시 즉각 정규군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는 예비병력 222만 명이 확보되어 있었다.<sup>9</sup>

### 제3절 북한의 대남도발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이면적으로는 대남도발을 계속 자행했으나, 표면적으로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화해 제스처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북한은 대화를 통한 대남적화혁명 여건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파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남도발을 공공연하게 강화해 나갔다. 197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사를 남북대화기(1970~1973. 8)와 이후의 남북 냉각기(1973. 8~1979)로 대략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남북 대화기(1970~1973. 8)

북한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남북대화기에 외형적으로는 남북대화에 응하면서 내적으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남도발을 계속했다. 1970년에는 거진 앞바다와 속초 앞바다에 무장간첩선을 침투시켰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1973년 3월에는 제주도 동남쪽의 우도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우리 해군경비병 1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며칠 후 비무장지대에서 풋말을 보수하고 있던 우리 측 민정경찰 요원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을 사망케 했다.

그런가 하면 그 해 4월에는 포천 북방의 비무장지대로 무장공비가 침투하다 사살되었고, 5월에는 전남 완도군 금당도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으나 우리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항의하도록 조치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 수석대표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북한 측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sup>10</sup>

또한 북한은 남·북한 쌍방이 휴전선 부근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남·대북방송을 금지하기로 한 남북조절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6월 10일부터 휴전선상의 6개 초소에서 대남방송을 시작했다.<sup>11</sup> 8월 28일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직후부터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통해 대남 비방방송을 재개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강원도의 휴전선 부근 일대에 불온전단 수 천 장을 뿌렸다. 휴전선상에서의 대남·대북방송의 금지는 쌍방이 1972년 11월 2일과 3일, 2회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었다. 이는 당시 합의된 공동발표문 제6항 '나' 호에 규정되어<sup>12</sup> 11월 11일 0시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북한 측의 대남방송 재개는 211일 만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위반 행위였다.<sup>13</sup>

## 2. 남북 냉각기(1973. 8~1979)

1973년 8월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북한은 대남방송의 재개와 함께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북해역 인근 도서를 둘러싼 영해권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한 북한은 12월 1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본회의에서 서해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도서를 둘러싼 해역을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측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김풍섭(金豊燮)은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가 유엔 측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을 둘러싼 해역은 우리의 영해이므로 이 도서로 운항하는 보급선 등 모든 선박은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토마스 유 그리어(Thomas U. Greer) 육군소장은 서해 5개 도서 일대 해역이 북한의 영해라는 것은 휴전협정을 비롯하여 어떤 규정에도 없음을 상기시키고, “휴전 후 20년간 자유로이 항해해 온 한국의 해역을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북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sup>14</sup>

1974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도발은 그치지 않았다. 2월에는 백령도 서쪽 30마일 공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 어선 ‘수원(守元) 32호’에 불법적으로 함포사격을 가하여 어선을 격침시키고 어부를 납치해 갔다. 5월에는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임진강 하류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 상공을 정상비행중인 미군 헬기 2대에 대하여 총격을 가했고, 추자도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다. 6월에는 동해안 군사분계선 남방에서 어로보호 경비 중에 있던 해양경비대 863호 경비정이 북한 함정 3척의 공격을 받고 교전 끝에 격침되었다. 교전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우리 공군기와 해군 함정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동시에 북한의 MIG기도 출동하여 쌍방의 전투기가 2마일 거리까지 접근함으로써 일촉즉발의 긴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 왔다. 그러다 마침내 8월 15일 재일동포 문세광(文世光)이 ‘8·15해방 29주년’ 기념식장에서 연설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도발을 저질렀다.<sup>15</sup>

1975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상과 해상에서 지속되었다. 2월에 강원도 거진항으로 침투한 간첩선은 우리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으로 격침되었다. 지상침투는 5월 부산 동래에 2명, 6월 광주시 동운동에 2명, 9월 전북 고창군에 수명 등 끊임없이 이어졌다. 1976년에는 8월 우리군 제7사단 GP에 대한 북한 GP측의 기관총 사격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3신진호 납북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북한은 삼천포 및 거문도 해상 무장간첩선 침투사건, 강원도 철원 및 충남 홍성의 무장간첩 침투사건, 미군 헬기 격추사건, 비무장지대(DMZ) 내 도발사건 등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했다.<sup>16</sup>

북한의 대남도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74년과 1975년, 그리고 1978년 남침용 땅굴을 굴착한 것으로, 특히 제2땅굴은 시간당 18,000~24,000명의 병력과 중화기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였다. 이는 북한의 '위장평화전략' 과 대남 기습도발 기도를 만 천하에 드러내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후 제4땅굴이 1990년에 발견되었는데, 그 제원은 도표 <3-1>과 같다.<sup>17</sup>

도표 <3-1> 발견된 땅굴 제원(자료출처 : 전쟁기념관 전시실)

구 분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
발견 일자	1974. 11. 15	1975. 3. 19	1978. 10. 17	1990. 3. 3
위 치	연천 고랑포 동북쪽 8km	철원 북쪽 13km	판문점 남쪽 4km	양구 동북쪽 26km
크기(높이×폭)	1.2×1m	2×2.1m	2×2m	1.7×1.7m
깊이	지하 45m	지하 50-160m	지하 3m	지하 145m
총 길이	3.5km	3.5km	1.635km	2.052km
MDL 월경	1,000m	1,100m	435m	1,052m
굴착 방향	고랑포-서울	철원-포천-서울	문산-서울	편치볼-서화-서울

요컨대 북한의 대남도발은 무장공비 및 간첩의 지상과 해상 침투, 우리 어선 격침 및 납북, 미국 항공기에 대한 사격, 남침용 땅굴 굴착,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도표 <3-2>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와 시기에 크게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97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 현황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197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sup>18</sup>

구분 연도	북한 침투, 도발(건)	전과 현황				북한 정전협정 위반사례(건)			
		계	사살	생포 검거	귀순 자수	계	계공중	해상	지상
1970	125	107	84	22	1	913	1	8	904
1971	80	70	59	9	2	2,483		4	2,479
1972	25	2		2		5,160			5,160
1973	45	8	3	5		5,415		8	5,407
1974	34	16	8	8		4,985		2	4,983
1975	44	26	15	6	5	5,252	15	5	5,232
<b>1976</b>	<b>17</b>	<b>16</b>	<b>5</b>	<b>10</b>	<b>1</b>	<b>7,221</b>	<b>1</b>		<b>7,220</b>
1977	15	12	12			2,946	1		2,945
1978	18	11	8	1	2	2,259		3	2,256
1979	6	8	7	1		5,383		1	5,382
계	409	276	201	64	11	42,017	18	31	41,968

## 주(註)

- 1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5~1996』, 1995, 165쪽
- 2 1975년 2월 11일 노동당 5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것으로, '5대 방침'이란 강인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영명한 전술, 무쇠 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 같은 규율을 말한다.(『안보문제연구 1975~1976』, 307쪽)
- 3 『방위연감 1995~1996』, 176쪽 ; 북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 1974, 40쪽
- 4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북한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남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주도하는 용공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정권과 함께 적화통일을 성취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에 의거한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하면서 한국 내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통일혁명당'이 창당되었다고 위장선전했다. 그리고 종래의 각종 투쟁형태에 '반합법투쟁전술'을 새롭게 추가하여 반정부투쟁에 필기할 것을 독려했다.(『북괴의 대남도발사(1945. 8~1980. 4)』, 87쪽)
- 5 『북괴의 대남도발사(1945. 8~1980. 4)』, 88쪽
- 6 국방부, 『북괴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1979, 114쪽 ; 극동문제연구소, 『북괴 군사전략집』, 1974, 327~329쪽
- 7 『방위연감 1995~1996』, 165~167쪽
- 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1570쪽
- 9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77, 91쪽 ; 『북한전서』 중권, 40~41쪽 ; 『안보문제연구 1973(총람판)』, 313~314쪽(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북한의 군사력 현황은 부록 참조)
- 10 『북괴의 대남도발사(1945. 8~1980. 4)』, 87, 96쪽 ; 합참,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307~308쪽 ; 『대비정규전사 II』, 144~145쪽
- 11 “국방부 발표문”(1973. 6. 11)
- 12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1972. 11. 4)
- 1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연표(1945~1990)』, 1994, 397쪽 ; 『안보문제연구 1973(총람판)』, 289쪽 ; 『동아연감』, 225쪽
- 14 해군본부, 『NLL,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해상경계선-북한의 NLL 해역 도발사』, 국군인쇄창, 2011, 18~19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군인쇄창, 2012, 175~178쪽
- 15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록 분석』, 1980, 238쪽 ;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327~329쪽 ;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314쪽 ; 『동아연감』, 323쪽
- 16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314, 346쪽 ; 『합동연감』, 1976, 146쪽
- 17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332~340쪽 ;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352쪽 ;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151~153쪽
- 18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512쪽 ; 합참 정보본부, 『북한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 사례집』, 2011(전과현황은 이 책에 수록된 개별 사건들의 전과를 총합한 것이다.)

## 제 4 장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와 주요 충돌사건

제1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설치와 경비체제

제2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주요 충돌사건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문제의 미루나무



## 제 4 장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와 주요 충돌사건

### 제1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설치와 경비체제

#### 1. 지리적 위치

판문점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임진강 지류인 사천강변의 비무장지대 내 북위 37° 57′ 20″, 동경 126° 40′ 40″에 위치하고 있다. 판문점은 서울 외곽에서 직선거리로 40km, 문산에서 임진강을 건너 13km, 북한의 개성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면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본다면 아군지역에 자리 잡은 백학산을 정점으로 하여 북한 지역의 덕불산과 대덕산을 연결하는 삼각형 중심부에 자리 잡은 회랑지역이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고 공동경비구역이 공식 명칭이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남·북한 쌍방간의 행정관할권 밖에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공동경비구역은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에는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부터는 군사분계선 위에 폭 50cm, 높이 5cm의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양측 경비병이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 갈 수 없게 되었다.

#### 2. 설치 경위

최초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열렸다.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회담장소인 개성 고려동에 있는 ‘래봉장’을 중심으로 반경 8km의 원형지대를 중립지대로 정하고, 쌍방은 이 안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대표단이 통과하는 도로주변에는 무장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조항을 공산 측이 지켜주었다면 판문점이란 고유명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회담이 개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회담장으로 들어오는 유엔군 측 보도진의 통과를 거부한 북한초병의 적대행위가 있었다. 8월 4일 중공군 무장부대가 유엔군측 대표단 건물주변을 남하 통과한 사실과 ‘중립지역 변두리를 미군폭격기가 공중폭격했다.’는 공산 측의 가장연극 등으로 개성회담은 중지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유엔군사령관 매튜 리지웨이(Matthew Ridgeway) 장군은 유엔군 측 대표단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미군기에 의한 피폭의 거짓생떼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담장소를 옮기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사천강을 건너지 않은 ‘널문리’로 회담장소를 옮길 것을 공산 측에 제의했으며, 공산 측이 이를 받아들여 1951년 10월 25일 이곳에서 회담이 재개되었다.<sup>1</sup>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측과 공산 측간 전문 5조 36항으로 된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개전 후 3년 1개월, 회담시작 후 2년 만에 6·25전쟁은 종결되었다. 이때부터 이곳은 국제연합군 측과 공산 측의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1953년 8월~9월 초, 이곳에서 6·25전쟁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 판문점을 통해 13,444명의 한국군 및 유엔군 전쟁포로가 귀환했고, 82,493명의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가 송환되었다.<sup>2</sup>

그런데 휴전회담이 열리고 조인된 당시의 판문점은 지금과 위치가 다르다. 당시의 건물은 현재의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쪽으로 1km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북한의 전쟁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1953년 10월 19일,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의 회담 지원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제25차 본회의에서 회담장을 현 위치로 옮기고, 회담장 건물을 중심으로 직경 약 800m의 타원형 모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의 JSA가 탄생했다.<sup>3</sup>

### 3. 경비체제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이후 판문점 지역을 포함한 장단반도로부터 사미천에 이르는 정면 약 32km 지역은 미 제2사단이 경계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따라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이 1971년 3월 27일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현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제1사단이 이동하여 1971년 3월 10일부로 미 제2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했고, 미 제2사단은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의 임무를 인수했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여전히 미 제2사단이 경비책임을 맡고 있었고, 지휘계통은 JSA 경비부대-미 제2사단-한·미 제1군단-미 제8군(유엔군사령부)로 이어졌다.<sup>4</sup>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경비는 JSA 경비를 위해 장교 5명, 사병 30명의 경비병력을 두도록 한 정전협정 제2조 36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초 미국은 정전협상이 진행 중인 1952년 5월 5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지원단’<sup>5</sup>(장교 5명, 병사 10명)을 창설하여 운영했다.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경비인원을 증편한 ‘공동경비구역 미 육군지원단

(USASG -JSA<sup>6</sup>)' 을 창설하여 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를 수행해 왔다.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미 육군지원단' 은 3개 소대 166명으로 편성되었다. 이 부대는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방기지로 더 알려진 '캠프 키티호크(Camp Kittyhawk)<sup>7</sup>' 에 위치하고 있었다. 각 소대는 미 육군 장교 1명과 한국군 장교 1명, 미 육군 사병 26명, 카투사<sup>8</sup> 사병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소대는 순환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 번째 소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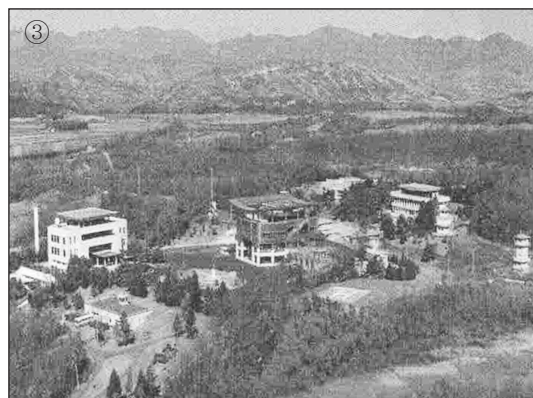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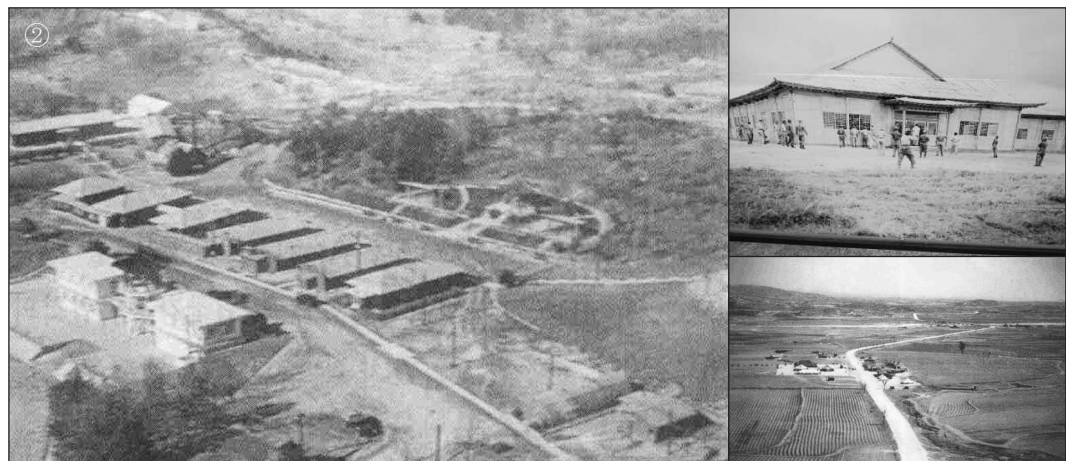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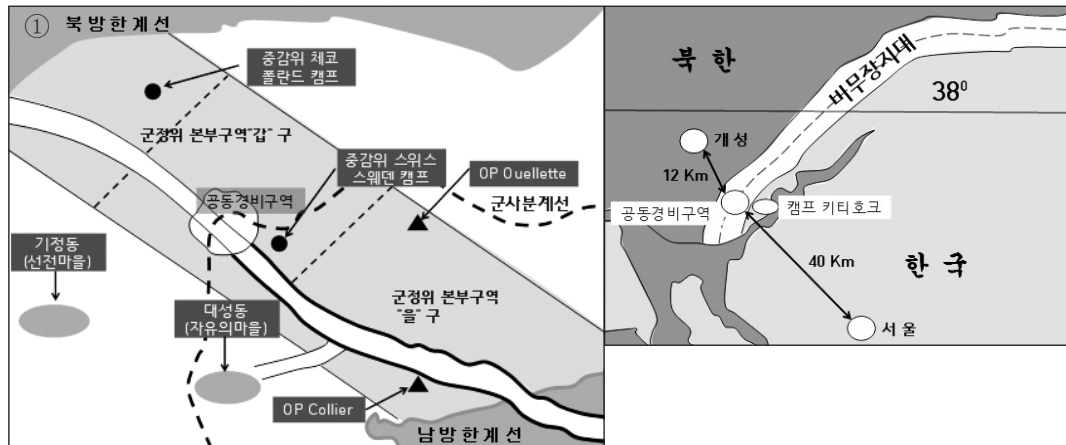
도표 <4-1>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의 임무

1. 공동경비구역 내 작전임무 수행
  - 검문소 및 관측초소 24시간 점령 운용
  - 주·야간 수색정찰작전 실시
  - 적의 정전협정 위반 및 도발행위에 대한 상시 즉각 대응태세 유지
2. 대성동 주민들에게 경호 및 민사행정업무 제공
3.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단에게 경호 제공
4.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주관 안보견학 지원(경계, 경호, 차량, 안내 등)
5. 공동경비구역 내 모든 작전 및 국가사업에 대한 경호 및 안전, 기타 지원 제공
6. 주둔지 방호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출입인원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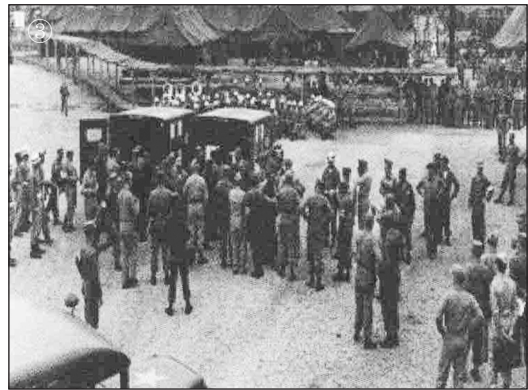
도표 <4-2>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의 기능별 임무

1. 판문점 소초
  - 경계초소를 운용하여 주·야간 적정 감시, 검문소를 운용하여 실시간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실시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에게 경비 및 경호 제공
  - 판문점 안보견학 단체 및 VIP를 근접경호,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적의 정전협정위반 및 도발행위에 대비, 상시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
  - 각종 남·북 회담 및 송환, 국가사업 등에 대한 경호 및 지원 제공
2. 기동타격대(비상상황 발생 시 증원부대)
  - 상시 출동대기태세 유지
  -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기에 상황을 종료하여 정전상태를 회복 및 유지
  - MDL 근접 수색정찰 작전
  -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비무장지대 내의 적 침투 흔적과 정전협정 위반사항 확인, 적정에 관한 첩보획득
3. OP Collier(115GP(Guard Post : 경계초소)), OP Ouellette(116GP)
  - 주·야간 경계, 적정 감시, 조기 정보
  -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관측과 경계 제공

초소 근무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작업조, 방문자들에 대해 경계를 제공했다. 두 번째 소대는 기동타격대(QRF : Quick Reaction Force)로 10:30에서 17:00까지 유엔사 2번 검문소 75m 남쪽에 대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키티호크 캠프에서 대기한다. 세 번째 소대는 예비로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한다.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의 기능별 임무는 도표 <4-1, 2>와 같다.<sup>9</sup>



① 공동경비구역 위치도  
 ② 옛 판문점 모습  
 우측 위 사진은 휴전회담이 조인된 건물이고  
 아래 사진은 당시 북쪽에서 찍은 항공사진이다.  
 멀리 보이는 다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이다.  
 ③ 오늘날의 판문점 모습



- ① 휴전협정 직후 공동경비 모습  
휴전협정 당시 깔금했던 풋말이 녹슨 풋말로  
변해 있다.(우측)
- ② 오늘날 판문점 경비 모습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분리되어  
마주보고 있다.
- ③ 1953년 포로교환 모습
- ④ 오울렛 초소(현재의 241GP)

## 제2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주요 충돌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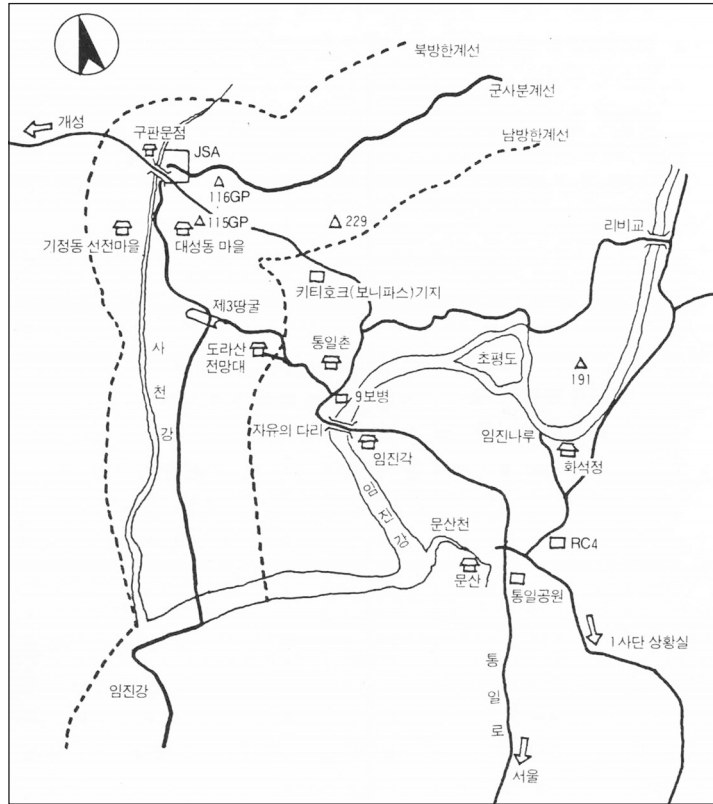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기본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소로 이용되었지만, 남북간의 왕래와 대화의 장소<sup>10</sup>이기도 했고, 충돌의 장소이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은 유엔군과 북한군이 직접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1953년 7월에서 1976년 7월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부터 경비장교 회의<sup>11</sup>까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공동 일직장교에게 보고해야 할 정도의 공동경비구역 경비대간의 물리적 충돌은 25건이 발생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 유엔사 인원은 심한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유엔사 인원은 북한군 경비대원 근처에 있을 때면, 거의 매일 언어적 협박과 위협적 행동을 받아 왔다. 충돌이 생겼을 때 북한군은 증원군을 불렀고, 이후 욕설과 위협을 하는 전술을 썼다.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 경비대원들에게는 “심하지 않은 괴롭힘은 무시하고, 도발을 당했더라도 강한 반격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1961년 4월 22일 북한 병사의 도발로 유엔군과 북한군 간에 10여 분간 주먹다짐이 계속된 사건이 있었고, 1967년 9월 8일 양측 경비병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졌던 사건도 있었다. 1968년 4월 14일 유엔사 측 초소 경비병을 3/4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공동경비구역 동남쪽 1km 지점의 도로상에 매복해 있던 북한군들이 유엔사 차량을 급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차에 탔던 7명 중 한국군 2명과 미군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미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동년 5월 15일에는 북한 경비병이 미 헌병에게 돌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충돌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1970년 10월 9일과 12일, 북한 경비병의 난동사건이 발생했다. 10월 9일, 북한 경비병 1명이 어깨에 규정된 견장을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엔사 측이 정전협정의 기본 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났고, 미군 2명과 카투사 1명이 북한군과 격투를 벌였다. 10월 12일, 북한 경비장교 1명이 유엔사 측 경비병이 사진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가했다. 이에 옆에 있던 유엔사 측 경비병들이 합세하자 북한 측은 예비병력 50명과 판문각 공사인원 10여 명을 동원했고, 이 충돌로 인해 유엔사 측 장교 1명과 사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때 북한 측도 2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단이 싸움을 말리다 경상을 입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 내에 유엔사 측 검문소가 없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10월 16일 쌍방간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위병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0월 17일, 제30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측은 판문점 내 경비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명시된 대로 공동경비구역 내 쌍방 경비병력을 장교 5명, 사병 30명 내로 제한할 것, 경비병 무장(권총)을 해제할 것, 쌍방 경비장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조사 후 불필요한 초소를 제거할 것,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시 쌍방 경비병은 중앙

도표 <4-3> 사건 당시의 공동경비구역 주변 요도



출처 :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66쪽

분계선 횡단을 금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정전협정과 추가 협약으로 명확히 규제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공동경비구역도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1975년 6월 3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64차 본회의 종료직전에 회담장 밖의 벤치에 앉아 있던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부단장 윌리 디 핸더슨(Willie D. Handerson) 소령이 북한 경비병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 기자가 핸더슨 소령의 머리를 만지며 장난을 걸었고, 핸더슨 소령이 이를 뿌리치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순식간에 북한군 50~60명이 증원되어 핸더슨 소령을 때려눕히고 목을 발길로 걷어차며 구타를 가했다. 이로 인해 핸더슨



앉아 있는 사람이 핸더슨 소령이다.

소령은 후두파열상을 입고 미국으로 후송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 측은 7월 12일 제 365차 본회의에서 공동경비구역 내 긴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경비구역의 분할경비안을 다시 제의했다.

1976년 6월 26, 공동경비구역을 순찰하던 유엔사 차량 1대가 우리 측 4번 초소로 이동 중 북측 경비병 3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를 정차시킨 후 20여 명의 북측 경비병이 뛰쳐나와 몽둥이, 도끼자루 등으로 유엔사 측 인원을 구타했다. 유엔사 측은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피신했으나 미군 1명이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sup>12</sup>



## 주(註)

- 1 1951년 10월, 널문리에 천막촌이 신흥도시처럼 들어섰다. 이때만 하더라도 널문리로 통했다. 그런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가 사용된 회담용 용어 중에서 중국어의 표기가 까다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쌍방의 연락장교 회담에서 휴전회담에 참석하는 중공군 대표가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시 회담장소 부근에 있던 주막을 겸한 가게 이름을 한자로 적어 ‘판문점(板門店)’으로 표기했고, 영어로는 Panmunjom으로 표기하면서 널문리는 사라졌고 지금의 판문점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판문점의 ‘판’은 널빤지를 의미하고, ‘점’은 ‘주막’이란 뜻으로 그 유래가 그 명칭 속에 담겨 있다.
- 2 이 때 남·북한 포로들은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사천강의 ‘널문다리’로 불리던 곳을 통과하였는데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여 이후 ‘돌아오지 않는 다리(Bridge of No Return)’로 이름이 바뀌었다.
- 3 JSA 경비대대, 『JSA 50년사』, 육군 인쇄창, 2008, 29~31쪽 ; 국방부 정훈국, 『월간 정훈 10월호』, “판문점 분할경비의 문제점”, 공화출판사, 1976, 72쪽 ; JSA ‘안보견학관’ 전시자료
- 4 『국방사 제4집(1971, 1~1981, 12)』, 687쪽
- 5 이 부대의 명칭은 1979년 6월 유엔사 지원단(UNCSG-JSA), 1985년 12월 유엔사 경비부대(UNCSF-JSA), 1994년 10월 유엔사 경비대대(UNCSB-JSA)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군과 미군이 JSA의 경비임무를 공동으로 맡고 있으나, 실제 경비병력은 한국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미군은 대대장과 대대본부 참모요원으로 편성되어 한국군과 Counterpart 형식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이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가 행사하고 있고, 한국군(부)대대장은 미군 대대장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 6 USASG-JSA : United States Army Support Group-Joint Security Area, 편의상 이후 기술 시는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이라고 약칭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7 ‘캠프 키티호크(Camp Kittyhawk)’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0주년인 1986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캠프 보니파스(Camp Bonifa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8 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 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 카투사 프로그램은 1950년 대한민국 대통령, 주한 미국 대사, 유엔군사령관의 합의로 시작되었으며, 인원이 가장 많았던 1952년에 카투사 병력은 2만 명에 달했다. 휴전협정 이후에도 카투사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1971년 7월 한국 주둔 미 지상군 감축으로 그 병력은 감소되어 7천 명 선을 유지했다. 카투사는 주로 전투부대에 배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8군 전체를 지원했다.
- 9 『JSA 50년사』,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in UNC/USFK/EUSA 1976 Annual Historical Report, 1976, pp.9~10 (이 자료는 미 제8군 역사실에서 획득했다.)  
\* UNC : United Nations Command(국제연합군사령부), USFK :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주한미군), EUSA : Eighth US Army(미 제8군)
- 10 1968년에는 북한에 납북되었던 푸에블로호 선원 82명과 시신 1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1970년대 초에는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판문점은 남북간 접촉 및 회담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20일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연락사무소가 자유의 집 2층에 설치되었다.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판문점 내의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은 실무접촉과 예비회담 장소로, 북측지역의 판문각과 유엔군 측의 자유의 집은 본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 11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4등급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급 회의는 본회의로 휴전협정을 크게 위반한 경우 소집되며, 양측 수석대표를 포함한 각 5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중핵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장군급 대표들이 참석한다. 제2급 회의는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을 다루는 '비서장회의'이고, 제3급 회의는 '공동 당직 장교회의'로 행정상의 정보교환을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에 모인다. 마지막으로 제4급 회의로 긴장완화의 필요에서 수시로 소집되는 '경비장교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는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는 협조회의라고 할 수 있다.
- 12 JSA 경비대대, 『JSA 50년사』, 육군 인쇄창, 2008, 29~30, 68, 175쪽; 배명오, “판문점 분할경비의 문제점”(국방부 정훈국, 『월간 정훈 10월호』, 1976), 72쪽;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69~70쪽;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148~149쪽;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1

## 제 5 장

# 8 ·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1절 북한의 도발 의도

제2절 사건 발생

제3절 유엔군사령부와 미국 정부의 조치

제4절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조치

제5절 폴 버넌작전과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

제6절 군사정전위원회 회담과 공동경비구역 분할 경비



유엔사의 미루나무 절단작전(1976. 8. 21)

## 제 5 장

###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제1절 북한의 도발 의도

북한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 저의에는 대내외적인 복합적 성격의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를 밝히고 있는데, 그가 당시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비서실장의 직책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도 이와 일치하는데 김정렴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sup>

이와 같은 살인 만행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다 이날 기회를 잡아 저지른 것으로 여기에는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내부적인 면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하는데 따른 권력투쟁과 외채상환 불능, 식량부족 등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한국의 북침위협설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도발을 해 와 응분의 조치를 가했다고 뒤집어씌움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긴박감을 불러넣어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한 것이었다.

외부적으로는 그 전해 4월 월남의 패망에 따른 미국 내 비판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전사상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미군을 죽임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미군철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한·미간을 이간시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게 하려는 술책이 내포되어 있었다. 또 당시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열리고 있던 비동맹국회의와 가을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허위로 선전한 한·미 양국의 북침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른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미군철수 주장을 관철해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내포되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미·영·불·일 등의 신문들은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스리랑카의 비동맹국회의와 유엔에 제출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기도에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위험이 있다.”고 떠들어온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내의 언론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설과 비판 기사를 실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 동기를 김정렴의 회고록과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그 배경을 포함하여 대외적인 면과 대내적인 면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외적 동기

북한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 핵심적인 대외적 동기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소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조선민족 자신의 힘으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었다. 그들의 군사적 도발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국제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혁명전쟁은 반드시 국제전쟁화를 피하고 내전화해야 한다.”는 레닌이 교시한 혁명의 철칙과도 상치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북침 위협’으로 역선전하며 한반도에서의 휴전협정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떠벌여 왔다.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겨냥한 술책이었다. 미국과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닌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명분을 제거하여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실현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미국은 1976년 7월 20일, 대사관 경호를 맡을 250명만 남기고 태국 주둔 모든 미군을 철수 시킴으로써 인도차이나반도와 이별을 고했다. 이로써 동 아시아에서 공산 측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국가에 미군이 주둔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시켰음은 제2장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국내는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민주당 후보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반전여론에 편승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었다. 한국군의 열세한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공군만 제외하고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카터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뿐만 아니라 이 시기 미 의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로 반한 감정이 높아져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 내 분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11월 실시될 미 대통령 선거에 편승하여 미국 국민들의 반전무드를 이용한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더불어 한·미 관계를 이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1976년 8월 9일부터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비동맹국 8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동맹국 외상회의’에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다. 북한은 결의안 전문에서 한·미군의 군사도발로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① 전쟁을 도발하는 군국주의자들의 기도 저지 ② 핵병기를 포함하는 모든 전쟁수단의 철수 ③ 외국군대의 철퇴 ④ 휴전협정에 대체될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주장했다. 외상회의에 이어 8월 16일부터 개막된 ‘비동맹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대표 박성철(북한 총리)은 위의 주장을 되풀이해서 늘어놓았다.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들 비동맹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회의에서 비동맹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1976년 6월 말까지 55개국에 58개 사절단을 98회에 걸쳐 파견할 정도로 비동맹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어쨌든 북한은 비동맹권국가들의 반미, 반서방 성향에 편승하여 이들 세계에 우리는 발을 못 붙이게 하면서 북한의 활동 중심지로 만드는데 거의 성공했다. 그 결과 비동맹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1975년 11월 18일의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양측을 각각 지지하는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게 되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지지하는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서방 측 결의안과 ‘유엔사의 해산, 한국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는 공산 측 결의안의 동시 통과가 그것이었다.

1975년의 성과에 고무된 북한은 1976년도의 콜롬보 비동맹국회의에서 비동맹국가들을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등에 업고 유엔총회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비동맹국가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북한은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sup>2</sup>

먼저 북한은 8월 5일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제7사단 전방에 위치한 북한 GP(Guard Post : 경계초소)에서 아군 측 GP를 향해 고의적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는 충격도발을 자행했다. 이어 군사정전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했고, 이 회담에서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고 우겼다. 그리고 당일 소위 ‘전쟁임박 성명(8·5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한·미군의 공격 제대가 휴전선에 집결하고 있다.”는 등 전쟁발발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내외에 퍼뜨렸다.

그런데 8월 초·중순 비동맹국회의 선언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자 북한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최국 스리랑카를 비롯한 회의 참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 지지에서 중립적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 16일, 공지에 몰린 북한은 그 해 9월 21일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총회에 공산 측 결의안을 전격 제출했다. 북한은 비동맹 회원국의 측면 지원을 받고, 표결의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통상 서방 측 결의안이 제출된 다음에 움직이는 선례를 깬 것이다. 공산 측의 결의안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 및 평화의 유지와 강화, 그리고 한반도의 독자적이고 평화적인 재통일의 촉진’이라는 긴 제목의 그것이었다.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은, “미군의 호전성과 군사도발로 북침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고 엄중한 긴장상태 내지 위기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없이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변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남북연방제 등도 함께 제의했다.<sup>3</sup>

이와 같은 책동으로도 ‘북침 위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북한은 벼랑 끝으로 한 발 더 내디뎠다. 콜롬보 ‘비동맹국 정상회의’는 8월 19일 폐막되고, 그 폐막식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었다. 이리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마침내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도끼로 주한미군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북한은 사건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만약 미국이 과잉반응하게 된다면 ‘미국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도 이를 빌미로 북침을 하려 한다.’고 조작하려는 흥계를 꾸민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건의 전모가 미군의 카메라에 담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도발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었다.<sup>4</sup>

## 2. 대내적 동기

북한의 ‘8·5성명’은 8월 5일 18:15에 방송되었다. 노동자·농민들이 하루의 일과에 쫓기다가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소위 황금시간에 방송이 나갔다. 이때부터 북한은 가공적인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8·18사태가 발생하자 19일 17:00을 기해 최고사령관 김일성 명령으로 전 정규군과 예비군에게 전투태세령을 하달하여 북한 전역을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했다.

북한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통해 대내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한국과 미국의 북침 위협으로 무마하고, 김정일 세습에 따른 내부 권력투쟁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서서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무력증강과 이를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주민의 의식주 수준은 말이 아니게 저하되었다. 더구나 1973년의 소위 ‘오일쇼크’로 인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격감했고, 외화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채까지 급증하게 되었다.<sup>5</sup> 그리고 6개년 경제계획(1971~1976)도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1976년 들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다. 개성지역의 경우 수입 원자재로 운영

하는 공장의 80%가 돌아가지 못했고, 국내 원자재로 운영하는 공장도 50%가 멈춰 섰다. 농업생산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700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이 달성되었다고 선전했으나, 8월 2일의 홍콩발 UPI통신에 의하면 76년 7월 북한에서 손꼽히는 광산인 함남 용성광산에서 수백 명의 광산노동자가 식량문제로 쫓겨하여 그 중 수 십 명이 체포, 처형되었다고 보도될 만큼 식량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식량난과 생활고로 누적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임전태세가 필요했고, 또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전시에 준하는 비상태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또 하나의 내부 갈등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에 따른 권력투쟁에 따른 것이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당원중 재교부사업’, ‘3대 혁명소조’, ‘반관료주의 투쟁’ 등을 통해서 수 십 만 명의 당원들을 ‘반당관료주의자’, ‘법무생활 위반자’ 등의 죄목으로 출당, 철직, 숙청했다. 특히 김정일의 직접 통제를 받는 ‘3대 혁명소조’의 전횡과 안하무인격의 업무처리는 김정일에 대한 원성과 원망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불만을 품은 자가 한 두 명이었겠는가? 또한 김정일 자신도 1973년 9월, 31살의 젊은 나이에 당 ‘조직사상비서’, ‘조직부장’, ‘선전선동부장’ 등의 핵심적인 직책을 겸하게 되면서 김일성의 후광까지 등에 업고 온갖 전횡과 횡포를 부리자 당과 군의 최고위직에 있는 인물들까지도 반발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반발은 김성애(김일성의 후처) 등의 가족간의 갈등, 당내 갈등, 군부 내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애는 김일성의 후광을 배경으로 여성동맹위원장으로써 권력을 남용하면서 측근의 세력확장을 꾀하다 1974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조직지도부와 호위국의 비리조사 결과로 실각했다.

부주석이었던 김동규는 1976년 6월 열린 정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김정일의 간부정책, 계급정책, 조급한 후계체제 확립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 결과 결국 김동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김동규에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던 당·군의 주요 인사들도 숙청당하고 말았다. 당내 반대파인 김동규와 유장식은 1977년 숙청되었고, 군부 반대파인 지경수, 지병학은 1976년 8월과 1977년 3월 각각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특히 지경수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인 8월 26일 갑자기 사망했는데, 지경수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 계획’에 대해서 무모한 짓이라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한다.《통일일보》1977년 12월 17일자 기사)

이에 앞서 1976년 3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정무원 부총리인 남 일(南日)이 돌연 의문사했다. 남 일은 최후로 남은 소련파로 북한군 총참모장, 휴전위원회 북한 측 대표, 외무상 등을 역임했고 장기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북한 최고위 권력층에 속했던 인물이었다. 남 일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연관이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다.<sup>6</sup>



이 같은 대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더욱 분명히 밝혀졌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여파가 대충 정리되어 가던 9월 하순경, 북한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정치 공작원으로 남파된 김용규(金用珪)라는 인물이 자수해 왔다. 그는 연락부 부부장급 대우를 받는 거물급으로 북한에서 영웅 칭호와 함께 최고 훈장까지도 받았던 인물인데, 북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새로운 임무를 받고 침투하자마자 자수를 결심한 것이다. 그의 임무란 바로 8·18사태 이후의 남한 정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것이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7</sup>

8·18사건 후 북괴는 모든 정규군과 비정규군에 전시 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적인 등화관제 및 주요 부서의 후방 소개(疏開)를 단행하는 한편, 30만의 평양 시민을 각 지방으로 분산 소개해 전쟁준비를 서둘렀다. 전국 대학생들의 학업을 전폐하고 교도대에 투입시켰으며, 각 가정과 직장의 비상배낭 준비상태를 재검열했고, 아간에는 탱크 등 중무장 장비들을 평양 시내로 통과시켜 전쟁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장들은 군수품 생산에 주력하여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경제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해외 선전비 지출, 극심한 무역 적자 등으로 외화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특히 물가가 30~50%나 올라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식량은 8·18 이전에는 15일분씩 지급했으나 8·18 이후에는 1일 배급제를 실시하고, 하루 6백 그램의 배급량 중에서도 한 달에 4일분은 전쟁 비축미로 공제하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후, 모든 직장과 기관 및 학교, 유치원에서는 일과 시작 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앞에서 선서식을 하고 전쟁 준비를 구실로 하루 12~16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김일성은 족벌정치와 유일체제의 조직적 통제, 인간 존엄성의 유린, 노동시간 연장과 휴사, 생필품 부족과 저임금, 평양시민의 농촌 강제이주, 결혼연령 및 여행통제 등을 자행하였는데, 이것이 특히 북한 주민들의 불평 요소이다.

요컨대 1976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권력 투쟁이 극에 달해 있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이와 같은 권력투쟁을 잠재우고 북한 권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극도의 긴장상태를 만들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대내적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던 김일성은 대외적 여건이 최적기로 맞아 떨어지는 8월 18일 마침내 도발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sup>

## 제2절 사건 발생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11:00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 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군 경비중대장 아더 지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와 경비소대장 마크 티 배렛(Mark T. Barrett) 중위가 피살되고 미군, 카투사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1. 사건지역(3초소) 위치 및 특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3초소(현재의 4초소)는 이 구역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3초소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이라 불렀다.

도표 <5-1>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요도에서 알 수 있듯이 JSA로 들어가는 우리 측 출입구(유엔사 2초소)는 남쪽에서도 오른편 귀퉁이에 있었다. 여기를 통과해 바로 올라가면 우리 측 부속 건물들과 자유의 집이 나온다. 그리고 언덕을 따라 빙 돌면 그 정상에 5초소(현재의 3초소)가 있는데 JSA의 상당히 넓은 지역과 휴전선 너머 북한지역을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다. 판문점을 찾는 인사들은 이 유엔사 5초소에 와서 휴전선 너머 개성지역이라든지 북한 측 선전촌을 비롯한 북한군 전방진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을 조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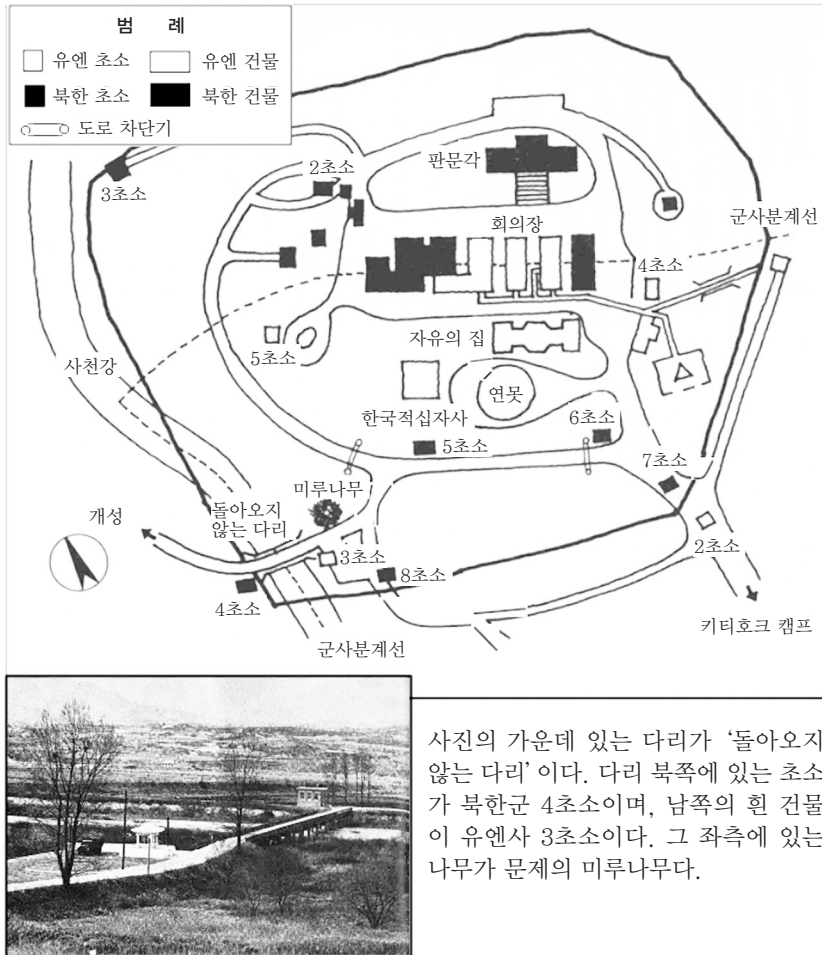
여기서 왼편 등성이 아래로 멀찌감치 보이는 것이 3초소였다. 언덕을 따라 낸 길을 타고 돌아 보면 이 초소에 이른다. 3초소로 가는 또 다른 길은 JSA 출입국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5초소 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난다. 요컨대 3초소는 JSA 남쪽의 왼쪽 귀퉁이에 자리 잡은 셈이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오는 북한 측 출입 통로의 초입이기도 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이 초소에서 불과 20여m 전방에 놓여 있고, 그 다리 중간을 휴전선이 지나는 만큼 50m 길이의 다리 저편에 있는 북한 측 초소와는 155마일 전 휴전선상에서 가장 근접한 초소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다 3초소는 그 입지가 북한 측의 4·5·8초소에 의해 마치 포위된 듯한 형상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의 북한 측 4초소가 서쪽에, 8초소가 동쪽에 그리고 5초소가 북쪽에 위치하여 3초소를 둘러싸고 있었다. 북한의 5초소와 8초소는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것들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그들의 5초소와 유엔사 2초소 사이에 또 다른 두 개의 불법 초소, 곧 6초소와 7초소를 세워 놓고 있었다. 3초소가 공동경비구역 중에서 우리 측에 속해 있으면서도 늘 위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1970년대 초 우리 측은 사천강을 넘어 북측이 JSA로 들어오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점에 우리 측 3초소를 설치<sup>9</sup>하고, 그 북쪽의 3초소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 측

도표 <5-1> 사건 당시의 공동경비구역 요도



사진의 가운데 있는 다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이다. 다리 북쪽에 있는 초소가 북한군 4초소이며, 남쪽의 흰 건물이 유엔사 3초소이다. 그 좌측에 있는 나무가 문제의 미루나무다.

출처 : JSA-판문점(1953~1994)』, 392쪽

5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3초소 지역을 관측하며 북한 측의 수상한 행동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3초소 옆에는 유사 시 우리 경비병들이 재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타고 간 트럭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그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 3초소와 5초소 사이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십수 년은 되었을 이 나무의 키는 약 12m로 그 크기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한창 물오른 여름철엔 그 무성한 잎이 우리 5초소와 3초소 사이의 시야를 가리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5초소에서 3초소를 관측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측은 매년 여름마다 무성한 잎으로 덮여 옆으로 뺨여 나온 이 미루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내 왔고, 북한 측도 별다른 시비를 걸지

않았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우리 3초소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계 청소에 기본 목적이 있었지만, 판문점 방문객들이 역사적인 기념물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잘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sup>10</sup> 사건 당시의 공동경비구역의 요도는 도표 <5-1>과 같다.

## 2. 사건 배경 및 경과

8월 6일, 한국인 노무단(KSC)<sup>11</sup> 노무자 6명과 유엔사 경비병 4명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때, 북한 경비병이 그들의 목적을 묻은 뒤에 나무를 그대로 두고 가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노무자들은 이에 따랐고, 그 후 북한 측은 공식 또는 비공식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공동경비구역 미 육군지원단(USASG-JSA)’ 단장 빅터 에스 비에라(Victor S. Vierra) 중령은 줄기를 자르는 대신 가지를 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8월 6일에 있었던 북한 경비병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sup>12</sup>

- ① 작업을 위해서 현재 근무 중인 소대인원으로 10명의 경비대를 편성하여 노무자 5명과 함께 투입한다. 경비대는 미군 병사 5명과 카투사 병사 3명으로 구성하며, 미 육군 대위 보니파스가 지휘를 맡고, 중위 배렛(Mark T. Barrett)이 보좌를 한다.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군 대위 김문환이 동행한다. 곡괭이자루를 작업 차량 2.5톤 트럭 뒤에 싣는다.
- ② 근무소대의 나머지 인원은 초소 근무를 서지 않고, 즉각 배치 준비를 한 상태로 유엔사 4초소에서 대기한다. 기동타격대는 2초소 남쪽에서 전화와 무선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대기 소대원들은 전방기지에서 대기한다. 전방기지에 있는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상황실은 조기경보태세를 갖춘다.
- ③ 유엔사 3초소의 근무자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시킨다. 유엔사 5초소 관측병과 유엔사 3초소 경비병에게 카메라를 지급해서, 평상시와 다른 상황들을 촬영·기록하게 한다. 곤경에 처할 경우 현장 지휘관은 즉시 경비장교 회의를 요구한다.

위의 계획에 따라 8월 18일 10:30, 경비병력 10명, 노무자 5명<sup>13</sup>으로 구성된 유엔사 작업반이 나무 주변에 도착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다. 몇 분 후,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9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 중 한 명(북한군 박 철(朴 哲) 중위<sup>14</sup>)이 김 대위에게 무엇을 하는지 질문했고, 답변을 듣자 별다른 반대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다. 북한군 경비병 몇 명은 가지치기를 하는 한국 노무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참견까지 하려 했다.

작업은 10:50까지 계속되었다. 그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박 철이 보니파스 대위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대위는 거절했다. 박 철이 작업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박 철은 경비병 1명을 북한군 초소로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11:00경 10여 명의 경비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북한군 4초소와 8초소에서 북한군 몇 명이 현장으로 왔다. 이로써 북한군 병력은 약 30명까지 늘어났다. 이때 박 철은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인 고용 노무자들은 작업을 중지했지만, 보니파스 대위는 김 대위에게 “북한군은 단지 위협만 할 뿐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노무자들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계속 하라고 명령했다. 보니파스 대위는 노무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돌아섰다. 그러다보니 박 철이 손목시계를 푸는 것과 또 다른 북한군 장교가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 우리 측 경비병 1명이 이들의 행동을 보니파스 대위에게 알리려 했지만 때는 늦고 말았다.

박 철이 “죽여”라고 소리치면서 보니파스 대위의 사타구니를 걷어차자 곧바로 전 북한군들이 달려들어 보니파스 대위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 중 몇 명은 곤봉, 쇠파이프와 그들의 트럭에서 곡괭이자루를 꺼내 휘둘렀다. 이 때 한국 노무자들은 도끼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북한군 경비병 몇 명이 이 도끼를 가지고 쓰러진 보니파스 대위에게 달려들어 도끼머리로 대위의 머리를 가격했다. 배렛 중위가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공격을 당하는 우리 측 경비병을 돕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다. 적어도 북한군 일곱 명이 우리 측 인원 한 명을 둘러싸고 도끼자루, 곤봉, 발과 주먹으로 구타하는 장면 두 개가 카메라에 찍혔다. 4분간의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측 경비대는 서로를 떼어놓고, 동료를 구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한편, 북한군의 만행이 시작되자 나무 위에 있던 노무자 3명(김·손·장 씨)과 작업반장 괄씨는 남쪽으로 25m 가량을 뛰어 도망가는데 갑자기 5~6명의 북한군이 모여들어 주위를 포위하는 바람에 숲 옆 비상도로로 도망하여 유엔군 2초소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기동타격대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 씨는 혼자 아군 작업반 대기트럭으로 피했다.

싸움이 끝나갈 무렵, 우리 측 운전사가 작업 차량인 2.5톤을 몰아 충돌 현장을 돌아 북한군 8초소 쪽으로 내려가서 북한군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친 노무자들을 모두 탑승시킨 후 유엔사 2초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우리 측 경비병 2명이 유엔군 3초소에 세워둔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의 짚차에 뛰어 올라 보니파스 대위를 싣고 유엔사 2초소로 향했다. 작업반과 동행했던 일부 경비 대원들은 급히 유엔사 3초소에 재집결했고, 그 중 한 명이 초소에 있던 트럭을 몰고 북한군 경비병들에게 돌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한 후 충돌현장에서 나머지 아군들을 구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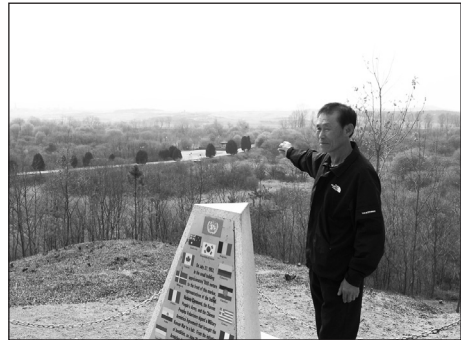
증원을 위해 유엔사 4초소에서 출발한 근무소대 트럭이 북한군 대부분이 모여 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동쪽 끝을 막았다. 그리고 3초소 트럭이 남쪽 도로 출구를 막았다. 이 두 대의 차량은 11:07에서 11:10 사이에 현장을 떠났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600m 이격된 유엔사 제2초소에 대기하고 있던 기동타격대는 노무자 괄씨로부터 사고보고를 받고 즉각 트럭을 타고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은 싸움이 끝나 있었다. 싸움이 불과 4분 만에 끝난 관계로 이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기동타격대는

유엔사 5초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관측병들을 4초소로 데려왔다. 인원 확인 결과 배렛 중위가 실종된 것을 알고서, 기동타격대는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배렛 중위를 찾았다. 길에서 50m 정도 벗어난 움푹 들어간 덩굴 속에 쓰러져 있는 배렛 중위를 찾아 차에 싣고 11:33에 유엔사 2초소로 돌아왔다. 배렛 중위는 그때까지는 숨을 쉬고 있었으나, 얼굴은 멍개지고 군화도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미군 장교 두 명은 모두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다. 보니파스 대위는 전방기지에 도착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배렛 중위는 용산 기지의 병원으로 헬기 후송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김 대위와 한국군 사병 4명, 미군 사병 4명 등 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 중 카투사 1명은 중상이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땅에 쓰러지지 않아서 집중된 공격과 발길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대위와 작업반과 동행했던 경비대 5명 중 중 4명, 유엔사 3초소 미군 경비병 1명은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유엔사 3초소가 완전히 부서졌고, 현장에 있던 유엔사 트럭 3대도 돌에 맞아 유리창이 모두 부서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북한군 사상자는 알 수 없었다.

유엔사 병력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공격을 당하는 동안 발포하지 않았다. 유엔사 경비대가 권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 최소한의 무력 사용으로 접촉을 단절시키라는 장기간 이어온 지침, 근접 육박전, 권총 실탄 미장전, 그리고 보니파스 대위와 배렛 중위가 초기에 쓰러짐으로써 지휘공백이 발생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sup>15</sup>



'12. 4. 19, 현장답사한 필자에게 당시상황을 설명하는 한국인 노무단 제12중대 소속의 박용한 씨(71세)



북한군들이 유엔사 장병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



북한군들이 유엔사 장병에게 달려들어 구타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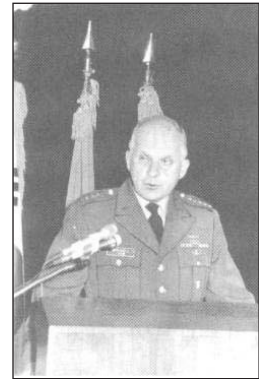
북한군들이 보니파스 대위를 짓밟고, 배릿 중위에게 달려드는 장면

### 제3절 유엔군사령부와 미국 정부의 조치

#### 1. 유엔군사령부와 미 수뇌부의 초기 조치

##### 가. 유엔군사령부

사건 발생 직후, 유엔군·주한미군·미 제8군 사령부(UNC·USFK·EUSA)<sup>16</sup> 작전참모 해병대 대령 디 채플린(D. Chaplin)의 통제 아래 ‘유엔사 위기대책반(UNC Crisis Action Team)’이 용산지휘소에 편성되었다. 이들은 사실을 파악하여 유엔군사령관, 미 태평양사령부, 미 합참, 주한 미국 대사관에 신속히 보고했다.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대장은 8월 16일 38년간의 군복무를 끝내고 오는 10월에 퇴역할 것임을 발표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부대를 고별 방문 중이었다. 일본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스틸웰 장군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sup>17</sup>



스티웰 대장

8월 18일 20:00, 집무실에 도착한 스틸웰 장군은 사복바지에 셔츠만 걸친 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유엔군 부사령관인 존 제이 번스(John J. Burns) 공군중장, 새로 부임한 참모장 존 케이 싱글러브(John K. Singlaub) 육군소장, 부 참모장, 각 참모부장,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및 비서장과 수석대표 특별보좌관(이문향) 등이 참석했다. 스틸웰 장군은 워싱턴에 데프콘-3(DEFCON-3)<sup>18</sup> 격상과 더불어 3가지 대응방책을 건의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것은 유엔군 측 수석대표 마크 피 프루덴(Mark P. Frudden) 제독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에 제시하기 위한 항의문과 유엔군사령관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작전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대응조치는 스틸웰 장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스틸웰 장군이 건의한 대응조치 방안들은 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스티웰 장군은 그의 최초 조치계획을 워싱턴에 보고하도록 하고, 2월 19일 서종철 국방부장관과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여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제4절 참조) 유엔군사령부 참모들은 밤 세워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측에 19일 11:00에 군사정전위원회를 열 것을 제의했다.<sup>19</sup>

##### 나. 미국 수뇌부

워싱턴에서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것은 워싱턴 시간으로 18일 00시경(한국시간 18일 14시경)이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쯤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가 국무부로



들어왔고, 이 보고들은 곧 취침 중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enger) 국무장관에게 보고되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스코우크로프트(Scowcroft)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을 통해, 캔자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참석 중이던 포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즉각 ‘워싱턴 특별 대책단(WSAG : Washington Special Action Group)’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키신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워싱턴에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부차관 아더 험멜(Arthur Hummel) 통제 아래 특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24시간 운영되기 시작했다.

한국시간으로 19일,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군의 행위는 “비겁하고도 잔인한 악독한 공격”이라고 통박하며, “이 사건결과 빚어지는 어떠한 사태도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키신저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1차 ‘WSAG회의’는 워싱턴 시간 18일 14:00(한국시간 19일 04:00)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윌리엄 클레멘츠(William Clements Jr.) 국방차관,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국무부 정치차관보, 제임스 할로웨이(James Holloway) 대통령 안보담당 부보좌관, 조지 부시(George Bush) 중앙정보국장 등 12명이 참가했다.<sup>20</sup> 이들은 북한의 도끼만행 의도 파악, 휴전선 지역을 비롯한 남북한 군사 능력 검토, 미국의 대응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도끼만행은 북한의 계획된 행동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더 이상 군사적 행동이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태의 긴박성은 감소되었다고 판단했다. 남북한의 군사능력 평가에서는 한국군이 화포와 공군력에서 절대 열세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원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현지 지휘관인 스틸웰 장군의 의견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미국의 대응책은 스틸웰 장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2차 WSAG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화력증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했다.(실제 이 권고사항들은 미루나무 절단작전과 더불어 그대로 실행되었다.)

① 주한미군의 전투태세 강화 ② 오키나와의 F-4 전투기 1개 대대 한국으로 재배치 ③ 미국 본토의 F-111전폭기 1개 대대 한국으로 배치 준비 ④ 일본 주둔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의 한국 해역 배치 준비 ⑤ UN 안보리와 중국·소련 대표에게 북한의 만행을 통지한다는 것이었다.<sup>21</sup>

## 2. 유엔군사령부 및 미국의 후속조치와 북한의 반응

### 가. 데프콘-3 격상에 따른 군사조치

유엔군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JCS : Joint Chiefs of Staff)의 승인을 받아 한국 주둔 모든 미군에게 8월 19일 10:30부로 유효한 데프콘(DEFCON)-3을 발령<sup>22</sup>했고, 30분 후 한국

국방장관의 동의하에 한국 내 모든 군대에게 데프콘-3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의 모든 부대가 8월 20일 11:30까지 상향된 데프콘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군사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군 제1군사령부와 한미 제1군단<sup>23</sup>의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들의 일반전초 부대는 8월 20일 밤에 전투진지를 점령했다.<sup>24</sup> 서울로 향하는 전략적 접근로를 방어하는 한미 제1군단과 그 피 작전통제부대는 8월 21일 07:00부로 데프콘-2 단계를 취했다.(이 데프콘-2는 48시간 이내에 데프콘-3로 환원되었다.) 주둔지 경계 강화, 정찰과 정보 수집활동 강화, 탄약의 전방지역 이동, 무기·장비·차량의 가동상태 유지를 포함한 데프콘 격상에 따른 조치들이 취해졌다.<sup>25</sup>

데프콘-3 발령에 따라 한국 내 미군 및 한국 공군기 80대가 공중 방공대기태세에 들어갔고, 40대는 지상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공중 방공대기 항공기수는 매일 약 75대 선으로 유지되었고, 지상 비상대기 항공기수는 점차 증가되어 8월 23일에는 70대로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8월 27일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34대로 감소되었다. 데프콘-3이 발령된 기간 동안 통합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비행훈련이 매일 실시되었고, 하루 평균 한국 공군기 220대와 미 공군 및 해군 항공기 80대가 참여했다.

8월 19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미 공군을 한국에 증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증원배치된 항공기 현황은 도표 <5-2>와 같다.

도표 <5-2> 한국에 증원배치된 항공기 현황<sup>26</sup>

기종	대수(총 54대)	소속	착륙기지	도착 일시
RF-4C	6	제18전술항공단	오산	8. 19. 18:21
F-4D	14	제18전술항공단	군산	18:46
F-4CWW	6	제18전술항공단	군산	18:46
HC-130	2	제33항공구조구난대대	오산	8. 20. 12:40
HH-53	2	제33항공구조구난대대	오산	14:20
F-111F	20	제366전술항공단	대구	17:55
KC-135	2	376전략항공단	광주	19:10
F-4E	2	33전술항공단	오산	8. 21. 19:45

공군 증파에 이어 8월 20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미드웨이 항공모함(USS Midway)을 주축으로 한 '항공모함 기동전단(Carrier Task Group) 77.4'를 대한해협 남쪽 해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함재기 65대를 실은 미드웨이 항공모함은 순양함 그리들리(USS Gridley)와 캐속 프리깃함 커크(USS Kirk), 쿡(USS Cook), 록우드(USS Lockwood),

프란시스 해먼드(USS Francis Hammond)함의 호위를 받으며, 8월 21일 08:00에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하여 8월 23일 04:00에 작전지역에 도착했다. 항공모함단은 도착과 동시에 전투태세를 갖추고 작전에 들어갔다. 한국전역에서의 해군 항공작전은 한국 공군과 미 제314항공사단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1해병사단의 병력 1,800명이 20일 한국으로 출동했다.

‘군수작전 통제센터’가 제3군사령부 내에 편성되어 모든 보급작전을 통제하고 연결하는 중앙통제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 센터는 탄약, 유류, 식량과 전투긴요장비 등의 소요를 파악하고 전쟁 예비물자를 불출할 준비를 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갔다.

이와 함께, 유엔군·주한미군·미8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술 통신-전자 시스템도 가동되기 시작했다. 통신부대가 야전에 배치되었고, 탱고지휘소(TANGO Command Post)의 통신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동식 보안전화는 한국 국방부·합참·육군본부 상황실, 제3군사령부, 미 제2사단, 유엔사 전진기지(키티호크 캠프)에 설치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FM 보안통신망이 구성되어 항공중계기를 통해 용산 지휘소와 전방부대를 연결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엔사 전진기지과 공동경비구역 간에는 직통 회로가 설치되었는데,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사 공동 일직실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연결되는 수신전용 음성 회로가 그것이었다.<sup>27</sup>

#### 나. 유엔사 및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와 북한의 반응

판문점에서 도끼만행사건 관련 첫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제379차)가 19일 16:00에 열렸다. 이 회의는 당초 유엔군 측에서 19일 11:00에 열자고 제의했으나, 공산 측은 아무런 응답을 않고 있다가 19일 정오경 경비장교 회의만 열자고 수정제의했다. 이에 유엔군 측에서는 13:00부터 본회의와 경비장교회의를 동시에 열자고 수정제의했으며, 공산 측에서 16:00에 열자고 다시 제의하여 결국 회의는 16:00에 열렸다.<sup>28</sup>

회의가 시작되자 유엔군 측 수석대표 프루덴 제독은 북한 측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먼저 낭독했다. 이 성명서는 스틸웰 장군이 초안한 것으로 미 국무부·국방부는 물론 안전보장회의 참모, 대통령 보좌관 등에 의해 조정된 공식 문서였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월 18일, 공동경비구역에서 까닭 없는 심각한 적대 행위가 북괴 경비병의 주도로 유엔사 경비병에 대해 자행되었다.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은 유엔사 경비장교 2명의 죽음을 가져온 북괴군의 노골적이고도 악랄한 호전 행위였다. 이 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전체 기구를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약정을 위배했고, 1953년 7월 쌍방이 합의한 공동경비구역의 중립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정식 조인된 지 23년 동안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요원이 현장에서 아만적 행위에 의해 살해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언쟁의 폭발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며, 2명의 유엔사 인원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행위이다.

이들 인원은 당신네도 자주 실시하는 유형의 일상적인 관리 기능에 종사하고 있다가, 도끼와 몽둥이를 휘두르는 수적으로 우세한 당신 측 병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공격당했다. 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네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 성명서 발표에 이어 프루덴 제독은 만행 현장에서 찍은 15장의 사진을 일일이 제시하며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둘째,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의 안전이 다시 침해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것, 셋째, 주범 박 철을 비롯한 관계자를 처벌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생트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도발은 유엔사 측이 먼저 했다면서 도끼를 집어 들어 증거물이라고 내세웠다. 심지어 북한 측은 우리 측이 내놓은 사진 증거물에 대해서도, “유엔군 측이 미리 계획하여 사진사까지 배치해 놓고 도발을 했으니 저렇게 많은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우겼다. 북한 측 수석대표 한주경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도끼를 증거물이라고 제시하며 우기는 북한 측 대표

유엔사 작업인원 100여 명이 경비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도로 옆에 서있는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북한 측 경비병 4명이 그곳으로 가서 그 나무는 북한 측이 심고 기른 것으로 도로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면서 약 30분간 자르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반드시 잘라야 한다면 북한 측과 상의해서 협의를 본 다음에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 경비병들은 북한 측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 측 경비병들에게 도발적인 행위를 시작했다. 북한 측 경비병 5명이 부상을 입었기에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유엔사 측이 계획적으로 자행한 도발행위이며 그 증거로 지난 8월 6일에도 바로 이 나무를 자르려는 것을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 나무를 자르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유엔사 측 5초소에서 유엔사 공동감시구역 지원단 부책임자와 유엔사 당직장교, 그리고 다른 장교들도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유엔사 측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측이 경비장교회의를 하자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측은 ‘아만스런 행위’나 ‘아만스런 살인사건’이니 하면서 북한 측을 욕하면서

자기들의 비행을 가리려 하고 있다. 유엔사 측 수석대표는 책임지고 이 사건에 가담한 주모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인 답변이었다. 유엔사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어 유엔군사령관의 메시지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후회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 측 수석대표는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DMZ와 해상에서 우리 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상투적인 태도를 반복함으로써 유엔사 측의 비난을 악화시키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었다.



김포공항에서의 영헌 봉송식

북한은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이 판문점에서 북한군에게 도발행위를 자행했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측이 19일 10:30부로 데프콘-3을 발령함에 따라 북한은 19일 17:00를 기해 최고사령관 김일성 명의로 전 군대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북한의 모든 정규군과 예비군 병력에게 대해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여 북한 전역을 비상체제로 돌입케 하고, 평양방송 등을 통해 미국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대내외에 선전공세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의 전투태세는 공격적인 것이 아닌 방어적인 것이었다. 이는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일 저녁 무렵 스틸웰 장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진기지(키티호크 캠프)를 방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돌아온 유엔군 수석대표 프루덴 제독으로부터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12:50, 김포공항에서는 18일 희생된 두 미군장교 보니파스 대위와 배렛 중위의 영헌 봉송식이 있었다. 스틸웰 장군은 식장에 직접 참석했다. 성조기에 싸인 고인의 유해 앞에서 장군은, “두 장교의 희생은 의무, 조국, 명예를 신조로 하는 미국의 2백 년 역사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며, 복귀의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응징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추도했다.<sup>29</sup>

한편 워싱턴에서는 현지시간으로 19일 08:00(한국시간 19일 22:00) 제2차 WSAG회의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키신저 국무장관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대통령 안보보좌관 스코우크로프트 장군은 사태의 확전을 염려했다. 그러나 부시 중앙정보국장이 제시한 최신 북한군 동향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군의 휴전선으로의 병력이동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군사적 대응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대신 스틸웰 장군이 건의한 대로 문제의 미루나무를 무력시위 속에서 절단하고, 북한에 대해 해명과 보상을 요구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의 공군력 증강을 위한 항공기의 재배치계획과 스틸웰 장군이 보낸 ‘폴 버넌(Paul Bunyan) 작전’ 이라고 명명된 미루나무 절단을 위한 기본 작전계획을 검토했다.

이 작전계획의 골자는 데프콘-3 격상에 따른 증강된 전력으로 무력시위를 하면서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하여 미루나무를 절단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죽은 미군 장교들이 실행하다가 중단된 일을 마저 마무리함으로써 유엔사 경비요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경비구역이나 비무장지대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합법적 권리를 침해 또는 부인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과시한다는 개념이었다. 이때까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세부계획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세부계획이 오는 대로 검토하여 포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밤 새워 세부계획을 완성하여 미 합참에 송부했고, 이 계획은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의 참모들에 의해 검토된 후 캔자스시에 있는 포드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워싱턴 시간으로 20일 아침 캔자스에서 포드 대통령과 스코우크로프트 장군은 이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에 10:15에 최종 집행 결심을 전달했다. 11:35(한국 시간 21일 01:35) 미 합참은 보안화를 통해 스틸웰 장군에게 작전 승인을 알렸다.

폴 버넌작전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동시에 군사적 준비도 함께 추진되었다. 작전계획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서종철 국방장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수립되었고 미국의 국가통수기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폴 버넌작전의 실행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작전개시 시간은 8월 21일 07:00로 결정되었고, 스틸웰 장군은 ‘기습, 신속한 실행과 철수, 북한군과의 교전회피’ 등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sup>30</sup>

## 제4절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조치

### 1. 한국 정부의 조치

8월 19일 오전 서종철 국방장관은 스틸웰 유엔군사령관과 만나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모든 한국군에 대해 데프콘-3 격상을 발령토록 합의했다. 그리고 스틸웰 장군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건의 전개와 유엔군사령부의 조치 및 미국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대응조치를 보고했다. 이미 도끼만행사건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던 박 대통령은 스틸웰 대장을 접견하자, 희생된 미군 장교 두 명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번의 도끼만행사건에 대해 미국 측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1968년의 ‘1·21사태’를 비롯하여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미 정보기 EC 121기 격추사건’ 등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거듭된 강력한 보복조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때그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이런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북한은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알보고 계속 도발해 온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 다시는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야말로 강력한 보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티얼웰 장군은 박 대통령의 견해와 미국 정부의 방침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과 포드 행정부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 북한이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을 감히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추후 다시 보고·협의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한편, 문화공보부 대변인인 김동호 보도국장은 18일 오후 북한군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한·미 양국이 굳게 단결하여 북한의 재침기도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19일 17:00을 기해 김일성이 북한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전투태세령을 발령하자, 정부는 정부차원의 특별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했다. 정부 대변인인 김성진(金聖鎭) 문화공보부장관은 특별성명을 준비하여 19일 18:30경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9:00 이를 발표했다. 이 특별성명은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총화된 의견이 집약된 듯 했는데, 그 성명의 핵심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무력으로 침략하여 아시아에서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세계의 평화 애호 국민과 더불어 전쟁광 김일성에게 전쟁 재발 기도를 즉각 포기하고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북괴는 작금 그들의 상투적인 거짓 선전을 격화시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북침설’을 우겨 오다가

마침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평화적으로 통상 작업에 종사 중인 유엔군 휘하 미군 장병과 한 국군을 야만적인 수법으로 살상하여 침략적 도발을 격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추후의 양심적 거 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그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기에 급급하다가 이제는 북괴의 정규군과 예비군의 전 병력에게 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북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시켜 대한민국을 다시 무력 남침코자 미리 계획된 전쟁 도발 각본에 따라 침략적 도발을 간교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상투적 기만 수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자유 애호 국민들은 북괴가 이다음에 어떠한 수법으로 나올 것인지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우리는 북괴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수법으로 재침 도발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깨끗이 전쟁 야욕을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박 대통령은 8월 19일 제3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서종철 국방부장관 대독)를 통해 북한이 재도발해 올 때에는 즉각 응징할 것이라는 단호한 결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공산집단은 침략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우리가 북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침략행위는 첫째,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견잡을 수 없는 반발과 심각한 권력투쟁의 내분을 일시적으로나마 얼버무리고 은폐해 보려는 어리석은 책략이다. 둘째, 그들이 남침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언제나 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또다시 불법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이제부터는 즉각적으로 응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한 응징의지를 표명했다.

8월 20일, 스틸웰 장군은 박 대통령을 만나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대해 보고했다. 스틸웰 대장은 미국정부는 도끼만행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재개하여 북한의 여하한 방해가 있더라도 미루나무를 절단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할 때에는 즉각 무력으로 대응, 판문점을 넘어 개성을 탈환하고 연백평야 깊숙이 진출하여 지리상의 근접으로 인한 수도 서울에 대한 위협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 미루나무 절단작전은 판문점 경비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미군 측이 나무 절단과 경호 및 근접지원을 담당할 것이며, 작전개시는 21일 07:00라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유사시 무력행사에 대한 작전준비 등을 자세히 검토·질문한 후에 흔쾌히 동의하면서 미군 대신 우리 국군을 제1선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두 명의 미군 장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미군 관할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미군의 희생을 내고 싶지 않다. 우리 국토 수호의 1차 책임은 우리 국군에게 있는 만큼 미군



지휘관 1명만 제외하고 절단작전, 경호, 근접지원 등의 제1선은 우리 국군이 맡을테니 미군은 제2선에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을 들은 스틸웰 장군은 큰 감동을 표시하고 미군의 생명을 아끼며 안전을 생각해 주는 박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이 제안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배석한 서종철 국방부장관과 노재현 합참의장에게 특전사령부 산하 정예부대와 서부전선의 제1선을 맡고 있는 육군부대로 하여금 금번 작전에 임하도록 지시했다. 그날(20일) 저녁 늦게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세호 육군총장을 다시 청와대로 불러 작전준비 상황을 검토하고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숙의했다. 합동참모본부장인 류병현 중장은 유엔사에서 거의 합동군무를 하다시피 하면서 스틸웰 장군과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국회는 20일 오전 외무·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회담을 열고 21일 이민우(李敏雨) 국방차관을 참석시켜 외무·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1일 국회는 예정대로 예결위 회의실에서 윤하정(尹河廷) 외무차관과 이민우 국방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무·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사건 관련 정부보고를 듣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조치를 촉구했다. 국민들은 반공단체와 개학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반공 궤기대회를 열어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고, 여론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조치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도발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sup>31</sup>

## 2. 한국군 특수전부대의 작전 준비

8월 19일 오후 공수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 준장은 류병현 합동참모본부장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합참본부장실로 출두했다. 류병현 중장은 박희도 준장에게 휘하의 제1공수여단 병력 중 정예요원을 얼마간 선발하여 특공작전을 펼 준비를 하라는 준비명령을 하달했다.<sup>32</sup> 이 때 류 장군은 작전임무 내용을 상세하게 하달하지 않고 다만 판문점에서 미군들과 합동작전을 할지도 모른다는 언질만 주었다. 그러면서도 류 장군은 이 내용은 기밀이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공대 규모나 특공대장의 계급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받지 못한 박 장군은 대략 오륙십 명 정도면 웬만한 임무는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대에 도착해서 작전참모 박중환 중령과 작전보좌관 김종현 소령을 불러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너희들 선에서 우선 철저히 보안유지하라. 가용한 몇 개 대대에서 오륙십 명의 대원을 선발해서 격리시켜 두어라. 선정되는 조(組)는 각 조별로 건제를 유지시키되, 그 선정의 기준은 체력, 담력, 훈련 수준에서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한다. 장남이나 독자들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특공대장을 제외한 장교 10명, 사병 53명(부사관 51명, 병 2명)이 특공대원으로 선발되었다. 이들은 모두 결사대 특공작전이라는 말만 듣고도 자원한 요원들이었다. 자원자 중

결혼한 하사관, 장남, 독자는 제외되었고 가능한 건제를 갖춘 5개 팀이 차출되었다. 박 장군은 5개 팀 중 가장 많은 2개 팀이 제5대대에서 선발되었고, 또 제5대대장 김택수 중령이 리더십도 뛰어난 점을 고려하여 그를 불러 특공대장을 누구를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중령은 한 달 전까지 제5대대 지역대장이었던 현 작전보좌관 김종헌 소령을 추천했다.

박 장군은 김종헌 소령을 불러, “국가의 체면과 우리 특전부대의 명예가 걸려 있는 작전이다. 자네가 특공대장 임무를 맡아보지 않겠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김 소령은 “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소령, 몇몇이 희생될지 모르는 작전이다. 네가 지휘자로서 최대한 희생을 줄이고 임무를 완수해라.”

“예, 여단장님 감사합니다. 맡겨 주십시오.”

“좋다 네가 특공대장이다. 지금부터 봉화관(제1공수여단의 체육관)에 가서 병력을 지휘해라. 내가 별도로 임무를 줄테니까 그때까지 대원들 사기 죽지 않도록 병력을 잘 장악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공대장이 임명되었고, 전체 특공대원 64명의 편성이 완료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박 장군은 그의 저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김 소령에게 임무를 주었을 때의 그의 표정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하겠는데, 투박하게 생긴 그의 얼굴 가득한 기쁨과 반가움의 표정이 나에게서는 전혀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혀 예상치 않은 그의 감사하다는 인사와 그 기쁨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감격과 고마움, 그리고 대견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외골수 공수부대 장교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지(死地)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단한 전화 한 통화 없이 그의 신혼 부인에게도 침묵을 지켰다. 나중에 그의 부인은 김 소령이 사지(死地)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절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지시한 보안을 철저히 지켰던 것이었다.

그날(8월 19일) 밤 군장검사를 완료한 후 김 소령은 대원들을 수습하고 봉화관 마룻바닥에서 대원들의 취침상태에 들게 했다. 그 사이 합참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키티호크 캠프에서 작전명령을 하달하니 참석하라.”는 지시가 긴급 전문으로 하달되었다. 그 지시에 따라 다음날(8월 20일) 아침 작전참모 박 중령, 특공대장 김 소령, 작전장교(통역담당 겸무) 김석찬 대위가 헬기를 타고 판문점 근처의 키티호크 캠프로 날아갔다.<sup>33</sup>



봉화관에서 군장검사를 하고 있는 박희도 여단장

## 제5절 폴 버넌작전과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

### 1. 폴 버넌작전

유엔사 병력들이 폴 버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결되었다. 전체 투입부대는 ‘브래디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BRADY)’<sup>34</sup>라는 암호명이 부여되었고, 예하부대는 공동경비구역 작전부대인 ‘비에라 특수임무부대’(비에라 중령 지휘)와 증원·지원부대인 미 제2사단 ‘9연대 2대대 특수임무부대’(토마스 케이 하이타워(Thomas K. Hightower) 중령 지휘)로 편성되었다. 수송·의료·군수지원 인력을 제외한 총 병력 수는 813명이었다. 특수임무부대의 편성은 도표 <5-3>과 같다.

도표 <5-3> 폴 버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 편성<sup>35</sup>

비에라 특수임무부대(총 428명)	9연대 2대대 특수임무부대(총 385명)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초소 경비병(9명)	미 2사단 9연대 2대대 혼성 소총중대(B·C 중대 140명)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2개 경비소대(60명)	미 2사단 공병대대 2개 팀(16명)
미 2사단 32연대 1대대 C중대(9연대 2대대의 TOW 4개 팀 증강)(115명)	미 2사단 9연대 2대대 A중대(110명)
1공수특전여단 특수부대(64명)	미 2사단 항공단(4-7 기갑수색대대, 2·52항공대대)(130명)
1사단 수색중대(169명)	

공동경비구역 경비소대는 권총과 도끼자루로 무장했다. 공병팀은 전기톱과 폭약을 휴대했다. 미 제2사단 제9연대 제2대대 A중대는 곡괭이자루를 들었다.(그러나 그들이 탑승한 트럭에는 M-16 소총이 숨겨져 있었다.) 모두가 태권도 유단자인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부대는 곤봉으로 무장했다.(그러나 이들이 탑승한 트럭에도 M-16 소총이 숨겨져 있었다.)<sup>36</sup> 한국군 제1사단 수색중대는 60mm 박격포 3문을 포함한 중대 편제화기로 무장했다. 미 제9연대 제2대대 혼성 소총중대와 미 제32연대 제1대대 C중대는 편제 소화기와 공용화기로 무장했다. 미 제2사단 항공단에 편성된 UH-1H 기동헬기 20대와 AH-1G 공격헬기 12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AH-1G 공격헬기 7대가 경기도 문산에 위치한 미 제2사단 스탠턴(Stanton) 육군 비행장 활주로에서 출동태세를 갖춘 채 비상대기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지정된 포병부대들도 폴 버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 사격태세를 갖추고 대기했다. 이들 포병 부대들은 도표 <5-4>와 같다.

도표 <5-4> 폴 버넌작전을 위한 지원포병 편성<sup>37</sup>

미 2사단 포병	위 치	한국군 포병	위 치
17포병 2대대(105mm)	문산 일대	3개 대대(+)	문산 일대
본부 및 본부포대	문산 동쪽 CS 073923	858포병대대(8")	문산 북서쪽 CS 035937
A포대	문산 북서쪽 CS 034953	868포병대대(8")	문산 북동쪽 CS 111953
B포대	문산 북쪽 CS 041961	606포병대대(155mm)	문산 동쪽 CS 052939
C포대	임진강 북쪽 CS 012961	722포병대대 1포대 (175mm)	문산 동쪽 CS 132904

유사시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미 공군 F-4D 14대가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에서 선회비행을 했고(07:00~08:30), F-4D 4대가 군산기지에서 즉각 출동태세를 갖춘 채 대기했다. 그리고 괄에 기지를 둔 B-52 폭격기 3대가 한 · 미 전투기 24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비무장지대 남쪽 100km 지역에서 선회했다.(06:30~08:00) 이들 전투기들은 고도를 500m까지 낮추어 북한 군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모든 부대들이 편성과 준비를 완료하고, 8월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까지 정위치했다. 비에라 특수임무부대는 전진기지에 위치했다. 혼성 소총중대는 트럭을 타고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에서 스탠턴 육군 비행장으로 이동했다. 미 제32연대 제1대대 C중대는 공동경비구역에 감시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내 115GP와 116GP에 위치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한미 제1군단과 이 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예하부대에게는 8월 21일 07:00부로 유효한 데프콘-2 격상 명령이 하달되었다.

폴 버넌작전은 8월 21일 06:48, 비에라 특수임무부대가 트럭으로 전진기지를 출발하여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경비소대가 공동경비구역 내의 유엔사 2·4·5초소와 공동 일직장교 사무실에 위치했다. 이 때 혼성 소총중대를 태운 UH-1H 헬기 20대가 AH-1G 공격헬기 7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스탠턴 육군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임진강 북쪽과 비무장지대 남쪽 일대에서 선회했다.

비에라 특수임무부대의 선두소대(경비 제2소대)는 근무자가 투입되어 있지 않은 북한 측 7·6·5초소를 차례로 지나 미루나무를 향해 곧바로 전진했다. 북한군은 평소 같이 수 미상의 인원이 공동경비구역 북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몇 명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서쪽 끝에 있었으며, 몇 명은 북한군 경비대 막사에 있었다. 경비소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트럭으로 다리 동쪽 끝을 막아서 북한군 경비대 증원군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했다. 공병들은 즉시 큰 가지를 톱질하기 시작했다.

07:02에 한국군 특수부대가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여, 경비 제2소대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를 점령하고 북한 측 5초소 부근의 교차로를 확보했다. 한국군 제1사단 수색중대는 유엔사 2초소를 지나 좌측 출입 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북한 측 8초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공동경비구역과 평행한 남쪽의 낮은 능선의 감제지역에 전개했다. 미 제9연대 제2대대 A중대는 유엔사 2초소에서 대기하면서 추후 지시를 기다렸다.

유엔사는 07:05에 “유엔사 작업반은 1976년 8월 21일,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간다. 그것은 지난 18일, 당신네 경비병들의 도발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작업을 평화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측 작업반은 유엔사 초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를 베어낼 것이다. 작업반은 임무가 끝나는 대로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할 것이다. 작업반은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는 통지문을 공동 일직장교를 통해 공산 측에 전달했다.<sup>38</sup>

07:22경 공동경비구역 서쪽에 위치한 북한군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차량 5대(버스 1대, 2.5톤 트럭 2대, 1/4톤 차량 1대, 민간 승용차 1대)가 서쪽에서 주도로를 따라 공동경비구역을 향해 달려오다 북한 측 4초소 부근에서 멈춰 섰다.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계급의 북한군이 권총이나 AK-47 소총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서쪽과 북한 측 4초소 남서쪽에서 유엔사의 나무 절단작업을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북한군의 출현에 대응하여 경비 2소대는 나머지 트럭 1대를 다리 동쪽 끝으로 보내 기존의 트럭과 합류시켰고, 미 제9연대 제2대대 A중대는 트럭으로 출입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공동경비구역 남쪽 경계선 바로 밖에서 하차하여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비했다. 북한 측 4초소 주변의 북한군 병력과 공동경비구역 내의 북한군들은 유엔사의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작전에 당황하고 약간은 겁먹은 듯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그들이 보인 산만한 움직임 속에는 혼란과 근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한군은 어떠한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07:45, 공병들이 미루나무 잘라내는 작업을 마쳤다. 약 12m의 미루나무는 가지와 몸통 밑부분 세 군데가 싹둑 잘렸다. 비에라 특수임무대는 출입도로를 통해 철수하기 시작했고, 08:06 제1사단 수색중대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08:20까지 유엔사 2초소와 116GP 진입도로 사이에 남아있던 공동경비구역 경비 2개 소대를 비롯하여 미 제9연대 제2대대 A중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들이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이동했다. 08:15에 공중지원 병력들을 태운 헬기들이 스탠턴 육군 비행장으로 귀환했다. 08:26까지 폴 버넌작전에 참가한 모든 병력이 공동경비구역을 이탈했다.

한편 미 제2사단장 브래디 장군은 폴 버넌작전 기간 중 UH-1H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했다. 작전이 마무리되고 예하 부대들이 비상대기 위치로 복귀했을 때까지 공중에서 지휘 및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조종사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월경하고 말았다. 10:30경 북한군의 사격을 받아서 한 발은 수직 안정 장치에 맞았고, 다른 한발은 우측 문포가에 맞았다. 헬기는 급히 돌아와서 리버티 벨(Liverty Bell) 캠프 부근 헬기장에 비상 착

룩했고, 브래디 장군은 다른 헬기로 갈아타고 정찰을 계속했다.

작전이 끝난 시간부터 이른 오후까지,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경비소대들과 미 제9연대 제2대대 A중대를 115GP와 116GP에 증원 배치하여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의 반응을 감시했다. 오전 중 소수의 북한군이 나무 그루터기,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리고 한국군 특수부대에 의해 입은 북한 측 5초소와 8초소의 피해상태를 가끔씩 확인하러 다니는 것이 관측되었다.<sup>39</sup>

## 2. 한국군 특수부대 작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 특수부대는 폴 버넌작전의 일부부대로 작전에 참가했다. 제3절에 이어서 이 부대의 작전을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는 시점부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명령수령을 위해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박 중령과 특공대장 김 소령, 그리고 작전장교 김 대위는 헬기를 타고 키티호크 캠프로 날아갔다. 키티호크 캠프에 있는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장(경비대대장) 비에라 중령 방에서 유엔군사령관 스틸웰 대장이 이들 한국군 장교들을 맞이했다. 그는 이곳에서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유엔군사령관, 주한 미군사령관, 미 제8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스틸웰 대장이 자신의 사령부나 집무실이 아닌 일개 대대장의 집무실에서 한국군 장교 3명과 얼굴을 마주하고 은밀하게 작전명령을 하달했던 것이다. 미군이 작전 관련 보안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스틸웰 장군의 명령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었다. 한국 특공대에 하달된 명령은 3가지 사항이었다. ① 미군이 미루나무를 절단할 때 그 주위를 경호한다. ② 무기의 휴대는 규정에 따라 금한다. ③ 한국군은 작전 부대장인 미군 중령 비에라의 지휘에 따른다.

스티웰 장군은 이 작전이 박 대통령에 의해 양해·승인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군의 수고를 기대한다는 정도로 평범하게 말했다. 그러나 한국 장교 3명은 그 분위기나 명령을 하달하는 장소와 방법 등의 상황조건으로 보아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단 한 줄도 문서상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었다. 미군 측에서도 보안 문제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측 장교들이 의견을 제기했고, 평소 담배를 잘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스틸웰 장군은 거의 줄 담배를 피우면서 답변했다.

“사령관께서는 한국군이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놈들은 도끼를 휘두르는 인간들 아닙니까?”

“한국군은 태권도를 잘하지 않는가? 태권도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정당한 작업을 하는 우리 측에게 도끼를 들고 덤비는 놈들인데 그들 앞에 맨주먹으로 신사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규칙이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충분히 조치하겠다. 몽둥이는 휴대할 수 있다.”

“상대하는 인간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무리한 작전입니다.”

“반복한다. 무기 휴대는 절대로 금한다.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태권도로써 적을 격퇴하라.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끝까지 규정을 준수할 것이니 설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맨 주먹으로 미루나무 주변을 둘러싸고 경비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작전명령을 하달하면서 스틸웰 장군은 구체적인 작전개시 시간을 하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군 부대가 움직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아직 지시받거나 시사받은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스틸웰 장군의 작전계획이 아직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군이나 한국군 모두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보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박중환 중령 등이 키티호크 캠프에서 명령을 수령하고 있는 동안 노재현 합참의장과 이세호 육군참모총장이 성관을 가린 채 신현수 육군 작전참모부장의 차에 편승하여 박희도 장군을 비밀리에 찾아왔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특공대는 판문점에 있는 미군대대에 작전통제 되도록 하라.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북괴군이든 밖에서 들어오는 증원군이든 간에 도발해오는 적이 있으면 철저히 응징하라. 적을 많이 처치하면 할수록 훈장을 많이 주겠다.”는 간략한 명령과 함께 박 대통령이 하사한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 장군은 한국 특공대의 임무를 달성하려면 특공대가 미군에 배속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현장 근처에 위치하여 작전지도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 부하들이니까 제가 특공대를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건의하여 승인을 얻었다.

명령을 수령한 박 장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그 자신의 생사와 부하들의 안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특공대 작전이 전쟁을 터지게 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전쟁이 난다면 그 책임은 자신이 도맡아 져야 하지 않는가?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어느 누가 책임져 줄 문제도 아니었다. 그리고 부하들의 희생도 적지 않을 것인데 미군들 사이에 끼여 부하들을 지휘해 나가는데 차질은 없을 것인가? 온갖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군인답게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의 마음을 굳히며 작전준비에 들어갔다.

작전을 준비·수행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극비리에 받은 명령과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가 모순·상충되는 것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것은 미군에게 맡기고 한국군은 지시대로 규정을 지켜 비무장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군 특공대가 미군 중령 비에라의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박 장군 자신은 지휘계통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박 장군은 부하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이 극비리에 부여받은 임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행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의 특공대가 결사대답게 대응하는 적을 보는 대로 모두 없애고, 증원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휘관으로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장군은 여러 가지 상념과 갈등 속에서도 결심을 굳혀 갔다. 첫째, 임무수행과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소총은 물론 수류탄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둘째, 어떤 방법으로도 지휘통신을 유지하여 발포명령을 주거나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식상으로는 미군 측의 요청을 들어야 함으로 특공대장에게 현지판단 재량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박 장군 자신 수준에서 종결시켜야 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든 미군들과의 충돌상황을 빚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떤 경우든 적군에게 납치되는 대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었다.

박 장군과 특공대원들이 출동준비를 거의 마쳤을 무렵 특공대를 문산 근처의 실내 체육관 ‘RC 4(Recreation Center #4)’로 이동시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공대원들은 공수단 마크, 이름표, 계급장 등을 군복에서 제거하고 총과 탄약, 수류탄은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군장 속에 넣었다. 대신 64개의 곡괭이 자루를 여러 묶음으로 하여 눈에 잘 띄게 하여 수송용 버스에 실었다. 박 장군이 특공대원들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를 강조하는 비장한 훈시를 한 후 이들은 두 대의 버스에 탑승하여 문산으로 출발했다. 그 때 시간은 8월 20일 22시경이었다. 행렬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미군 간보이 차를 선두로 해서 특공대를 실은 버스 2대가 따르고 이어서 박 장군과 작전참모, 제5대대장이 탄 짐차가 뒤를 따랐다. 약 한 시간 가량 달려서 23시경 일행은 ‘RC 4’ 실내 체육관에 도착했다. 박 장군과 참모들은 입구 쪽의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체육관 바닥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했다.

이제 문제는 언제 적군에게 발포를 하고 또 그때까지 특공대의 무장상태를 어떻게 미군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게 하느냐였다. 박 장군과 작전참모, 제5대대장, 특공대장 등은 발포명령을 언제 내릴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했다. 적병이 보이기만 하면 발포하자는 의견과 적이 먼 저 도발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이 100m 또는 200m 정도 접근하면 발포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토의 끝에 박 장군은 ‘적이 우리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발포’ 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러자면 결국 그 판단은 현장에서 지휘하는 특공대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문제는 특공대의 무장을 작전현장까지 어떻게 은폐해서 반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토의 끝에 특공대가 타고 들어갈 트럭의 적재함 양측에 샌드백을 쌓아 방호벽처럼 의탁하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샌드백 속에 M-16소총을 3등분으로 분해해서 넣기로 했다. 밤중이라 샌드백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특공대가 있는 곳이 군부대가 아닌 레크레이션 센터였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작전참모를 비롯한 간부들이 뛰어다니면서 샌드백을 구해 왔고 그 속에



소총을 분해해서 넣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특공대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은 대원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방탄조끼 안쪽에 권총과 수류탄, 크레모아까지 표가 나지 않게 넣도록 했다. 권총을 휴대하자는 안은 제5대대장이 건의한 것이었다. 근접전이 일어날 경우 소총보다는 권총이 유리하고, 적에게 포로가 될 상황에 처할 경우 자살용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키티호크 기지에 파견되어 미군과 협조를 하고 있는 김석찬 대위를 기다렸다. 21일 01시경 김 대위가 돌아와서 박 장군과 작전참모, 제5대대장, 특공대장이 모인 가운데 결과보고를 했다.

작전개시 시간은 21일 07:00이며 미루나무 절단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5분 정도이니까 현장 진입에서 철수 시간까지 시간을 10분 정도로 잡는 전격작전이라는 것이었다. 한국군으로서는 뜻밖의 작전계획이었다. 5분 안에 그 큰 나무를 잘라낼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 대위는 “어떻게 해서 5분 만에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느냐?”는 박 장군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5분이라는 미군 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스틸웰 대장이 나무 자르는 임무를 맡은 미군 공병대대장에게 두 번이나 질문을 반복했는데 그 공병대대장이 분명하게 5분이면 족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는 것이었다. 아마 스틸웰 장군도 5분이면 된다는 말에 대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김 대위는 말했다.

박 장군은 또 하나의 뜻밖의 보고를 들었다. 미루나무 주변은 미군들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경계를 할테니 한국군은 몽둥이를 들고 그 바깥의 군사분계선까지 나아가 경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즉 판문각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외곽의 일선 경계를 담당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무기는 권총 30정 만을 반입하되 이는 미군이 휴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무기 휴대를 금한다는 다짐을 재차 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들은 박 장군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회고록에서, “그 같잖은 나무 하나를 자르는데 내 부하들은 맨주먹으로 있다가 죽어도 좋다는 발상이 아닌가? 북한을 응징하는 마당에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기를 신주 모시듯 할 바에는 무엇 하러 한국군에게 몽둥이를 주면서 경계는 하라고 하는가? 차라리 도끼를 든 북한군에게 신사협정을 지키라고 할 일이지. 나는 미군들의 발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부하들이 팔시 받는 듯한 느낌마저 받고 분한 마음이 앞섰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특공대가 수행해야할 임무는 미군들이 특공대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인 없는 것이었다. 특공대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써 미군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 등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박 장군은 특공대장 김 소령에게 자세한 지침을 하달했다.<sup>41</sup>

“짧은 시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 우리 희생자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도록 하라. 일단 우리 지역 내의 대응하는 적병은 모조리 없애 버리고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적들은 우리에게 위해(危害)를 가해 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공격으로 격퇴하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소신껏 하되 미군들과 충돌이 될 만한 행위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격개시 명령에 신중을 기하되 일단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기다리지는 마라. 사격 시까지 우리 무장을 미군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유의 하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초의 발포명령이었다. 김석찬 대위가 전한 미군들과의 작전회의에서 합의한 ‘교전상황 판단에 대한 조건’은 적의 사격이 ‘연속적으로 3발 이상’ 이어지면 교전이고 그 이하는 교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군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토의를 했으며, 결국 1,2발의 사격은 오발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관망해볼 상황으로 간주하고 3발 이상의 사격이 가해지면 교전상황으로 간주하여 모든 작전요소가 적극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다.

박 장군은 새벽 3시경 특공대의 모든 장교(11명)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했다. “일단 교전이 붙으면 누가 먼저 발포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교전 결과가 중요하다. 일단 우리 편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그 즉시 선제 기습이 이루어지도록 특공대장 이하 간부들이 즉각 조치하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공대장의 판단하에 움직여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이상과 같은 지시를 하고 박 장군은 출동신고를 받았다. 박 장군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강조하는 짧은 훈시를 했다.

긴장 속에서도 대원들은 저마다 상기되어 우렁차게 합성을 질렀다. 박 장군은 일일이 대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아침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대원들은 3대의 트럭에 올라탔다. 차량 양쪽에는 샌드백으로 방호벽을 쌓아 유사 시 사격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그 속에는 M-16소총이 숨겨져 있었다. 대원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그 속에 수류탄 2발과 권총 1정, 크레모아를 표 안 나게 숨겨서 휴대했다. 각 팀별 임무 분담도 이미 이루어졌다. 공격조, 경계조, 지원조로 구분되었고 지원조는 차량에 남아 필요한 지원사격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 이제부터 주의할 것은 특공대의 무장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희뿌연 안개를 헤치며 트럭이 달리고 그 뒤를 박 장군이 탄 쫓차가 따랐다. 일행이 ‘자유의 다리’를 건너자 다리는 폐쇄되었다. 그리고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미군 막사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미군들은 자동차마다 모두 트레일러를 매달고, 그 위에 짐을 가득 실어 포장을 씌워 놓았다. 당시는 데프콘-3(07:00에 “2”로 격상)가 발령된 상태여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모두 남쪽으로 후송될 물품들이었다. 당시 이 지역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군들이 그의 가족들을 이미 후방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미군들은 일촉즉발의 전쟁 돌입 상황을 가상하여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윽고 일행은 JSA전진기지인 키티호크 캠프에 도착했다. 다행히 미군들은 한국군 특공대원들이 탄 트럭 내부에 대해서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서 한국군 특공대원들은 미군 대대장 비에라 중령 휘하로 배속되었고 김석찬 대위는 그의 한국군 작전장교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박 장군은 특공대장 김 소령과 악수를 나누며, “이제부터는 네가 한다. 최선을 다하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위는 비에라 중령과 함께 움직여 나가고 한국군 특공대를 태운 트럭들이 뒤를 이어 나갔다. 키티호크 캠프는 여차하면 후방으로 이동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박 장군은 작전현장의 무선 교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유의 다리’ 북방에 있는 미군 제9보병연대 상황실로 이동했다. 상황실에는 유엔군사령관, 미 제2사단장, 비에라 대대장으로 연결되는 지휘망이 구성되어 있고 현장의 작업조와 경계조 등의 통화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 대로 특공대의 선두는 트럭에 탄 채 문제의 미루나무 근처까지 신속히 진입했다. 아직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계(視界)가 5, 60m 정도였는데 도중에 북한군과 만나지 않은 채 들어갔으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 북한군 초소에서는 두어 명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편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놀랐음인지 초소 밖에 나와 한 동안 살펴보다가 초소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 상급부대에 보고하려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특공대장 김 소령은 계획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편에 A팀을 배치했다.

유엔군 3초소에서 다리까지의 거리는 30m가 좀 못되었다. A팀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는 북한군을 맡아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소령은 이곳 유엔군 3초소와 나무의 중간 부근에서 전체를 지휘했다. 유엔군 3초소와 나무까지의 거리는 50m쯤 되어 보였다.

A팀과 B팀이 타고 간 트럭은 쫑무니를 다리 쪽으로 향하게 세워 놓고 차에는 사격 지원조가 남아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M-16 소총으로 기관총처럼 집중 화력을 퍼부을 생각으로 삼각대 총받침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B팀은 유엔군 3초소와 2초소를 잇는 도로 옆에 배치되었다. B팀은 북한군 8초소를 수색했으나 여기에도 북한군은 없었다.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으나 계획된 대로 팀별 지원조를 즉각 사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준비를 갖추었다. 엎드려 썩 자세를 하고 총을 가슴으로 덮어 숨긴다든지 풀숲에 숨어 총이 보이지 않게 했다.

이어서 C, D팀이 두 번째 트럭을 타고 들어와 북한군 5초소 근처에서 하차하여 유엔군 5초소가 있는 언덕 아래 갈대밭에 배치되었다. C, D팀은 군사분계선에서 20m 정도까지 전진하여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완전히 매복을 했다. 매복조는 갈대 속에 완전 은폐했고, 6명만이 몽둥이를 들고 몸을 드러내어 북한군 5초소 근처 도로상에서 경계를 했다. 이곳 5초소에도 북한군은 없었다.

세 번째 트럭에 탄 E팀은 북한군 6초소 근처에서 하차하여 6초소와 7초소를 수색하고 판문각 방향과 자유의 집 동쪽 방향을 경계하도록 배치되어 예비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군 특공대가 순식간에 자리를 잡는 사이 미군 공병대를 태운 덤프 트럭이 미루나무 곁으로 이동하여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 때 비에라 중령과 김 대위 그리고 유엔군사령관과 직접 교신하는 미군 연락장교인 소령 한 명<sup>42</sup>이 상급부대와 무선을 주고받으며 유엔군 3초소 앞에서 나무 자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계획대로라면 5분 내에 나무가 잘라져야 했다. 그런데 3개의 나뭇가지 중에 첫 번째 가지를 다 자르기도 전에 전기톱이 나무에 끼어 버렸다. 한 여름이라 미루나무가 잔뜩 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 공병대가 전진기지에 가서 예비 톱을 가져 오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다. 비에라 중령과 유엔사 연락장교가 시계를 보면서 초초함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안개가 걷히면서 특공대장 김 소령도 내심 안절부절못하게 되었다. “뭔가 엇갈려 가는구나.”하고 생각하니 일말의 불안감이 일어났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으로는 북한군이 한 명도 없어 특공대의 활약상을 보여 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저편에 북한군 1개 중대 이상 되어 보이는 병력이 사천강 독을 엄폐물로 하여 일열 횡대로 전개하고 엎드려 사격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 김 소령은 오금이 저려 왔다. 상상외로 크게 한 판 붙을 것 같은데 우리 편은 노출되어 있었다.

C, D팀이 매복해 있는 갈대밭 앞에도 북한군 4, 50명이 엎드린 자세로 기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김 소령에게 들어왔다. 아직 군사분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사격을 해야겠다는 김 대위의 무전 보고를 받고 김 소령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적으로는 완전히 열세였지만 근접전으로 육박전을 한다면 해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 백 명의 적군이 지척에서 집중사격을 가해 온다면 손실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지휘자인 김 소령은 고독한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소령은 우리 편이 살상당하기 직전이라고 판단되면 선제 기습사격으로 적을 먼저 제압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으므로, 내심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반쯤 이상 건너오면 사격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2개 팀도 안 되는 병력이 매복해 있는 방향에서 수십 명이 전진해 오는 데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김 소령은 결심을 했다. 그리고 팀장 김 대위에게 명령했다. “일단 그대로 있어라. 만약 적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그 즉시 제압하라.”

그런데 적은 군사분계선 앞에 와서 전진을 멈추었다. 한 발자국만 더 왔더라면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다. 미루나무의 큰 가지 3개 중 2개가 잘려 나갔을 때쯤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로 북한군 군관 1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걸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다리의 이쪽 끝에는 몽둥이를 든 유엔사 측 경비소대원과 한국군 특수부대 A팀이 딱 버티고 서 있는 상황이었다.

김 소령은 트럭에 있는 사격지원조를 살펴본 후 그 앞으로 나아갔다. 다리의 중간만 넘어서면 쓰라고 지시하고 다리 쪽을 살펴보니 걸어오던 북한 군관이 겁에 질렸음인지 다리를 조금 넘어오다 뒤돌아가고 있었다.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역전되었다. 우리 팀이 샷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김일성은 잘 있냐? 이 간나새끼야! 이리 와 보라우!” “너희 인간 같지도 않은 개새끼들 모조리 없애 버린다.” “좀 와라” “야! 우리 맛 좀 볼래?”.....우리 대원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어 50m 건너편의 적병들의 약을 올렸다. 어떤 대원은 다리 앞에 나가서 바지를 내리고 적병을 향하여 오줌을 싸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적의 기가 죽자 A팀의 특공대원 1명(박호규 상병)이 북한군 8초소로 뛰어 들어가 장굴도로 유리창을 깨어버리고, 전화기도 내려쳐서 깨어 버렸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함께 달려들어 북한군 8초소와 5초소를 박살냈다. 초소 안으로 연결된 전선들이 부딪치며 번쩍번쩍 섬광을 발했다. 이 때 박호규 상병은 팔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는 기념으로 가져갈겸 해서 창문에 걸려 있는 빛바랜 노란색 실크 커튼을 찢어 봉대삼아 팔에 감고 나왔다.

한편, 북한군 6, 7초소 부근의 E팀도 6초소와 7초소를 모조리 부수고 북한군의 전화선을 끄 집어내어 잘라내 버렸다. 이 지역은 비에라 중령이 있는 곳으로부터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은 내친 김에 북한군이 설치한 도로차단기도 부수고자 했다. 그러나 도로차단기가 어찌나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대원들은 타고 온 트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미군 운전병에게 요청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미군 하사인 운전병은 권총을 목에 들이 대자 차를 움직였다. 차단기의 바리케이드에 철제 케이블을 걸고 차에 매달아 몇 차례 용을 쓰니까 부서져 나가버렸다. 대원들은 부서진 차단기의 잔해들을 들어내어 도로 옆 옹덩이 같은 곳에 던져 넣어 버렸다. 그 와중에도 북한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07:45이 좀 넘자 나무가 완전히 잘려 나갔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군 5초소 옆에 있는 차단기는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대원들이 트럭을 이용하여 이걸 제거하려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비에라 중령은 우리 대원들을 만류하며 철수하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미군들은 비에라의 명령에 따라 트럭을 타고 일부는 빠져 나가고 나머지도 계속 빠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sup>43</sup>

드디어 바리케이드가 모두 부서졌다. 미군들은 이미 트럭을 몰고 슬금슬금 나가고 있었다. 김 대위가 특공대 몇 명이 아직도 뒤쳐져 있는 것을 보고 트럭을 정지시켰다. 김 대위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나가는 미군 트럭도 김 대위가 미군 운전병의 목에 권총을 들이대자 정지하여 특공대의 마지막 대원들을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여 우리 특수부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고, 대원들은 박희도 여단장 인솔하에 키티호크 캠프로부터 전날 하룻밤을 새웠던 RC 4로 복귀의 길에 올랐다.<sup>44</sup>

11시 조금 지나서 우리 특수부대는 RC 4의 체육관 앞에 도착했다. 도중에 문산 일대에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도로변에 나와 손을 흔들고 뜨겁게 환호하는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었다. 새삼 가슴이 뭉클하고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RC 4에서는 뜻밖에도 스틸웰 장군의 환영과 격려를 받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은 땀에 젖어 악취까지 뿜어내는 64인의 특공대를 일일이 포옹을 하고 등을 두드리며, “자유의 투사에게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로 치하를 하고 떠났다.



- ① 미루나무 절단작업 개시 장면
- ② 잘려진 미루나무  
곡괭이 자루를 든 김종현 소령이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다.
- ③ 철수하는 유엔군사 병력
- ④⑤ 밀동만 남은 미루나무
- ⑥⑦ 미루나무 자리에 세워진 추모비  
밀동도 홍수로 쓸려 없어지고 이제는 추모비만 남아 있다.



RC 4의 장교클럽에 도착하여 대원들은 점심 식사를 했다. 참모들의 노력 끝에 육군본부 작전차장과 전화연결이 되어 박희도 장군은 작전결과와 이상 유무 보고를 마쳤다. 보고는 곧 작전참모부장,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선으로 이루어졌다. RC 4 장교클럽의 미군 장교들은 신이 나서 연방 ‘씩세스플(Successful)’ 을 소리치면서 한국군 특수부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어떤 장교는 “지금까지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력을 보여줬다.”면서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일보 전까지 갔었다.(We went about the war)”는 말을 하기도 했다. 장교클럽의 주방장인 미군 중사가 박 장군에게 다가와서 서슴없이 축하의 말을 건넸다. “장군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훌륭합니다. 음식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드십시오.” 식사가 끝나자 특공대는 곧장 부대에서 온 버스를 타고 귀대 길에 올랐다. RC 4의 미군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렬히 환송을 하여 주었고, 부대 앞 도로 변에는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다.

폴 버년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스틸웰 장군은 키티호크 캠프를 방문하여 작전 요원들을 치하·격려했고,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관 등이 작전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스틸웰 장군에게 보내왔다. 서종철 국방장관도 스틸웰 장군에게, “본인은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괴에 의해 저질러진 가공할 도발에 대한 오늘 아침의 적절하고도 성공적인 대응에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스틸웰 장군의 현명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치하 메시지를 보냈다.

### 3. 폴 버년작전 종료 이후 상황과 조치

판문점의 미루나무를 잘라낸 사실은 작전이 끝난 약 1시간 후 미 국방부에 의해 발표되어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간략한 사실발표에 그쳤다. 나무를 베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작업반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나무를 베기로 결정한 것은 워싱턴인가, 유엔군사령부인가?, 나무를 벨 때 북한 측의 저항이 있었는가? 등에 대한 기자들의 교묘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일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였다.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작전 이후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후 행동을 전개해 나가려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폴 버년작전이 끝난 이후에도 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폴 버년작전이 종료된 몇 분 후 북한 측은 우리 측에 항의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sup>45</sup>

당신네 측은 현재도 우리 측의 나무를 자르는 거만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동경비구역 내로

300명의 전투요원과 전투기들의 엄호 아래 현장 맞은편 고지에 수백 명의 전투요원을 불법적으로 투입하는 도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측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행위일 뿐만 아니라, 양측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계획된 도발행위이다. 우리 측은 당신네 측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무조건 중지할 것과 불법적으로 투입된 전투요원들을 공동경비구역 밖으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09:30경 유엔사 측은 다음과 같은 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측 작업반은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마쳤는데, 이 임무는 일찍이 당신 측이 방해했던 일이다. 덧붙여, 작업반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네 측이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제거했다.

11:00경 북한 측 수석대표는 전화 통지문을 통해, “8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전달된 바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인민군총사령관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12:00에 만나자”는 제의를 해 왔다. 이에 유엔사 측에서 응함으로써 12:00에 양측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의가 판문점에서 열렸다. 북한 측 한주경 수석대표는 상호 인사도 없이 바로 다음과 같은 발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본인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임을 받고 그가 당신 측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전달합니다.

‘판문점에서 오랫동안 큰 사건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이 도발을 사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먼저 도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발을 받으면 그럴 때만 오로지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본인은 당신이 이 통지문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당신 측 총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합니다.<sup>46</sup>

유엔사 수석대표는 북한 측 요청대로 이 통지문을 속히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북한 수석대표는 한 가지 첨부할 것이 있다면서 그날 아침에 사전 통보도 없이 수백 명의 완전무장한 병력을 이곳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하는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하면서 그 같은 행위는 8월 18일에 일어난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항의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사 수석대표는 “당신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오늘 이 회의에 나온 목적은 오로지 당신 측 총사령관이 우리 측



총사령관한테 전달하려는 통지문을 받으러 나온 것이지, 오늘 있었던 우리 측 작업이나 기타 안전을 논의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안건은 다음 번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시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북한 측 수석대표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유엔사 측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 같은 도발적 행위는 삼가달라는 요구를 하고 회의를 끝냈다.

김일성은 ‘유감’을 표시했을 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8월 22일, 우리 외무부 대변인은 김일성의 메시지를 수락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를 거부했고, 미국의 국무부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 메시지는 북괴가 그들의 과오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유엔군 장교 2명에 대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루나무 절단작전이 끝난 직후인 21일 09:30,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동 작전 이후의 북한의 반응과 제반정세 분석, 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 후 임방현(林芳鉉)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유엔군은 여하한 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의 굳건한 총화 단결이 요청되는 때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만행 규탄대회  
시민들이 규탄대회에서 김일성 화형식을 하고 있다.

미루나무 절단작전이 끝나고, 청와대의 성명 발표가 있는 이후에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민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전국에서 각종 종교·일반 단체와 직장 단위로 규탄대회와 희생된 두 미군장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었다. 마침 전국의 학교가 개학하자 학생들까지 학교나 지역 단위로 모여 규탄대회를 열면서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판문점 내의 미루나무를 잘라냈다는 평범한 보도 사실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김일성의 ‘유감’ 표시도 우리와 미국 정부가 목살해 버린 상황이라 국민의 마음을 흡족히 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8월 23일, 미국은 김일성의 ‘유감’ 표시 메시지를 수락할 수 없다던 당초의 태도를 하루 만에 바꾸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기 브리핑에서, ① 북한 성명을 유감의 표시로 인정하며 이것을 긍정적 조치라고 본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 장교를 잔인하게 살해한 비극적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③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북한 측의 확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25일 군사정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sup>47</sup>

미국의 이러한 발표는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불만의 태도를 분명히 표시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우리 외무부 당국자가 이것은 우리와 사전 협의된 것이라고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며 하나의 단계적 조치로써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응징책을 바랐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미국은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5일 오후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절단 이후 최초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sup>48</sup>

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25일 오전, 유엔군사령부는 미루나무 절단작전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고 작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을 감소시키고,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였던 것 같았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폴 버넌작전과 해·공군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가 대응이나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유엔사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낮춘 것으로 보였다. 그 증거로 8월 22일 북한 공군의 비행이 재개되었다. 며칠 동안 공군 비행활동이 평소와 달리 활발했지만, 훈련 패턴은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것이었다. 아마도 북한을 향한 한·미 공군의 비행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였다. 뒤이어 북한의 육군과 해군도 평소 수준의 통상적인 훈련을 재개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유엔사의 무력시위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 없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자, 유엔사는 8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취했던 방어준비태세 강화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갔다. 먼저 진지에 투입되었던 한국군 제1사단과 한미 제1군단 예하부대 및 피작전통제 부대들의 일반전초를 8월 22일과 23일 각각 철수하도록 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과 협조하에, 9월 8일 07:00부로 한·미군의 방어준비태세를 평시 상태인 데프콘-4로 환원하도록 지시했다<sup>49</sup>. 이에 따라 이날 '항공모함 기동전단 77.4'는 한국영해를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9월 16일 한국에 증파된 F-111과 F-4D 절반 정도가 아이다호와 오키나와의 모기지로 복귀했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10월 6일 최종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B-52 전략폭격기는 매달 한 두 차례 한반도에 대한 모의 폭격훈련을 계속했다.<sup>50</sup>

## 제6절 군사정전위원회 회담과 공동경비구역 분할 경비

유엔사 측이 요구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은 8월 25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렸다.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작전이 있고 난 다음 처음 열리는 회담이고, 김일성의 회담에 대해 논란을 한 차례 겪은 다음이라 이 회담은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회담에 나선 유엔사 측은 그동안 누누이 주장해 온 사건 책임자의 처벌, 유엔사 측 요원의 안전보장, 휴전협정에 보장된 쌍방 경비병의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회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북한 측에서는 대표 한주경만이 나왔는데, 평소 양갈지고 생떼쓰기 잘하며 판전만 피우던 그도 이날만큼은 풀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은 그의 이런 태도 때문이었다.

한주경은 유엔사 측 수석대표 프루덴 제독의 발언이 끝나자 영똥하게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업무를 분리 운영하자고 제의했다.<sup>51</sup> 유엔사 측의 요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응대하지 않으면서 발전적 대안이란 명목을 세워 이같이 제의한 것이었다. 분할 경비는 이미 오래전에 유엔군 측이 제안한 바 있었던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군사분계선을 판문점 내에 설치하고 유엔사 측과 공산 측이 각자의 구역만 경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공산 측은 이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유엔사 측도 더 이상 거론치 않았던 것인데 이번엔 오히려 공산 측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제안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었다. 책임자 처벌과 안전보장 등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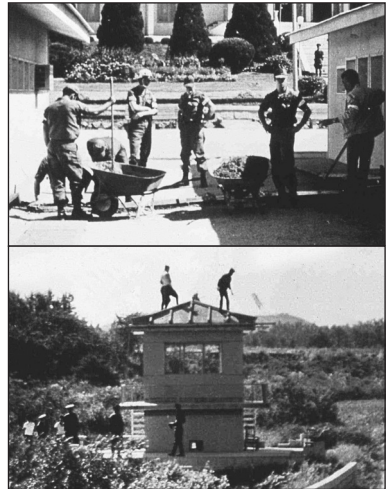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예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느니 보다 차라리 자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현실성 있는 결말을 짓고 싶어 했다. 유엔사는 재차 군사정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는 제외하고 안전보장의 문제만 거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는 28일 오후에 또다시 열렸다. 사건 이후 세 번째이면서 그와 관련한 마지막 본회의였다. 유엔사 측에서는 수석대표 프루덴 제독을 비롯하여 5명의 대표 전원이 참석했고, 공산 측도 지난번 회의와는 달리 중국대표 등 5명 전원이 회의장에 나타났다. 유엔사 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 고무되었는지 북한대표의 회의에 임하는 태도는 다시 거칠어졌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쪽지로 하나하나 전해 오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발언했다. 결국 이 회의에서 경비병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공동경비구역 분리경비 안을 실무적으로 다루기 위해 비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비서장회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 분리에 따른 세부 절차를 토의했다. 9월 6일 마지막 회의(제446차 비서장회의)에서 합의서에 양측의 비서장이 서명을 했고, 같은 날 양측의 수석위원이 비준을 함으로써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19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결되게 되었다. 결국 ‘8·18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은 세 차례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과 다섯 차례의 비서장회의를 통해 의견상으로는 해결을 본 셈이었다.

이에 따라 9월 7일부터 13일, 쌍방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JOT : Joint Observer Team)의 감독하에 군사분계선 표시작업이 실시되었다. 회의장 건물구역<sup>52</sup>에는 너비 50cm, 높이 5cm의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지름 10cm, 높이 1m의 시멘트 기둥이 10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sup>53</sup> 그리고 북한 측에 의해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되었던 4개의 경비초소들은 모두 파괴, 철거되었다.



군사분계선 표시작업과  
경비초소 철거작업 장면

비서장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원을 포함한 모든 군사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나,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조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구성원들은 제외된다. 둘째,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보조 인원들은 한 번에 1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측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공동경비구역 안의 통신시설을 관리·유지하거나 기타 허가된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 군사 인원이 상대측 구역에 넘어가려고 할 때는 상대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쌍방의 모든 비군사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나 회의장 건물구역에서만 허용된다.<sup>54</sup> 다섯째, 안전보장의 준수를 위해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시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여섯째, 유엔사 측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측 경비초소를 철거하고 경비요원을 철수한다.

당시 이 합의에 대해 국내외의 여론은, 공동경비라는 의미가 변질된 데는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신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통행을 봉쇄하고 북한 측 초소 4개를 공식 철거하도록 한 것은 사건의 발단이 된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공작이었다는 평이었다. 유엔사 측은 그때까지 북한 측 지역에 초소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동경비구역을 재정비한다면 유엔사 측으로서는 하등의 손해도 볼 것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혼합경비를 양측으로 분할시킴으로써 경비 요원들의 접촉을 막아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비롯한 유엔사 쪽 통로를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충돌이나 도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sup>55</sup>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합의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개선책일 수는 없었다. 우선 자기 측 경비요원 없이도 상대방 측 구역에 보도 요원, 관광객 등 비경비 인원의 자유 왕래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인가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비무장이 원칙인 이 구역에 지하땅굴 등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해져 더 큰 사고를 낼 우려도 있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이 새로이 합의한 공동경비구역의 분할관리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규정 개정 서명에 맞추어 공동성명을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서 보듯이 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결의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장래 행동을 결정할 때 한·미 양국의 확고한 결의에 대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합의서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이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조치이며, 이 조치들이 그대로 이행될 때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쌍방 요원의 안전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다.<sup>56</sup>

## 주(註)

- 1 김정렴(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정치회고록 아, 박정희』, 중앙M&B, 1997, 122쪽
- 2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52~53쪽, 강재윤, “전쟁위기 조성하는 북괴”, 『월간 정훈 9월호』, 국방부 정훈국, 1976, 33~34쪽
- 3 이에 대한 서방 측 결의안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건설적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8월 21일 제출되었다.
- 4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52~55, 59~60쪽 ; Edward F. Dandar, “The Poplar Tree Incident : The Use of US. Military Power”,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Studies, 1981, pp.5~6 ; 《동아·경향신문》의 8월 19일자 논설 및 주미 특파원 보도기사
- 5 1976년 북한의 외채는 공산권에서 7억불, 일본·서독·프랑스 등 서방국가에서 20억불로써, 당시 북한의 경제능력으로는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월간 정훈 9월호』, 1976, 40쪽)
- 6 남 일의 죽음과 관련하여 당시 북한의 중앙방송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정부원 부총리인 남 일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64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장의를 국장(國葬)으로 하며 김일성을 비롯한 35명의 장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돌연적인 사고라는 북한의 발표에는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① 사고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② 이날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3월 4일의 ‘농업 열성자 대회’와 3월 5일의 ‘토지개혁 30돌 기념보고대회’에 부총리로서 응당 참석해야 함에도 불참했다는 점 ③ 7일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8일 오전에 발표했고, 국장이라면서 단 하루만 문상객을 받고, 9일 오전에 조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점 ④ 장례위원 중 김일성과 김 일을 비롯한 16명이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점 ⑤ 장지도 북한의 1급 유공자들의 묘지가 있는 대성산구역 묘역이 아닌 형제산구역의 묘지라는 점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분석해 봤을 때 남 일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흥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통일일보》는 남 일은 김정일 후계세습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김정일 일파에 의해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설을,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는 김일성 집무실에서 김일성과 다투다가 경호원들에게 발코니로 끌려나와 떠밀려 추락사했다는 설을 보도하기도 했다.(『북한총람』, 299~301쪽 ;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100~101, 118~119쪽)
- 7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13~114쪽
- 8 『북한총람』, 299~301쪽 ;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100~101, 112~120쪽 ; 강재윤, “전쟁위기 조성하는 북한”, 34~35쪽 ; 김창순, “북한의 심각한 내부위기”, 『월간 정훈 10월호』, 국방부 정훈국, 1976, 139쪽
- 9 3초소를 지을 당시 북한 측은 도발적인 시설이라고 항의했으나, 이후 이 초소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 10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83~84쪽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1
- 11 한국인 노무단(KSC : Korean (Labor) Service Corps)은 6·25전쟁 기간 중에 준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인 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 수송, 부상병 후송, 야전진지 및 축성진지 구축, 도로

건설 및 보수, 보급소 운영 등을 통해 유엔군을 지원했다. 전쟁 당시 이들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10만 명에 달했다. 휴전 후에도 한국인 노무단은 미군에게 단순 노무를 제공했고, 1967년에는 간접 고용 민간 인력으로 재편성되어 미 제8군이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76년 당시 전체 규모는 3,200명 정도였다.

- 12 주한미군사 J3 브리핑(1976년 10월 14일, 주제 : 1976년 8월 18일 공동경비구역 사건)
- 13 이 날 투입된 노무자는 한국인 노무단 제12중대 소속의 작업반장 곽덕환(40세,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 선유리)을 비롯하여 김칠용(39세), 이정노(35세), 손원선(34세), 장통치(34세) 등 5명이었다.
- 14 1974년 3월 3일, 당시 공동경비구역 경비대 중사였던 박 철은 유엔사 경비대원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등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 늘 그가 끼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1974년 여름 어느 날 미군 경비병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일로 상부로부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장교가 되었다 한다.
- 15 국방군사연구소, 『비정규전사 II (1961~1980)』,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8, 342쪽 ; 『JSA 50년사』, 87쪽 ;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85~87쪽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p.12~15 ; 《동아·경향·전우신문》의 8월 19일자 기사(시간대별 세부적인 작전경과는 부록 참조)
- 16 당시 미국은 유엔군·주한미군·미 제8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운영했다. 본 사건은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했으므로 대응조치도 기본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기술은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로 표기하기로 한다.
- 17 휴가차 미국에 있던 주한 미국 대사 리처드 엘 스나이더(Richard L. Sneider)도 서둘러 한국으로 복귀했다.
- 18 데프콘(DEFCON :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은 워치콘(Watch Condition : 정보감시태세) 분석결과를 기초로 전군에 내려지는 방어준비태세로써, 정상 준비태세(5단계), 경계 강화(4단계), 준비태세 강화(3단계), 준비태세 더욱 강화(2단계), 최고 준비태세(1단계)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평상시는 4단계를 유지한다. 데프콘 격상은 유엔군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이 미국 합참에 건의하여 미 대통령의 승인을 득해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래 한반도에서 데프콘 단계가 격상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 19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15~116쪽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6
- 20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수술 후 미시간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 21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16~118쪽 ; Richard Nixon,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 A New Strategy for Peace(Report to the Congress, February 18, 1980), pp.170~172 ; Richard G. Head, Crisis Resolution :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Colorado : Westview Press, 1978) pp. 179-193 ; 《동아·경향·전우신문》의 8월 19일자 기사
- 22 같은 날 12:30에 휴가 또는 외출 중인 모든 미군 병력에게 AFKN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휴가와 외출은 8월 29일이 되어서야 부대의 경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었다.

- 23 한미 제1군단은 미 제1군단을 근간으로 1971년 7월 1일부로 한·미군 혼성군단으로 창설되었다. 이 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는 미 제2사단을 비롯하여 한국군 제6군단(제28·20·26사단)과 제1·25사단, 제2해병여단 등이었다.
- 24 제1사단 부대사 기록에 의하면, 군단장 명에 의해 8월 19일 11:57 데프콘-3 격상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12:20에 GOP(General Outpost : 일반전초) 부대가 출동준비를 완료했고, 14:40에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 전투지역 전단)부대가 출동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유엔 군사령관이 8월 19일 11:00부로 하달한 데프콘-3 변경 명령은 15:15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월 21일 03:40에 GOP부대가 진지점령을 완료했고, 07:00에 데프콘-3이 데프콘-2로 격상되었다가 18:35에 데프콘-3으로 환원되었으나, GOP지역은 계속 데프콘-2 상태를 유지했다.(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제2집(1966. 1. 1~1978. 9. 30)』, 1978, 373~377쪽)
- 25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6
- 26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6. 군사적 대응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F-111 20대는 미 본토의 아이다호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한국까지 13시간 만에 도착했고, 한국 배치 지시를 받은 시간부터 대구에 도착하여 무장 대기태세에 들어갈 때까지 총 26시간이 걸렸다.
- 27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p.16~18
- 28 이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측 대표들의 표정은 여전히 뻔뻔했으나 과거보다는 한결 수그러져 진땀을 흘리기까지 했다. 북한 경비병들도 예전엔 회담장 밖을 삼삼오오 떼져 몰려다니며 설쳤는데 이날만은 휴전선 북쪽에 모여 우리 측 경비병을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29 보니파스 대위는 33세, 배렛 중위는 25세로 둘 다 기혼자였다. 두 사람에게서는 퍼플 하트 훈장, 동성 훈장이 각각 수여되었다. 보니파스 대위는 진급 대상자였고, 소령으로 추서되었다. 유해는 8월 20일 한국을 떠났고, 보니파스 대위는 웨스트포인트에, 배렛 중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톤에 안장되었다. 우리 정부는 8월 21일 함병춘 주미대사를 통해 보니파스 대위와 배렛 중위에게 총무무공 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하고, 두 장교의 미망인을 위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 30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16~123쪽 ; 이문항(전 유엔사 특별고문),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60~62쪽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p.16~18
- 31 『김정렴 정치회고록 아, 박정희』, 123~125쪽 ; 《동아·경향·전우신문》의 8월 20일자 기사
- 32 당시 박 장군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공수부대의 고공 점프대회에 참석 중이었다.
- 33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32~140쪽
- 34 특수임무부대를 총 지휘한 미 제2사단장 모리스 제이 브래디(Morris J. Brady) 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 35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9
- 36 이상의 3개 부대는 공동경비구역 내로 직접 투입되는 부대였으므로 규정상 화기를 휴대(경비소대의 권총 제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곡괭이자루, 곤봉 등으로 무장했다.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특수부대에게는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나, 한국군은 트럭에 소총을 숨겨서 탑재했다.(여



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2항 참조)

- 37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19
- 38 일직장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에게도 이를 통지하고, 철수를 원하는지 문의했다. 이들은 남기로 결정하고,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무 절단작업을 감시했다.
- 39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p.19~23
- 40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40~179쪽, 박희도 · 김석찬 · 박호규(특공대 일원) 증언  
이 3명의 증언은 2012년 5월 10~11일 필자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장삼렬(2급 군무원, (예) 대령)이 청취했다.(세부 증언내용은 부록 참조)
- 41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33~152쪽
- 42 비에라 중령은 공동경비구역 내의 작전만 지휘하고 있었고, 전반적인 작전통제는 이 소령을 통해 전파되고 보고되었다.(김석찬 씨 증언)
- 43 이 작전으로 인해 김종현 소령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다. 그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잘라진 미루나무를 배경으로 촬영된 그의 사진 때문이다. 신문이건 잡지가건 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잘려 나간 문제의 미루나무’ 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은 김 소령이 무전기에 대고 “야! 빨리 빨리 해치워, 미군들이 이제 빠져 나갈 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79쪽)
- 44 박희도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들어올 때와는 대조적으로 나가는 길은 홀가분하고 싱그러웠다. 나는 1명의 손실도 없이 돌아온 용감한 부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미더웠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흐뭇함이야말로 지휘관이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기분이다. 우리 대원들은 더운 날씨 탓이기도 하지만 긴장된 수 십 분간의 작전을 하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결사대를 구성할 때 자원을 하였거니와 작전간 생사가 교차되는 엄청난 긴박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가능한 대로 조별 진체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급작스럽게 편조된 부대였다. 그리고 충분한 예행연습도 없이 투입되었건만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고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크나큰 긍지와 명예를 느꼈다.”
- 45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57~160쪽
- 46 1953년 휴전 이후 김일성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 47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99쪽 ; 《동아 · 경향 · 전우신문》의 8월 24일자 기사
- 48 이 회담을 포함한 이후의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 대해서는 제6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49 제1사단 부대사에 의하면, 제1사단의 경우 데프콘-3은 9월 16일 평상시로 환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76년도 『육군사』 제1군단 편에 의하면, 제1군단은 9월 21일 평상시로 환원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미 합참의 데프콘-3 환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일부 주요 부대들은 데프콘-3 상태를 며칠 더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 50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95~200쪽 ; 『JSA-판문점(1953~ 1994)』, 64~66쪽 ; “United Nations Command Activities : Panmunjom Tree Incident”, pp.23~25 ; 《동아 · 경향 · 전우신문》의 8월 22~26일자 기사
- 51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200쪽 ; 『JSA-판문점(1953~1994)』, 69~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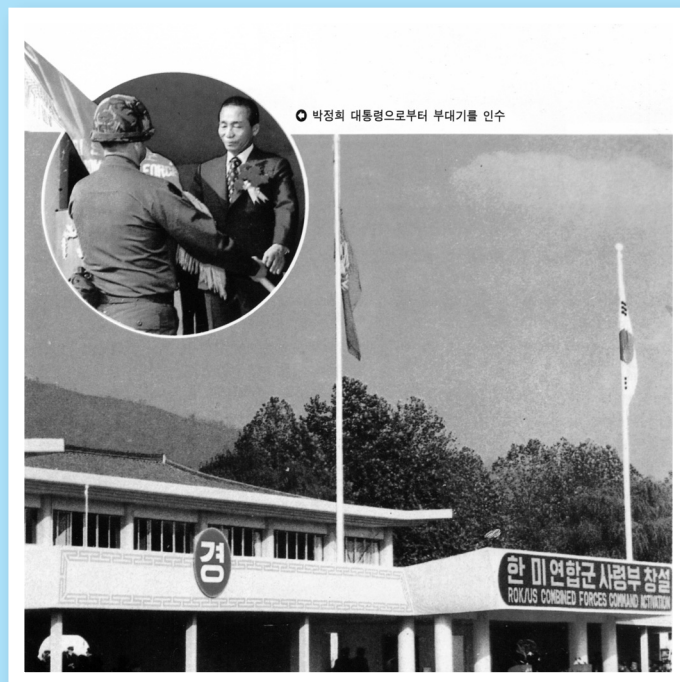
- 52 회의장 건물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상에 놓인 7채의 건물을 포함하여 서쪽 끝의 건물로부터 10m, 동쪽 끝의 건물로부터 10m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 53 기둥 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의 기둥 4개를 포함하여 총 59개이다.
- 54 그러나 유엔사는 방문객들에 대해 건물 내에서의 군사분계선 월경은 허용하고 있으나, 건물 밖에서의 월경은 신변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55 이후 북한 측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서 판문점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도로를 군사분계선 북쪽에 닦았고 72시간 내에 새로운 다리를 구축했다. 유엔사는 이 다리의 이름을 72시간 내에 지었다고 해서 '72시간 다리'라고 명명했다.
- 56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199~203쪽 ; 『JSA-판문점(1953~1994)』, 71~72쪽 ; 『JSA 50년사』, 94~95쪽

## 제 6 장

# 교훈과 사후조치

제1절 사건결과와 교훈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1978. 11. 7)

## 제 6 장

# 교훈과 사후조치

### 제1절 사건결과와 교훈

#### 1. 사건결과에 대한 평가

북한 측의 도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유감’ 표시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분할경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사건의 결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노린 ‘한·미 이간’과 국제적인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에 실패하면서 외교적 치명타를 입었으나, 대내적으로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다지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미흡하나마 그런 대로 국가적 체면과 명예를 지키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며,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유엔사의 합법적 권위를 지키고 경비병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한국에게는 이 사건이 다소 느슨해져 가던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굳혀 주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결속시켜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결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가. 북한의 입장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못되어 한·미가 방어준비태세를 격상시키고,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까지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 중단된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기어이 완료하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이자 김일성으로서는 내심 당황하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의 진실이 사진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공개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북침을 기도’ 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끌게 되면 자신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깨닫고는 하는 수 없이 ‘유감’이라는 최소한의 사과 표시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북한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큰 외교적 치명타를 입었는가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및 소련의 반응과, 사건 후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중국과 소련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전통적 후원국인 이들 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미국이 제시한 사진자료는 누가 도발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미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당시 중국과 소련 모두 북한의 전쟁도발을 원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도 바라지 않았다.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중국, 소련이 판문점 사건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북경과 모스크바가 그들의 성가신 맹방의 새로운 한국 전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증거”<sup>1</sup>라고 논평한 것은 이러한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중·소 양국의 태도는 내심 이들의 응원을 기대했던 북한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동맹국회의에서 북한이 노린 속셈은 실패로 끝났다. 사건발생 다음날 북한 대표는 이 사건을 들어 ‘미국과 한국이 북침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원국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당시 김일성 자신이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서둘러 취소한 사실만 미루어 보아도 그들의 속셈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유엔총회를 겨냥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비동맹국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지지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겠다고 나선 회원국이 30개국에 달하자 유엔총회의 표 대결에서 비동맹국 세력을 자기네 표밭으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알아차린 북한은 총회에 내놓았던 결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즉, 북한은 유엔총회 개최를 하루 앞둔 9월 20일, 공산 측 발의국들에게 지난 8월 16일 제출한 공산 측 결의안을 돌연 철회할 것을 요청했고, 발의국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결의안은 총회 개막 하루 전날 철회되었다.<sup>2</sup> 북괴가 결의안을 자진 철회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입은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때문이었다.<sup>3</sup>

끝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인권문제 등으로 미국에서 일고 있던 반한(反韓) 분위기를 이용한 한·미 이간,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기도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느슨해졌을 것이라는 북한의 예상과는 달리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강력 대응과 단호한 결의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한·미간 안보협력이 것처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전개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이간을 촉진시키려던 북한의 기도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필수불가결함을 내외에 널리 인식시킴과 아울러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의 긴장은 한·미 양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전쟁모

힘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김일성의 ‘유감’ 표시는 북한의 국제적 위신 추락과 외교적 입지가 위축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도 몇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미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 ‘유감’ 만 표명하고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버텼다. 결국 미국이 이 요구를 철회하고 사건을 평화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보고, 미국은 베트남전 종전 후에도 1968년 푸에블로호 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분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기도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신 사건은 내부통제 및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 북한은 전쟁이 곧 발발할 지도 모른다는 초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위 ‘미제와 남조선의 북침위협’ 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주민의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선전선동을 했다. 제5장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을 통해 김정일 세습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 나. 미국의 입장

본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절반의 성공’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미루나무를 끝까지 절단해냄으로써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유엔군사령부의 합법적 권위를 과시 및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력시위를 통해 휴전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의 ‘유감’ 표명을 받아냄으로써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고, 한반도의 안정과 휴전협정 유지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도 외교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9월 1일(미국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정치 및 군사 소위원회’ 에 출석하여 증언한 국무성 허벨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차관보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응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계속 고수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평양은 이제 한반도의 안정유지 및 휴전협정의 계속 유지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 만은 명백하다.”<sup>5</sup>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최종결론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제정치 맥락 속에서 미국의 무력시위와 결의 앞에 북한이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군장교 2명이 숨지고 한·미 양국군 병사 9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북한에 대한 응징이나 보상요구도 없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북한에 의해 묵살됐다. 미국은 처음에 의도했던 소박한 계획의 달성, 즉 미루나무를 절단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데 그쳤던 것이다.

## 다. 한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북한의 계속되는 안하무인격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희망했던 정부와 국민의 기대는 좌절을 겪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다시 우려해야 했다. 사건이 터진 후 스틸웰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했을 때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우리 특전사 요원까지 적극 지원했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대통령으로서 점잖지 못한 표현까지 써가며 응징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은 연일 격렬하게 규탄대회를 벌였고, 여론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면서도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도발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한미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포드 행정부 들어서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민주당 카터 대통령 후보의 동 정책 재추진 공약으로 인해,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에 대한 한국의 불신과 의혹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여함으로써 한미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한·미간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는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총력안보체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은 '74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과 더불어 북한의 호전성과 실제적인 위협이 변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 운동 등으로 자칫 분열될 수 있었던 국민여론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을 결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 2. 교 훈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 정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만행도 저지를 수 있는 야만적인 살인정권이라는 본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는 한계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 국민의 뜻과 여망에 우선한다는 세 가지 측면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북한 정권의 목표는 그들의 유일독재체제의 유지·강화와 대남적화통일 달성에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켜 수 백만 명을

죽게 만들고 1천만 명의 남북이산가족을 빚어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남·대미 도발을 자행했다. 1960년대는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대통령을 살해하려고까지 했고, 미함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하기까지 했다. 1970년대에는 또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고, 안타깝게도 대통령 영부인이 서거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비무장 미군을 도끼로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sup>6</sup>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태는 북한 정권이 인륜이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야만적인 집단이요 살인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북한 강압외교의 실효성과 한계성 문제이다. 사건 초기 한국과 미국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면서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했으나 결국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정작 문제를 유발한 북한에 대한 응징 방안을 일찌감치 철회함으로써 강압외교의 효과를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초부터 개전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온전한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와 함께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다.

물론 북한이 한·미 양측의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시 미국의 강압외교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북한은 결국 미국의 전쟁 의지가 없음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무력시위를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다라면 김일성의 유감 표명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관련자 처벌이라는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미루나무를 절단한다는 것은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었다.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보복이나 보상 요구 없이 단순히 미루나무만을 절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사건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무력시위를 통한 군사적 강압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제 당사국인 북한이 이를 직접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으나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북한이 과거의 학습효과를 통해 미국의 전쟁 의지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데프콘 격상이나 미국의 군사력 이동 배치 등의 시위는 그 규모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진지한 강압의 실체로 온전하게 투사되지 못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유사한 사건을 되풀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효과를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도 이러한 학습효과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 달리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원치 않고 있었다. 미국은 무력시위를 하면서도 사태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은 초기에는 강력한 응징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을 끝까지 굴복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여망과 의지는 관철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뜻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미국의 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다양한 도발을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등 북한에 의한 각종 테러와 안보 위협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최선의 방책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즉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자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앞으로 또 다시 유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6년 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절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할 것이다.

##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한미연합군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의 호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그 대처과정에서 한·미군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이 사건 이전부터 한·미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압력을 받아왔고, 한국의 국방력도 어느 정도 신장된 만큼 효과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닉슨 행정부의 등장으로 동서 데탕트의 진행과 더불어 1971년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이루어지고, 1971년 10월 중국의 유엔가입과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적 발언권이 증대되면서 한국에서의 유엔군사령부 존속문제가 대두되었다. 1974년 공산 측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유엔에 건의했고, 유엔은 제29차 총회에서 결의안<sup>7</sup>을 채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할 방안을 한국 측과 협의하면서 한·미 연합군 구성과 ‘한·미군사위원회’ 설치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휴전협정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미국정부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군장성 지휘하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관할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다.<sup>8</sup>

이후 포드 행정부의 등장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중단되면서 진행이 부진했으나,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터지고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재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77년 6월 서중철 국방부장관과 유엔군사령관 존 더블유 베시(John W. Vessey) 대장의 공동지시로 ‘한·미 실무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해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미 지상 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 완료 전에 한국방위의 효율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978년 7월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군사위원회’와 ‘연합군사령관 권한 위임사항’을 합의했고, 동월 28일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양국의 합참의장은 ‘전략지시 제1호’에 서명했으며, 초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지명했다. 이후 10월 17일 우리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대사간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를 교환했고, 마침내 그해 11월 7일부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78년 11월 7일 14:00,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이 박정희 대통령과 브라운 미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에서 거행되었고, 한미연합군사령관에는 베시 유엔군사령관이 겸임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마크 (위), 창설식에서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아래)

임명되었고, 부사령관에는 류병현 대장이 임명되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미 지상군의 일부 철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부동한 결의의 표명”이라고 강조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늘의 이 협조체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침략자에게 추호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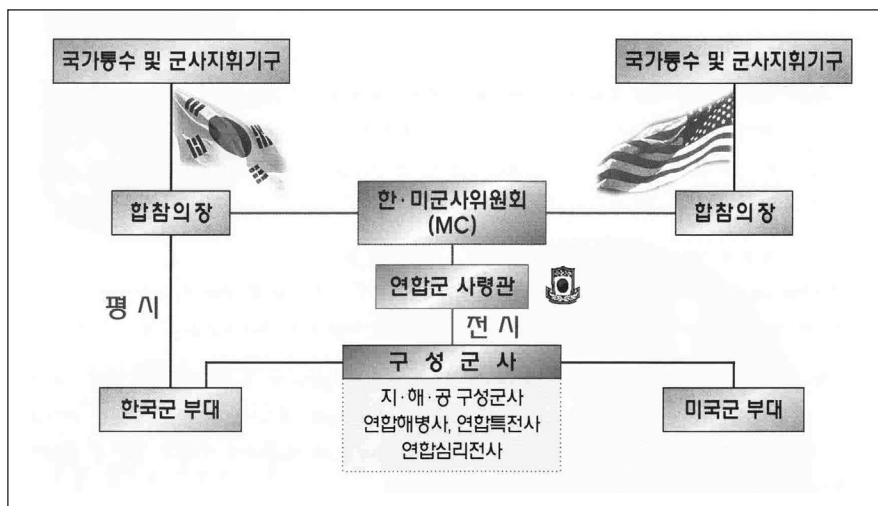
미 브라운 장관은 축사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고, 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격퇴하는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계속 한반도에 남아 있을 것을 결심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한·미 연합작전 수행은 물론, 전·평시 미국의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사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전까지는,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sup>9</sup>을 일방적으로 행사해 왔으나, 창설 후에는 ‘한·미군사위원회’의 공동의장인 양국의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자국의 통수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하달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한국 측의 의사를 반영 및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환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는 도표 <6-1>과 같다.<sup>10</sup>

도표 <6-1>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sup>11</sup>



## 주(註)

- 1 《Newsweek》, Aug. 30, 1976
- 2 원래 우리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론은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 이를 가급적 지양하고 유엔 밖 해결을 모색했으나, 북한이 먼저 공산 측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서방 측 결의안을 제출했던 터라 우리도 이를 9월 21일 자진 철회했다.
- 3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203~206쪽
- 4 김창순, “북한의 심각한 내부 위기”, 『월간 정훈 10월호』 (국방부 정훈국, 1976), 142~143쪽
- 5 《동아일보》, 1976년 9월 2일자 기사
- 6 6·25전쟁 이후,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국을 증오하게 만들었다. 1971년 북한을 방문했던 한 일본인은 유치원생들이 미군 인형을 쓰러뜨리고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도끼를 휘두른 북한군 병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 7 유엔총회 결의안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전협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 책임에 속하는 한국문제의 관련사항을 직접적인 관계당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사 제4집(1972. 1~1981. 12)』, 692쪽)
- 8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 1994, 334쪽
- 9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7일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를사록’ 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11월부터는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신오성기확인쇄사, 2004, 51쪽)
- 10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48~49쪽 ; 『국방사 제4집(1972. 1~1981. 12)』, 692~698쪽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사』, 행림출판사, 1979, 403~405쪽
- 1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50쪽

부 록

APPENDIX

# 부 록

## APPENDIX

- 부록 1 대통령 훈령 제18·19호
- 부록 2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
- 부록 3 남북한 국력 및 군사력 비교
- 부록 4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관련 원본사료
- 부록 5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
- 부록 6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경과
- 부록 7 폴 버년작전 경과
- 부록 8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 부록 9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할 관리 합의서
- 부록 10 사건 관련 증언록

**【부록 1】 대통령 훈령 제18·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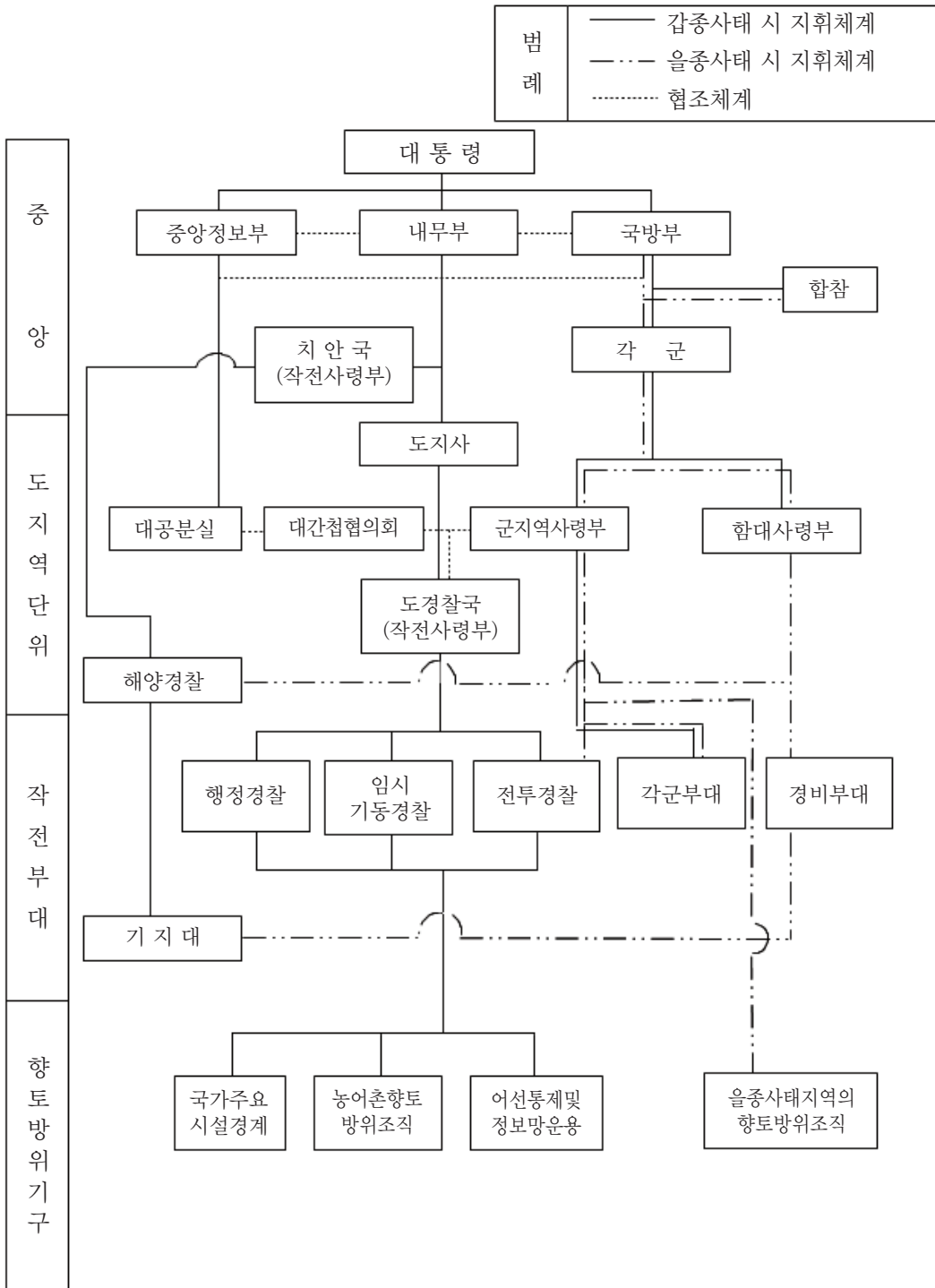
□ 대통령 훈령 제18호<sup>1</sup>

1. 사태 분류 및 지휘책임

사태 분류	개 념	지휘책임
갑종사태	무장간첩이 침투, 부분적인(일부지역) 기습, 파괴 및 살상행위를 자행함에 있어 경찰력 또는 일부 소수 군 병력의 단기간 지원으로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대간첩작전 수행 (해상 및 군 전방지역 제외)
을종사태	갑종사태에 부가하여 전국적 또는 일부지역에 무장간첩 행위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후방 부대병력 또는 일부 전방 전투병력을 해 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되 을종사태 선포지역의 작전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관장
병종사태	을종사태에 부가하여 전국적 또는 일부지역에 대량 침투한 무장간첩이 유격거점을 확보하고 중요시설의 파괴, 학살, 약탈 등 사회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해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할 경우	임명된 계엄사령관에 의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 위협이 낮은 순으로 갑·을·병종사태로 분류

## 2. 대간첩작전 지휘 및 협조체제





### 3. 행정 각부 및 기관의 일반적 임무

구 분	부 처	임 무
중 앙	내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종사태 시 예하 경찰로써 후방지역 대간첩작전 수행</li> <li>• 갑종사태에서 을종사태로의 전환을 당해 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출동을 요청하며 국방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과 협조하여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하달</li> <li>• 을종사태 선포지역의 전투경찰 작전통제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이양</li> <li>• 해군과 해상 대간첩작전 관련 협조를 하고 국방부장관 요청시 해양경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li> <li>• 국가중요시설 경비상태 지도감독</li> <li>• 농어촌 부락단위 향토방위대의 조직과 운영을 지도감독</li> <li>• 어선통제 및 정보조직 운용을 지도 및 감독</li> <li>• 경찰연락관을 국방부(합참)에 파견</li> <li>• 경찰 작전상황(작전명령, 적정, 부대배치, 작전성과, 포로심문 결과 등)을 국방부(합참)에 일일 통보</li> </ul>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태 구분 없이 군 전방지역(군단지역)의 대간첩작전 수행</li> <li>• 사태 구분 없이 함정 및 항공기에 의한 해상 대간첩작전을 수행(필요 시 해경의 작전을 통제)</li> <li>• 갑종사태하에서 실시되는 경찰의 대간첩작전을 지원</li> <li>• 을종사태 시 해 지역 전투경찰의 작전을 통제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li> <li>• 을종사태지역 국가중요시설 경비 지도 및 감독</li> <li>• 대간첩작전 종합대비책(본 지침)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시행사항을 파악, 확인, 건의하기 위한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li> <li>• 군 연락장교를 내무부(치안국)에 파견</li> <li>• 군 대간첩작전 상황을 내무부(치안국)에 일일 통보</li> </ul>
	중 앙 정 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공정보를 조정하며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li> </ul>

행정 각부 및 기관의 일반적 임무(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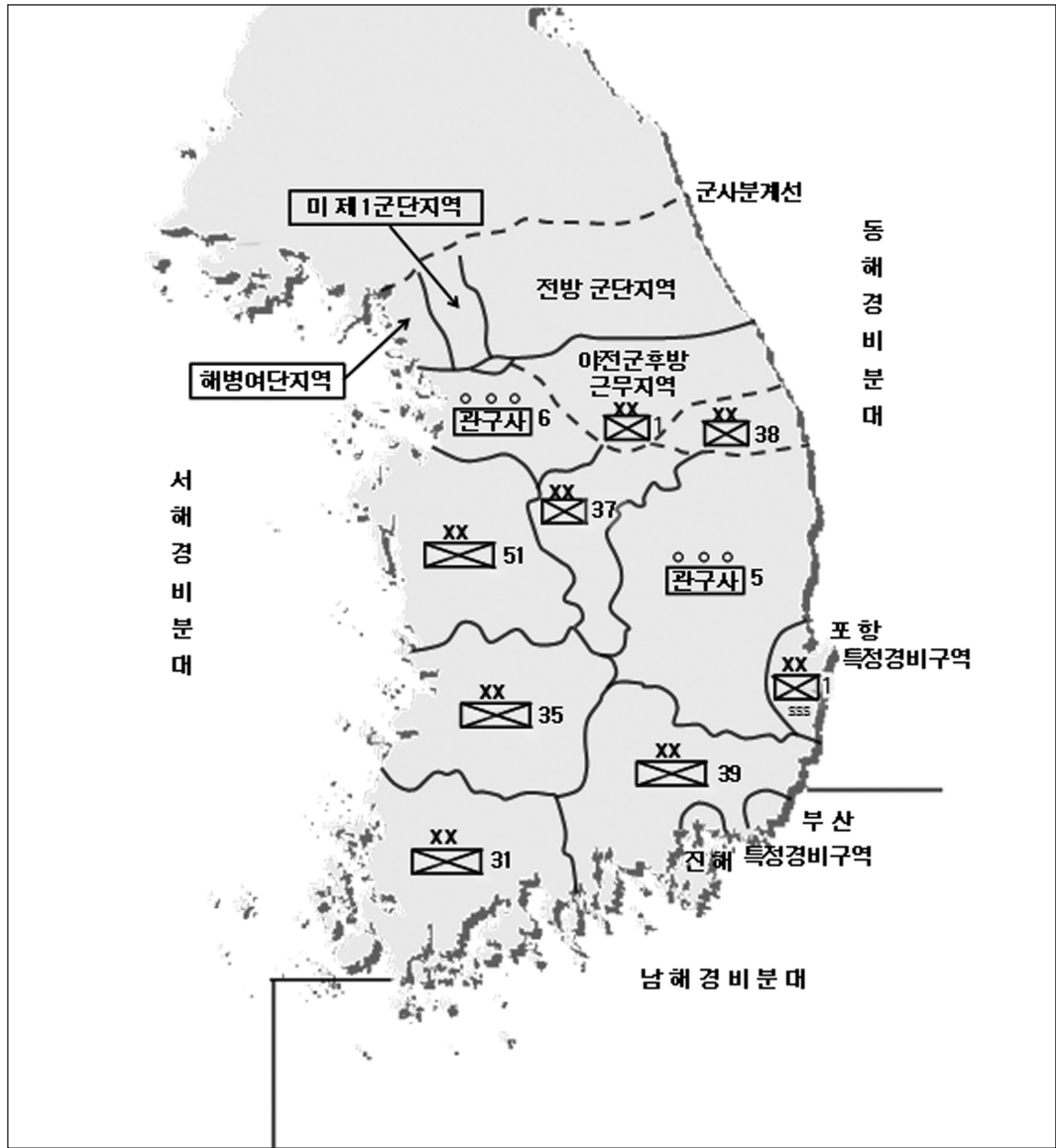
구 분	부 처	임 무
도 지 역 단 위	도 단위 대 간 첩 협 의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지역단위로 대간첩작전 요소 조정</li> <li>- 각 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조정, 집중적이며 효율적인 대간첩작전 실시</li> </ul> </li> <li>•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 도지사</li> <li>- 위원 : 군 지역사령관, 대공분실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도경국장, 기타(필요 시 의장이 지명하는 기관장)</li> </ul> </li> <li>• 의장의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협의회 회의를 관장</li> <li>- 군경 및 각 기관에서 제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li> <li>- 필요 시 군부대 출동 요청</li> <li>- 을중사태로의 전환 건의를 의결하고 내무부장관에게 건의</li> </ul> </li> <li>• 도 단위 대간첩협의회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경·관·민의 비협조적 요소 제거</li> <li>- 전투경찰 중대의 최초 배치 및 임무 조정</li> <li>- 군, 경 작전지휘관계 조정</li> <li>- 향토방위법의 효율적인 운용</li> <li>- 민폐 대비책 강구</li> <li>- 대간첩작전 공로의 심의 결정</li> </ul> </li> </ul>

4. 대간첩 작전지역 구분

군 전방지역	후방지역	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군의 군단지역</li> <li>• 미 제1군단지역</li> <li>• 김포 해병여단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도,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li> <li>• 포항, 진해특정경비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 경비분대 해역</li> <li>• 서해 경비분대 해역</li> <li>• 남해 경비분대 해역</li> </ul>

\* 각종 사태에 따라 지역별로 지휘책임 부여

5. 대간첩작전 책임지역 요도



- ◇ 2개 도(道) 이상이 관련되는 대간첩작전의 지휘권은 관구사령관 또는 제2군사령관이 관련 지역 도지사와의 협조하여 조정한다.
- ◇ 후방지역에 위치한 타군은 대간첩작전에 한하여 육군 제2군사령관 지휘하에 실시한다.

6. 지역별 · 사태별 지휘 및 협조체제

구분	갑중사태	을중사태	병중사태
한국 군단 지역	군단장이 군단지역 내 경찰을 작전통제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갑중사태와 동일	임명된 계엄사령관에 의해 대간첩작전 수행
미 제1군단 지역	경기도 경찰국장이 미 제1군단장과 협조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김포 해병여단 지역	여단장이 지역 내 배치된 경찰을 작전통제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해역	해군 각 경비분대 사령관이 해양경찰 협조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후방지역	2도 경찰국장이 군지역사령관과 협조하여 대간첩작전 수행		
서울 (한수 이북)	사태 구분 없이 한강수역 북단 이북은 수도경비사령관 책임하에 대간첩작전 수행		
서울 (한수 이남)	서울 시경국장 책임하에 대간첩작전 수행	제6관구사령관이 군 전방지역 및 한수 이북을 제외한 한강수역 및 서울특별시와 한수이남 지역의 대간첩작전을 수행	임명된 계엄사령관에 의해 대간첩작전 수행
경기도	도 경찰국장 책임하에 대간첩작전 수행		
청와대 특정경비구역	외곽경비 : 수도경비사령부, 내곽경비 : 경호실		

※ 사건지역의 대간첩작전 임무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은 미 제1군단(미 제2사단) 지역을 통과하여 서울외곽을 거쳐 청와대 근처까지 진입했다. 따라서 미 제1군단지역(서울 북방)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미 제1군단장과 협조하여 경기도 경찰국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임명된 계엄사령관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지역의 작전은 수도경비사령관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 7. 후방지역 각군 부대 사용 지침

### ○ 작전개념

-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은 예하부대를 군 지역사령관 지휘하에 대간첩작전에 사용토록 조치
- 군 지역사령관은 통합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내의 각군 부대를 통합 지휘
- 부대의 대소를 막론하고 명령수령 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훈련된 전투대 기조를 편성 유지
- 군 지역사령관은 관할 위수지역 단위로 명령 수령 후 4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잠정부대를 편성, 대간첩작전에 운용
- 부대 훈련은 지역수색 및 취약지역 거부작전을 병행하여 수행
- 군 중요시설 경계 강화

### ○ 대간첩작전 전담대대 증편 운용

- 8개의 대간첩작전 전담대대를 증편, 각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1개 대대씩 배치하여 경찰작전을 지원, 적을 침투초기에 격멸
- 증편되는 대대는 예비사단의 건제 1개 대대의 기간요원을 모체로 증편

## 8. 전투경찰 운용

- 임무 : 해안봉쇄, 국가중요시설 경비(필요시), 예상 은거지 거부작전, 제한된 기동작전 수행
- 운용 개념

단 계	내 용
제1단계	해안선에 상륙 시 생포 또는 섬멸(해안초소 경찰)
제2단계	해안선을 연한 농어촌지역에서 체포, 섬멸(전투경찰, 해안초소 경찰)
제3단계	간첩 밀거지역 도착 전 색출 섬멸(전투경찰, 임시편성 기동경찰대)
제4단계	간첩 밀거지역에서 섬멸(전투경찰)

- 편성 : 도 경찰국에 예속하여 운용하고 행정보급지원은 해 지역 경찰국장이 한다. 대간첩작전 기본단위로써 중대를 편성하고 중대는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전투경찰중대는 작전 및 지역의 성격에 따라 분대를 잠정 편성 운용할 수 있으며, 내륙지역 전투경찰중대는 산악작전과 분대 단위 독립전투 수행능력을 부여한다.
- 배치 : 북한 간첩의 위협정도를 고려하여 도 단위로 1~5개 중대를 배치하여 운용한다.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4(중대)	2	1	3	1	2	4	4	5	2

- 통신 : 기존 군·경의 통신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자체 통신망과 군과 교신 가능한 무전기를 준비하며, 군·경간 무선통신망은 군이 통제를 한다.

9. 각 부처별 조치사항

부 처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지역사령관에게 대간첩작전을 위한 각군 부대 사용권한을 부여</li> <li>• 대간첩작전용 통일된 지도를 각 부처 및 기관에 배포</li> <li>• 합참 내에 대간첩대책본부를 설치 운용</li> </ul>	'67년 말까지 '68년 2월까지 '67년 말까지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경찰에 적용할 법규제정에 관하여 총무처와 협조</li> <li>• 중요시설 민간인 경비에 대한 산탄총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제</li> <li>• 대간첩작전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신변보호책 수립</li> <li>• 교통시설과 같이 인원이 상시 업무를 하지 않는 시설의 경비방책을 교통부와 협조</li> <li>• 중앙정보부 기본계획에 의한 어선통제와 정보망 구성책을 수립</li> </ul>	'67년 말까지 " " " '68년 1월 말까지
중앙정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정책 수립</li> <li>• 어민의 정보조직과 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li> </ul>	'67년 말까지
체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작전에 관한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지원</li> <li>• 주요 통신축선의 자체 경계계획을 수립</li> </ul>	"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노선 보안 및 순찰강화책을 수립하고 공안경비 요원을 증가</li> </ul>	"
공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방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선전 및 계몽</li> <li>•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과 대간첩작전에 국민의 총력집중 위한 계몽계획을 수립</li> </ul>	"
보건사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지원 사업계획을 수립</li> <li>• 대간첩작전에 희생된 민간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책을 수립</li> </ul>	"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작전 유공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간소화</li> <li>• 교도소 자체 경계강화책을 수립</li> </ul>	"
원호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작전으로 희생된 민간인 및 가족에 대한 원호 강화책 수립</li> </ul>	"
총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작전 유공 민간인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책을 수립</li> <li>• 전투경찰에 적용할 법규 제정</li> </ul>	"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아선박 발견 시의 신고망 구성 및 운용을 내무부와 협조</li> <li>• 어선의 표식 및 식별신호를 제정</li> <li>• 휴전선 근해의 어선단을 편성</li> </ul>	'67년 2월까지

□ 대통령 훈령 제19호(무장공비 봉쇄 보강지침)<sup>2</sup>

구 분	내 용
수도권 방위	<p>수도권방위를 위하여 관계책임기관은 복귀가 택할 수 있는 도보, 차량, 공중, 해상을 통한 침투 및 공격 등 모든 가용한 방책을 상정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수 이북의 서울특별시 및 특정경비지역의 설정과 사태별 지휘 및 협조</li> <li>• 미 제1군단 후방지역의 대간첩작전 지휘 및 협조</li> <li>• 휴전선에 연하여 보다 중심 깊은 전방방책 장애물 설치</li> <li>• 수도권 접근로 상에 고도로 훈련된 특수봉쇄부대 배치 운용</li> <li>• 민간 및 군용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li> </ul>
봉쇄보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간첩대책본부는 대통령훈령 제18호 대간첩봉쇄지침에 의한 관계기관의 진행상황을 조속히 파악하는 동시에 휴전선, 연안, 해안 및 내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봉쇄보강책 조속히 수립 실천</li> <li>• 중앙 및 지역단위 관계책임 기관장은 책임지역별 특수여건을 감안 복귀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가정한 대비책과 봉쇄작전 철저 실시</li> <li>• 봉쇄 및 수색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공비의 주, 야간 행군속도를 고려 과감하고 즉각적인 부대투입, 원거리 봉쇄 및 수색 실시</li> <li>- 무장공비 도주에 용이한 지형상의 예상통로에 중점 배치</li> <li>- 주간 수색은 산정을 포함한 은신 및 관측이 용이하고 급수가 가능하며 도피에 용이한 지역 선정 실시</li> </ul> </li> </ul>
경계, 검문 검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강화 : 연중 계절과 관계없이 군경 작전부대 및 국가주요 시설 경계강화 및 지도감독 철저</li> <li>• 검문검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공비 침투복장 주지 : 검문검색 요원, 잠복조근무요원, 국민</li> <li>- 수상한자 무조건 무장공비로 단정, 수하에 의한 식별방법 철저 이행</li> <li>- 검문검색 시 고도의 경계심과 검문검색 담당자에 대한 즉각엄호 및 대응조치 강구</li> <li>- 민간·군용차량 검문검색 철저, 검문검색 불응 시 발포</li> <li>- 무장공비 생포 시 무장해제 후 연행</li> </ul> </li> </ul>



□ 대통령훈령 제19호(무장공비 봉쇄 보강지침)(계속)

구 분	내 용
휴일근무 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일 및 야간근무조 편성 운용(군경, 책임기관장)</li> <li>• 5분 대기부대 및 기동타격부대 상시 편성 보유</li> <li>• 군경 지휘관, 관계기관장 및 작전·정보요원은 항시 행선지 및 위치 확인, 즉각 연락 가능토록 조치 후 행동</li> </ul>
첩보 보고, 전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와 동시 차상급부대(기관) 및 대간첩대책본부에 속보</li> <li>• 상황발생 시 가용한 부대 출동, 무장공비 포착 섬멸</li> <li>• 접촉 유지, 침투대열 분산 방지</li> <li>• 공명심에 의한 단독작전 지양</li> </ul>
상황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훈령 제18호에 명시된 사태별 작전책임 사령부가 주상황실 운용, 기타기관은 연락관을 주상황실에 파견하여 관계상황만 파악하여 소속기관에 보고</li> <li>• 주상황실의 모든 상황보고는 사태 구분 없이 대간첩대책본부에 신속 정확히 보고</li> <li>• 대간첩대책본부장은 접수된 보고를 종합, 중앙협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li> </ul>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을 유리하게 하거나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불안을 주는 보도통제를 위해 대통령훈령 제18호에 명시된 사태별 작전책임사령부에서 발표 및 보도하되, 대간첩작전에 관한 보도는 대간첩대책본부와 사전 협조하여 보도</li> <li>• 대간첩봉쇄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비책은 일체 공포 금지</li> <li>• 파괴와 기습, 살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간첩의 종래의 호칭은 “무장공비”로 호칭을 통일하고, 지하당 조직과 세포활동 및 정보탐지 등을 목표로 은밀히 활동하는 간첩에 대해서는 종래호칭 그대로 “간첩”으로 호칭</li> <li>• 대간첩대책본부는 공보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중앙 및 지역 단위 기관의 보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제</li> </ul>

## 【부록 2】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sup>3</sup>

-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1968. 1. 30) -

**제1조 (설치)** 대통령훈령 제18호로 규제한 범국가적인 대간첩봉쇄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간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동 훈령의 시행상태를 파악 및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 건의하기 위하여 대간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협의회 조직)**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 ① 협의회에는 의장과 위원 약간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 ②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③ 의장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및 기타의 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합동참모본부 본부장이 된다.

**제3조 (대책본부 조직)** 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필요한 실무기구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1968년 1월 31일까지 이를 편성한다.
- ② 대책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본부장이 된다.
- ③ 내무부 및 중앙정보부 연락관은 대책본부에 상주하며 기타 관계기관은 대책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대책본부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연락관을 파견한다.
- ④ 대책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획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장, 각군(해병대 포함) 정보·작전참모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정보부 5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관 등의 관계기관 실무자를 소집하여 대책본부의 업무를 심의케 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아래사항을 관장한다.

- ①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지침에 의거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간첩봉쇄에 관하여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 ③ 갑종사태로부터 을종사태로의 전환 및 해제 건의를 심의한다.

제5조 (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아래사항을 관장한다.

- ①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지침의 시행상태를 확인하고, 대통령 및 협의회에 보고한다.
- ② 간첩 봉쇄상황을 종합분석 및 판단하여 대비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③ 기타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심의사항의 실시)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일반 행정계통을 통하여 지시 및 실시한다.

제7조 (운영 세칙) 본문에 규정된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대책본부의 세부편성 및 운용사항에 관하여는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대통령훈령 제18호 추가 1은 196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대책본부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록 3】 남북한 국력 및 군사력 비교<sup>4</sup>**

○ 국력 비교

남/북

구 분	1968년	1976년
영토 (만km <sup>2</sup> )	9.9/12.2	
인구 (만명)	3,210 1,324	3,461 1,628
GDP (억불)	46 27	184 35
병력 (만명)	63 41.3	60 50
군사비 (억불)	2.3 6.3	15 8.8
수교국 (개)	79 33	95 91

○ 군사력 비교

남/북

구 분	1968년	1976년	
육군	병력(만명)	54.8 36.7	52 48.9
	전차(대)	853 866	840 1,350
	야포(문)	2,356 5,200	2,570 6,200
	헬기(대)	0 0	13 40
해군	병력(천명)	51.1 10.5	45 27
	잠수함(척)	0 4	0 12
	수상전투함 (척)	24 100	74 240
	보조/지원함 (척)	223 66	100 390
공군	병력(천명)	27.1 35	30 47
	전술기(대)	295 591	204 600
	훈련/지원기 (대)	133 89	90 250
예비전력 (만명)	246 103	270 222	

【부록 4】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관련 원본사료<sup>5</sup>

1.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외무장관 성명서(1968. 1. 25)

1968. 1. 25. 10:30

북괴무장침입자 일단의 서울침입사건과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한 외무부장관성명서

1968년 1월 21일 밤 소련제 “김단총, 권총, 수류탄, 대전차 지뢰등으로 중장비한 31명 에 달하는 북한괴뢰의 소위 정규군 장교들로 구성된 일단이 휴전선을 침범하고 귀속히 수도 서울에까지 침입한사건과 2일을 구한 1월 23일에 발생한 미국의 함선 “푸에블로호”를 북괴해군근이 동해안 근처 공해상에서 납북하여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및 국동의 안전에 대한 북괴의 가장 중대한 위협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수 없다.

일양년전부터 북괴는 더욱 빈번히 무장간첩을 납파하여 갔은 단행은 되풀이하였을뿐만 아니라 운항중인 열차의 추파기도를 양차에 걸쳐 감행하기 까지 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들은 정확하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선과 어부들을 무수히 납치한 가장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러왔다.

그런데 이번 북괴의 무장침입자 일단의 서울침입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오인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이었음은 성포된자의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바와 같으며 또한 민간인의 코롱수단인 버스에 수류탄을 마구 투척하여 양민을 살살하였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가장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행위 및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대한민국은 평화애호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온것은 세계주지의 사실이며, 이사한 한국의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지속적인 침략행위는 전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2. 안전보장이사회 토의 관련 주유엔대사에 보내는 외무장관 메모(1968. 1. 26)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262200

일시: 262200

수신인: 주유엔대사, 주백과사

의심과	
정수	일부

안보이사회에 한국사태 토의에 관하여 미국 기록 수첩장이  
견의안을 제출한 경우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견의안도 그 내용을  
 수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북괴의 식량일회용 곡물 (Grain) 양산 강화의 중요
2. 식량일회용의 제반 양자를 위한 PUNITIVE MEASURE
3. 식량일회용을 다시 번양지 않도록 하는 보장조치 (일련)

~~김정일~~  
 김

美 W

韓 議 案 送 達 行 事

의송일시	
의송지	

의송일시	인	인
의송지		

3.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1968. 1. 24)

- 북한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소련의 정책 -

~~SECRET/EXDIS/NO FOREIGN DISSEM/CONTROLLED DISSEM/~~  
NO DISSEM ABROAD/BACKGROUND USE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telligence*  
*Note - 67* 17 376  
1-22-68  
January 24, 1968

---

DECLASSIFIED  
Authority: NLS 018-032-1-4  
By: [signature] NARA Date: 2/3/02 30

To : The Secretary  
Through: S/S  
From : INR - Thomas L. Hughes

Subject: Sovie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Pueblo Incident

The USSR appears to have been caught unawares by the Pueblo incident. Despite several reports in recent months that the USSR has been urging Pyongyang to take a more hostile stance against the US, there is no indication that Moscow instigate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Pueblo or that Moscow even knew in advance that the incident would take place. Moscow's initial response-- to refuse to convey a US message to Pyongyang--and its sparse propaganda treatment suggest that the USSR wants to avoid all direct involvement in the present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t present it is uncertain whether Moscow has offered any advice to North Korea. The USSR probably would caution the DPRK only if full-scale US--North Korean war seemed imminent.

The Background: Reports of Soviet Instigation. While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in the past several months alleging that Moscow has been urging Pyongyang to increase military pressure on the US, we doubt that Pyongyang was encouraged to provoke a serious incident such as this. A bloc source reported in September that his government was checking an unsubstantiated report that the USSR desired a "second front" in Asia and that it wanted North Korea to

~~SECRET/EXDIS/NO FOREIGN DISSEM/CONTROLLED DISSEM/~~  
NO DISSEM ABROAD/BACKGROUND USE ONLY

GROUP 1  
Excluded from automatic  
downgrading and  
declassification

This report was produced by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side from normal substantive exchange with other agencies at the working level, it has not been coordinated elsewhere.

4.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1968. 2. 9)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SECRET~~

(Translation)

February 9, 1968

Dear Mr. President:

Yesterday, I received your kind letter which has given details of your views again through Ambassador Porter.

I understand your view that the Pueblo incident, a question of immediate concern to you,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in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and with differing tactics from the longer run question of ensuring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you have termed.

However, the north Korean commandos' intrusion into Seoul has given such a particular and serious impact upon my people that an alien would find it hard to grasp it fully and the indignant feelings of my people against the north Korean Communists seem to have reached the apex.

Although it is understandable to me that you are seeking an earliest possible solution to the question of the Pueblo, you will no doubt know that my personal understanding cannot be equated with that of my fellow countrymen as you may have experienced yourself in dealing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Vietnam War.

If Your Excellency consider it absolutely necessary to have further closed meetings with the north Koreans in order to have the crew of the Pueblo back, it is likewise necessary for us to have your assurances on the following points:

~~SECRET~~

DECLASSIFIED  
Authority *NK 96-249*  
By *Q/cb*, NARA, Date *2/19/04*



## 【부록 5】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간의 공동성명서<sup>6</sup>

1968. 4. 17, 호놀룰루

1.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은 미 합중국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현하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공동 이익과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한국사태

2. 양국 대통령은 지난 정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목표로 한 북괴의 공격과 푸에블로호의 공해상에서의 납치사건을 포함하여 과거 18개월간 북괴의 증가된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위의 결과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북괴의 침략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중대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계획들에 관하여 서로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가족과 친척들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그들이 북한 공산도당의 마수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조속히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했다.
3. 양국 대통령은 북괴에 의한 더 이상의 침략적 행위는 평화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 양국 정부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할 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할 것에 합의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용의와 결의를 재확인했다.
4. 존슨 대통령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을 지원한 바 있는 16개국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결의된 공동선언을 미국 정부는 준수할 것이라고 재 확인했다.
5.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한·미 양국군의 증강을 위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특별 조치들에 관하여 예의 검토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군이 한국에서 발생할 모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6.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은 한국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존슨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지속적인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는 효과적인 대간첩작전계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도 검토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토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5월에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부간에 제1차 각료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7. 박 대통령은 북괴의 침투와 파괴 기도를 분쇄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의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이에 관하여 토의했다. 존슨 대통령은 항토 방위예비군 편성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찬동하고 또 이를 지원할 뜻을 천명했다. 존슨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박 대통령의 조치들은 현명하고도 선견지명이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8. 존슨 대통령은 북괴의 대남 치안교란과 민심소란을 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정체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속한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미국과 여러 우방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대한(對韓) 민간투자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 베 트 남

9. 양국 대통령은 베트남 공화국이 침략을 막고 베트남 국민이 외부의 간섭 또는 테러분자들의 압력 없이 그들 자신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한·미 양국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우고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의 사태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했다.
10. 양국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가 그 군대를 증강하고 증가시키며 또한 정부의 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주목했다.
11. 양국 대통령은 명예스럽고 확고한 평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계속적인 결의와 군사적인 결단성을 상반하는 외교적인 해결을 성의있게 추구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대통령은 평화가 달성되기까지 모든 면에서의 투쟁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양국 정부의 정책을 표명했다.
12.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공화국과 그 지원을 위하여 병력을 파월한 나라와 상의하여 이루어진 북월 폭격지역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의 결정으로 시작된 과거 2주간의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진전 상황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했다.
13. 존슨 대통령은 미국과 북베트남의 대표들이 조속한 접촉을 위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미국 대표가 사전 접촉에 있어 취할 입장을 상호 검토하고 미국 정부는 교섭 진전상태 및 연합국 측이 각 단계에서 취할 입장에 관하여 대한민국 및 기타 연합국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임을 확인했다.

14. 양국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평화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적인 희망을 품고, 연합국의 입장은 계속하여 1966년 ‘마닐라 코뮤니케’에 기초를 둘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15. 또한 양 대통령은 1967년 4월에 있었던 ‘7개국 외상회담’에서 언명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그것은 “영속적이어야 할 베트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베트남 국민의 소망과 회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베트남 공화국은 분쟁의 해결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도되는 여하한 협상에도 전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한 베트남 공화국을 방어함에 있어 원조를 한 연합국들도 동 분쟁의 여하한 해결에도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 들이다.

### 아세아 · 태평양 지역

16. 박 대통령은 아세아 ·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미합중국의 커다란 역할과 꾸준한 노력을 높이 찬양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미국의 체류는 올바르고 영속적인 평화에 긴요하다는 그의 소신을 표명했다.
17. 존슨 대통령은 아세아 각국 국민 자신들의 요청과 희망에 의거하여 미국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18. 이와 관련하여 양국 대통령은 1966년 10월의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에서 행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 인 사

19.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 하와이 주지사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이번 방문 기간 중 자신에게 베풀어 준 따듯한 영접과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다.

## 【부록 6】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경과<sup>7</sup>

- 10:35 가지치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북한군 경비장교 박 철 중위 등 2명과 경비병 9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
- 11:05 북한군 장교가 한국군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그만두라고 소리쳐 겁에 질린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했고,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한국군 김문환 대위(보니파스 중대장 Counterpart)도 북측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보니파스 대위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화가 난 경비중대장의 독려로 작업은 다시 시작됨.
- 11:06 북한군 박 철 중위의 지시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으로 건너간 연락병에 의하여 30여 명의 북한 경비병이 현장에 도착
- 11:07 손목시계를 풀어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은 북한의 박 철 중위는 갑자기 “죽여!” “대위부터 죽쳐라!”라는 고함을 지르며 보니파스 경비중대장을 가격함. 그 후 북한군은 한국인 노무자(KSC)들이 버리고 간 도끼를 들어 도끼 뒷면으로 여러 사람들을 가격하기 시작함. 보니파스 대위가 쓰러진 것이 보고됨.
- 11:08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유엔사 정전부 담당관에게 경비구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함.
- 11:09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전진 캠프(현 보니파스 캠프)를 떠나 공동경비구역으로 향함. 보니파스 대위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후송되었고 공동경비구역 1소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함. 이 때 기동타격대는 유엔사 2초소에 도착함.
- 11:10 경비구역 1소대, 유엔사 2초소 도착 공동경비구역지원단은 작전계획 ‘지원’을 발동, 경계태세 강화. 유엔사 3초소에서 인원 철수
- 11:15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유엔사 2초소에 도착함. 상황을 보고받고 몇몇 인원들이 부상당한 것을 확인함. 보니파스 대위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
- 11:16 공동경비구역지원단 5분 대기조, 유엔사 5초소의 인원 철수를 위해 출발
- 11:17 공동경비구역지원단 5분 대기조, 유엔사 5초소에 도착 유엔사 경비원 3명 전원 철수
- 11:19 공동경비구역지원단 5분 대기조, 유엔사 5초소 경비원들과 함께 유엔사 4초소에 도착
- 11:20 80~100명의 북한 경비병들이 북한군 막사지역에 있는 것이 보고됨. 부상당한 유엔사 인원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후송됨.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은 곧 단 지휘통제실에 이 사실을 보고함. 지휘통제실은 미 제 2보병사단에 증원 병력을 보내줄 것을 보고하도록 지시받음.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경비장교는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8월 18일 정오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도로상에서 열 것을 제의함. 이 시각 보니파스 대위는 전진 캠프에 도착함.

- 11:21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은 유엔사 정전부 담당관에게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긴장 고조로 인하여 현장에서 경비장교회의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 11:23 이 때 북한군은 북한 측 7초소와 8초소를 폐쇄함.
- 11:25 유엔사 전 초소 병력을 집합시켜 점호를 한 결과, 배렛(Barrett) 중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
- 11:27 공동경비구역지원단 기동타격대는 배렛(Barrett) 중위를 찾기 위해 곳곳에 배치됨.
- 11:31 배렛(Barrett) 중위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유엔사 3초소 동쪽 약 50m 지점 남쪽 도로 옆 덩불 속에서 발견됨.
- 11:34 의료후송 헬기, 전진캠프 H-127에 도착함. 탑승해 온 의료요원들은 보니파스 대위의 사망을 최종 확인함.
- 11:40 연료부족으로 의료후송 헬기, 부상 요원 태우지 않고 공동경비구역지원단 전진 캠프 H-127을 떠남.
- 11:45 유엔사 경비장교, 북·중군 측의 현장 경비장교회의 개최 제안을 ‘당신 측(북·중군)의 과도한 무장 경비원들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한다면’ 이란 조건으로 받아들임.
- 11:50 공동경비구역지원단 작전장교, 배렛 중위를 세단에 태우고 전진캠프에서 그리브스 캠프 H-122로 향함. 이는 의료후송 헬기가 주유를 위해 떠난 후 아직 H-127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임.
- 11:57 유엔사 경비장교, 현장 경비장교회의에 대한 그의 사전 수락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로 취소함.
- 12:04 유엔사 근무사관, 8월 18일 당일의 일례 근무사관회의를 경비구역 내의 긴장을 이유로 취소할 것을 제안
- 12:09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은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를 1976년 8월 19일 11시에 개최할 것을 제안함.

- 12:10 배럿 중위, 그리브스 캠프 H-122에 도착
- 12:15 배럿 중위, 의료후송 헬기를 타고 H-122를 떠남.
- 12:39 의료후송 헬기, 부상자 2명을 싣고 전진 캠프 H-127을 떠남.
- 12:43 북·중군 경비장교는 현장 경비장교회의에 유엔사 측이 출석할 것을 요구
- 12:50 배럿 중위를 태운 후송 헬기, 용산 유엔군사령부 H-201에 도착, 배럿 중위는 후송 중 사망함.
- 12:52 유엔사 정전부 사실조사팀, 공동경비구역 사건의 실태조사를 위해 용산 유엔군사령부 H-201을 출발
- 12:55 유엔사 경비장교, 공동경비구역의 극심한 긴장 상태를 이유로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재차 거절함.
- 13:15 자상(刺傷)을 입은 새로운 부상자가 보고됨.
- 13:18 유엔사 정전부 사실조사팀, 전진 캠프 H-127에 도착함.
- 13:25 현재까지 유엔사 사상자 숫자가 밝혀짐. 미군 장교 2명 사망, 미군 병사 4명 부상, 한국군 장교 1명 부상, 카투사 2명 부상
- 13:30 북한군 경비장교는 유엔사가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유엔사가 지체 없이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함.
- 13:45 유엔사 경비장교,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재차 거부함.
- 13:50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은 사건 전모를 스웨덴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위원과 스위스 군사정전위원회의 대리 수석에게 보고함.
- 14:05 한·미 제1군단장, 전진 캠프 H-127에 도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음.
- 14:30 한·미 제1군단장, 전진 캠프를 떠남.
- 16:20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전진 캠프로 복귀
- 16:30 유엔사 정전부 사실조사팀, 전진 캠프를 떠나 용산 유엔사 H-201로 향함.
- 17:49 북·중군 근무사관은 8월 18일 당일 열릴 예정이던 근무사관회의 취소에 합의함.

- 19:35 부상으로 후송된 유엔사 병력은 전부 미군 7명, 한국군 1명, 카투사 3명으로 밝혀짐.
- 20:56 유엔사 군정위 대표, 다음 사실을 북·중군 측에 전달 : “55명 이내의 우리 측 기자가 8월 19일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갈 것이다.”
- 22:07 북한군 경비장교는 유엔사측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경비 장교간의 현장 검증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며 유엔사의 참석을 강력히 재차 요구함.
- 22:17 북·중군 군정위 대표는 북·중군 군정위가 경비장교간의 현장 검증이 열릴 때까지는 유엔사가 제안한 제379차 군정위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23:25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23:49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를 떠남.
- 23:52 유엔사 군정위 수석위원,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 “유엔사가 요구한 제379차 군정위가 열리지 않고 있음은 오늘 아침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살인사건을 생각할 때 유엔군사령관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유엔군사령관은 76년 8월 19일 10:30에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유엔사 요원을 우리의 전진 캠프로 가도록 지시했고, 바로 그 시간에 당신 측은 우리가 제의한 시간에 당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 측에 알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 미 제2보병사단 증원군이 전진캠프의 H-127에 있는 전초지점으로 이동하였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관계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원대 복귀

## 1976. 8. 19

- 06:49 유엔사 3초소 요원이 트럭에 탄 북한군 경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증원을 요청함.
- 06:51 유엔사 3초소 요원들의 철수 명령이 하달됨.
- 06:52 북한군, 트럭을 타고 출발
- 06:52 유엔사 3초소 요원들에게 계속 남아 있으라는 명령이 하달됨.
- 08:32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과 참모들이 전진 캠프에 도착함.
- 08:35 북한군 7, 8초소가 비어 있다는 보고를 함.
- 08:45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총75명의 기자단이 8월 19일 경비구역 내에 들어올 것임을 북·중군 측에 알림.
- 09:12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과 참모들, 전진 캠프 출발
- 09:53 폴란드 장교 2명,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옴.
- 09:57 체코 장교 2명,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옴.
- 10:05 북·중군 선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함.  
“우리가 먼저 제의한 현장 경비장교회의에 당신 측이 참가할 때, 당신 측이 제의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겠다.”
- 10:10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부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이 전진 캠프 도착
- 10:26 유엔군사령관, 전진 캠프 도착
- 10:34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도착
- 10:42 북·중군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이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19일 12:00에 개최할 것과 그 직후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10:55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출발
- 11:07 폴란드 장교 1명, 공동경비구역 출발
- 11:26 중국군 장교 2명,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옴.



- 11:43 중국군 장교 2명, 공동경비구역 출발
- 12:08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다음과 같이 응수 제의  
 “당신 측이 제의한 현장 경비장교회의를 13:00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동편에서 개최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측이 제의한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를 76년 8월 19일 13:00에 개최할 것.”
- 12:20 체코 장교 2명과 폴란드 장교 1명, 경비구역 출발
- 12:24 유엔군사령관, 경비구역지원단 전진 캠프 출발
- 13:00 북·중군 수석위원, 8월 19일 16:00에 현장 경비장교회의와 379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8월 19일 16:00에 동시 개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임.
- 13:34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북·중군 측의 현장 경비장교회의와 379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8월 19일 16:00에 동시 개최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임.
- 15:24 유엔군사령관, 전진 캠프의 H-127에 도착
- 15:33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공동경비구역 향해 전진 캠프 출발
- 15:40 북·중군 경비장교가 유엔사 측에 공동경비구역 내에 22명의 과도한 무장경비병이 있음을 비난하고 이들을 철수시켜 줄 것을 요구함.
- 15:50 북한군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
- 16:00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현장 경비장교회의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동편에서 개최함.  
 \* 유엔사 경비장교, 북·중군의 무장 경비병 고발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정전협정에 규정된 수의 경비병만이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을 뿐이라고 말함.
- 16:15 현장 경비장교회의 휴회.
- 17:49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를 마치고 전진 캠프로 돌아옴.
- 20:55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21:10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출발

## 1976. 8. 20

- 03:52 유엔사 부참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07:00 유엔사 부참모장과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전진 캠프 출발
- 09:40 북·중군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8명의 과도한 무장 경비병이 있다고 유엔사를 비난하고 이의 철수를 요구함.
- 10:10 적십자회의 개최
- 10:40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북·중군의 무장 경비병 고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정전협정에 인가된 것처럼 규정된 수의 경비병만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다고 말함.
- 11:30 유엔사 정전부가 테프콘-Ⅲ을 취함.
- 13:00 적십자회의 중회
- 14:43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도착
- 15:15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출발
- 15:55 유엔군사령관, 전진 캠프 도착
- 16:10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전진 캠프 도착
- 17:00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 도착
- 17:16 유엔군사령관, 전진 캠프의 H-127 출발
- 17:36 공동경비구역지원단 단장, 전진 캠프 출발
- 18:43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전진 캠프 출발
- 21:45 공동경비구역지원단장, 전진 캠프로 돌아옴.

## 【부록 7】 폴 버년작전 경과<sup>8</sup>

- 05:02 한국군 제1공수특전여단 및 한국군 제1사단 병력이 전진 캠프에 도착
- 05:58 한국군 제1사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06:55 유엔사 근무사관이 스위스 및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폴 버년작전의 임박을 통보함. 그들에게 후송을 바라는지 의사 타진, 부정적인 답변 받음.
- 07:00 유엔사 정전부로부터 미 제2보병사단으로 공동경비구역지원단의 작전권 이양 폴 버년작전 개시, 공동경비구역 내로 병력 이동
- 07:05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북·중군 수석위원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  
“유엔사 작업반은 76년 8월 21일 아침 7시,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간다. 그것은 '76년 8월 18일 당신네 경비병들의 도발로 마무리 짓지 못한 작업을 평화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측 작업반은 유엔사 초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를 베어낼 것이다. 작업반은 임무가 끝나는 대로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할 것이며, 이 작업반이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 07:14 북한군의 첫 번째 도로 차단물 제거, 두 번째 도로 차단물 제거작업 진행
- 07:17 나무 절단 진행
- 07:20 북한군의 도로차단물 2개 모두 제거
- 07:22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25~30m 떨어진 곳에 20~25명의 북한군 출현
- 07:26 ‘돌아오지 않는 다리’ 50m 북방에 150여 명 가량의 북한군 출현
- 07:48 나무 절단 완료
- 07:50 폴 버년작전 완료
- 07:58 북·중군 측 수석위원이 아래 전문을 발송해 옴 :  
“당신네 측은 현재도 우리 측의 나무를 자르는 거만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동경비구역 내로 3백여 명의 전투 요원과 전투기들의 엄호 아래 현장 맞은 편 고지에 수백 명의 전투 요원을 불법적으로 투입하는 도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측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양측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계획된 도발 행위이다. 우리 측은 당신네

측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무조건 중지할 것과 불법적으로 투입된 전투 요원들을 공동경비구역 밖으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08:26 폴 버넌작전에 참가한 모든 요원을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시킴.
- 08:45 한미 제1군단장이 전진 캠프에 도착함.
- 08:56 폴 버넌작전에 참가한 모든 요원을 공동경비구역 밖으로 철수시킴.
- 09:12 유엔군사사령관, 전진 캠프 H-127에 도착
- 09:25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장, 아래와 같은 전문 발송 :  
“우리 측 작업반은 미루나무 절단을 마쳤는데 이 임무는 당신 측이 방해했던 일이다. 덧붙여, 작업반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네 측이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제거했다. 작업반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철수했다.”
- 10:09 유엔군사령관, 전진 캠프 H-127을 출발
- 10:11 미 제9보병연대 제2대대 A중대, 116GP 출입구 워병소로 이동
- 11:00 북·중군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은 유엔군사령관의 '76년 8월 19일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의 수신 전문에 대한 응답으로, 21일 12:00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장과 회합을 갖자고 제안함.
- 11:29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은 '76년 8월 21일 12:00에 회합을 갖자는 북·중군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함.
- 11:44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전진 캠프 H-127에 도착하여 즉시 공동경비구역으로 출발
- 12:00 비공식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의 회합, 유엔군사령관의 서신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김일성 주석)의 답신이 유엔사 측에 전달됨.
- 12:13 비공식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회합 휴회
- 12:56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전진 캠프에 도착
- 13:25 미 제2보병사단 제3여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14:23 미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메네트리), 전진 캠프에 도착(출발 시간 미상)

- 16:35 한·미 제1군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17:06 미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 전진 캠프에 도착
- 17:19 미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 전진 캠프를 출발
- 17:29 미 제9보병연대 제2대대 A중대, 전진 캠프의 남부 초소로 이동

**【부록 8】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1976. 8. 19)<sup>9</sup>**

1976년 8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진행된  
제 37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출석 인원

국제연합군 측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
마크 피 푸르덴 미국 해군 소장	한주경 조선인민군 소장
천영성 대한민국 공군 소장	김두환 조선인민군 대좌
김재명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왈성 조선인민군 대좌

1976년 8월 19일 16시 개최

1. 국제연합군 측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식 항의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내게 내렸습니다.

어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국제연합군 경비군에게 엄중한 적대 행위가 조선인민군 경비 인원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인민군에 의해서 자행된 2명의 국제연합군 경비장교를 죽게 한 심각한 중대성을 지닌 극악무도한 호전 행위이다. 이 사건은 본 위원회의 전체적인 구성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53년 7월 쌍방에 의해 합의된 공동경비구역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전협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된 이래, 23년 동안을 두고 공동경비구역의 경비군 인원을 야만적으로 살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전쟁의 폭발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었으며 두 명의 유엔사 인원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행위였는 바, 이들 인원은 당신네 인원들도 자주 실시하는 유형의 일상적인 유지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도끼와 몽둥이를 휘두르는, 수적으로 우세한 당신 측 군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공격당했던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네들이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한 장군, 나는 당신이 이 항의를 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히 당신 측 최고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사실만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며, 또한 나는 이들

제반 사실에 관해 논쟁을 하거나 또는 어떤 관련이 없는 문제를 토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당신에게 말해두는 바입니다. 나의 왼쪽에 있는 사진들과 나의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오. 어제 아침 10:30경, 국제연합군의 작업 인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동쪽 우리 쪽 초소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작업 인원들은 5명의 한국인 노무자로 구성되었으며 3명의 유엔사 측 장교와 8명으로 구성된 경비병이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나무 가지를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측 2개 초소 사이의 관측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그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유지 작업이었으며 당신 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 작업 대원들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명의 당신네 장교들과 약 9명 가량의 사병들이 트럭을 타고 달려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신네 장교 1명이 국제연합군 선임 장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제연합군 선임 장교가 작업반이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다고 설명을 하자, 당신네 장교는 ‘좋아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10분 내지 15분 동안 계속되었고 당신네 인원 가운데 몇 명은 우리 측 작업 대원들에게 나뭇가지를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10:50경에 당신네 장교는 국제연합군 장교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쌍방 장교들간에 말이 오고 가는 동안 당신네 장교는 우리 측 인원들을 협박했습니다. 평화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측 장교는 그의 권한으로써 인원들에게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때 당신네 장교는 우리 측 작업 대원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제연합군 장교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당신네 장교는 1명의 당신네 경비병을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의 임무는 분명히 당신네 증원병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당신네 추가 경비 인원들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또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서쪽으로부터 들이닥쳐 마침내 이 지역에는 약 30여명의 당신네 인원들이 운집했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있었던 국제연합군 경비 인원들이 약 1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바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길 바라며 동시에 이들 사진에 당신네 장교가 손수건으로 손목시계를 짚 다음 그의 호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당신네 장교는 그의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우리 측 선임 장교는 가지치기 작업에 분주한 나머지 이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네 장교는 그렇게 한 바로 다음에 우리 측 장교에게 다가서며 ‘죽여!’라고 소리치며 그를 구타하고 땅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에 또 다른 5명의 당신네 인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구타를 가했습니다. ‘죽여!’하는 이 명령에 응했던 것인지 또는 당신네 장교가 싸움의 선수를 걸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당신네 인원들이 즉각 야만적으로 나머지 유엔사 인원들에게 달려들었으며 이 때 당신네 인원들 속에 도끼자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적

으로 우세한 당신네 인원들이 유엔사의 각개 경비원들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당신들이 과거에도 사용했던 작전입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오고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유엔사 경비원들은 싸움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져 나가려고 했으며 당신네 경비원들은 각 개인들을 계속 포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당신네 경비병들은 몽둥이 외에도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위해 사용했던 도끼를 집어 들고 공격을 가하는 잔악하고도 짐승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측 장교가 땅 위에 무력한 채로 쓰러져 있는 동안 그를 도끼머리로 내리 쳤습니다. 또 다른 유엔사 인원이 현장을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당신네 경비원들이 한 사람을 포위하고 잔인하게 구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첫째로 유엔사의 작업대가 일상적인 조치로 평화적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로 수많은 당신 측 인원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셋째로 수적으로 우세한 당신네 인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몽둥이와 도끼로 무장을 했다는 점, 넷째로 국제연합군은 이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으로부터 이탈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로 수적으로 압도되어 무기력한 상태에서 당신네 인원들에게 전적으로 아무런 위협도 가한 바 없는 국제연합군 각개 경비병들을 당신네 경비병이 계속 구타했던 점 등입니다.

이 공격 행위는 그 잔인성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던 헨더슨 소령에 대한 공격행위를 능가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 활동인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 결코 적대적이거나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경비병들은 평화적인 사유를 목적으로 한 바로 그 도끼를 집어 들어 이를 살인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군은 이 같은 야만적이며 흉악 무도한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난폭하고도 호전적인 행동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북한은 그 야수적인 만행으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 2. 조 · 중 측

당신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왜곡입니다. 거짓으로 엮어진 장광설입니다. 이제 내가 어제 당신 측이 이곳 공동경비구역에서 감행한 엄중한 도발 행위의 진상에 대해서 말해줄 터이니 똑똑히 듣고 분별 있게 처신하도록 하시오. 당신 측은 지난 8월 18일 아침 10:45경 10여명의 경비원들과 수명의 작업대 성원들을 판문교 부근 도로상에 내몰아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측 불한당들의 이와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4명의 우리 측 경비원들은 현장에 나가 그 나무는 우리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심었고 관리하는 나무이므로 그것을 베려면 우리와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30분 이상이나 인내심 있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측 불한당들은 우리 측 인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대신 제 놈들의 수적 우세를 믿고 도끼와 곤봉 등의 흉기들을 휘둘러



대면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우리 측 경비 인원들을 구타하는 난폭한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도끼와 몽둥이들을 휘둘러대다가 던졌으며 우리가 그것을 되받아 던지게 되자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저것이 당신 측 불한당들이 가지고 있던 도끼와 몽둥이들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이 도끼에는 영어로 ‘수투베이 오스트리아’ 라고 쓰여 있으며 몽둥이에는 영어로 ‘치카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신 측의 불의적인 무분별한 도발 행위에 의하여 우리 측 경비원들은 저렇게 5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우리 측 경비 인원들은 부득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우리 측이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그를 중지할 것에 대하여 한 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더욱 더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난폭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번 당신 측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감행한 난폭한 도발 행위는 당신 측이 이 구역 안에서 조성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8월 6일 불한당들을 내몰아 그 나무를 찍으려 하다가 저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수많은 불한당들을 사건현장에 보냈다는 사실과 사건 현장 맞은편인 회의장 서북쪽 산정에 포대경까지 설치해 놓고 당신 측 부 경비단장과 공동 일직군관 등 여러 명의 장교들이 도발 행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 현장 부근에 100여 명의 무장 인원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측은 자신의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우리가 부른 현지 경비장교회의에 제 때에 나오는 것을 것처럼 완강히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금번 당신 측이 감행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도발 행위가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쌍방간에 무장충돌을 야기시키기 위한 당신들 미제 침략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한 고리로서 전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한 목적에 의해 감행된 것임을 반박할 여지없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처럼 명백한데 당신이 ‘야만적인 살인 행위’ 나 ‘잔악성’ 이니 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진상을 가릴 수 있으며 그로부터 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측은 그 무엇으로서도 흑백을 뒤집어 놓을 수 없으며 시비를 전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당신 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남조선에 더욱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끌어들이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곳 회의장 구역에서 술한 무장인원들을 동원하여 오만무례하고 횡포하기 그지없는 도발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측이 이번에 또다시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이곳 공동경비구역에서까지

사전에 면밀히 준비한 계획 밑에 불한당들과 술한 무장 인원들을 내몰아 우리 측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난폭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강경히 항의하는 동시에 이번의 도발 행위를 조작 지휘한 주모자들과 그에 관련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공동경비구역 밖으로 축출하며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도발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담보할 것을 당신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3. 국제연합군 측

당신은 당해 사건에 대해 당신네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2명의 국제연합군 장교가 죽었습니다. 도끼와 몽둥이를 든 북한 경비병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오늘 국제연합군이 제시한 여러 사진들은 이 공격 행위에 대한 정황과 그들이 어떻게 맞아 죽었는지를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국제연합군의 항의가 당신 측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측은 더 이상 제기할 안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4. 조·중 측

당신은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무슨 '증거'가 되는 듯이 말하는데 저 사진은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금번 당신 측이 감행한 잔악한 도발행위가 계획적인 준비 밑에 감행된 것임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대로 당신 측 인원들이 사건장소에서 빠져나가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면 한 두 장의 사진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당신들이 사진기를 준비해 놓고 이번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제 아무리 왜곡된 비난을 늘어놓아도 이번에 이 구역에서 미제 침략군이 감행한 엄중한 도발 행위의 진상을 가릴 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 측이 이번에 감행한 난폭한 도발 행위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신 측은 올해에 들어서만도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겨냥하며 총을 쏘고 우리 측 인원들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무려 400여 차에 걸쳐 여러 가지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 측이 공동경비구역에서 긴장 상태를 계획적으로 격화시켜 오다가 이번에 횡포무도한 도발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쌍방간에 대결 상태를 더욱 더 격화시키고 사태를 극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측은 조성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대신 우리가 부른 경비장 교회회의에 나오지 않으려고 앙탈을 부렸으며 심지어는 어용 보도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측을 터무니없는 중상 비방하는 광란적인 '반공' 소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당신 측이 감행한 이번의 도발 행위가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자신들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사건에서 당신들에게 그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발자들에게 치러진 응당한 징벌입니다. 쌍방간에 엄중한 충돌을 야기시킨 죄과도, 이 구역에 긴장한 정세를 조성시킨 책임도 그 모두가 당신 측에 있습니다. 쌍방 경비 인원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곳 공동경비구역에서 미제 침략군들과 같이 일방적인 무례한 행동을 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도발 행위를 공공연하게 감행하는 것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성을 증대시키게 할 뿐 이 구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쌍방간에 긴장을 제거하는 데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당신 측은 세상 여론을 오도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번 도발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 지휘한 주모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도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시오.

만약 당신들이 분별 있는 행동 대신 우리 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당신 측은 지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가 있는 다음에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측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들은 8월 12일 11시 10분경 군사분계선 표지물 256번 동쪽 1,200m 지점 부근에서 맞은 편 우리 인민군 초소를 향하여 수발의 12.7mm 대구경 기관총사격을 가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은 이와 같은 무장 도발 행위를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9차례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남조선 괴뢰군은 지난 8월 16일 15시경 군사분계선 59호 표지 동쪽 650m 지점 부근 초소에 1정의 57mm 무반동포와 12.7mm 대구경 기관총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9차에 걸쳐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불법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남쪽 부분에 끌어들이었습니다.

또한 남조선 괴뢰군은 8월 4일 15시 13분경과 8월 16일 9시 25분경 등 6차에 걸쳐 비무장지대 안의 남쪽 부분인 중사리 일대 상공에 군용 비행기를 침입시켜 우리 측에 대한 정탐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괴뢰군은 해상에서도 우리 측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11시 40분경 남조선 괴뢰군은 경호함을 우리 측 연해인 북위 37도선 51분, 동경 124도 50분 부근 해상에 침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17차에 걸쳐 이 부근 우리 측 연해에 여러 가지 해군 함선들을 침입시켜 정탐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한편 당신 측은 지난 8월 14일 10시 55분 경 'SR-71' 고속도 고공 정찰기를 비무장지대 상공에 침입시켜 동서로 횡단 비행하면서 우리 측을 정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4차에

걸쳐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8월 5일 일본의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제5공군 관하 전투 폭격기와 정찰기, 대형 수송기 등 각종 비행기 30여 대와 수많은 비행사들과 기술 정비원들을 오산과 군산 비행장에 불법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신 측이 감행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긴장 상태는 날로 더욱 더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측이 정전협정 서언과 제6항, 10항,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상술한 바와 같은 범죄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 규탄하는 동시에 그러한 범죄 행위를 즉시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5. 국제연합군 측

한 장군, 당신의 특징적인 주장들은 앞으로 조사될 것이지만 나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앞서 당신에게 말해 준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2명의 우리 측 경비 장교를 살해한 데 대해 말하고자 본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토의할 의도의 전부이며 나는 이미 우리 측이 더 이상 토의할 안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6. 조·중 측

당신 측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우리 측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적대적 도발 행위와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불법적으로 끌어들이는 위반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측이 제기할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 7. 국제연합군 측

어제 판문점에서 만천하 사람들은 당신들의 행동이 당신이 이 회의장에서 사용하는 말들과는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짐승 같은 만행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당신네 행동은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짓은 본 위원회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측 총사령관으로부터 당신 측 최고사령관에게 대한 항의문을 전달했던 바 이는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어떤 수정 조치가 취해지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훌륭한 2명의 군인이 무참히 죽고 만 것입니다. 비단 유엔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네가 살인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엄중히 주시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은 앞으로 당신

네 행동과 태도가 당신네의 진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 측은 이로서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 8. 조·중 측

오늘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당신 측은 흥기를 진 채 침략군 불한당들을 내몰아 우리 측 경비 인원들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는 잔악한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신 측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 측을 반대하는 온갖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군용 비행기들을 불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당신 측이 감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한 모험적인 단계에 이른 당신들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의 한 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황당한 궤변과 당치않은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중지하는 것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았으며, 그 무슨 ‘항의문’에 대해서까지 떠벌렸습니다. 당신들의 이러한 부당한 입장과 태도로 인하여 오늘 조선에는 긴장 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말로만 ‘신뢰감 조성’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측을 반대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지 말아야 하며 조성된 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조성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대신 보다 격화시키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의 휴회 제의에 동의합니다.

### 1976년 8월 19일 17:37에 휴회

본 제379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기록은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 측 수석위원의 영어 발언 전문의 번역문 및 군사정전위원회 조·중 측 수석위원이 한 한국어 발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 측 비서장 미국 육군 대령 티 더블유 맥클레인

## 【부록 9】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할 관리 합의서(전문)<sup>10</sup>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에 대한 보충을 위한 합의서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쌍방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25항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위치와 활동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1953년 10월 19일에 채택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제2조 C항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또한 위의 협정들을 시행한 이후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인명의 안전보장 특히 양쪽 군인들 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들은 본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아래 보충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가. 본 보충은 쌍방 수석위원에 의하여 비준된 1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나. 공동측량 및 군사분계선의 표지를 위하여 각방의 동수로 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공동측량소조를 구성하며 이들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해서는 공동감시소조의 감시하에 쌍방이 보장해야 한다.

다. 본 보충이 비준된 날부터 발효일까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설치를 완료한다.
- 상대측 관할하의 구역에 있는 자기 경비초소와 경비 인원들, 그리고 기타 시설물들을 철수한다. 단 각방의 공동일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와 그 시설은 제외된다.
- 국제연합군 측 부분에 있는 조중 측 경비초소를 철수한다.
- 쌍방은 각기 본 보충이 쌍방 수석위원에 의해 비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상대 측 인원의 안전을 저해하는 접촉 또는 본 보충이 이행과 관련된 작업을 방해하지 말도록 명령을 하달하고 또 실시함으로써 상대 측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비준 군사정전위원회 1976년 9월 6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보충  
(1976년 9월 6일 제446차 비서장 회의에서 합의,  
1976년 9월 6일 쌍방 수석위원 비준)

1. 제2조 C항의 보충

공동측량에 기초하여 공동경비구역 안의 군사분계선은 회의장 건물구역에서는 너비 50cm, 높이 5cm의 시멘트 포장만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10cm×10cm, 높이 1m의 시멘트 기둥만을 10m 간격으로 박아 표시한다. 회의장 건물구역이란 군사분계선 상에 놓인 7채의 건물과 서쪽 끝의 건물로부터 10m, 동쪽 끝의 건물로부터 10m까지를 포함한다. 표지를 위한 작업은 군사분계선 표지물 제99호로부터 서쪽 한계선까지는 공산 측이, 동쪽 한계선까지는 국제연합군 측이 책임지며, 다만 공동경비구역 서남쪽 모퉁이에서 군사분계선이 강바닥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해당 각방이 자기 측 제방에 표시한다.

2. 제2조 D항의 보충

공동경비구역 경비인원을 포함한 모든 군사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 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정전협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들은 이에서 제외된다. 그러되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보조 인원들은 각방에서 상대 측에 들어가는, 또는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번에 15명을 넘지 못한다.

공동경비구역 안의 군사분계선 상에 놓여 있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 안에서는 쌍방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일방이 이용하는 건물 안에서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측만이 자유로이 이동한다.

공동경비구역 안의 통신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비무장 군사 인원에 의한 기타 허가된 활동을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넘어가려는 군사인원은 상대 측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쌍방의 모든 비군사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적절한 식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동경비구역 안의 회의장 건물구역에서만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 차량들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쌍방의 군사 인원 및 비군사 인원들은 서로 안전을 침해하는 접촉을 할 수가 없다. 각방은 공동경비구역 자기 측 부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상대 측 인원들의 안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 3. 제3조 B항의 보충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기 측이 필요로 하는 경비초소는 자기 측 구역에만 설치한다. 제2조 D항의 안전보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일방도 그 상대방의 시계를 방해하는 시각적이거나 기타 장애물들을 설치하지 못한다.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중 관련조문(1953. 10. 19)

#### 가. 제2조 C항

본부구역의 2개 갑, 을 구역 내에 하나의 원형에 가까운 구역을 설치해서 쌍방의 공동경비 구역으로 한다. 이 지역의 경계선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와 국제연합군 대표 간의 1953년 9월 3일과 5일에 도달한 합의에 의하여 지상에 나무말뚝을 박아 이를 표시한다.

#### 나. 제2조 D항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원은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본부구역의 다른 일방의 구역에 넘어가지 못한다.

#### 다. 제3조 B항

각방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 중 자기 측 요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각방의 군사정전위원회 위원과 예하 인원이 사용할 사무소, 숙소 및 휴게 천막은 군사분계선의 자기 측 본부구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 두든가 공동경비구역 외에 두든가는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 【부록 10】 사건 관련 증언록

◇ 증언 현황

①~③ : 1·21 사태, ④~⑦ : 8·18 사태

증언자	증언 일자	증언 장소	증언 청취자	사건 당시 직책
①김신조	'12.1.13	남양주시 소재 성락교회 교육원	필자	무장공비 제2조 조장
②우철재	'11.12.14	법원리 삼봉산 현장	〃	나무꾼 우씨 4형제중 3째
③이세호 (예)대장	'11.12.8	서울 이촌동 자택	〃	제6군단장
④임복진 (예)소장	'11.12.9	서울 서초동 커피숍	〃	제1사단 작전참모
⑤박희도 (예)대장	'12.5.10	한국 문화안보연구원 사무실	〃	제1공수특전여단장
⑥박호규				제1공수여단 특공대원
⑦김석찬 (예)대령	'12.5.11	연구소 국방사부장실	필자, 장삼열 국방사부장	제1공수여단 작전장교



〈김신조〉



〈우철재〉



〈박희도(좌), 박호규(우)〉



〈필자(좌), 김석찬(우)〉

(이세호, 임복진 (예)장군은 사진 미 촬영)

## 1. 김신조 씨 증언

- 나는 1961년 3월 8일 제6사단 민경정찰중대에 입대했다. '66년도 1월 또는 2월경 내 계급이 아마 상사였을 때 황해도 평산에 위치한 제2집단군에 선발되었다. 여기서 1966년 5월경에 밀로정찰(密路偵察) 임무를 한 번 수행했다. 이 때 남방한계선까지 침투해서 미 제2사단의 경계근무 실태, 초소 위치 등을 확인하고 복귀했다. 그러다 그 해 7, 8월경 제283군부대로 소환되었다. 당시 제283군부대는 민족보위성 직할부대였다.
- 그 부대에 가자 나를 곧 조장으로 임명하고 장명근 중좌를 교관으로 붙여 주었다. 그리고 대남공작 임무를 부여 받았고 그래서 그곳이 군사와 민간을 포함한 대남공작 임무를 동시에 하는 곳인 줄 알았다. 임무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양평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라는 것이었다.(포섭대상은 마지막에 주는 것이라 그 때까지 명단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북한강 극복을 위한 수영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임무가 해제되었다. 그 때가 1967년도 5, 6월경이었다.
- 그 후 대기하고 있던 중 124군부대에 차출되어 갔다. 이 부대 역시 민족보위성 직속으로 평안남도 상원, 중화와 황해도 연산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사령부는 중화에 있었고 내가 속한 제6기지는 연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124군부대에는 6개 기지가 있었는데, 이는 남한의 각 도(제주도 제외)별로 1개 기지씩 담당해서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전체 2,400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었다. 내가 제6기지에 1968년 8월경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바로 창설멤버로 제1기였다. 내가 갔을 때 일부 인원들은 이미 와 있었고 또 일부는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다.
- 당시 124군 부대장은 이재형 대좌이고 부부대장은 우명환 상좌였는데, 이 두 사람은 1965년 여름(7월 18일) 소위 '노성준 무장간첩사건'의 멤버였다. 당시 노성준 소좌(조장), 이재형 소좌(조원), 우명환 대위(조원) 등 3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하고 침투하여 경기도 송추 유원지에서 고첩(고정간첩)과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고첩이 배신한 줄도 모르고 접선하다가 치안국의 역공작에 걸려 미리 매복한 경찰과 교전하게 되었다.  
이 때 노성준은 체포되었으나 이재형은 체포되기 직전 경찰과 사투 끝에 복부에 총을 맞아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상태에서 탈출하여 월북했고, 우명환도 도망쳐서 결국 월북에 성공했다. 이들은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특진했으며, 124군 부대가 창설되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맡게 된 것이다. 이 얘기는 이재형과 우명환이 자신들의 경험담으로 우리들에게 해 준 것이다.
- 이 부대의 창설 목적은 폭력 계렬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뿐만 아니라 민간 인도 장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멤버들은 보통 군인들과 좀 달랐으며, 훈련도 완전

〈김신조 씨 증언(계속)〉

무장하고 한 시간에 10km 이상씩 달리게 하는 등 그 강도가 훨씬 강했다. 그 때 단기 속 전속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대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심지어 대전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 124군부대가 미리 가서 거점과 지하당을 구축해 놓고 주민들을 포섭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단기속결전은 우리 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지가 서울 담당이다. 124군부대 중에서도 다른 기지와 다르다. 긍지와 영웅심을 가져야 한다.”하면서 영웅심리를 부추겼고 실제 대우도 좀 달랐다.

- 1967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제6기지 내에서 35명을 뽑았는데 이들은 거의 남한을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이고 주로 교관들이었다. 그래서 “아! 이 임무가 보통 임무가 아니구나!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 지역이 300~500고지 사이의 구릉지여서 임무지역이 의정부, 동두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 이렇게 35명이 훈련을 하고 있던 중 정찰국장 김정태(육군 중장)가 평양에서 내려와서 임무를 부여했다. 35명을 5개 조로 나누어 1968년 1월 21일(일요일) 청와대, 미 대사관, 국방부, 육군본부, KBS를 습격하고 서빙고에 잡혀 있는 대남공작원을 석방시켜 데려 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8년 1월 9일경 김정태가 다시 내려와서 인원을 31명으로 축소하고 임무도 청와대 하나만 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내 생각으로는 김일성이가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남한을 완전히 끝내느냐 아니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박 대통령만 없애고 나면 그 후의 임무는 바로 이어서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 31명을 5개 조로 나누어서 청와대를 목표로 해서 훈련을 했다. 그 때 청와대는 2층 건물이었으니까, 1조가 박 대통령을 처리하고 내가 2조 조장인데 우리 2조는 1층을 습격하고 3조는 경호실을 담당하고 4조는 외곽 엄호를 하고 5조는 자동차를 탈취하여 대기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분담했다. 내가 총조장 김종웅에게 “청와대를 정확히 아느냐, 그 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느냐?”하고 물으니까 김종웅은 “청와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없다. 그 날 박 대통령은 있다.”고 답했는데 김정태에게서 별도로 지령을 받았던 것 같았다.
- 31명 5개조는 건제 단위가 아닌 선발된 인원으로 임시로 편성된 조직이었다. 총조장인 김종웅도 계급은 상위였지만 6기지 내의 같은 조장이었다. 김종웅은 여러 번 남한을 갔다 왔다 했다. 그러나 남방한계선까지만 정찰을 하고 그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정찰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당시 미 제2사단 지역은 철책선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 부대는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했다. 내 생각에는 남방한계선과 임진강 정찰은 제2

<김신조 씨 증언(계속)>

집단군 도보정찰대나 민경중대에서 사전에 하고 DMZ 내 통로도 미리 개척해 놓은 것 같은 데, 이 사실은 김종용에게만 알려 준 것 같았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해 준다. 두 사람 이상에게 알려 주면 한사람이라도 잡히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침투시기를 가장 추운 겨울로 선정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는 1월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1월에 대남공작을 한 적이 없고 또 제일 추운 때라 무방비 상태일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정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또 1월 21일이 일요일이고 그 뒷날이 대학 입학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라 가장 취약한 시기로 기습달성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대남공작 총책임 허봉학 대장이 그의 전임자인 이효순이 대남공작 임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숙청되었으므로 김일성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녹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기에 도발 시도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더 심하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피격사건도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겨울이라 남한이 방심할 수 있는 취약점을 노린 것이 제일 큰 요소라 생각한다.

- 침투 시 남방한계선을 돌파한 이후로 작은 개울과 서측 능선의 와지선을 따라 이동했으며 도로는 도로 밑의 드림통 속을 통과해서 이동했다. 첫날 숙영은 임진강 북쪽 능선의 험하지 않은 곳에서 했는데 아침에 보니 바로 위에 T자 간판(항공기 월경 방지판)이 있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숙영을 했다. 거기서 직선으로 임진강을 건너서 대안의 절벽 사이 틈으로 통과했다. 옆에 초소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 통과지역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있다.

- 이후 침투는 파평산 북쪽의 목책다리 밑을 통과해서 파평산으로 붙어서 미타사 옆을 경유하여 삼봉산에서 2차 숙영을 하고 우씨 형제들을 보낸 다음 앵무봉 기슭에 난 소로 옆을 따라 침투해서 지금의 제1군단사령부 뒷산을 경유, 노고산과 진관사를 지나 비봉 북방에 도착해서 3차 숙영을 했다. 원래는 7~8부 능선을 타도록 되어 있었지만 우씨 형제들에게 발견되어 최대한 빨리 멀리 가야 했기 때문에 능선도 타고 소로도 타고, 산 와지선을 따라 행군하기도 했다.(필자가 휴대한 당시 1:5만 군사지도를 보며 주요 침투지점을 확인)

- 침투 복장은 최초 한국군 전투복에 제26사단 마크를 달았으며, 전투화를 신었다.(우철재 씨는 농구화를 신었던 것으로 증언을 했다는 필자의 말에) 최초는 전투화를 신었지만 눈길을 오느라고 젖었기 때문에 농구화로 갈아 신었다. 배낭 속에 농구화와 사복을 넣고 왔었다. 무장은 소련제 권총(TT 권총), 체코제 기관단총(PP 기관단총), 대전차 수류탄

<김신조 씨 증언(계속)>

2발, 개인용(방어용) 수류탄 8발이었으며, 이것을 어깨 반도와 허리 탄띠에 찼다.(일부 기록에는 기관단총을 접철식 AK소총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 잘못된 것이다.)

- 비봉 북방에서 3차 숙영을 한 후 원래는 형제봉을 지나 북악산을 경유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대에서 하룻밤 해매는 바람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 험한 지형에 바위가 많고 눈이 와서 길도 안보이고 미끄러워 몇 번씩 넘어지면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 날이 밝아 승가사 바로 북쪽에서 21일 낮에 숙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1일 출발 전 사복으로 갈아입고 최종 임무를 확인한 후에 저녁에 승가사 옆을 지나 능선을 타고 내려왔다.(계곡에는 눈이 많이 있어서 신속한 이동 불가) 지금의 파크호텔 자리에 당시 구평동 버스종점이었는데 거기 시동이 걸려 있는 버스가 있었다. 내가 버스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총조장이 도보로 가자고 해서 2열종대로 걸어서 침투하게 된 것이다. 그 때 버스를 탔으면 간단히 끝났을 것이다.
- 세검정 일대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으나 검문당하지 않았고, 최초로 검문을 받은 곳은 자하문 고개 너머의 임시검문소(종로경찰서 관할)였다. 경찰 두 명이 나와서 검문을 했고, 우리는 CIC대원이라고 하면서 통과했는데 뒤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고, 조금 지나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때 정치 부조장인 김춘식 중위가 맨 뒤에 따라오다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대원은 그대로 통과했다. 임무가 중요했으므로 뒤편에 신경 쓸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후 청운중학교 후문 근처에서 최규식 총경을 만났다. 당시는 누구인지 몰라도 체격이 좋은 사람이 검은 짚차를 타고 와서는 권총을 뽑아들고 앞을 가로막았고 짚차에서 두 명이 따라 내렸다. 최규식 총경이 우리들의 신원을 물었고, 우리가 CIC라고 하자 자기가 종로경찰서장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자기 관할구역이므로 자기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버텼다. 그러면서 외투가 불룩하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중웅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하자 최 총경이 외투를 들치려 했다. 그러자 바로 김중웅이 최 총경에게 사격을 가했으며, 최 총경과 순경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순경 한 명은 도망갔다.
- 최 총경을 제거하고 앞으로 가려는데 곧 경북고등학교 후문 근처(현재의 효자동 삼거리 검문소에)에 배치된 수경사 제30대대의 사격을 받았고, 마침 자하문 고개에서 버스 한 대가 내려와서 멈추자 이를 증원부대가 온 것으로 알고 버스 안으로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대열은 흩어졌다. 이 때 나는 2조 조장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6, 7번째쯤에서 이동하고

<김신조 씨 증언(계속)>

있었는데 선두가 사격을 받자 우리 조원 2명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후문을 밀치고, 놀라 뛰어 나오는 정문 수위에게 사격을 가한 후 인왕산으로 도주했다. 당시 우리 대열 일부는 뒤돌아서 자하문 고개 방향으로, 또 일부는 북악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 나는 인왕산을 넘어 홍제동 계곡을 지나 비봉으로 가는 능선을 올라가다 제30사단 제90연대 매복 병력에게 발견되자 다시 계곡 쪽으로 내려와서 바위 옆의 독립가옥에 숨어 있다가 결국 투항했다. 당시 같이 왔던 31명 중 28명이 죽고 2명은 북으로 도주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사건 후에 한국에서 28명의 시신을 북으로 돌려주려고 했으나 북한은 1·21사태가 남한 내부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우기면서 결국 시신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문산 근처의 적군 묘지에 묻혔다. 그 때 살아 북으로 도주한 자가 박제경이었다. 몇 년 전에 박제경이 대장계급을 달고 한국에 왔을 때 국정원에서 박제경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살이 많이 썩어서 얼굴을 잘 알아 볼 수는 없었지만 눈 위쪽의 얼굴 윤곽은 맞는 것 같았다.

○ 자수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유는 산소와 같아서 이를 누리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군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에 강연을 다니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유를 가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생을 바칠 것이다. 나는 북한의 눈에 보이는 위협 못지않게 한국 내부의 좌익세력이 큰 위협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대남공작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들의 위협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오늘 나도 잘 몰랐던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기 바라고 좋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끝.

## 2. 우철재 씨 증언

- 1월 19일 우희재(30세), 우경재(22세), 우철재(21세), 우성재(20세) 등 우리 4형제(6촌)는 삼봉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비를 만났다. 삼봉산은 봉우리가 세 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비는 우리 군과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제26사단 마크를 달고 있었다. 나는 처음 봤을 때는 훈련하러 나온 우리 국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나의 옆구리를 총 끝으로 쿡 찌르면서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자세히 보니 군복이 완전히 누빈 것이라 우리 군의 군복하고는 차이가 났다. 그래서 바로 간첩인 줄 눈치 챘다. 본부로 가니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부르라고 해서 이름을 불러 모두 본부로 오게 했다.
- 처음에는 우리들의 손을 뒤로 묶어서 대검에 꽂아 나무에 묶어 두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좀 지나니 우리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억센 이북 사투리로 “우리는 미제 억압을 받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러 온 인민군 선발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했다. 그런 후에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말고 이북에 가자고 했다. 이북에 가면 집도 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무를 해서 팔아야 집에 아파 누워 계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러자 그들은 우리들을 데려가는 걸 포기했는지 우리 형제들에게 엿·과자 등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태어나서 엿을 그렇게 많이 먹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 공비들이 대략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 ① 동무들의 성명, 연령, 가족사항은?
- ② 미군은 한국군 장교가 차를 세우면 세워 주는가?
- ③ 법원리 지서의 위치 및 경찰관 수는?
- ④ 법원리에서 문산까지의 거리 및 검문소 위치는?
- ⑤ 법원리에서 서울, 의정부, 동두천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 ⑥ 법원리에서 서울까지의 검문소 수, 위치, 배치인원 수는?
- ⑦ 서울에 가서 청와대를 보았느냐? 청와대로 가는 거리를 잘 아느냐?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 우리들은 이들 질문에 대해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보다시피 이 산중에서 농사짓고 나무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알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서울이란 곳에 가보지도 못했다고 답변했다.
- 한참이 지나서 공비들은 가져온 공산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강요하여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서명을 했다. 해가 지자 공비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너희는

<우철재 씨 증언(계속)>

우리가 간첩이라면 신고하겠는가? 우리는 인민 혁명당이다. 우리는 동무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68년도는 통일이 된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우리를 지원해 달라. 우리는 이북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니 절대로 신고하지 말라. 만약에 신고하면 당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가족을 몰살하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이겠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

그리고 공비 대장은 손목에 차고 있던 일본제 세이코 손목시계를 풀어 우리들에게 주면서 나머지 공비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고 한 명씩 악수를 하게 한 후 우리들을 귀가시켰다. 그 때 인원수를 정확히 세었는데 31명이었다. 우리를 귀가시킨 시간은 대략 저녁 7시경이었다.

-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법원리 천현지서에 달려가서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엄동설한에 3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내려 올 리가 없다면서 한 대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다 지서장이 도착해서야 제25사단에 연락을 했는지 바로 군인들이 조사를 나왔고 우리는 경험한 대로 진술했다.
- 후에 1월 21일이 되면 김신조 씨가 가끔 현장에 와서 법원리 경찰서장을 비롯한 유지들과 식사를 하곤 했다. 그 때 김신조 씨가 말하기를, 당시 우리들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하는 논쟁을 자기들끼리 벌였는데 우리들을 살려 준 이유는, 죽이면 묻기 위해 언 땅을 파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우세하여 총조장의 결심으로 우리들을 교양시킨 후 북으로 가는 듯이 하여 침투로를 허위로 알리고 귀가시켰다고 한다. 또 김신조 씨가 안보강연 다닐 때 제2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들과 완전무장 달리기를 했는데 조교들이 자기와 상대가 안 되더라는 얘기도 했다.
- 당시 보상은 별로 없었고 막내가 경찰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군대생활을 여기 우리 고향에서 했다. 나는 강원도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이리로 전속시켜 주었다. 그게 아마 보상이었던 같다.
- 사건 이후 군이나 경찰, 관공서에서 자주 여기를 찾아온다. 올 초에 제25사단장도 다녀갔고 얼마 전에 제26사단장도 다녀갔다. 국방부에서 역사책을 쓴다하니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해서 국민의 안보정신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



### 3. 이세호 (예)대장 증언

- 법원리 뒷산에서 거수자 31명이 출현했다는 내용을 군단 방첩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참모들과 회의를 한 결과, 대다수 참모들이 군단 작전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관여했다 실패하면 군단장 옷 벗어야 된다는 말을 하며 작전관여에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공비가 나타났으면 때려잡고 봐야지 작전지역이니 뭐니, 군복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려고 있으면 안된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그 날 밤 중으로 송추 초등학교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 군단 예비로 있던 제26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금일( 68.1.20) 04:00까지 의정부-송추-벽제를 잇는 도로(현 39번 도로)를 연해 차단선을 점령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공비들의 이동 속도를 감안할 때 04:00까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비들은 그날 밤 이미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노고산 일대까지 가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행군속도가 아닐 수 없었다.
- 공비들이 발견된 지역이 미 제1군단 책임지역이었기 때문에 미 제1군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작전통제권을 나한테 넘겨주도록 요청했다. “지금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25사단 지역 사이에 거수자가 출몰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정규전인 대간첩작전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이 많고 한국인의 심성과 지형 등 여러 면에서 장군보다 내가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니 미 제2사단과 우리 제25사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나에게 이양해 달라”하고 강력히 요청했다.  
미군들이 자존심이 세서 잘 안 해 줄텐데 미 제1군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좀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내게 전화를 해서 미 제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포함해서 대침투작전 통제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미 제8군사령관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자 제일 먼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25사단에 지시해서 전방 철책선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보고토록 했다. 그리고 양 개 사단 다 ‘철책선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 제25사단은 철책선을 일일이 손으로 흔들어가면서 점검했으나 미 제2사단은 철책선 따라 난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눈으로만 점검했기 때문에 철책이 뚫린 것을 알 수 없었다.
- 나중에 김신조가 자수한 후에 그를 대동하고 가서 미 제2사단 철책을 발로 툭 차니까 그대로 구멍이 뚫렸다. 당시 옆에 서있던 미 제2사단장이 놀래 자빠졌었다. 당시는 철책기둥을 남쪽 방향에 설치하고 북쪽 방향에 철망을 매달았기 때문에 기둥 뒤에다 절단 부분을 이어놓으니 남쪽에서 눈으로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이세호 (예)대장 증언(계속)〉

- 제30사단에 지시해서 노고산 일대를 수색하라고 했는데, 1개 중대를 투입해서 수색을 한 결과 용변이 묻은 빨간 손수건과 탄알을 주었다. 그래서 “아! 이놈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구나.”하고 생각하고 수경사령관에게 “빨리 서울 쪽을 막아라.”고 전화를 했다.
- (상급부대의 정식 지시도 없었는데 독자적 판단에 의해 선 조치를 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급부대 지시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선 조치를 그렇게 했는데, 작전 중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우리 전술지휘소를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세호가 자기 책임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잘했느냐.”고 칭찬을 하더라고 전하면서 “이 장군이 정말 잘했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제6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하셨으므로 우리 군단과 미 제1군단과의 지휘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군단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셨다.
- (제6관구사령부 및 수경사령부와의 지휘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급해 상급부대에서 정식 지휘관계를 설정하기를 기다리거나 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제일 선임이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지시하다시피 했다. 제6관구사령부나 수경사령부가 우리 군단에 공식적으로 작전통제되거나 한적은 없었고, 제6관구사 예하에 있던 제30사단과 육본직할로 제6관구사에 배속되었던 제1공수단과 제1유격대대가 우리 군단에 배속되기는 했었다.
- 제1공수단 예하 대대로 하여금 비봉 일대를 수색하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나중에 김신조 얘기를 들어보니 바위 입구를 소나무로 막고 있어서 우리 수색대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비들도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전날 길을 잘못 들어 우이동 쪽으로 가다 돌아오느라고 하룻밤을 허비하고 말았는데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방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 (합참의 역할에 대해) 당시는 군령권이니 군정권이니 따질 틈도 없었고, 국방부-육군본부-제1군사령부-제6군단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 따라 작전이 이루어졌다. 사실 합참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방부, 합참, 육본이 모두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작전을 같이 모여서 했다.
- (당시 테프콘이 격상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남.
-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시 육본의 역할에 대해) 육본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JSA는 미군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작전을 하고 우리는 특수부대를 지원했다. 박희도 당시 제1공수여단장에게 지시해서 미군이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할 때 경계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세호 (예)대장 증언내용(계속)〉

○ (데프콘-2 발령여부에 대해) 데프콘-3가 발령되었는지 데프콘-2가 발령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미군이 북쪽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다. 일본과 미국 본토에서도 전투기가 날아와서 공중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사건발생 후에 김일성이 사과까지 했었다.

○ 자신의 회고록 『한 길로 섬겼던 내 조국』에 수록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21사태 관련 작전 속의 중에 있는 사진 속의 인물 설명

- 좌로부터 김계원 육군총장, 박종규 경호실장, 서종철 제1군사령관, 이세호 제6군단장, 박 대통령, 이후락 비서실장이다. 끝.



#### 4. 임복진 (예)소장 증언

- (주한미군사령부 역사요약 자료를 보여주면서 당시 데프콘-2가 발령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 자료를 다 읽고 난 후) 이 내용이 맞다. 당시 한미 제1군단이 제6군단을 작전통제했으며, 한미 제1군단과 그 피작전통제부대에 데프콘-2가 발령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미루나무 절단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이 미 제2사단 사령부에 설치한 전방지휘소에 직접 나와서 지휘했다. 작전현장은 미 제2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지휘했다.
- 당시 우리 제1사단도 전투준비태세를 다 갖추었다. GOP는 20일 밤에 당연히 점령했고, FEBA 부대도 작계 5027계획에 따라 실탄분배를 하고 포병도 모두 사격태세를 갖추었다. 미 제8군사령관이 연백평야까지 진격할 연습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우리도 밤새 연습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했다. 당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공격헬기도 다 날아와서 문산 논바닥에 짝 깔렸었다.
- 당시 미루나무 절단작전 시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다. 통역장교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통역을 했다.(당시 영어를 좀 했다.) 군단장, 사단장, 나만 알고 심지어 사단 참모장과 정보참모도 내용을 잘 모른다. 참모장이 보고 안 해 준다고 내게 화를 많이 내기도 했다. 군단장과 사단장, 나와 수색대대장만 알고 있었다. 작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전쟁이 나면 가족도 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가족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당시 우종림 장군(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이 사단장이셨지만 미루나무 절단작전은 내가 직접 미군하고 같이 협조했다. 미군에 대한 작명은 미군이 하달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내가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이 때 미군의 임무형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했다. 조건만 부여했는데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서면 바로 쏘도록 했고, 나머지는 현지 지휘관이 독단으로 처리하게 했다.
- 작명을 하달하니 미군 병사들이 아무 말도 없이 수첩을 꺼내들고 기록을 했다. 유서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위축되어 긴장만 하고 있었다. 전쟁을 해 본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의 차이다. 우리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 우리 제1사단 수색대대(-) 병력이 JSA 바로 남쪽에 미 제2사단 부대와 함께 매복을 했다. 미루나무 절단 시 북한군이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오면 바로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 차량 20여 대가 내려왔는데 다리 바로 전방에서 멈추었다.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건너왔다면 바로 전쟁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 (당시 합참의 역할은?) 합참이 하기는 했겠지만 미군이 주도해서 작전했기 때문에 합참은

〈임복진 (예)소장 증언내용(계속)〉

별 역할을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합참은 지금의 합참 같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합참 국장들이 육군 총장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었다.

- 당시 박희도 장군이 쓴 책이 있는데 읽어봤는가? 그리고 인터뷰는 해봤는가? 책에 내 이름도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답변 : 책은 읽어 보았고, 인터뷰는 내년에 할 예정임.)
- 이런 책은 우리 군 최초로 발행되는 것 같은데 안보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일 하고 있고, 좋은 책이 될 것 같다. 끝.

## 5. 박희도 (예)대장 증언

- 내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라는 책을 1988년 참모총장하면서 썼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 터진지 10여 년이 지나니까 사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두 잊어버리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 전역하기 대략 두 달 전쯤에 이 책을 발간했다.
-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 터졌다. 그 때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 대기하고 있는데 8월 19일 갑자기 합참본부장인 류병현 중장이 불려서 작전보좌관을 데리고 갔다.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고공 점프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류병현 장군이 내게 지시한 사항은 능력이 뛰어난 병력으로 60여 명 정도 뽑아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들과 연합작전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 부대에 도착해서 작전참모에게 지시해서 독자를 제외하고 지원병으로 병력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병(兵)은 2명밖에 없고 거의 다 장교와 부사관들이었다. 제5대대장이었던 김택수 중령하고 의논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5대대의 지역대장이었던 현 작전보좌관 김종현 소령을 특공대장으로 선발했다. 그리고 선발된 전 병력을 여단 체육관인 봉화관에 집합시켜 작전준비를 했다. 당시 여단은 현재 위치와 같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편성은 3개 대대와 1개 공수교육대로 되어 있었다. 대대는 3개의 지역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지역대 예하의 1개 팀은 장교 2명, 사병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 편성과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 8월 20일, 작전참모, 특공대장, 작전장교가 명령수령하러 전진기지(키티호크 캠프)로 가고 난 후에 노재현 합참의장과 이세호 참모총장이 신현수 육본 작전참모부장 차를 타고 은밀히 우리 부대를 방문했다. 이세호 총장이 나에게 “특공대는 판문점에 있는 미군 대대에 작전통제되도록 하라. 무기 휴대는 미군들이 통제하는 대로 따라 하되 여단장이 알아서 하라.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북괴군이든 증원군이든 간에 도발해 오는 적이 있으면 철저히 응징하라. 적을 많이 처치하면 할수록 훈장을 많이 주겠다. 여단장이나 작전참모부장이 특공대와 함께 가서 작전지휘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하사하셨다고 하시면서 일금 50만원을 주고 가셨다. 당시 5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부하들에게 작전을 멋지게 끝내고 돌아와서 이 돈 가지고 회식 한 번 제대로 하자고 말했다.
- 부하들이 전진기지에서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다. 미루나무 절단작전 경비작전을 하는데 비무장으로 들어가라니 답답했다. 그리고 미군 비에라 중령 밑에 우리 부대가 작전통제 된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

### 〈박희도 (예)대장 증언(계속)〉

었다. 어쨌든 나는 방탄복에 소총과 권총, 실탄, 수류탄에 크레모아까지 준비하도록 했다. 그 때까지는 소총 휴대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준비는 해 가는 것으로 했다.

- 이런 가운데 특공대를 문산 선유리에 있는 RC 4라고 하는 미군 체육관으로 옮겨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최종 군장검사를 하고 부하들에게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의 훈시를 하고 그리로 옮겼다. 나는 체육관 입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 같은데서 작전참모와 함께 어떻게 무기를 미군에게 들키지 않고 휴대하고 들어갈 것인가?, 언제 사격을 개시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체육관 마루바닥에서 휴식을 하도록 했는데 밤이 늦었는데도 아무도 자는 사람이 없었다. 무기 휴대문제는 토의 끝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샌드백을 구해서 그 속에 M-16 소총을 분해해서 넣고, 이를 2.5톤 트럭의 양쪽에 쌓아 엄호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작전참모와 제5대대장 김택수 중령 등이 뛰어 다니면서 어떻게 샌드백을 구해왔고, 그 속에 소총을 3등분해서 넣으니 표가 나지 않았다. 나는 미군들이 장비 검사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미군들은 우리 장비와 차량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그 날(8월 20일) 24시가 넘어서 작전장교 김석찬 대위가 미군 협조회의를 참석했다가 돌아왔다. 김 대위의 보고를 들으니 우리 임무가 미루나무 절단 인원을 근접경호하는 것에서 외곽경비로 바뀌었고, 무기 휴대를 금지한다는 것을 재차 다짐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분 내에 작전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교전 조건은 피아를 막론하고 연속 3발 이상의 사격이 가해지면 교전상황으로 보고, 준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작전을 5분 내에 완료할 수 있을까하는데도 의문이 생겼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외곽경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총알받이가 될 터인데 미군들은 권총이라도 휴대하면서 우리에게서 비무장을 강조하다니 분통이 터졌다. 어쨌든 우리는 더욱 면밀하게 작전준비를 하고, 각 조별로 임무를 세부적으로 부여했다. 나는 당시 적어도 우리 대원 7~8명은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나도 현 계급으로 군 생활을 끝낼 각오를 했었다.
- 이제 남은 문제는 언제 발포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적이 보이기만 하면 먼저 사격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100m 전방, 또는 200m 전방에 오면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나는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쏘았느냐보다는 어느 편이 많이 죽었느냐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공대장에게 “신중하되 적이 사격을 가해 올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투입되기 전에 우리 대원들을 모아놓고, 짚차 본네트에 올라가 “이 작전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과 북괴 김일성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인 만큼 필사즉생, 필생즉사 정신으로 작전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희도 (예)대장 증언(계속)〉

- (당시 우리 제1사단과 미 제2사단 증원병력, 포병, 전투기 등의 전투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당시는 전혀 몰랐으며, 작전이 끝난 이후에 B-29 폭격기까지 공중에 떠 있었고, 항공모함도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중 삼중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는 전혀 몰랐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 우리 병력이 들어가니까 초소의 북한군들이 모두 철수하고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었고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 대원들이 오히려 당황을 했다. 상대가 없어지다 보니 싱겁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초소에 들어가 전화기를 부수고, 창문 커튼 천도 찢어오고 그랬었다.
- (초소를 부수는 것과 도로차단기를 제거하는 임무를 최초부터 합참본부장이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명령은 받지 않았으며, 미루나무 절단인원을 보호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의 북괴군을 처치하라는 임무만 받았다. 초소를 부수는 것과 도로차단기를 제거하는 것은 대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었다.(유엔사에서 유사 시 연백평야까지 진격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을 들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 김 대위는 비에라 중령과 함께 출발하고 한국군 특공대를 태운 트럭들이 뒤를 이어 나갔다. 나는 함께 들어갈 수 없었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 파악을 해야겠기에 작전현장의 무선 교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미 제2사단 제9보병연대 상황실로 이동했다. 이 부대는 자유의 다리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실에는 유엔군사령관, 미 제2사단장, 비에라 대대장으로 연결되는 지휘망이 구성되어 있었고 현장의 작업조와 경계조 등의 통화 내용이 모니터링 되고 있었다.
- 나는 거기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전쟁상황이 될 터인데 여기 있으면 여단을 지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작전참모와 제5대대장의 건의를 듣고 부대로 복귀하다 제1사단 상황실에 들러 상황을 확인했다. 거기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누르면서 다시 미 제9연대 상황실로 돌아 왔는데, 거기서 작전이 종료되고 우리 대원들이 모두 무사히 전진캠프로 돌아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작전이 끝나고 이세호 참모총장에게 “우리 부대가 들어갔을 때 공동경비구역 안에 적이 한 명도 없었고, 작전 중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 한 명도 죽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보고하니까 이 총장은 “잘 했어, 더 잘됐어”라고 우리를 격려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총을 휴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합참본부장이 징계위원장이 되어 우리 김종현 특공대장과 김석찬 작전장교가 징계를 받았다. 훈장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박희도 (예)대장 증언(계속)〉

되어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후에 스틸웰 장군을 만났을 때, 그는 “당신이 미군장교였다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제2사단에서 당시 절단한 미루나무로 기념패를 만들어서 64개를 보내 주었다.

- 그 때 우리가 한 작전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한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책을 낸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날의 국내 상황과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내용이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끝.

## 6. 박호규 씨 증언<sup>11</sup>

- 당시 특공대원 중에는 병(兵)은 2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은 통신병이었고, 또 한 명이 나왔다. 나는 상병으로 화기하사관 직책을 맡고 있었다. 원래 나는 병이었으므로 뽑히기 어려웠으나, 내가 권투, 태권도 등 여단 3관왕이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자원했다. 여단장님이 “야! 박호규, 너는 병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갈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다. 기꺼이 가겠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 최초 무기는 휴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단장님께서 “군인이 무기도 안가지고 가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총을 3등분해서 사냥 속에 숨겨서 가져가게 되었다. 실탄은 RC 4에서 모두 자는 사이에 몰래 분배해서 장전을 했다. 그 외의 무기는 자살용으로 권총 1정, 수류탄 2발, 크레모아를 휴대했었다. 나는 여기에 추가해서 칼 24자루 정도를 방탄조끼 안에 차고 들어갔다. 그리고 정글도도 가지고 갔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곡괭이 자루뿐이었다. 우리는 들어갈 때 모두 죽을 각오를 했다. 우리는 그 지역 내의 남북한의 포병 화집점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살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바로 앞에서 송중윤, 김달수하고 3명이서 같이 경계를 섰다. 다리 건너편에 북한군이 엮드려 싸 자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쪽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북한군이 사격을 가해 올지도 모르니 움직이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했다. 사천강은 말이 강이었지 개울과 같아서 쉽게 건너올 수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오른 편이 개활지였기 때문에 특히 이쪽이 신경이 쓰였다. 지금도 전방을 보고 있어도 좌우 측방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때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이 습관이 되어있어 그렇다. 나는 국가대표 복싱선수도 했고, 군인 태권도 대표도 했는데 전방을 보고 있어도 좌우측 공격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때 생겼다.
-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로 종군 기자인지 사단장인지 모르겠는데 빨간 완장을 낀 인물이 다리를 건너오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 때 우리가 나가서 “야! 너 이리 좀 와 봐라, 김일성이 잘 있냐?”하고, 오줌을 싸면서 약을 올렸다.(박희도 장군 : 그 때 총을 가지고 갔으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계획대로라면 5분이면 미루나무를 잘라야 하는데 첫 번째 가지를 자르는데 전기톱 날이 나무에 끼어 버렸다. 미루나무가 잔뜩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이 전진캠프로 가서 다시 예비 톱을 가져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자 병력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긴장이 풀어지려 했다. 나는 그 톱을 이용해서 초소로 뛰어 들어가 정글도로로

〈박호규 씨 증언(계속)〉

유리창을 깨어버리고, 전화기도 내려쳐서 깨어 버렸다. 유리창을 깨면서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기념으로 가져갈겸 해서 초소의 빛바랜 노란색 실크 커튼을 뜯어 봉대 같이 팔을 싸맸었다. 미군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총으로 쏘서 유리창을 깬 줄 알았다가 내가 정글도로 초소를 부수고 있으니까 ‘코리아 넘버원’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 (초소를 부수고, 바리케이트를 부수라는 것은 김종현 특공대장이 지시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 내가 먼저 초소를 때려 부수니까 대원들이 나머지 초소도 다 때려 부수자고 하면서 함께 부수었다. 당시 공동경비구역 내에 북한 측 초소가 우리 측보다 많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개 초소를 부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저 바리케이트도 없애 버리자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힘으로 안되니까 차량에 체인을 묶어서 제거했다.(박희도 장군 : 미군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미군 운전수가 말을 안 들어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위협을 하니까 말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 (미군 공병이 북한군 5, 6초소 바리케이트를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우리 군과 중복된 임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군은 미루나무만 잘랐지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바리케이트는 우리가 제거한 것이다.
- 사건이 끝나고 복귀하니 스틸웰 사령관이 우리를 포옹해 주면서 “자유의 투사에게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훈장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무기휴대 문제 때문에 우리 특공대장이 훈장은커녕 징계를 받게 되어 당시는 아쉬웠다.
-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대원들 명단도 없어졌고, 그 때 가져왔던 커튼도 없어졌으며, 미 제2사단에서 기념으로 보내 준 기념패도 잃어버렸다. 제1공수특전여단에도 자료가 없고, 육군본부에도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요즘 같이 중복세력이 설치되는 세상에 다시 옛 동료들을 모아서 국민 안보계도 운동에도 앞장서고 싶은데 여건이 어렵다.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할 현 시기에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쪼록 좋은 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끝.

## 7. 김석찬 (예)대령 증언<sup>12</sup>

- 나는 당시 통역장교가 아니라 제1공수특전여단의 작전장교였다. 나는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폐병이 생겨서 병가를 내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8월 18일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는 여단을 대표해서 판문점 JSA대대 상황실로 가서 작전협조를 했다.
- 8월 20일 여단 작전참모, 특공대장 김종현 소령과 같이 전진기지의 JSA 대대장실에서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지침을 들었다. 스틸웰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헬기로 바로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쓰기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1공수특전여단 장병이 용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대를 선택을 했다고 했다. 스틸웰 사령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작전은 북한군이 대응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치워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게 미루나무 절단 작전 시 경계를 제공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무기를 휴대하지 말 것을 강조한 후 떠났다.
- 우리 여단의 작전참모와 김종현 소령도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아서 미군과 작전협조를 했다. 우리 부대는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아 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여단과 통신도 안 되고 지도도 없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엽서를 구해서 뒷면에 있는 요도를 보고 토의에 임했다. JSA 대대장은 국지작전을 책임지고 전체적인 작전통제는 유엔사에서 나온 연락장교(소령)가 모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었다.
- 협조회의에서 토의된 핵심사항은 무장문제, 부대배치 위치, 교전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미군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인원은 모두 찼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장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우리가 얻어맞았는데 그런 것 따지고 있느냐?”며 항의를 했으나 미군들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무장 승인을 거부했다. 나는 “그러면 총 가진 사람이 맨 앞에 서야지 왜 우리보고 앞에 서라고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교전조건에 대해서 밤 12시까지 장시간 동안 토의를 했는데 결론은, 사격개시는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중간을 넘어서면’ 한다는 것이었고, 피아를 막론하고 ‘총탄이 연속 세 번 나가면’ 교전선포로 본다는 것이었다.
- 미군과 협조회의를 마치고 21일 01:00경 되어서 RC 4 체육관에 복귀해서 박희도 여단장을 비롯해서 작전참모, 김종현 소령 등과 토의를 했다. 나는 우리 특공대가 미군에 작전통제되었기 때문에 여단장님은 작전지휘라인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 소총을 휴대하게 되면 미군의 작전지시를 어기게 되는 것인데, 그 배후에 한국군 장성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나중에 잘못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석찬 (예)대령 증언(계속)〉

- 사냥에 소총을 숨겨서 휴대하도록 했는데 샌드백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우리가 있던 곳이 군사기지가 아니라 체육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간부들이 뛰어다니면서 겨우 샌드백을 구해 왔다. 소총 휴대는 지원조만 휴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원이 다 휴대하는 것으로 했다.
- 21일 새벽에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우리가 자유의 다리를 지나면서 다리는 폐쇄되었다. 다리 북쪽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못나오게 하고 밖에서도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했는데 작전보안을 위한 조치였다. 비에라 중령은 “지금까지 JSA에서 생긴 작은 문제들도 북한 측에 첩보가 새 나갔다.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번만은 비밀이 새 나가지 않고 성공했다고 한다.
- 미루나무 절단작전은 5분 만에 끝내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미 제2사단 공병대대장이 5분 이내에 충분히 자를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미루나무가 물이 잔뜩 올라 있어 첫 가지를 자르는데 전기톱이 끼여 버렸다. 전진기지에 가서 예비 톱을 가져 오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비에라 중령과 유엔사 연락장교가 시계를 보면서 초초함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톱은 끼여 있고 대략 150명 정도의 북한군 증원 병력이 사천강 건너편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었으니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 우리의 임무는 북한군의 증원을 막는 것과 나무 자르는 인원을 외곽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김종헌 소령이 미루나무 근처에 있었고 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에 있었다. 북한군 증원을 막는데 이 다리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우리 특공대도 소총을 결합했는데 이 때 무기를 휴대했다는 것을 미군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정말 일촉즉발의 긴장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북한 군관이 다리를 조금 건너오다 돌아갔다. 다리 중간까지는 오지 않았다.
- (미군 공병대가 도로차단기를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질문에) 미군들은 도로차단기를 제거하지 않았다. 5분 만에 작전을 끝내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시간 여유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협조회의 때도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한 토의도 없었다. 미군은 미루나무만 잘랐지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바리케이트는 우리가 제거한 것이다.
- (협조회의를 할 때 우리 제1사단 등 다른 부대에서 온 요원은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다. 우리만 있었다. JSA 작전만 토의했지 다른 작전에 대한 토의는 없었다. 다른 작전은 아마 별도로 토의했을 것이다. 당시 나는 JSA에 한정된 부분적인 작전만 했지만 전쟁이

〈김석찬 (예)대령 증언(계속)〉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당시 B-52폭격기도 뜨고 정말 전쟁직전의 상황이었다. 제1사단 포병은 포탄을 전부 개봉했다는 얘기를 사건이 끝나고 제1사단 포병장교들로부터 들었다.

- (초소를 부수고,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사전에 지시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과 사전 협조회의를 할 때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현지에서 나와 우리 대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었다.
- 무기휴대와 관련해서 작전지시 위반으로 나하고 박 소령이 처벌을 받았다. 그래도 처벌이 여단장선까지 안 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JSA 내의 작전 외의 전체적인 작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나의 증언이 책을 집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좋은 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끝.

## 주(註)

- 1 합동참모본부, 『합참사 1948~1981』, 1982, 435~453쪽, 이 훈령은 1967년 12월 15일 제정되었다.
- 2 합동참모본부, 『합참사 1948~1981』, 1982, 470~472쪽, 이 훈령은 1968년 2월 26일 제정되었다.
- 3 『합참사 1948~1981』, 454~455쪽
- 4 국방부, 『국방백서 1968』, 1968, 43~44쪽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970』, 127 · 237 · 287쪽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The Military Balance, 1968~1969, 1976~1977
  - \* 데이터 인용은 국방백서 등 국내자료를 우선하고, 국내 자료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는 The Military Balance를 인용하였음.
  - \* 해병전력은 병력은 해군에, 주요 지상 전투장비는 육군에 포함.
  - \* 헬기는 한국군은 육 · 해 · 공군 전력, 북한군은 공군전력이나, 육군전력에 포함.
  - \* 야포에는 다련장, 방사포와 북한군의 120 · 160mm 박격포 및 한국군의 4. 2" 박격포 포함
- 5 이 글에서는 사료의 샘플만 제시했다. 사료 전체 내용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V, 박정희(2) : 푸에블로호 사건』 참조
- 6 외무부, 『60년대의 한국 외교(부록)』, 평화당인쇄주식회사, 1971, 314~318쪽
- 7 『JSA 50년사』, 87~90 ;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249~256
- 8 『JSA 50년사』, 92~94 ;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256~258
- 9 『JSA 50년사』, 96~103쪽
- 10 『JSA 50년사』, 104~106쪽
- 11 박희도 (예)대장과 함께 증언청취를 했으며, 박 장군 증언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기술했다.
- 12 박희도 (예)대장 및 박호규 씨 증언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은 제외하고 기술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1967』, 삼성인쇄, 1967  
\_\_\_\_\_, 『국방백서 1968』, 삼본문화, 1968  
\_\_\_\_\_, 『국방통계연보 1970』, 1970  
\_\_\_\_\_, 『북괴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1979  
\_\_\_\_\_, 『국방조직 변천사』, 1992  
\_\_\_\_\_,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_\_\_\_\_, 『국방사 제4집(1972. 1~1981. 12)』, 군인공제회 공우개발사업소, 2002  
\_\_\_\_\_,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신오성기확인쇄사,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서라벌인쇄, 1990
-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5  
\_\_\_\_\_, 『대비정규전사 II (1961~1980)』,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8  
\_\_\_\_\_, 『建軍 50年史』,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_\_\_\_\_, 『국방사연표(1945~1990)』,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신오성기 확인쇄사, 2004  
\_\_\_\_\_,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군인쇄창, 2012
- 국방부 정훈국, 『월간 정훈 9월호』, 공화출판사, 1976  
\_\_\_\_\_, 『월간 정훈 10월호』, 공화출판사, 1976
- 합동참모본부, 『합참사 1948~1981』, 합참인쇄소, 1982  
\_\_\_\_\_, 『합참 40년사』, 합참인쇄소, 1994  
\_\_\_\_\_,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합참인쇄소, 1999  
\_\_\_\_\_, 정보본부, 『북한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사례집』, 합참인쇄소, 2011
- 육군본부, 『육군사 제12집(1968년도)』, 육군 인쇄소, 1971  
\_\_\_\_\_, 『북괴 4반세기 분석』, 육군 인쇄소, 1972  
\_\_\_\_\_, 『대침투작전사(전사연구 제6집)』, 육군 인쇄소, 1978  
\_\_\_\_\_, 『간첩침투사건 편람 II 집( '53~'68)』, 육군 인쇄소, 1986
- 해군본부, 『NLL,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해상경계선-북한의 NLL 해역 도발사』, 국군인쇄창, 2011



한미연합사,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해』, 육군인쇄창, 2008,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 1973(총람판)』, 1973  
 \_\_\_\_\_, 『안보문제연구 1978』, 1978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제6군단사령부, 『진군약사(1954. 5. 1~1976. 4. 40)』, 1976  
 제1보병사단, 『전진약사 제2집(1966. 1. 1~1978. 9. 30)』  
 JSA 경비대대, 『JSA 50년사』, 육군 인쇄창, 2008  
 국토통일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록 분석』, 1980  
 \_\_\_\_\_, 『남북대화 백서』, 1988  
 외무부, 『60년대의 한국외교』, 1971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 제1집』, 1968  
 국회사무처, “제63회 국회회의록 제1·2호”, 1968  
 북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 1974  
 \_\_\_\_\_, 『북한총람』, 1983  
 극동문제연구소, 『북괴 군사전략집』, 1974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5~1996』, 1995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73  
 \_\_\_\_\_, 『합동연감』, 1976  
 \_\_\_\_\_, 『합동연감』, 1977  
 내외통신, 『북괴의 대남도발사(1945. 8~1980. 4)』, 1980  
 중앙일보사,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삼성인쇄주식회사, 1994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선집 제4권』, 1960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6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박정희(2):푸에블로호 사건』, 동화인쇄공사, 2010  
 한국역사정치연구회 김용직,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강인덕, 『한국 안전보장 논총 제3집』, 1971  
 김성은, 『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템플코리아, 2008  
 김정렴, 『김정렴 정치회고록 아, 박정희』, 중앙M&B, 1997  
 박희도,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 샘터, 1988  
 송효순, 『북괴도발 30년사』, 북한연구소, 1978  
 서효일, 『김일성 주체사상, 그 올바른 이해』, 도서출판 한원, 1989  
 오기원, 『북괴 간첩기관의 전모, 그 내부로부터의 고발』, 미문출판사, 1977

-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 이민룡, 『한반도 안보전략론』, 도서출판 봉명, 2001
- 이세호, 『한길로 섬겼던 내 조국』, 대양미디어, 2009
- 조갑제, 『박정희, 제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조갑제 닷컴, 2007
- 조갑제, 『박정희, 제12권 1979년』, 조갑제 닷컴, 2006
- 조영갑, 『한국위기관리론』, 팔복원, 1990
- 박호섭, “위기 시 미국의 대북한 협상 행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중심으로”, 『해군전략 제121호』, 해군대학, 2003
- 심홍선, “북괴 도발행위의 새 양상과 대비책”, 『국회보 제76호』, 국회사무처, 1968
- 양성철·문정인,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 푸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동맹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I : 정치·안보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 장삼열, “국가 Power-Image와 남북한 갈등 사례 연구”, 한남대학교, 2012

## 2. 외국 문헌

-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 X I X Part 1 Korea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Eighth United States Army, CHRONOLOGY 1 January 1968-30 June 1968 (Staff Historian's Office, G-3, Headquarters, Eighth U. S. Army)
- Robert E. Newton, The Capt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Effect on SIGINT Operations (Washington D.C. : National Security Agency, 1992)
- 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 A Spy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e (Lawrence, Kansas 66049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 Naval War College,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01
- UNC/USFK/EUSA, UNC/USFK/EUSA 1976 Annual Historical Report, 1976
- Richard Nixon,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 A New Strategy for Peace (Report to the Congress, February 18, 1980)
- Richard G. Head, Crisis Resolution :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 (Colorado : Westview Press, 1978)

## 찾아보기

-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25, 47, 205, 209, 327
- 1·21사태 85, 124, 156, 172, 173, 174, 175, 178, 188, 206, 207, 209, 214, 217, 218, 221, 292, 328, 383, 387
- 115GP 263, 297
- 116GP 263, 297, 298
- 124군부대 25, 52, 57, 73, 79, 81, 83, 85, 86, 89, 112, 208, 379, 380
- 17정찰여단 59, 81
- 283군부대 52, 57, 81, 208, 379
- 2차 숙영 93, 381
- 2초소 279, 281, 283, 298, 304
- 2X도로 95, 117
- 2Y도로 96, 108
- 3·15부정 선거 47
- 303위원회 142
- 33전술항공단 287
- 376전략항공단 287
- 38도선 51, 158, 163, 172
- 3대혁명소조 242, 277
- 3대혁명역량강화론 48
- 3차 숙영 93, 381, 382
- 3초소 279, 281, 282, 304
- 4·19혁명 33, 47, 56, 65, 82
- 4대 군사노선 36, 40, 48, 54, 56, 82, 83, 251, 252, 253, 276
- 4초소 279, 281, 282, 283, 298
- 5·16군사정변 33, 40, 47, 56, 65
- 5개년 경제계획 33, 35, 40, 240
- 5분대기조(부대) 97, 107, 108, 123, 346, 357
- 5초소 279, 281, 283, 289, 298, 299, 304, 306, 396
- 6·23특별선언 245
- 6·25전쟁 25, 51, 152, 174, 175, 209, 262, 326
- 6개년 경제계획 276
- 6초소 279, 305, 306, 396
- 7·4 남북공동성명 239, 245, 255
- 7개국 정상회담 356
- 7개년 경제계획 37, 40, 83
- 7초소 279, 298, 305, 306
- 8·15 경축 239
-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25, 276, 387, 391
- 8·5성명 275, 276
- 863호 경비정 256
- 8초소 279, 299, 304, 306
- 907군부대 58
- 각료회담 355
- 감시태세 156
- 갑산파 40
- 갑종사태 74, 211, 220, 336
- 갑호(甲號)비상령 123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26
- 강압외교 327
- 강인덕 74, 208
- 건물구역 313, 376
- 검문검색 210, 256, 345, 382
- 검문소 212, 263
- 검은 방패 항공정찰작전 165
- 계릴라전 31, 73, 253, 379

겹쳐쓰기 방법 181, 182, 183  
 경기도 경찰국 93, 98, 99, 211  
 정보병(부대) 50, 52, 59, 252  
 경북고등학교 106, 382  
 경비병(력) 266, 280, 281, 282, 288, 312, 323  
 경비소대 296, 297  
 경비장교 266, 281, 288  
 경비장교회의 266, 289, 357, 362, 370, 371  
 경비초소 313, 375  
 경전선 174, 223  
 경제 및 기술협정 37  
 경제에서의 자립 37, 39  
 경호실 102, 221, 341  
 고 혁(高赫) 81  
 고량포 246  
 곡괭이 자루 281, 282, 296, 301, 395  
 골드버그 168, 170, 178, 180  
 골딩 157  
 공군본부 106  
 공동일직실(장교) 266, 288, 298, 375  
 공동감시소조 375, 376, 313  
 공동경비구역 231, 232, 233, 261, 262, 266, 267, 273, 279, 288, 290, 291, 292, 293, 296, 297, 298, 300, 308, 309, 312, 313, 323, 325, 369, 370, 371, 375, 376, 377, 391, 393, 395, 396  
 공동경비구역 지원단 263, 264, 267, 281, 282, 289, 299, 357, 359  
 공동성명(담화문) 123, 215, 216  
 공보부 124  
 공식 위치일지 170  
 공중엄호 150  
 공해 139, 142, 143, 146, 155, 156, 158, 170, 213  
 과학수사연구소 105  
 교전규칙 142  
 교전상황(조건, 선포) 303, 392, 397  
 교훈 26, 206, 233, 323, 326  
 구경 50기관총 139  
 구정 대공세 168, 176  
 구파발 102, 114  
 구평동 382  
 국가군사지휘본부 154, 157  
 국가안보국 136, 141, 144, 146, 157, 157, 158, 161, 165, 169, 170  
 국가안전보장회의 159, 218  
 국가재건비상조치법 33  
 국가재건최고회의 33  
 국가통수기구 291, 330  
 국군조직법 67  
 국무부(장관) 157, 161, 176, 352  
 국방과학연구소 240  
 국방목표 66  
 국방부 97, 108, 117, 121, 122, 146, 157, 161, 387  
 국방에서의 자위 39, 51, 186, 251  
 국방위원회 124, 241  
 국방일보 25  
 국방정보국 157, 161  
 국방정책 65  
 국방조직 67  
 국제공산주의운동 36  
 국제기 146  
 국제사법재판소 168  
 국제연합군 262, 367, 368, 369, 371, 373, 374, 375, 376

국제적십자위원회 168  
 국제혁명역량 243, 244  
 국지도발 대비태세 72  
 국회 124, 173, 294  
 군령권 69  
 군사·기술 원조협정 38  
 군사노선 251  
 군사대비태세 72  
 군사동맹 36  
 군사분계선 232, 261, 298, 303, 305, 312, 313, 372, 375, 376, 377  
 군사전략 72, 251, 252  
 군사정전위원회 143, 174, 176, 178, 183, 232, 255, 256, 262, 263, 264, 266, 275, 285, 288, 309, 310, 311, 312, 313, 314, 358, 362, 363, 365, 372, 374, 375, 377  
 군사정책 26, 233, 251  
 군사지휘본부 149  
 군사혁명위원회 33  
 군원(軍援) 205  
 군정(淸)권 69  
 권력세습 277  
 권한 위임사항 329  
 규탄대회 125, 175, 294, 310, 326  
 그리브스 297, 358  
 근무사관회의 358  
 기관(단)총 102, 104, 115, 123, 147, 163  
 기관원 212  
 기동속공전략 51  
 기동타격대 105, 263, 264, 281, 282  
 기드로로그(Gidrolog)호 166  
 기자회견 191, 192  
 긴급구조신포 147  
 긴급파기 148  
 김 일(金 一) 38, 241  
 김·오히라 메모 34  
 김계원 96, 97, 98, 113, 122, 126, 388  
 김광협 178  
 김동규 243, 277  
 김동조 174  
 김동호 292  
 김문환 281, 357  
 김석찬 295, 302, 303, 304, 378, 392, 378, 393, 397  
 김성애 243, 277  
 김성은 69, 73, 97, 98, 121, 122, 123, 173, 213, 214  
 김성진 292  
 김신조 81, 89, 108, 110, 178, 208, 378, 379, 385, 386, 387  
 김영주 245  
 김용규 278  
 김용식 173  
 김일성 25, 38, 40, 81, 82, 103, 161, 162, 163, 166, 167, 168, 172, 175, 176, 178, 180, 186, 187, 188, 190, 191, 192, 193, 206, 208, 232, 241, 242, 252, 276, 277, 278, 285, 290, 292, 310, 312, 323, 324, 325, 327, 380, 381, 387, 393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83  
 김일성 주체전략 252  
 김재규 96  
 김정렴 273  
 김정은 25  
 김정일 25, 232, 241, 242, 273, 277, 278, 325  
 김정태 41, 85, 86, 89, 103, 380

김종웅 85, 104, 105, 106, 208, 380, 382  
 김종필 34, 124  
 김종현 294, 295, 391, 393, 397, 398  
 김중린 58  
 김중철 118, 126  
 김진만 124  
 김창봉 41, 43, 186, 188  
 김춘식 105  
 김택수 295, 391, 392  
 김풍섭 256  
 김현옥 121, 124  
 김형욱 73, 122, 387  
 난단(NhanDan)지 184  
 남 일 243, 277  
 남노고산 102  
 남방한계선 58, 379, 380, 381  
 남베트남 32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 National Liberation Front) 32  
 남북공동성명 245  
 남북관계 233, 239, 245, 246  
 남북대화 239, 246, 267  
 남북연방제 276  
 남북적십자회담 239  
 남북조절위원회 245, 255  
 남북한 국력(군사력) 349  
 남북회담 255, 256  
 남장대 113, 114  
 남조선혁명 47, 243  
 남침전쟁 293  
 남해 경비분대 339  
 내무부 101, 123, 124, 218  
 냉전(체제) 29, 161, 189, 190, 208, 238  
 널문리 262  
 노고산 93, 101, 117, 381, 386, 387  
 노농적위대(원) 48, 49, 55, 86, 253, 290  
 노도(Nodo) 170  
 노동당 241, 242, 243  
 노동당 연락부 58  
 노동신문 37, 192  
 노무자 232, 281, 282  
 노벨 워드(Norvell Ward) 140  
 노비코프 38  
 노성준(소좌) 379  
 노재현(합참의장) 294, 300, 391  
 뉴스위크 324  
 뉴욕 타임스지 184  
 닉슨 182, 231, 237, 239, 245, 252, 262, 326  
 닉슨독트린 239  
 다낭(Danang) 155  
 당 대표자회의 39  
 당 중앙위원회 39  
 당료과 40  
 당원증 재교부사업 242, 277  
 당조직지도부 241  
 대간첩대책본부(장) 72, 74, 80, 109, 117, 118, 122, 124, 218, 344, 345, 346, 347  
 대간첩봉쇄대책위원회 73  
 대간첩작전 97, 112, 113, 117, 121, 123, 124, 125, 211, 215, 218, 220, 221, 222, 386  
 대간첩작전기획국 218  
 대간첩통신전자국 218  
 대간첩협의회 337, 339, 347  
 대남공작(기구, 사업) 56, 58, 83, 380, 383  
 대남도발 26, 187, 233, 246, 256, 257  
 대남방송 255, 256  
 대남사업담당 58

대남사업총국(장) 58, 85  
 대남적화통일 25, 36, 252, 326  
 대남(폭력)전략 40, 33, 82  
 대약진 운동 39  
 대일청구권 34  
 대잠함 146, 147, 148  
 대전 공설운동장 223  
 대침투작전 212  
 대통령훈령 제18호 73, 98, 206, 211, 218,  
 220, 336, 345, 347  
 대통령훈령 제19호 218, 220, 221, 345  
 더 인디펜던트 타임지 184  
 데탕트 238, 329  
 데프콘 156, 209, 285, 286, 287, 290, 291,  
 292, 297, 303, 311, 327, 388, 389  
 도끼 231, 232, 282, 289, 296, 299, 327,  
 369, 370, 371  
 도끼만행(사건) 231, 233, 246, 254, 256,  
 261, 273, 274, 276, 277, 279, 286,  
 292, 293, 313, 314, 324, 326, 327,  
 328, 329, 357  
 도로차단기 306, 393, 398, 399  
 도발 동기 274, 276  
 도보경찰대(소) 52, 57, 59, 381  
 도봉산 101, 114  
 독재정권(체제) 25, 36, 39, 206  
 돌아오지 않는 다리 183, 231, 279, 281,  
 295, 297, 302, 304, 305, 313, 357,  
 364, 389, 391, 395, 397  
 동서화해 237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37  
 동해 145, 150, 158, 165, 166, 176, 214  
 동해 경비분대 339  
 두웨인 호지스 148, 181, 183  
 등거리외교 36, 37  
 땅굴 252, 257  
 텃(Tet : 節)공세 32  
 라이언(John D. Ryan)(대장) 141, 153  
 래봉장 261  
 러스크(Dean Rusk) 141, 157, 162, 168,  
 176, 178, 179, 181, 182, 192,  
 레너드 제안 181, 183  
 레닌 274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37,  
 38  
 로란(LORAN) 136, 137  
 로버트 치카(Robert Chicca) 140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180  
 로스토우(Walt W. Rostow) 141, 158, 159,  
 161, 162, 163, 168, 178  
 루카스(Lucas) 183  
 류병현(중장) 294, 330, 391  
 리가급(Riga class) 166  
 리마 275  
 리버티 벨 298  
 리버티호 139  
 리오 비스타(항) 136, 137  
 리지웨이 262  
 린박오 31  
 마닐라 코무니케 356  
 마르크스-레닌주의 37  
 마리노프스키 43  
 마셜 카터(Marshall Carter) 141, 144, 157,  
 169, 231, 274, 326, 329  
 마양도 145  
 마오쩌둥 31, 51, 56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80  
 맥나라마(Robert McNamara) 141, 143,

157, 158, 161, 162, 164, 168, 169, 179  
 맥클레인 374  
 맥키(Seth J. Mckee)(장군) 141, 152, 153  
 맹호사단 34  
 머피(Murphy) 140, 171, 189, 192  
 모래동 89  
 모로소프(Morosov) 170  
 모블레이(Mobley) 134  
 모스크바 36, 161, 166, 167, 184, 188, 237  
 몽둥이 293, 304, 326, 367  
 무건리 114  
 무력(시위) 166, 214, 232, 291, 297, 311,  
 325, 327, 328  
 무력적화통일 251  
 무력혁명노선 252  
 무장간첩(사건, 선) 256, 379  
 무장공비 25, 56, 104, 105, 106, 121, 126,  
 207, 208, 209, 214, 257, 346  
 문세광 239, 246, 256, 326  
 문화혁명 31, 83  
 뮌헨 42  
 미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134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25, 47, 335,  
 350  
 미 제1군단(장) 94, 96, 98, 99, 107, 109,  
 211, 221, 386, 387, 389, 339  
 미 제1해병사단 51, 288  
 미 제9연대 296, 304  
 미 제2사단(장) 87, 89, 93, 94, 96, 109,  
 112, 116, 117, 118, 126, 262, 288, 296,  
 304, 359, 361, 362, 363, 379, 380, 386,  
 389, 393, 394, 396, 398  
 미 제2사단 항공단 296  
 미 제314항공사단 288  
 미 제32연대 296, 297  
 미 제36공병단 96  
 미 제3여단(장) 359, 361, 362, 363  
 미 제5공군(사령부) 136, 140, 150, 153, 155,  
 209  
 미 제7사단 156, 231, 239, 240, 256, 262,  
 275  
 미 제7함대(사령부) 153  
 미 제8군(사령부(관)) 95, 96, 109, 262, 288,  
 386, 389  
 미 제9보병연대 298, 365, 393  
 미 태평양사령부 149, 285  
 미·북 회담 180  
 미·일 안보조약 36  
 미군 철수 273  
 미그(전투기) 21, 133, 147, 152  
 미드웨이(호) 232, 286, 287  
 미루나무 231, 232, 290, 293, 297, 298,  
 299, 300, 302, 304, 305, 308, 310,  
 312, 323, 325, 326, 327, 280, 287,  
 387, 391, 393, 394, 397, 398, 399  
 미사와 기지 152, 153  
 미얀마 아웅산묘지 폭탄테러사건 26  
 미첼 러너 188  
 미친 개 293, 326  
 미타사 89, 381  
 민기식 124  
 민방위기본법 239  
 민족보위상 41, 208, 379  
 민족보위성 경찰국 57  
 민족해방전쟁론 47  
 민족해방투쟁노선 38  
 밀러(Miller) 162



밀로정찰 379  
 밀봉교육 56  
 바리케이트 395, 396, 398, 399  
 박 철 281, 282, 289  
 박금철 41, 83, 186  
 박성철 275  
 박영식 101  
 박용한 283  
 박원조 110  
 박정희(대통령) 25, 35, 72, 73, 79, 80, 98, 112, 162, 173, 175, 176, 205, 206, 208, 213, 214, 215, 223, 231, 240, 246, 256, 285, 292, 326, 327, 329, 353, 354, 379, 380, 389, 391, 392, 397  
 박제경(대장) 383  
 박종규 122, 388  
 박중국 125, 178, 179  
 박중환 294, 300  
 박채석 175  
 박태안 105, 106  
 박호규 306, 378  
 박희도(장군) 294, 300, 306, 308, 378, 387, 390, 391, 395, 396  
 반관료주의 투쟁 242, 277  
 반당관료주의 277  
 반정리 89  
 발포명령 301, 303  
 방공대기태세 287  
 방아벌레작전 135, 136, 142  
 방어준비태세 156, 232, 311, 323  
 방위산업정비 3개년계획 218  
 방첩대 94, 99, 101  
 방탄조끼 302, 303, 395  
 배너(Banner)호 135, 143, 155, 162, 165, 166, 213  
 배렛(중위) 231, 279, 381, 282, 283, 359  
 배합전 51, 72  
 백령도 256  
 백악관 146, 149, 157, 158, 161, 286, 290  
 밴스(Vance) 176, 177, 214, 215  
 버거(Berger) 169  
 범블 버그(Bumble Bug) 165  
 법원리 92, 93, 98, 105, 385, 386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지 184  
 베리타 하리안지 184  
 베시(연합사령관) 329  
 베트남(전) 29, 31, 48, 51, 154, 155, 162, 164, 168, 172, 173, 174, 175, 177, 190, 191, 192, 209, 214, 237, 238, 239, 275, 325, 355  
 베트남 파병 33, 34, 67, 72, 74, 82  
 베트남참전 7개국 정상회의 34  
 별 대형 작전 164  
 병비국 224  
 병중사태 74, 336  
 보니파스(대위) 231, 279, 281, 282, 283, 290, 357  
 보복조치 162, 175, 292  
 보조일반환경조사선 135, 139, 140  
 본스틸(유엔군사령관) 95, 156, 162, 173, 174, 175, 215  
 볼라도함(USS Volador) 165  
 봉쇄선(진지) 112, 113, 212  
 봉화관 295, 391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30  
 부시(중앙정보국장) 286, 290  
 푸에블로호 137, 139, 174, 161, 175  
 부처(Bucher) 137, 140, 146, 147, 148, 159,

169, 183, 191  
 북노고산 95, 114  
 북방한계선 72, 158  
 북베트남군 32  
 북약산 88, 101, 102, 106, 109, 110, 383  
 북침(설, 위기) 273, 274, 276, 292, 293, 323, 324, 325  
 북한정세 26, 36, 241  
 분할경비 323  
 불가침협정 246  
 붉은청년근위대 49, 290  
 브라운(Brown) 258, 169, 329  
 브라운 각서 175  
 브래디(특수임무부대) 296, 298  
 브레머튼항(Port Bremerton) 137, 139  
 브링글(Bringle)(중장) 140, 141, 154, 155  
 블라디보스톡 36, 38, 166  
 비동맹국회의(외상회의) 231, 244, 273, 274, 275, 276, 324  
 비무장지대 163, 188, 261, 210, 297, 298  
 비밀파기 137, 138, 147  
 비밀회담(협상) 175, 214  
 비봉 93, 101, 102, 107, 108, 109, 113, 212, 381, 387  
 비상경계령 99, 101  
 비상대기태세 150, 151, 156, 287  
 비상치안회의 73  
 비서장(회의) 312, 375, 376  
 비에라(중령) 281, 299, 300, 304, 306, 393, 398  
 비에라 특수임무부대 296, 297, 298  
 비정규전 대비태세 72  
 사격개시 303, 397  
 사과(문, 요구) 179, 181, 182, 190, 192, 206, 327  
 사기동 102  
 사모바위 101  
 사미천 262  
 사상에서의 주체 37, 186  
 사세보(Sasebo) 153, 155  
 사천강 261, 262, 279, 305, 395, 398  
 사천교 182, 231  
 사회주의헌법 241, 243  
 삼봉산 89, 93, 381, 384  
 상호방위조약 54, 175  
 상황보고-2 149  
 샌드백 301, 303, 392, 398  
 샌디에이고항 139  
 샤프(Sharp) (대장) 141, 155, 166  
 서대문 경찰서장 104  
 서북해역 256  
 서울시 경찰국(장) 99, 104, 110  
 서종철 101, 113, 285, 291, 292, 293, 294, 308, 329, 288  
 서해 경비분대 339  
 서해도발사건 26  
 서호급 대잠함 145, 146, 170  
 선제기습(공격) 303, 305  
 성진항 145  
 세검정 96, 99, 102, 104, 110, 212, 213, 382  
 세검정 파출소 104  
 세습체제 232, 241, 243, 325  
 세쓰 제이 맥키(Seth J. Mckee)(장군) 151  
 셀레핀(Selephin) 37  
 소련 공산당대회 31  
 소탕작전 79, 106, 126  
 속전속결전략 218, 252  
 송추 94, 96, 98, 109, 114, 212

송추 초등학교 94, 386  
 수도경비사령부(관) 25, 96, 102, 104, 107,  
 109, 211, 221, 341, 382, 387  
 수경사 제30대대 106  
 수세적 방어전략 72  
 수원(守元) 32호 256  
 수정주의(적 노선) 29, 31, 36  
 슈마허(Schumacher) 146, 189  
 스미스(Smith) (소장) 178, 180  
 스웨덴 359, 364  
 스위스 359, 364  
 스키프트 286, 290  
 스탈린 29, 189  
 스탠턴(비행장) 296, 297, 298  
 스테판 해몬드 140, 145  
 스틸웰(유엔군사령관) 209, 232, 285, 286,  
 288, 290, 292, 293, 294, 299, 302,  
 326, 391, 394, 396  
 승가사 101, 104, 109, 382  
 시각 기록일지 170  
 신법직 121  
 신현수(육군 작전참모부장) 391  
 신호정보 135, 137, 138, 157, 158, 159,  
 170, 189, 213  
 심흥선 80, 207  
 싱글리브(소장) 285  
 쓰시마해협 145, 166  
 안전보장이사회 167, 168, 170, 244, 286,  
 351  
 안전보장회의 288  
 알렉세이 코시긴(Aleksei Kosygin) 37, 180  
 앵무봉 93, 95, 98, 101, 102, 113, 117, 381  
 양현 정지 148  
 어뢰정 146, 147, 148  
 에페스(Epes) (장군) 153  
 엔터프라이즈호 153, 156, 158, 162, 164,  
 165  
 여우사냥 작전 164  
 연방제 통일방안 56  
 연백평야 293, 389  
 연평도 포격사건 26, 328  
 영도핵심 41  
 영해(침범) 169, 170, 179, 181, 182, 189,  
 190, 191, 256  
 예비군 소집령 165  
 예비사단 221, 224, 342  
 오마하(Omaha) 165  
 오진우 51, 242  
 오키나와 153, 311  
 오히라(大平修三) 34  
 완케(Warnke) 159  
 왓슨(Watson) 163  
 요코스카 135, 140, 155, 156, 166, 288  
 요코타(Yokota) 152, 153  
 용산 지휘소 285, 288  
 우드워드 180, 181, 182, 183, 192  
 우명환 86, 379  
 우씨 형제 92, 93, 102, 121, 207, 210  
 우종림(장군) 389  
 우철재 92, 378, 384  
 우탄트(유엔사무총장) 173, 350  
 우호조약 54, 237  
 응도 146, 170  
 워싱턴 135, 157, 158, 169, 188, 216, 232,  
 285, 291, 308, 314  
 워싱턴 특별대책단(WSAG) 286, 290  
 워싱턴포스트지 167  
 워터게이트사건 239

원산(항) 25, 142, 146, 148, 152, 153, 155, 156, 159, 163, 165, 166, 188, 190  
 원주 치안회의 218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장군) 155, 168, 176  
 위급(CRITIC) 146, 150, 155, 157  
 위기대책반 285  
 위스키급 잠수함 145  
 위장평화(전략) 246, 257  
 위협평가(판단) 142, 150, 158, 213  
 윌리엄 에이치 에버렛(William H. Everett) (대령) 149  
 유감 232, 309, 310, 323, 324, 325, 327  
 유격대(전) 56, 122, 125, 252  
 유엔군사령부(관) 66, 69, 106, 125, 156, 216, 274, 285, 286, 288, 290, 291, 292, 293, 295, 299, 300, 304, 305, 308, 309, 311, 325, 329, 362, 363, 365  
 유엔사 2초소 357  
 유엔총회 231, 273, 275, 276, 324  
 유일사상체계 40, 41, 79, 242  
 유일지배체제 26, 241 277  
 유장식 243, 277  
 유진 폴브리니(Eugene Fulbrini) 135  
 육군본부 96, 101, 109, 113, 117, 123, 211, 387  
 육영수 246  
 윤보선 33, 35  
 윤봉주 94  
 윤필용 73, 122, 208  
 윤하정(尹河廷) 294  
 윤홍정 217  
 울곡(栗谷)계획 240  
 을중사태 74, 211, 220  
 응웬 반 티우(Nguyen Van Thieu) 32  
 이 호 121, 122  
 이각현(李珪鉉) 104, 213  
 이남주 107  
 이문항 285  
 이민우(李敏雨) 294  
 이상열 99  
 이세호 94, 294, 300, 378, 387, 388, 391, 393  
 이승만(李承晩) 33  
 이와쿠니(Iwakuni) 152  
 이용무 243  
 이용선 125  
 이익수 114, 116  
 이재형 80, 86, 379  
 이주연(李周淵) 43  
 이충진 116  
 이타주케(Itazuke) 153  
 이효상 124  
 이효순 58, 81, 186, 208, 381  
 이후락 121, 122, 179, 245, 388  
 인도 · 중국 전쟁 29  
 인도 · 파키스탄 전쟁 29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359, 365, 367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252  
 인민위원회 85  
 인왕산 106, 107, 110, 118, 383  
 인정 192, 206  
 인천상륙작전 51  
 일반전초 287, 311  
 일전불사(一戰不辭) 209, 327  
 임방현 310  
 임복진 378, 388  
 임진강 87, 98, 210, 261, 380

임충식 73, 122, 124, 173  
 자백 169, 170, 183, 188, 189, 190  
 자위권 174, 181  
 자유의 다리 303, 393, 398  
 자유의 투사 307, 396  
 자주국방 174, 205, 215, 240  
 자주노선 38, 40, 48, 79, 83  
 자주방위태세 205  
 자주외교노선 38  
 자하문 104, 105, 106, 382  
 작계 5027 389  
 작전개시 293, 300, 302  
 작전요구능력 137  
 작전지휘(권) 74, 211  
 작전통제(권) 66, 94, 209, 214, 216, 329,  
 330, 386, 392, 397  
 장 면(張 勉) 33  
 장자완만 165  
 장지량 106  
 잭 워너(Jack Warner) 190  
 저우은라이 36  
 적군 묘지 383  
 적십자회의 363  
 적화통일(노선, 전략) 47, 72, 80, 210, 244,  
 274  
 전격전 51, 252  
 전기톱 305, 395, 398  
 전두환 106  
 전략공군사령부 165  
 전략무기 제한협상 42  
 전략적 후방지대 49  
 전략지시 제1호 329  
 전면전 대비태세 72  
 (노동당) 전원회의 39, 40, 58, 83, 241, 242  
 전쟁 예비물자 288  
 전진캠프 357, 362, 363, 365, 366, 393  
 전진전략 239  
 전투경찰 98, 343, 100, 104  
 전투대세완비 3개년계획 218  
 전투배치 147  
 전투준비태세 304, 308, 311, 327, 389  
 전투태세 254, 290, 293  
 전투태세령 207, 276, 292  
 정래혁 113  
 정병주(장군) 99, 391  
 정보수집 프로그램(AGER Program) 134  
 정보수집(보조)함 147, 155, 157, 159, 166,  
 213  
 정보실패 207, 208  
 정보위원회 135, 137  
 정보조사국 161  
 정일권 73, 81, 121, 122, 174, 214  
 정전부 357, 359  
 정전협정 163, 257, 262, 266, 288, 367, 370,  
 372, 373  
 정중수(경사) 105, 106  
 경찰국장 85, 86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39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39  
 정치선전 182, 193  
 제1110야전공병단 114  
 제1201건설공병단 113, 117  
 제1201공병단 107  
 제13공군사령관 153  
 제15연대 114, 115, 212  
 제17민경초소 89  
 제17포병 115, 296  
 제18전술항공단(장) 151, 153, 287

제1공수특전여단(장) 97, 99, 101, 107, 113, 114, 116, 294, 296, 299, 364, 387, 391, 396, 397  
 제1군사령부 73, 95, 101, 106, 116, 287, 387  
 제1땅굴 246  
 제1봉쇄선 작전 112  
 제1사단(장) 101, 106, 109, 112, 212, 262, 296, 311, 364, 389, 389, 393, 399  
 제1사단 수색중대 298  
 제1숙영지 89  
 제1유격대대 96, 99, 107, 113, 114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37  
 제226보안부대 118  
 제259수송자동차대대 114  
 제25사단(장) 87, 89, 93, 98, 101, 109, 112, 210, 211, 385, 386  
 제26사단(장) 93, 94, 95, 102, 107, 109, 110, 113, 115, 126, 211, 381, 384, 386  
 제2공화국 33, 82  
 제2땅굴 246  
 제2봉쇄선 108  
 제2숙영지 89, 92  
 제2의 뮌헨 31  
 (북한군) 제2집단군 379  
 제30대대 107, 110  
 제30사단(장) 96, 101, 102, 104, 107, 387  
 제33대대 109, 110  
 제33사단 107, 117  
 제33항공구조구난대대 287  
 제347전술비행단 152  
 제356전술비행전대 152  
 제366전술항공단 287  
 제3공화국 56, 65  
 제3군사령부 288  
 제3봉쇄선 108, 112  
 제3사관학교 293  
 제3세계 38, 39, 187, 244, 329  
 제3숙영지 101  
 제3전진호 256  
 제3차 중동전쟁 29  
 제4차 숙영지 104  
 제6관구사령부(관) 96, 99, 101, 107, 112, 113, 114, 115, 211, 213, 221, 341, 387, 389  
 제6기지 85, 86, 89, 379, 380  
 제70연대 109  
 제71기동함대 153, 154  
 제71연대 94, 109, 117  
 제72연대 109, 112, 114  
 제73연대 107  
 제75연대 95, 114, 117, 118,  
 제76연대 95, 102, 107, 114  
 제77기동함대 155  
 제7함대사령부 136, 138, 140, 141, 154  
 제91연대 101  
 제92연대 108, 110  
 제너럴서먼호 193  
 조·소 우호조약 36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계획 40  
 조·중 상호방위조약 36, 40  
 조사위원회 172  
 조선노동당 52, 243  
 조선인민(해방)군 181, 309  
 조선일보 184  
 조선중앙통신 192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31  
 조직사상비서 277

조타실(장치) 136, 147  
 존 디 라이언(John D. Ryan)(장군) 151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31  
 존슨(대통령) 31, 32, 141, 142, 159, 161, 162,  
 164, 165, 166, 167, 176, 177, 179, 180,  
 181, 214, 215, 353, 354  
 종로경찰서(장) 104, 382  
 종파분자 39  
 주식단 242  
 주월 한국군 34  
 주유엔대사 351  
 주일 미 해군사령부 134, 135, 136, 142, 143,  
 144, 149, 150  
 주체사상 39, 48, 83, 183, 186, 188, 192,  
 193, 206, 241  
 주한미군 156, 158, 231, 239, 243, 244, 245,  
 262, 274, 275, 276, 288, 323, 324, 326,  
 329, 330  
 주한미군사령부(관) 157, 156, 216, 389  
 주희준 112  
 중·소 관계 36, 237  
 중·소 분쟁 36, 238  
 중동전 51  
 중립국감독위원회 263, 266, 313, 376  
 중앙대간첩협의회 121, 218  
 중앙방송 169  
 중앙일보 175  
 중앙정보국 165, 167, 169, 190, 352  
 중앙정보부(장) 218, 220, 387  
 지경수 243, 277  
 지병학 243, 277  
 지역예비군 224  
 지휘계통 211  
 지휘관계 69  
 지휘체계 69, 211, 330  
 직장예비군 224  
 진관내동 96  
 진관사 381  
 진군 “4” 94  
 진보도(다마스키섬) 31  
 징후정보과장 134  
 차단선(작전) 95, 210, 386  
 채원식 99, 105, 122, 123  
 천리마 운동 39  
 천빠오다(陳伯達) 42  
 천안함 피격(사건) 26, 328, 381  
 천현지서 93, 119, 211, 385  
 청와대 25, 58, 79, 86, 88, 99, 101, 102,  
 105, 106, 110, 121, 122, 172, 207, 208,  
 209, 214, 215, 292, 310, 380, 384, 397  
 청와대 특정경비구역 341  
 청운동 208, 212  
 청운중학교 105, 382  
 청진항 145  
 체임벌린 수상 42  
 체코슬로바키아 42, 180  
 체코제 기관단총 381  
 초리골(동) 89, 92  
 충동원령 163, 175  
 총력안보체제 205, 206, 207 239, 326  
 최 광 37, 41, 85, 186  
 최 현 51, 241  
 최고인민회의 52, 241  
 최고지휘관회의 113  
 최규식(총경) 105, 123, 212, 382  
 최규하 177, 214  
 최소한(minimal) 142, 143, 150, 151, 213  
 최용건 43, 241

최우근 102  
 치안국(장) 93, 99, 122, 123  
 치카 145  
 친소노선 37  
 친중국노선 36  
 카데나(Kadena) 151  
 카루긴(Kalugin) 193  
 카미세야 138, 145, 146, 148, 149, 170  
 카쉬급(Kashin class) 166  
 카스트로 30  
 카첸박 159, 162, 182, 192  
 카투사 231, 263, 281, 359  
 칼 엘 호켄슨 주니어 소령  
 (Chal L. Hokenson Jr.) 149  
 캔자스시 232, 286, 291  
 캠프 키티호크 263  
 캠프(Kemp) 217  
 코리아 해럴드 175  
 코마(KOMAR) 163  
 코틀린급(Kotlin class) 166  
 콜롬보 231, 273, 275, 276  
 쿠바(사태, 위기) 30, 31, 37, 39, 40, 48,  
 165, 238  
 쿠쉬맨(Cushman) 155  
 쿠즈네트소프(Kuznetsov) 167  
 쿠즌(Cousins) 155  
 크라이츠(Harry H. Chraitz) 94  
 크루프니급(Krupny class) 166  
 클라크공군기지 153  
 클레멘츠 286  
 클리포드 161, 183  
 키신저 239, 286, 290  
 키티호크(캠프) 155, 295, 299, 288, 290,  
 300, 302, 304, 306, 308  
 키프리스내전 29  
 킬딘급(Kil'din class) 166  
 태평양각료이사회(ASP: Asian and Pacific  
 Council) 34  
 태평양공군사령부(관) 150, 153, 157  
 태평양사령부(관) 135, 140, 142, 150, 154,  
 155, 157, 158, 159, 308  
 태평양육군사령부(관) 157  
 태평양함대사령부(관) 155, 157, 135, 138,  
 139, 142, 143, 150, 166  
 탕고지휘소 288  
 톰슨(Thomson) 167  
 통일일보 277  
 통일혁명당 255  
 통킹만 31, 142, 154, 164  
 통행금지 123  
 트롤선 134, 136, 145, 149  
 트룩스톤(Truxton)호 154  
 특공대(장, 원) 116, 294, 295, 300, 301,  
 302, 303, 305, 306, 308, 392, 392, 393,  
 395, 396, 397  
 특별 군원 214, 215, 216, 222  
 특별대책반 232  
 특별대책본부 286  
 특수8군단 52, 59, 253, 387  
 특수부대원 123, 212  
 특수작전부실 138, 139, 148  
 특정경비지역 220, 221, 222  
 파리평화협정 237, 238  
 파블로프스크항 142  
 파주경찰서 93, 99, 101  
 파평산 89, 94, 116, 117, 126, 381  
 판문교 369  
 판문점 162, 172, 174, 175, 178, 179, 184,



192, 214, 231, 246  
 팜비치(Palm Beach)호 135, 136  
 펜타곤 157  
 평양공군사령부 151  
 평양방송 143, 191, 192, 290  
 평양신문 190  
 평화공존(노선) 82, 237  
 평화통일(전략) 47, 48, 210, 246  
 평화협정 246, 274, 275  
 포트(대통령) 231, 232, 239, 274, 286, 291, 292, 326, 329  
 포레스트 에이 피스(Forest A. Peace) 대령 149  
 포터(대사) 168, 173, 174, 176, 177, 184, 215  
 폭력적 혁명전략 48, 210  
 폴 한슨(Paul Hanson) 152  
 폴란드 163, 361  
 폴 버넨작전 290, 296, 297, 298, 299, 308, 311  
 푸에블로호 80, 133, 134, 140, 141, 142, 143, 145, 148, 149,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60, 162, 165, 166, 169, 174, 176, 180, 186, 188, 189, 192, 205, 206, 208, 209, 213, 214, 215, 217, 232, 325, 327, 328, 350  
 프로비던스(Providence)호 154  
 프루덴(제독) 285, 288, 289, 290, 312  
 필사즉생 300, 301, 303, 392  
 하비브 286  
 하와이 142, 159  
 하이랜드(Hyland)(제독) 141, 155, 156, 158  
 하이타워(중령) 296  
 학습효과 327  
 한·미 국방장관회담 205, 209, 214, 215  
 한·미 상호방위조약 36, 214, 215, 354  
 한·미 실무위원회 329  
 한·미 안보협력체제 323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216, 329  
 한·미 연합기획참모단 209, 216  
 한·미 연합방위전략 72  
 한·미 연합방위체제 205, 209, 214, 329  
 한·미 정상회담 205, 214  
 한·미 제1군단(장) 262, 287, 297, 311 359, 365, 389  
 한·미군사위원회 329, 330  
 한·일 기본조약 34  
 한·일회담(협정) 33, 34, 47, 82  
 한국방위계획 216  
 한국인 노무자(단) 281, 357  
 한국전쟁 164, 176  
 한무협 95  
 한미동맹 209, 231, 326, 326  
 한미연합군사령부 329  
 한주경 289, 309, 312  
 합동정찰본부 158  
 합동참모본부 68, 69, 73, 97, 108, 135, 159, 175, 216, 286, 287, 311  
 합참본부장 347, 393  
 항공 조명 212  
 항공모함 311, 323, 393  
 항구봉쇄 162  
 항해도 170  
 해군 56함 피격사건 74  
 해도(海圖) 153  
 해리스(Harris) 148  
 해상봉쇄 조치 30  
 해상초계기 156

해양조사선 145  
 핵군축 협상 30  
 핵확산 금지조약 30  
 핸더슨 소령 267, 369  
 향토방위법 74, 344  
 향토(방위)예비군 174, 205, 215, 218, 223, 224  
 허봉학(대장) 41, 58, 81, 83, 85, 186, 208, 381  
 헬름(중앙정보국장) 141, 159, 161, 162, 169  
 헬싱키협정 238  
 혁명기지화 51  
 현리 106, 262  
 호놀룰루 154, 215  
 호도반도 170  
 호레이쇼 리베로(Horacio Rivero) 139  
 호켄슨 150  
 홍위병 38  
 홍제동(파출소) 102, 104, 107, 108, 110, 112, 125, 383  
 홍종철 121, 124  
 효자동(파출소) 88, 104, 106, 382  
 후계체제 241, 242, 278  
 후츄(Fuchu) 150  
 휠러(합참의장) 141, 157, 158, 159, 164  
 휴전선 222, 255, 279, 290  
 휴전협정 125, 173, 246, 262, 266, 274, 292, 309, 312, 325, 329  
 흐루시초프 31, 36  
 흑룡강 31  
 히그비(Higbee)호 154  
 AN-2 수송기 50, 52, 253  
 B-29폭격기 393, 399  
 B-52폭격기 297, 311, 323  
 CIC 105, 382  
 DMZ 118, 290  
 EC 121 격추사건 292  
 F-111전폭기 286, 311  
 F-4D 177, 209, 222, 286, 297  
 FEBA 222, 389  
 GOP 389  
 GP(Guard Post) 210, 256, 275  
 H-127 358, 359, 362, 363, 365  
 H-201 358, 359  
 JSA(대대) 397, 398, 399  
 KAL기 폭파사건 26  
 KOMOR급 유도 어뢰정 50  
 KW-7 138  
 M-16소총 240, 296, 301, 303, 304, 215, 392  
 MDL 263  
 MIG-15(21) 50, 163, 253, 256  
 OP Collier 263  
 OP Ouellette 263  
 Pinnacle-1 149, 153, 154  
 Pinnacle-2 150, 154, 155  
 PT-76 경전차 50  
 RC 4(레크레이션 센터) 301, 306, 392, 395, 397  
 SR-71(정찰기) 165, 372

□ 감 수

최 북 진(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장 삼 열(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이 동 일(군사편찬연구소 前 국방사부장)

□ 저 자

김 창 규(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

## 국방사건사 제1집

2012년 6월 29일 인쇄

2012년 7월 11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2069438)

---

---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홈페이지 [www.dsc.mil.kr](http://www.dsc.mil.kr))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원고  
작성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세 사건은 북한이 일인 독재권력 유지와  
대남적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북한의 對南·對美 도발의 동기와  
그 메커니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 788989 768791  
ISBN 978-89-89768-79-1  
ISBN 975-89-89768-75-4 (세트)